

통계청 정책연구용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2005 Population and Household Census

2007. 11. 30

통 계 청

제 출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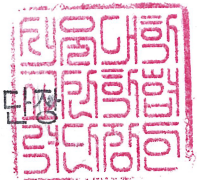
제 출 문

통 계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2005 인구주택총조사 분석사업” 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연구책임자 은 기 수(서울대 국제대학원, 조교수)
공동연구자 권 태 환(서울대, 명예교수)
조 영 태(서울대 보건대학원, 조교수)
최 진 호(아주대, 교수)
전 광 희(충남대, 교수)
윤 일 성(부산대, 교수)
장 세 훈(동아대, 조교수)
이 성 용(강남대, 조교수)
박 수 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유 리(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현 성 민(성균관대 석사과정)
최 정 욱(동아대 석사과정)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200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		
중심단어	인구센서스, 주간인구, 출산력, 인구이동, 노인 생활비 부담, 근로장소, 주택, 가구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연구책임자	은기수
연구기간	2007. 9. ~ 2007. 11.		
<p>이 연구는 2005년 인구센서스 원자료를 가지고 인구, 주택 및 가구, 그리고 방법론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2005년 인구센서스에 반영된 출산의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 인구센서스와 동태통계의 자료를 질을 비교하면서 인구센서스에 반영된 출산 통계의 질을 검증하면서 현재의 출산력 상황 및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출산력의 방향을 전망하였다. 두 번째로 인구센서스의 1년전 거주지와 5년전 거주지 기록을 통해서 장단기 인구이동의 시계열적 분석을 하고, 특히 수도권의 인구이동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일일 인구이동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통근·통학인구와 주간인구의 개념을 설정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통근·통학과 주간인구, 그리고 수도권에 초점을 맞춰 서울 및 인천 그리고 경기 지역 내에서 매일 통근·통학을 통한 일일 인구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서울지역에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성격을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넷째로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들은 어떻게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 고령화의 현황과 고령자들의 거주형태, 그리고 고령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생활비를 부담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영업이 급증하였다. 이에 자영업의 경우 근로장소가 실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길거리 노점상인 경우도 많다. 이 연구에서는 1995년 이래 한국의 직업 및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2005년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직업별 산업별 근로장소를 분석하였다. 여섯째, 고령자들은 몸이 약해지고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2005년 인구센서스는 활동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고령자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활동장애를 겪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일곱째, 한국인의 활동장애여섯째, 이 연구는 2005년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가구와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앞으로 주택공급을 어떤 원칙에 따라 해야 할지 그 방안을 연구하였다. 여덟째, 2005년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한국인들의 주택소유현황을 분석하고 아파트 중심의 자가소유가 강화되어 가는 현실을 분석하였다. 아홉째, 현행 인구센서스의 질과 완전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에서 준비중인 One Number Census가 어떤 의도로 준비되었고, 어떤 절차를 거쳐 실시되는지, 한국의 인구센서스 자료의 질과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One Number Census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p>			

Project Summary

Title of Projec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2005 Population and Household Census		
Key Words	census, day population, fertility, migration, elder living expense, work place, house, household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ject Leader	Ki-Soo Eun
Project Period	2007 . 9 . - 2007 . 11.		

This research aim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2005 Korean population and household census in areas of population, housing, household and census methodology. First, this research deals with fertility issues reflected in the 2005 census by comparing vital statistics with census data to check the quality of the census. By doing this, we can examine why Korean fertility is so low, and try to predict the prospect of fertility in near future. Second, short- and long-term migration based on several wave of census has been analyzed in this research. In particular, migration to Seoul metropolitan area was more closely analyzed using the records of the residence of one year ago and five years ago. Third, daily migration has been explored with the magnitude and amount of daily migration in each province including Seoul. In particular, this research has focused on the daily migration within Seoul metropolitan area. Fourth, to cope with aging problem, this research figures out how Korean elderly arrange their financial conditions at the individual and family level. Fifth, self-employment has been a major type of employment since the 1997 economic crisis. This research explores work places by occupation and industry based on the information from the 2005 Korean census. Sixth, there has no systematic and in-depth survey on the disabled in census. The 2005 Korean census gathers information on the disabled in daily activity. This research analyzes various types of disability in daily activity in particular for the elderly. Seventh, housing and living arrangement in Korean society has been analyzed using the census. This research suggests the way how to provide housing for ordinary people by new housing governance principle. Eighth, the ownership of house is analyzed with the 2005 census by class in this research. The result suggests how dynamically Koreans owns their own house and the future policy on house provision by government. Ninth, to cope with the problem of declining quality of census data, this research examines one number census which is prepared and practiced in England. This examination of one number census provides a clue to deal with the declining quality of Korean census.

목 차

1. 2005년 인구총조사에 반영된 출산의 현황과 전망	3
2. 최근 한국 인구이동의 특징과 변화	35
3. 통근·통학과 주간인구	65
4.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 방법	105
5. 산업 및 직업별 근로 장소 유형	143
6. 한국인의 활동장애: 고령자를 중심으로	173
7. 가구구성 및 주거실태를 통해 본 주택공급의 재편 방안	207
8. 주거생활의 변화: 주택유형과 자가소유를 중심으로	241
9. 영국의 2001년 One Number Census 프로젝트	259
10. 한국의 종교인구	317

1

2005년 인구총조사에 반영된 출산의 현황과 전망

권 태 환

(서울대, 명예교수)

〈표 목차〉

<표 1>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1995-2006	3
<표 2> 2001-2005년의 동태통계 출산아 수와, 센서스 및 2% 센서스 표본의 0-4세 인구 비교	9
<표 3> 2005년 연령별 출산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혼인상태 분포변화에 의한 합계출산율 감소 추계분 (절대값)	10
<표 4> 센서스에서 조사된 기혼 여성 비율, 1966-2005	13
<표 5> 센서스에서 조사된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1966-2005	14
<표 6> 유배우부인과 비유배우 기혼부인의 출생아수 및 추가계획 자녀수	15
<표 7> 유배우자의 연령집단별 평균 혼인연령, 출생아수 및 계획 자녀수	17
<표 8> 사회경제적 배경별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및 총기대자녀수	18
<표 9> 총자녀수 및 성 구성에 따른 평균 추가계획자녀수	19
<표 10> 동태통계와 2005센서스 2% 표본자료의 비교: 첫출산 비율과 다태아 비율	20
<표 11> 어머니와 동거하는 0-4세 자녀의 출산순위 분포와 평균 출산순위	22
<표 12> 0-4세 자녀의 연령별 주 동거양육자 상황	23
<표 13> 0-4세 자녀와 동거하는 모의 혼인상태	24
<표 14> 모 없이 0-4세 자녀와 동거하는 부의 혼인상태	24
<표 15> 어머니와 동거하는 2005년 센서스의 0-4세 자녀의 모의 평균 혼인연령과 자녀의 출생당시 모의 평균 출생연령과 동태통계 자료에서 계산된 2001-2005년 출생자 모의 출생시 연령	26

(그림 목차)

(그림 1) 연령별 출산율의 추세, 1995, 2000 및 2005년	11
--	----

2005년 인구총조사에 반영된 출산의 현황과 전망

권태환 (서울대, 명예교수)

제 1 장 머리말

1960년 이후 한국 출산력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한국전쟁으로 피폐된 상태에서 매우 높은 통제되지 못한 출산력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1962년 정부는 적극적인 출산억제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합계출산율은 6을 넘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여, 20여 년 후인 1980년대 중반에는 인구재생산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인구급증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의 숨을 내뿜기 무섭게, 이제는 새로운 공포, 인구의 빠른 감소와 급격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¹⁾ 출산력은 제1차 변천에 이어 휴식도 없이 바로 20세기 후반부터 서구사회가 겪기 시작한 제2차 변천으로 돌진하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 후인 1995년에는 인구감소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수준인 1.65를 기록하였고, 감소는 계속하여 2005년에는 가정적인 상태에서 한 세대에 인구가 반감하게 되는 상태인 합계출산율 1.08에 이르렀다.

<표 1>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1995-2006

(단위: %)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TFR	1.65	1.47	1.3	1.17	1.19	1.16	1.08	1.13
15-19	3.6	2.5	2.2	2.6	2.5	2.3	2.1	2.2
20-24	62.9	39	31.6	26.6	23.7	20.4	17.9	17.7
25-29	177.1	150.6	130.1	111.3	112.3	104.6	92.3	89.9
30-34	69.6	84.2	78.3	75	79.9	84.2	82.4	90.2
35-39	15.2	17.4	17.2	16.7	17.3	18.6	19	21.5
40-44	2.3	2.6	2.5	2.4	2.5	2.5	2.5	2.6
45-49	0.2	0.2	0.2	0.2	0.2	0.2	0.2	0.2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연보 (출생 및 사망), 각 연도.

1)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두섭, 2005 참조할 것.

여기서 당연히 몇 가지 인구학적 질문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근본적인 것은 “제2차 출산력변천의 성격은 무엇이며, 과연 인구는 언제 다시 안정 성장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인류의 인구역사상 제2차 출산력변천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며, 인류 문명에 대한 그 영향력은 가히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출산연구의 초점은 제2차 출산력변천의 성격규명과 인구의 재안정 상태로의 전이에 놓여 있다. 이미 제2차 변천에 깊숙이 진입한 사회에서는 광범하게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선진국의 경험을 기초로 서둘러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인구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게 사회의 모든 영역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변화가 총체적으로 개인의 출산행위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과거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소가족 메시지는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앞으로 날아오고 있다. 이제는 전통적 가족이 저출산의 장애요인이 아니라 저출산이 전통적 가족의 안정성에 장애 요인임이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다.

극도의 저출산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가족형성의 기초인 보편혼의 개념이 사라져 가고 있다. 만혼과 함께 이혼에 의한 가족해체현상도 널리 나타나고 있다. 아직 무자녀 가족의 이념이 지배적은 아니지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부각되는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복지의 확충은 그 자체로는 매우 중요한 바람직한 국가 정책임에는 틀림 없지만, 엄격하게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으로는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 대부분이 이미 반대의 맥락에서, 즉 저출산 정책으로 주장되고 실시되어 오던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력 연구는 매력을 갖기가 어렵다. 그런 가운데서도 출산력 연구는 지속되고 있으며, 활성화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거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수요와 일부 이와 연관된 다양한 자료의 생산, 그리고 출산에 대한 관심의 다각화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혼인의 연구와 정책에서 자녀의 재생산은 이미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와 자녀양육의 조화로운 병행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또한 저출산은 청소년, 학교교육, 성평등과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관념적, 제도적 변화를 추동하고 방향 짓는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새로운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긴박성에 대한 인식은 이제는 모두가 공유하는 바가 되었고, 따라서 각종 출산과 관련된 조사 자료들이 여러 기관과 연구자들에 의해 수집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정책적 목적에서 수행된 이들 조사 자료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가령, 통합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단편적이며 과제 지향적인 특징을 갖기 쉽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보이지만, 정책적 연구는 아직도 전체 틀을 바꾸는 창조적인 내용보다는 주어진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정적인 측면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슷한 조사의 남발과 자료의 생산, 다른 조사 자료와의 통합적 분석의 결여, 조사의 지속성 결여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통계청의 2005년 센서스 결과분석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연구는 이러한 최근 연구의 관심이나 틀에서 떠나, 우리나라 인구센서스에 반영된 출산현상을 살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보다는 센서스 자료가 제시하는 메시지를 읽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른 말로, 체계성과 집중성을 강조하는 연구라기보다는 탐색적이고 시사적인 성격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탐색적인 성격의 연구는 흔히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연구에서 간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주변적이나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데 공헌을 하기도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센서스에서 제공해온 출산관련 항목인 총출산아수의 추세, 총출산아수와 더불어 최근에 수집되기 시작한 추가계획자녀수를 통한 생애 기대가족규모의 개관, 그리고 어머니와 동거하는 0-4세 인구를 통한 출산의 양상과 여성의 가족 생애주기에 관한 단편적인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제 2 장 자료의 종류와 구성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동태통계는 보고의 완전성이 매우 낮아 인구학적 지표작성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²⁾ 반면 센서스 자료는 매우 질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인구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한편 196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각종 출산관련조사가 실시되어 새로운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대부분이 가족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져 출산력과 출산행위 분석에는 부적합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가 세계출산력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각종 분석이 활성화되면서 조사 자료를 이용한 출산력 연구도 크게 활성화되었다. 또한 1980년대 중반에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동태통계의 개선이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이것이 출산력 분석의 기초자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센서스를 이용한 출산력과 출산행위의 분석은 매우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오늘날 센서스에 기초한 출산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 밖에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서스는 인구연구에 있어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센서스의 역사와 명성, 그리고 센서스가 제공하는 자료의 포괄성과 질에 근거한다. 특히 많은 사례의 관찰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인구학적 행위에 대한 분석에서는 인구센서스만큼 큰 장점을 갖는 자료도 드물다.³⁾

이미 동태통계를 이용한 출산력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다. 특히 최근의 업적으로는 전광희(2006)의 연구를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그는 연령별 출산수준의 특성과 합계출산율의 변동 구성요인을 197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최근 센서스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출산관련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하나는 기혼여성의 출산관련 현황으로 여기에는 성별 총 출생자녀 수와 사망아수, 동거 및 별거자녀수, 그리고 추가 출생계획자녀수가 포함된다. 그러나 개별 출산에 대한 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것은 0-4세 인구자료이다. 이것은 엄격하게는 출산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과거 이들 자료를 이용한 성공적인 출산력 측정의 시도들이 있었다는 점(가령,

2) 통계청의 평가에 따르면 1975년 56.2%였던 출생신고의 완전성은 1990년에는 95.2%로 올라가고 있다 (Kim M-K, 2004: 57).

3) 한국 인구센서스에 관해서는 김민경(2000)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Cho L-J, 1973; Kwon T-H, 1977: Ch. VI), 그리고 2005년 센서스에서는 자녀들에 대해 “모와의 동거 여부를 묻고 있어”, 이 자료를 모와 연결시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0-4세 인구는 유용성이 큰 출산관련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0-4세 자료는 특히 최근 5년 사이의 출산력과 출산행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센서스 분석연구라는 취지를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 이 연구는 기혼 여성의 출생자녀수와 기대자녀수를 이용한 총체적 출산상황의 이해와 0-4세 자녀의 재구성자료를 사용한 2001-2005년의 출산상황의 파악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둘은 서로 중복되는 내용을 갖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인구센서스에서 직접적인 출생관련 문항이 등장한 것은 1960년이었다. 여기에는 기혼여성에게 “총출생아수”를 묻는 항목이 나타나고, 그 결과도 상세히 제표 되었다.⁴⁾ 그 이후, 1995년을 제외하고는, 2005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센서스에 이 항목과 그 때 그 때 생존자녀수나 동거자녀수 등의 항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김민경, 2000: 제4장; 권태환·김두섭, 2002: 244 참조). 그리고 이들 자료는, 10-20% 표본자료에 입각해, 1970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출산력”이라는 제목으로, 2000년과 2005년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제목의 센서스 보고서로서 출간되었다. 그러나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집된 이들 자료는 우리나라 출산력의 분석에는 별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이전에는 센서스 보고서의 출간이 늦어 자료의 시의성이 약하였다는 점, 총출생아수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출산력 분석기법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 1960년대 중반부터 가족계획 및 출산력 조사가 활성화되었다는 점, 1980년 이후 동태통계의 질이 출산력 분석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센서스 자료의 유용성은 아직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이것이야 말로 40년 이상에 걸친 우리나라 출산력 변천의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통합성을 지닌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심의 초점이 2005년 센서스에 반영된 출산현상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은 통합적인 시계열 분석까지는 행하지 못하고 있다.

4) 13세에서 49세까지는 매우 간격, 그 이후는 5세 간격으로 제표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용한 연령은 다른 센서스 보고서의 “만 나이”와는 다른 소위 “세는 나이”이며, 이 연구에서는 1960년도의 추세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표3>에도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출산억제가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기 이전이었고, 당시 장면정권이나 이전의 이승만정권도 가족계획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당시 센서스를 도왔던 UN 자문단의 권고가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2005년 센서스 자료는 10% 표본조사를 기초로 만든 2% 원자료 표본이다. 2005년 센서스에서는 모든 기혼여성에게 자녀출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아 출생아수와 여아 출생아수, 그리고, 센서스에서는 처음으로, 추가계획자녀수를 묻고 있다. 남녀별로 생존 및 사망 자녀수, 동거 및 별거 자녀수를 묻고 있다. 이를 통해 집계된 총출생아수와 추가계획 자녀수에 관한 제표는 센서스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2%표본자료와의 연결 분석하기가 어려워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였다. 또한 센서스의 개인 정보는 본인에 관한 정보만을 기록하고 있다. 가령 3세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부모의 정보는 이 아이의 정보란에서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모나 주 양육자의 정보를 포함한 0-4세 자녀의 표본 파일은 자녀의 모 동거여부에 관한 항목과 가구 파일을 이용해 별도로 구성하였다. 모와 동거하는 경우, 같은 가구에 속한 여성들 가운데서 제시된 조건에 맞는 여성을 어머니로 선택하여 그 여성의 정보를 해당 자녀의 정보와 결합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한 정보는 가구구성원들의 가구주와의 관계 및 자녀의 성 및 기혼여성의 출생 남아 수 및 여아 수, 동거 자녀 수였다.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일치하지 않아 동거 어머니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자료 오류로 판단해 별도로 뽑아 직접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총 43,744개의 관찰 사례 가운데, 이렇게 수정된 경우는 360개에 달했다. 한편 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가구주와의 관계를 통해 주 양육자를 확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한 출산율의 측정이나 추세에 있지 않다. 대신 센서스 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는 출산현상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센서스 자료나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2% 표본에서의 결과가 동태통계의 출생신고 자료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 중심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센서스 0-4세 인구와 대체로 이들이 출생한 연도와 일치하는 2001-2005년의 출생신고 통계를 비교 제시하였다. 이 표에 따르면, 만약 동태통계 자료가 100% 완전성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센서스의 0-4세 인구 집계의 완전성은 연령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보인다. 센서스의 4세 인구는 출생 시부터의 사망확률을 고려하면 거의 완전한 집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완전성은 나이가 적을수록 떨어져 0세에 이르면 95% 가까이에 이르게 된다. 2% 표본 집계는 센서스에 비해 93.3%에서 96.7% 정도의 완전성을 보일 따름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

도 표본이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데서 주로 유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표본과 동태자료와의 차이는 더 커, 0세 표본인구는 2005년 출생의 90%에도 달하지 못한다. 이점은 2% 표본 집계결과에 입각한 분석결과의 평가와 이해를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동태통계 결과와의 비교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2001-2005년의 동태통계 출산아 수와, 센서스 및 2% 센서스 표본의 0-4세 인구비교
(단위: %)

동태통계 출생연도 / 센서스 연령	자료간 비교			2000센서스 연령 / 2005 센서스 연령	%
	센서스 / 동태통계	2%표본/ 동태통계	2%표본/ 센서스		
2005 / 0세	94.46	88.14	93.30	0세 / 5세	97.08
2004 / 1세	95.64	90.58	94.71	1세 / 6세	98.85
2003 / 2세	95.74	91.37	95.44	2세 / 7세	99.52
2002 / 3세	98.14	94.89	96.68	3세 / 8세	99.38
2001 / 4세	99.67	93.56	93.88	4세 / 9세	99.01
합계	96.87	91.85	94.82	0-4/5-9세	98.78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연보 (출생 및 사망), 각 해당 연도; 2000년 및 2005년 인구총조사 보고서; 2005년 인구총조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제 3장 기혼 여성의 출산추이

과거 대부분의 사회에서 출산은 혼인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에서 총체적인 출산력의 변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주로 유배우자의 비율과 유배우자의 출산수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차 출산력변천은 주로 유배우 출산수준의 감소에 의해 설명이 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제2차 출산력변천에는 유배우 출산수준보다는 유배우 여성 비율의 급격한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전광희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변화의 요인으로서 유배우율의 변화는 1970-85년 사이 20% 정도를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그 영향의 정도가 급증하고 있다(전광희, 1997: 62-65; 2006: 83). 이는 물론 1985년 이후 유배우 출산율 자체의 변화의 폭이 급격히 줄어든 데 기인한다. 전광희에 기초해 유배우율의 변화가 직접 합계출산율에 미친 절대값을 계산해 보면, 유배우율 변화의 영향의 절대 값은 1970년대에 0.13-0.14 포인트에서 그 이후에는 0.2 포인트 수준으로 올라가다, 1995-20년에는 0.14 수준으로 떨어지고 2000-2005년에는 다시 0.34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유배우 출산율은 장기적으로는 저하의 추세를 나타내지만, 부분적으로는 상승과 저하를 반복하고, 전반적으로 변화의 폭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1980년대 중반 이후 합계출산율 또는 출산수준에 대한 유배우율과 유배우 출산력의 영향은 낮은 연관성을 보이고, 이러한 형상은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유배우율만을 대상으로 하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2020년까지는 계속 합계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유배우자의 출산력의 저하 없이도 현재의 출산 규범과 실행이 지속된다면 출산 수준의 지속적인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2005년 연령별 출산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혼인상태 분포변화에 의한 합계출산율 감소 추계분 (절대값)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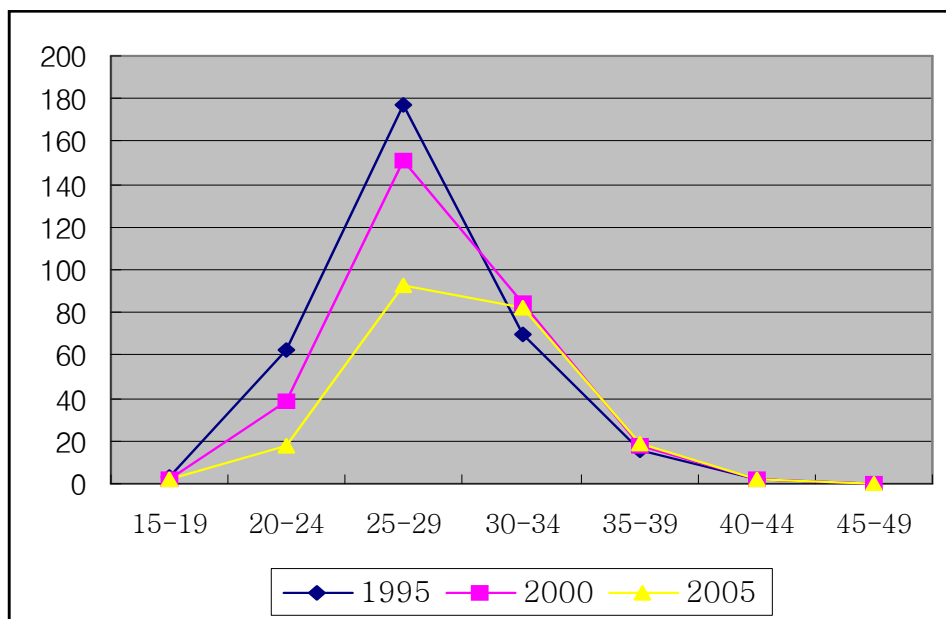
	유배우	미혼	사별	이혼
2000-05	0.141	0.140	-0.002	0.001
2010-20	0.164	0.164	-0.001	0.001
2020-30	-0.012	-0.014	0.000	-0.002

주) 계산방법은 전광희, 2006: 81-83 참조.

자료: 2005-2030년의 혼인분포 추계는 통계청(2007), 장래가구추계결과 65-70에 수록된 것을 사용함. (미간행)

한편 유배우율은 미혼, 사별 및 이혼의 추세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의 경우, 최근 이들 세 혼인의 구성요소는 모두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미혼과 이혼의 추세는 출산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사별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미혼비율의 증가는 1920년부터 지속된 현상으로 그 직접적인 결과는 여성의 초혼 연령의 변화로 파악된다. 센서스를 이용해 연령별 미혼자 비율로부터 계산한 평균 초혼 연령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연령은 1925년 15.9세에서 80년 후인 2005년에는 28.8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Kwon T-H, 2007). 그리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는 가장 중요한 출산력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생애 미혼자 비율은 강력한 보편혼 규범의 작용으로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고, 이는 출산력의 저하를 어느 선에서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버팀목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생애 출산 수준의 지표로 간주되는 평균 가족규모나 이상적인 또는 원하는 자녀수가, 재생산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출산수준에서도, 2명 정도로 별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1) 연령별 출산율의 추세, 1995, 2000 및 2005년



그러나 최근의 여러 조사 자료는 보편혼의 규범이 급속히 약화되고, 만혼의 경향과 함께, 평생 비혼 상태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김승권, 2003: 12-14; 김태현, 2005: 17-18; 은기수, 2003: 102-107). 또한 평생 비혼의 정도나 생애 출산수준에 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만혼의 추세는, 연령별 출산수준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유형을 나타내는 모

형은 연령만 옮겨지지 비슷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전광희, 2006: 85). 그러나 한국에서는 1995년 이후의 추세를 보면, <그림 1>에 수록된 바와 같이, 전혀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다른 말로, 만혼이 30세 이전의 출산력을 크게 낮추나 그것이 30세 이후의 출산력을 높이는 데로는 연결되고 있지 못하며, 앞으로도 그러한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짙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이제까지와는 달리 유배우자가 이상 자녀수에 따라 출산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이상 자녀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크며, 이러한 상태에서 재생산 수준으로의 출생수준의 상승은 기대하기 곤란하다.

이혼은 1990년에 들어오면서 급증하고 있다(통계청, 2006: 141-143 참조). 그러나 이혼의 출산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이혼의 절대적인 다수가 높은 재생산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낮은 연령층에서는 이혼 여성의 재혼률이 상당히 높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사별자의 비율 감소는 출산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 정도는 이혼율 증가의 효과를 상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즉 한국의 유배우율에 영향을 미쳐온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만혼의 추세와 최근에 대두된 비혼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최근의 출산력 추세와 변화, 양상을 염두에 두고 2005년 센서스에 반영된 기혼 여성의 출산 행위와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기혼여성의 비율의 변화는 <표 4>와 같다. 이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출산력변천이 시작된 1966년부터 최저 출산력 수준을 보인 2005년의 약 40년 사이에, 기혼자 집단의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를 보인다. 가장 괄목할만한 기혼 비율의 저하를 보인 것은 20-24세와 25-29세 집단이다. 이들 연령집단에서 기혼자의 비율은 48.3%에서 6.3%, 92.3%에서 41.4%로 줄어들어, 각각 42% 포인트와 51% 포인트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5세 이상 여성인구의 경우, 기혼자 비율은 약 40년 사이에 77.0%에서 74.7%로, 2.3% 포인트의 감소만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재생산 연령층에 속하는 15-49세 집단에서는 기혼자 비율이 70.8%에서 63.2%로 총 7.2% 포인트의 감소를 나타낸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보편혼의 전통과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의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의 대부분이 25-29세 연령에서의 미혼자 비율의 증가에 기인함을 보여준다. 다른 말로, 만혼의 추세와는 달리, 비혼은 이제까지는 출산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출산력의 핵심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것임

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만혼은 불가피하게 선호 및 기대 자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최저출산이 될 것이다. 30세 이후의 결혼 여성은 대부분 경제활동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경력의 단절을 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연주, 2003). 따라서 이들 가운데는 1자녀 또는 무자녀 가족을 선택 하는 경향이 쉽게 퍼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표 4> 센서스에서 조사된 기혼 여성 비율, 1966-2005

(단위: %)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2000	2005
합계	76.96	75.20	71.49	71.41	71.89	72.30	74.95	74.66
15-19세	3.88	2.79	2.30	1.79	0.85	0.52	0.67	0.30
20-24세	48.37	42.89	36.92	34.36	27.91	19.95	11.21	6.34
25-29세	92.27	90.56	88.66	86.33	81.63	78.31	60.29	41.26
30-34세	99.00	98.66	98.07	97.33	95.74	94.71	89.44	81.42
35-39세	99.69	99.59	99.38	98.98	98.39	97.47	95.79	92.59
40-44세	99.88	99.84	99.69	99.54	99.28	98.87	97.46	96.41
45-49세	99.90	99.91	99.73	99.71	99.57	99.30	98.22	97.49
50-54세	99.92	99.93	99.81	99.80	99.74	99.55	98.94	98.13
55-59세	99.93	99.94	99.76	99.83	99.81	99.64	99.25	98.73
60-64세	99.93	99.96	99.74	99.86	99.84	99.73	99.44	99.08
65-69세	99.93	99.92	99.64	99.89	99.87	99.76	99.59	99.30
70-74세	99.92	99.94	99.61	99.88	99.87	99.78	99.62	99.41
75 이상	99.93	99.96	99.74	99.90	99.66	99.80	99.68	99.35
15-49세	70.75	68.53	63.99	63.70	63.71	63.68	65.28	63.18

자료: 각 해당연도 센서스 보고서.

<표 5>에는 1966년에서 2005년에 걸쳐 센서스를 통해 수집된 기혼 여성의 출산력 추세가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따르면 모든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966년의 4.16명에서 2005년에는 2.34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인구재생산 연령인 15-49세의 경우, 같은 40년 동안 평균 총출생아수는 4.16명에서 1.74명으로 약 60% 가까운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기혼자의 출산수준은 기혼자가 현재 유배우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표 5> 센서스에서 조사된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1966-2005

(단위: %)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2000	2005
합계	4.16	4.15	3.95	3.59	3.26	2.97	2.54	2.43
15-19세	0.50	0.50	0.48	0.45	0.44	0.32	0.51	0.36
20-24세	1.10	1.03	1.00	0.92	0.86	0.70	0.70	0.65
25-29세	2.31	2.15	1.97	1.75	1.54	1.28	1.11	0.91
30-34세	3.78	3.53	3.18	2.67	2.29	1.89	1.71	1.52
35-39세	4.85	4.55	4.11	3.43	2.80	2.35	1.92	1.87
40-44세	5.53	5.28	4.79	4.16	3.44	2.83	2.01	1.94
45-49세	5.66	5.62	5.23	4.69	4.07	3.43	2.31	2.00
50-54세	5.49	5.65	5.47	5.09	4.58	4.07	2.72	2.30
55-59세	5.26	5.42	5.44	5.30	4.91	4.56	3.27	2.72
60-64세	5.08	5.22	5.19	5.30	5.13	4.90	3.89	3.30
65-69세	4.96	5.05	5.00	5.10	5.13	5.10	4.29	3.88
70-74세	4.85	4.91	4.86	4.93	4.97	5.11	4.52	4.27
75 이상	4.80	4.75	4.71	4.73	4.79	4.94	4.61	4.50
15-49세	4.16	3.70	3.43	2.94	2.52	2.13	1.81	1.74

자료: 각 해당연도 센서스 보고서.

<표 6>의 2005년 센서스 2% 표본 결과에 의하면 29세 이하에서는 무배우 기혼자가 유배우자보다 평균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자녀를 출생하고 있다. 이는 이들 초기 혼인연령에서는 자녀출생으로 인한 이혼이 최근에 상당히 늘어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5-49세의 재생산 연령층을 총괄하면 이혼, 사별 여성의 출생 자녀수는 유배우자의 출생 자녀수의 95% 수준에 이른다. 이 두 집단 사이의 차이는 30세 이상에서 급속히 벌어져, 30-35세에서는 전자가 후자의 85.4%, 35-39세에서는 81.5%, 40-44세에서는 78.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계획 자녀수의 차이는 훨씬 더 커, 이혼 및 사별자의 경우 유배우자의 계획자녀수의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혼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20-24세의 이혼 및 사별 여성들의 경우도 추가 계획 자녀수가 유배우자의 10%선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05년 센서스에서 총출생아수와 추가계획자녀수에 대한 응답자의 수가 이혼 및 사별자의 경우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더 나아가 현재 혼인생활 중이 아닌 이들의 응답에 대해서는 신뢰성과 관련해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추가계획자녀수와 이를 총출생자녀수와 합해 나오는 총기대자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한 기대

출산력에 대한 논의는 유배우자에 한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더하여 출산관련 항목 응답에 미혼여성은 아예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살펴는 2005년 센서스 결과를 중심으로 한 출산관련 논의는 유배우자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표 6>유배우부인과 비유배우 기혼부인의 출생아수 및 추가계획 자녀수 (단위: %)

혼인상태	연령집단	총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유배우	20-24	0.65	1.04
	29-29	0.92	0.84
	30-34	1.54	0.33
	35-39	1.91	0.07
	40-44	1.98	0.01
	15-49	1.77	0.18
이혼+사별	20-24	0.97	0.11
	29-29	1.10	0.06
	30-34	1.29	0.01
	35-39	1.55	0.01
	40-44	1.67	0.00
	15-49	1.68	0.01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제 4 장 유배우 여성의 출산 행위와 유형

<표 7>에는 2005년 센서스(표본조사)의 2% 표본을 통해 나타난 재생산 연령층 여성들의 출산관련 지표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현재의 혼인연령과 현재 유배우자의 혼인연령 사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81.4%가 이미 혼인한, 최고의 혼인연령을 기록하고 있는, 30-34세 여성의 경우도 2005년 현재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여성들의 혼인연령 27.7세에 비해 2.4세 정도, 그리고 2005년 센서스의 미혼자 비율에서 계산한 것보다는 3.5년 정도 낮다(통계청, 2006: 136; Kwon T-H, 2007: T2). 한편 총출생자녀수는 대부분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것으로 판단되는⁵⁾ 이 연령층의 평균 출생자녀수는 1.54명이고 추가계획 자녀수는 0.33명을 기록해, 현재 혼인생활 중인 30-34 여성들의 평균 생애 기대출생자녀수는 1.87이 된다. 한편 25-25세와 20-24세의 경우에도 총기대자녀수가 1.76명과 1.69명에 달해, 전반적으로 현재 유배우 집단의 기대 출산수준은 2005년 현재의 기간 합계출산율 1.0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그리고 <표 1>의 2001-2005년 출산수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먼저 <표 7>에 제시된 평균 생애 기대자녀수는, 뒤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낮은 혼인연령 집단에서 높은 경향이 보인다는 점, 다음으로 여기에는 비혼여성나 무배우 기혼여성이 배제되었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이는 다른 말로, 혼인연령 및 비혼의 경향과 관련된 연령별 유배우자의 비율이 실제 기대출산율의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확인시켜 준다.

다른 한편, 현재 낮은 연령층에서 앞으로 유배우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15세에서 49세에 이르는 모든 재생산 연령층에서 연령이 낮아지면 생애 기대자녀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출산추세를 조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2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유배우 여성의 경우에도 실제 출생자녀수가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원하는 자녀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향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코호트 별로 분석할 때, 이상적 자녀수와 생애 출생수의 괴리가 매우 작았고, 그것도 이상적 자녀수보다 출생아수가 약간 컸다(권태환, 1997: 34-36). 이러한 점은 단적으로 현재 여성들이 출산 및 육아관련 조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30세의 경우 평균 혼인연령은 25.11세이며, 34세의 경우 25.33세로 나타나고 있다.

<표 7>유배우자의 연령집단별 평균 혼인연령, 출생아수 및 계획 자녀수 (단위: %)

혼인상태	연령집단	총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총기대자녀수
15-19	17.81	0.35	1.22	1.57
20-24	21.06	0.65	1.04	1.69
25-29	24.31	0.92	0.84	1.76
30-34	25.35	1.54	0.33	1.87
35-39	25.11	1.91	0.07	1.97
40-44	24.49	1.98	0.01	1.99
45-49	23.74	2.05	0.00	2.05
15-49	24.57	1.77	0.18	1.95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그러면 유배우 여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총출생아수 및 생애 기대자녀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표 8>은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자신의 현재 거주지 배경, 교육수준, 종교를 택하여 이들 각각에 따른 총출생아수 및 생애 기대자녀수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⁶⁾

현 거주지에 따라서는 총출생아수와 생애 기대자녀수, 그리고 추가계획자녀수, 모두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총출생아수와 생애 기대자녀수는 모든 연령층에서 다 같이 농촌에서 보다 큰 수치를 보인다. 반면 추가 계획자녀수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낸다. 이들 3가지 지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현재의 총출생아수로 다른 2개는 이에 따라 결정된다. 추가계획자녀수는 총출생아수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며, 생애 기대자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나 차이의 폭은 감소한다. 한편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30-34세와 35-39세 집단에서는 교육수준과 총출생아수 및 생애 기대자녀수는 역상관성을 보인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생 및 기대자녀수는 적어진다. 그러나 25-29세 집단에서는 중고등학교 출신 여성이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보다 현재 더 많은 출생아수를 가지고 있고, 또 더 큰 미래 가족규모를 가질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의미 있는 것인지, 즉 새로운 출산력 차별행위의 등장인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종교에 따른 차이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징적으로 종교가 없는 여성들에게서 가장 낮은 현재 및 생애 기대 출산수준이 관찰된다. 다음, 일상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천주교 여성들이 이에 버금가는 저출산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개신교, 불교, 기타로 구성되는 나머지 종교집단에 속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재 및 미래 출산력 집단을 형성한다.

6) 자료의 구조상 직업이나 중사상의 지위와 같은 중요한 남편과 연관된 배경변수는 고려할 수 없었음. 한편 각종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인 차별출산력의 분석은 김두섭, 2007: 제6장에 제시되어 있다.

현재 및 생애 기대 출산수준의 차별 유형은, 그 관찰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3가지에 국한되어 있지만,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지 배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유형이 연령집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종교에 따른 차이가 비종교 집단과 종교를 가진 여성들 사이에 뚜렷하며,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의 교리와는 달리 매우 낮은 출산 성향을 보인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배경적 요인에 따른 차이의 양상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8> 사회경제적 배경별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및 총기대자녀수 (단위: %)

연령집단	사회경제적배경		총출생아	추가계획자녀	총기대자녀
25-29	합계		0.92	0.84	1.76
	거주지 배경	도시	0.86	0.86	1.72
		농촌	1.18	0.73	1.91
	교육수준	초등 이하	1.10	0.55	1.66
		중 고등	1.16	0.66	1.82
		대학 이상	0.72	0.99	1.71
	종교	없음	0.92	0.81	1.73
		불교	0.95	0.84	1.79
		개신교	0.91	0.90	1.81
		천주교	0.83	0.90	1.73
기타		0.91	0.87	1.78	
30-34	합계		1.54	0.33	1.87
	거주지 배경	도시	1.50	0.33	1.83
		농촌	1.74	0.29	2.03
	교육수준	초등 이하	1.75	0.19	1.94
		중 고등	1.70	0.24	1.94
		대학 이상	1.38	0.41	1.79
	종교	없음	1.53	0.31	1.84
		불교	1.60	0.32	1.91
		개신교	1.53	0.36	1.89
		천주교	1.51	0.35	1.86
기타		1.62	0.34	1.96	
35-39	합계		1.91	0.07	1.97
	거주지 배경	도시	1.88	0.07	1.95
		농촌	2.03	0.07	2.10
	교육수준	초등 이하	2.03	0.08	2.11
		중 고등	1.95	0.06	2.01
		대학 이상	1.83	0.09	1.91
	종교	없음	1.88	0.06	1.94
		불교	1.94	0.07	2.01
		개신교	1.93	0.08	2.01
		천주교	1.19	0.07	1.98
기타		1.95	0.08	2.03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9> 총자녀수 및 성 구성에 따른 평균 추가계획자녀수

(단위: %)

연령집단	총자녀수	성구성					
		합계	남0+여1	남1+여0	남0+여2	남1+여1	남2+여0
20-24	0	1.46					
	1	0.79	0.80	0.77			
	2	0.25			0.42	0.10	0.37
25-29	0	1.48					
	1	0.71	0.74	0.68			
	2	0.14			0.24	0.11	0.12
30-34	0	1.25					
	1	0.49	0.54	0.45			
	2	0.06			0.12	0.04	0.05
35-39	0	0.68					
	1	0.18	0.21	0.15			
	2	0.02			0.04	0.01	0.01
15-49	0	1.14					
	1	0.34	0.40	0.29			
	2	0.02			0.05	0.01	0.02

주) 유배우 여성에 한함.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급격한 출산력 저하와 함께 관찰된 한국 출산력의 독특한 대표적인 양상의 하나로 남녀 출생성비의 급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높은 출산순위에서 더욱 뚜렷하였으며, 이는 다른 말로, 남자 아이가 없을 때, 다음 자녀 출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녀의 성구성에 따른 다음 출산수준의 차이는 2005년 센서스에서는 매우 미미할 정도로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출생자녀수가 1인 경우, 그 자녀가 남아인 경우와 여아인 경우에, 모든 연령집단에서, 추가 자녀출생을 계획하는 경향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연령이 낮아질수록 현재의 자녀가 여아인 경우와 남아인 경우에 추가로 자녀를 원하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2명일 때, 다음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는 20-29세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집단에서 3번째 출생을 계획하는 여성의 비율은 남자 아이만 둘이거나 여자 아이만 둘일 때에, 아들과 딸 각각 1명인 경우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자녀선호에 있어, 남아선호가 약화되고 대신 남녀 균형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젊은 연령층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동태통계와 2005센서스 2% 표본자료의 비교: 첫출산 비율과 다태아 비율
(단위: %)

출생연도	동태통계			연령	2005 센서스 표본	
	총출생아	첫출산 %	다태아%		첫출산 %	다태아%
1995	716,993	48.32	0.97			
2000	636,780	47.19	1.63			
2001	557,228	47.65	1.74	4세	45.3	2.0
2002	494,625	48.75	1.91	3세	46.6	2.3
2003	493,471	49.55	1.89	2세	47.8	2.1
2004	476,052	51.09	2.01	1세	48.1	2.2
2005	438,062	51.75	2.15	0세	49.7	2.0
2006	451,514	52.04	2.14			

주1) 센서스 표본의 경우는 모가 동거중인 자녀에 한함.

2) 2% 센서스 표본의 경우, 다태아인 경우 각각의 출생에 다른 순위를 부여하였음.

3) 2% 센서스 표본의 경우, “첫출산”은 총출산이 1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연보, 각 해당연도; 2005년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제 5 장 0-4세 인구의 출생상황과 양육환경

센서스의 0-4세 인구자료를 이용해 출산에 관한 논의를 할 때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령에 상응하는 동태통계 자료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표 10>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쉽게 비교가 가능한 0-4세 인구 중 첫 출산의 비율과 다태아의 비율을⁷⁾ 선택하여 이들을 동태통계 자료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표 11>에서는 출생자들의 평균 출생순위를 비교 제시하고 있다. 2005년 센서스에서 0-4세 인구는 2000년 11월 1일에서 2005년 10월 30일 사이의 출생자를 뜻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들에 관한 출생관련 정보를 동태통계 자료와 비교할 때는 2001-2005년 출생자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첫 출산자의 비율은 동태통계가 센서스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아마도 앞에서 언급한, 표본을 일반가구에 한정시킨 2005년 센서스 2% 표본자료의 성격과 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를 분석에서 제외시킨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첫 출산 자녀의 비율의 변화는, 그 쪽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두 자료 모두 최근에 올수록 높아지는 현상을, 그리고 평균 출산 순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한편 다태아 비율의 경우 센서스 0-4세 인구의 경우 나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2.3%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동태통계에서는 다태아 비율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폭도 상당히 크다. 그러나 2004-2006년의 수치는 센서스의 추정 값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두 자료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센서스 자료가 동태통계와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동태통계보다 더 안정된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는 센서스의 0-4세 인구를 통한 출산현상의 논의가 충분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7) 다태아는 동일 가구 내에 동일 연도 출생 자녀 수가 둘 이상이며 이들이 동일 모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를 가리킴.

<표 11> 어머니와 동거하는 0-4세 자녀의 출산순위 분포와 평균 출산순위
(단위: %, 순위)

출산순위	센서스 자녀연령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1	49.7	48.1	47.8	46.6	45.3	47.4
2	40.6	40.8	42.1	43.3	44.4	42.4
3+	9.7	11.1	10.1	10.1	10.3	10.2
평균순위	1.61	1.65	1.64	1.65	1.66	1.64
동태통계 자료 비교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평균순위	1.59	1.60	1.61	1.62	1.64	1.65

자료: <표 10> 참조

<표 10>과 <표 11>을 통해 명백한 것은 적어도 2001년 이후 최근에 올수록 출산 자녀 가운데 첫 출산의 비율이 계속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50%선에 도달하였고, 그 결과 최근 출생자들의 평균 출산순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미루어진 혼인의 급증으로 인한 것인지, 혼인연령 인구의 연령구조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둘째 아이 기피 또는 한 아이 선호의 확산 때문인지는 별도의 분석을 요한다. 그 주요 요인이 무엇이든, 이 현상은 일단 현재 최저 출산수준의 상황에서도 한국 출산력은 저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즉 이미 급격히 다가온 인구위기가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산 자녀들의 양육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누구와 동거하느냐 일 것이다. 특히 핵심 출산연령에서 이혼이 급증하고, 젊은 연령층에서 미혼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상황의 파악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자녀양육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모의 역할이며, 그 대체 변수는 아마도 자녀와 모의 동거 여부일 것이다. 2005년 센서스에서는 개별 자녀에 대해 모의 동거여부를 묻고 있고, 앞의 “자료의 구성”에서 언급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자녀의 주 동거 양육자에 관한 제표가 아래에 제시된 <표 12>다.

<표 12> 0-4세 자녀의 연령별 주 동거양육자 상황

(단위: %)

동거상황	자녀연령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모동거	98.1	97.0	97.2	96.1	96.1	96.8
부동거	0.5	0.8	1.0	1.9	1.9	1.3
기타	1.4	2.2	1.8	2.0	2.0	1.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이 표에 따르면, 2005년 센서스 당시 0-4세 자녀 가운데 모와 동거하는 자녀는 96.8%에 이르고, 부모 모두와 별거하고 있는 자녀가 1.9%를 보인다. 그러나 기타의 경우는 대부분 자녀의 “조모”로 되어 있어 이들 자녀는 3대 가족에서 생활하는 셈이 된다. 모와의 동거자는 나이가 많아지면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모동거” 자녀는 0세에서 98.1%이던 것이 3-4세에 이르면 96.1%로 감소한다. 모 동거자의 감소는 주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13>에는 자녀와 동거하는 모의 혼인상태가, <표 14>에는 모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 양육자로 판단되는 부의 혼인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모동거”의 경우, 모는 0세 자녀의 99.7%, 4세 자녀의 98.2%, 0-4세 자녀의 98.8%에 이르는 거의 대부분이 남편과 동거하는 유배우 상태에 있다. <표 12>와 <표 13>을 결합하여보면, 부모와 모두 동거하는 자녀는 0세 자녀에서 97.8%, 4세 자녀에서 94.4%, 0-4세 자녀의 경우 95.6%로 나타난다. 한편 <표 14>를 보면, “부동거”의 경우, 0-4세에서 유배우자는 35.1%에 불과하며, 60.4%가 이혼자임을 알 수 있다. 0세와 4세를 비교하면, 부동거의 상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0세 자녀의 부의 유배우 비율은 72.2%에 달하나, 4세 자녀에 이르면 그 비율이 22.8%로 준다. 0세 자녀의 부 유배우도, 부인과 비동거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그 대부분이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나 소위 여자가 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 또한 기타 동거의 대부분도 부모 별거나 이혼의 경우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이혼의 경우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0-4세 자녀는 1/3 정도만이 모와 동거하고 나머지는 부 또는 조모의 돌봄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0-4세 자녀와 동거하는 모의 혼인상태

(단위: %)

혼인상태	자녀연령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사례수	7577명	8364명	8766명	9018명	10019명	43744명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배우	99.7	99.1	98.8	98.4	98.2	98.8
사별	0.1	0.2	0.2	0.2	0.3	0.2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14> 모 없이 0-4세 자녀와 동거하는 부의 혼인상태

(단위: %)

혼인상태	자녀연령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사례수	36명	70명	90명	183명	197명	576명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배우	72.2	45.7	35.6	36.6	22.8	35.1
사별	0.0	8.6	3.3	4.4	4.6	4.5
이혼	27.8	45.7	61.1	59.0	72.6	60.4

자료: 2005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그러면 2005년 센서스에서 0-4세 자녀를 출생한 여성은, 어떠한 생애 단계에 있는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45% 정도가, 0세 자녀를 가진 자녀의 50% 정도가 처음 자녀를 출생하였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첫 자녀 출생 여성들의 자녀 출생시 연령은 전체적으로는 28.1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혼인연령은 26.4세로, 혼인에서 첫 출산으로의 이행이 1.7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연령별로는 첫 출생 당시의 출산여성의 연령, 첫 출생 여성의 혼인연령, 혼인에서 첫 출생으로의 이행 기간 모두 2005년 현재 4세 자녀집단에서 가장 적거나 짧고, 최근 출생 집단에 오면 올수록 연령은 올라가고, 간격은 넓어져, 0세 집단의 출생연령은 28.6세, 혼인연령은 26.7세, 그리고 그 차이는 2.1세에 이르게 된다. 이는 2001-2005년의 4년 사이에 가족의 형성과 가족형성에서 자녀 출생으로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모두 연기되어 왔음을 알려 준다. <표 15>에 비교자료로서 제시된 동태통계에서 계산된 모의 첫 자녀 평균 출생연령은 상응하는 연령 또는 출생연도에서 거의 같은 수치를 보인다. 동태통계에서 계산된 것이 일관되고 0.2-0.3세 정도 높게 나타난다. 한편 총출생의 경우, 그 차이는 0.1-0.2세로 더 줄어든다. 그것은 아마도 동태통계의 지연신고

또는 센서스 자료에서 모 비동거 자녀가 빠진 데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하간 이는 센서스 자료의 정확성을 알려주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한편 둘째 이상의 출생으로 인한 가족규모의 확대도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나타낸다. 이들의 혼인연령은 첫 출생 여성에 비해 약 1.1-1.2세 정도 낮으며 출생연령은 2.3-2.6세 정도 높다. 그리고 0-4세 집단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는 변화 추세가 관찰된다. 최근에 올수록 혼인연령과 출생연령이 높아지고 둘 사이의 차이도 커진다. 이 둘의 차이 또는 이행기간의 차이는 1-3세에서 일부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나지만, <표 1>에 제시된 2001-2005년도의 합계출산력 추세를 고려하면, 이것도 오차라기보다는, 오히려 출산력 변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05년 현재 0-4세가 된 둘째 자녀를 출생한 여성들이 비록 혼인연령은 다르지만 첫 자녀를 출생한 여성들과 같은 이행 기간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면 2001-2005년에 출생한 둘째 출생의 첫 출생으로부터의 이행기간은 0-4세 집단 전체로는 3.6년이 된다. 그리고 그 안의 자녀연령집단 별로는 3.4년에서 3.8년의 분포를 보인다.⁸⁾ 우연히도 이 첫째에서 둘째 출생으로의 이행기간은 0-4세의 모든 자녀의 모의 출생시 연령과 혼인연령의 차이와 일치한다. 이들 자녀의 개별 자녀 출생의 경우는, 대체로 최근에 가까울수록 혼인연령과 출생시 모의 연령의 차이가 늘기는 하지만, 3.5년에서 3.75년 사이에 머문다. 또한 현재 젊은 연령층의 유배우 여성의 생애 기대자녀수가 1.8명 정도이고 2005년의 0-4세 출생자의 평균 출생순위가 1.64명임을 고려할 때, 자녀의 출생은 혼인 후 평균 4년 정도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의 생애에서 혼인에서 자녀 출생으로 이어지는 가족형성과 확산의 기간은 이미 매우 짧아 졌고, 당분간 이 기간은 유지되거나 더 짧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8) 2001-2005년의 첫 출생자의 혼인에서 첫 출생으로의 이행은 물론 이들의 첫 자녀 출생으로의 이행보다 늦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따라서 첫 출생에서 둘째 출생으로의 이행은 더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표15>에서 “둘째+”는 셋째 또한 일부 포함하고 있고, 이는 이미 둘째 출생만을 포함시켰을 경우보다 이행기간을 늘리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는 서로 상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표15>에서 “둘째+”를 “둘째”로 간주해 계산한 첫째에서 둘째로의 이행기간은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표 15> 어머니와 동거하는 2005년 센서스의 0-4세 자녀의 모의 평균 혼인연령과 자녀의 출생당시 모의 평균 출생연령과 동태통계 자료에서 계산된 2001-2005년 출생자 모의 출생시 연령

(단위: %)

자녀순위	모의 연령	센서스 자녀연령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총자녀	혼인	26.11	25.95	25.81	25.58	25.40	25.75
	출생	29.85	29.62	29.33	29.21	28.93	29.37
	차이	3.74	3.67	3.52	3.63	3.53	3.62
첫자녀	혼인	26.68	26.59	26.39	26.18	25.99	26.35
	출생	28.55	28.29	28.12	27.87	27.60	28.06
	차이	2.13	1.70	1.73	1.69	1.61	1.71
둘째+	혼인	25.55	25.36	25.28	25.06	24.91	25.21
	출생	31.13	30.85	30.44	30.38	30.03	30.55
	차이	5.59	5.50	5.16	5.32	5.12	5.34
동태통계 자료	출생순위	자녀출생연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합계	30.0	29.8	29.4	29.3	29.1	
	1	28.8	28.6	28.3	28.0	27.8	
	2	30.8	30.6	30.3	30.0	29.7	
3+	33.2	33.0	32.8	32.7	32.4		

주) 센서스에서 “모의 자녀 출생연령”은 해당 자녀연령에 상응하는 모의 연령에서 0.5세를 뺀 수치임.

자료: 2005년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및 전광희, 2006: 87.

제 6 장 맺는 말

우리나라의 경우, 동태통계의 완전성이 낮았던 1980년 이전에는 출산력 연구가 인구센서스 자료와 전국출산력조사 자료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동태통계의 질이 크게 개선되면서 출산력 지표의 작성과 추세 및 유형의 파악은 주로 동태신고 자료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1960년에 시작된 출산력 관련 문항은 2005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센서스에 포함되었으며, 2005년에는 총출생아수 이외에 동태신고를 통해 수집할 수 없는 자료인 추가 자녀출산 계획, 생존-사망 자녀수, 동거-비동거 자녀수, 자녀들의 모와의 동거여부 등을 추가로 묻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은, 그 목적이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된 기초 자료의 확보에 있지만, 출산력 연구의 폭과 전망을 넓히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들 자료의 유용성은 그 질 또는 완전성에 달려 있다. 아마도 센서스의 출산관련 자료들의 질과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출산력 관련 연구과제의 점검과 구체적인 자료의 분석, 그리고 그 결과의 다른 자료로부터 도출된 결과와의 비교일 것이다. 바로 이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분석의 체계성이나 정교함보다는, 센서스에 반영된 출산현상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고, 가능하면 그 결과를 동태통계의 분석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센서스 자료의 유용성과 한계를 살피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2005년 센서스 2% 표본 원자료가 기초 자료로 채택되었고, 고찰한 주요 내용은 총출산아수와 추가 자녀출산 계획, 이 둘을 합한 생애 기대자녀수, 기혼 여성의 초혼연령, 그리고 모와 동거하는 0-4세 자녀를 이용한 최근 출생의 출산 순위, 혼인-첫 출생-둘째 출생으로의 여성의 생애주기 이행에 관한 것들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는 센서스를 통한 출산력 분석의 유용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첫 출생의 비율, 평균 출산 순위, 출생시 모의 연령 등과 같이 동태통계 결과와의 비교가 가능한 내용에서는 그 일치의 정도가 매우 높으며, 약간의 차이도 부분들 사이에 매우 일관성을 보이고, 자료의 성격과 관련하여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이는 바로 센서스 특히 2005년 센서스의 출산관련 주요 자료들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센서스 자료의 완전성이 동태통계와 비슷하다는 것은 출산력 분석에 있어

센서스가 동태동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태동계에서는 혼인 관련 사항은 혼인이나 이혼 신고를 통해 별도로 파악하고, 사별 현황의 파악은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혼인상태와 관련된 출산력 분석은 동태자료에서는 간단하지 않다. 혼인상태나 혼인연령이 출산력과 출산행위의 핵심적 배경요인이라면, 그리고 센서스의 출산관련 정보가 신뢰성이 매우 높다면, 이와 관련된 동태자료의 한계는 센서스를 통해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출산행위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이 여성의 생애주기와 관련해 출산을 이해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만들어 사용한 모의 정보와 결합된 0-4세 자녀의 파일은 여성의 생애주기 연구에 있어 센서스 자료의 유용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0-4세 자녀 파일로는 개별 여성의 생산가족형성에서부터 최대 규모의 가족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파일을 0-9세로 확대하면 보다 충실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별거 자녀나 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에 관한 분석은 부와 동거하는 자녀의 부의 혼인상태에 대한 간단한 고찰에 제한되어 있다. 모의 동거 여부와는 관계없이 센서스 자료를 통해서도 부를 중심으로 한 출산의 분석도 가능하다. 또한 한 가구에 아동 인구가 2명 이상일 경우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그들의 부모는 물론 자녀들 사이에 출산서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가구주와의 관계”이다. 소가족 가구나 핵가족 가구에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확대가족이나 형제나 친척들이 동거하는 가족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가지고는 명확하게 성원들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상당수 발견된다. 출산력과 출산행위 분석에서 센서스 자료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점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의 지위를 가구주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 현재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핵가족 단위로 파악하는 “부부-자녀 관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으로 미래 출산력 추세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총출생아수와 생애 기대자녀수, 0-4세 자녀의 연령별 첫 출산과 혼인에서 출산으로의 이행 등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우리나라의 출생률 반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의 경우 비혼과 이혼의 증가는 혼외 또는 미혼 출산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한 나라의

출산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혼인과 출산규범, 그리고 미혼자들의 자녀 양육환경이 바뀌면 미혼 출산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센서스에서 모든 출산 관련 정보를 기혼 여성에 한정하여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센서스의 출산관련 항목의 응답대상을 미혼여성으로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7 장 참고문헌

- 권태환. 1997. “출산력 변천의 과정과 의미” 권태환·김태현·김두섭·전광희·은기수.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서울: 일신사.
- 권태환·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두섭. 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제 1권 제1집.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 _____. 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서울: 집문당.
- 김민경. 2000. 『인구센서스의 이해』. 서울: 글로벌.
- 김승권. 2003.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2003-12 (통권 8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현. 2005. “가치관의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2005-4 (통권 10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은기수. 2003. “가족가치관”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여성부.
- 이연주. 2003. “결혼과 출산 등의 가족형성과 경제활동: 가정과 직장의 병립을 위하여” 『보건복지포럼』 2003-12 (통권 8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광희. 1997. “출산력 변화의 메커니즘” 권태환·김태현·김두섭·전광희·은기수,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서울: 일신사.
- _____. 2006. “한국의 혼인력과 출산력: 추이와 전망” 『통계』 제32권 1,2호 통합본. 대한통계협회.
- 통계청. 2006. “2005년 동태통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인구와 사회』 2-2.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 통계청. 2007. 『장래 가구추계 결과』. (미 간행)
- Cho L-J. 1973. *The Demographic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No. 29.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 Kim M-K. 2004. “population and census and other data sources” in Kim D-S & Kim C-S (eds.), *The Population of Korea*, Seoul: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Kwon T-H. 1977. *Demography of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Kwon T-H. 2007. “Trends and implications of delayed and non-marriage in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3-3.

<감사의 말>

필자는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많은 노력을 들여 만든 2005년 센서스 2% 표본 자료를 흔쾌히 제공해준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의 김두섭 소장, 자료처리와 분석을 위해 궂은 일을 도맡아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은기수 교수, 센서스 원자료를 필자가 원하는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준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의 현성민 씨, 그리고 주요 인구자료를 쉽게 찾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KOSIS에 포괄적인 인구자료를 수록해준 통계청 관련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

최근 한국 인구이동의 특징과 변화

최진호
(아주대학교)

<표 목차>

<표 1> 한국의 인구이동 추이, 1965-2005	38
<표 2> 시·도간 인구이동, 1965-2005	40
<표 3> 도별 총 이동자의 도외 및 서울 이동 비율, 1965-2005	42
<표 4> 수도권내 인구이동, 1965-2005	44
<표 5> 전국이동 중 수도권 이동의 비중	46
<표 6> 수도권 전입자의 전거주지, 1965-2005	48
<표 7> 수도권으로의 이출률, 1965-2005	49
<표 8>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	51
<표 9> 수도권내 지역별 이동자의 특성, 2000-2005	54
<표 10> 수도권의 인구집중, 1960-2005	57
<표 11> 수도권의 인구증가분, 1960-2005	58

최근 한국 인구이동의 특징과 변화

최진호 (아주대)

제 1 장 연구목적과 방법

1절 연구목적

이 연구는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의 한국 인구이동의 특징을 밝히고 과거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를 추적하려는 것이다. 인구이동은 출생, 사망과 더불어 한 지역의 인구 규모의 증, 감이나 인구 구성의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인구학적 과정의 하나이다. 이때 출생이나 사망은 생물학적인 현상으로서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한번 밖에는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구이동은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어떤 개인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이동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구이동은 인구학적 과정 중에서도 단기간에 특정지역 인구의 규모나 구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인구이동의 영향력에 비하면 한국의 인구이동 연구는 출생이나 사망과 비교할 때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의 하나는 한국인들의 인구 이동이 다른 사회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이들 빈번한 인구이동을 모두 다 추적하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인구센서스는 1970년부터 인구이동을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인 5년 전 거주지와 1년 전 거주지를 포함하고 있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인구이동의 분석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5년 센서스에 포함된 5년 전 거주지 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한국인의 인구이동 성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로 인구이동의 흐름을 분석한 후, 특히 과거 수십 년간 문제가 되어 온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구이동을 분석하려 한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정책 수립에 긴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2절 자료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이다. 2005년 인구센서스는 5년 전 거주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2005년 센서스 당시의 거주지와 5년 전 거주지를 비교함으로써 인구이동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이 처럼 센서스의 두 시점을 비교하여 이동을 분석할 경우의 약점은 단순히 두 시점의 거주지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이 5년 동안에 여러 번 이동을 했더라도 한 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또 같은 기간 중 이동이 있었지만 5년 전 거주지로 다시 되돌아간 경우에는 실제로는 두 번 이동이 있었지만 이 분석에서는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복이동과 귀환이동의 누락을 감안한다면 실제의 이동의 양은 분석에서 나타난 이동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음을 유의해야 하겠다.

이 연구는 2005년 센서스의 10% 표본 집계 결과와 센서스 2% 표본 원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2 장 기존의 인구이동 연구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인구학의 다른 분야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다. 보통 인구이동의 분석에 쓰이는 자료에는 인구 센서스자료를 비롯하여 주민등록자료나 표본조사자료가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연구는 주로 인구 센서스자료를 많이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인구센서스에서 5년 전 거주지 항목이 처음으로 조사된 것은 1970년 센서스 부터로서 그 이후 1년 전 거주지, 혹은 출생지 등이 조사 항목에 포함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이들 거주지 항목을 이용하여 인구이동의 총량, 지역 간, 혹은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의 방향 그리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동자의 특성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김대영, 이효구, 1979; Kim and Sloboda, 1981; 이한순, 이우리, 1983; 최진호, 1982, 1986, 1994, 1997; Noh, 1991).

또 1980년 이후에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관련하여 수도권의 인구 이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행하여졌으며(문현상, 한영자, 1989), 1985년부터는 매 센서스결과를 분석하는 연구 중에 인구이동도 포함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최인현 외, 1989; 최진호, 최병선, 1993; 김남일 외, 1997; 최진호, 2002).

제 3 장 한국의 국내 인구이동

1절 인구이동 추이

먼저 <표 1>은 1970, 1980, 1990, 2000 그리고 2005년의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각 5년간의 총 이동자수와 이동률을 시·도내 이동과 시·도간 이동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이동은 시·군·구의 행정 구역을 벗어나서 거주지를 옮긴 경우로 정의한다.

<표 1> 한국의 인구이동 추이, 1965-2005

(단위: 천 명, %)

	총이동자수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기타이동	이동률		
					총이동	시·도내	시·도간
1965-1970	4,394 (100.0)	1,918 (43.7)	2,457 (55.9)	20 (0.5)	16.2	7.1	9.1
1975-1980	7,658 (100.0)	3,879 (50.7)	3,739 (48.8)	40 (0.5)	22.8	11.5	11.1
1985-1990	9,871 (100.0)	4,380 (44.4)	5,435 (55.1)	55 (0.6)	24.6	10.9	13.5
1995-2000	9,711 (100.0)	4,191 (43.2)	5,386 (55.5)	134 (1.4)	23.1	10.0	12.8
2000-2005	9141 (100.0)	3730 (40.8)	5238 (57.3)	173 (1.9)	20.8	8.5	11.9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표에서 보면 2000-2005년의 최근 5년간 시·군·구의 경계를 벗어나서 거주지를 옮긴 이동자는 총 914만 명으로서 2005년 현재 5세 이상 총 인구의 20.8%가 이동을 경험하였다. 총 이동자수는 1965-70년 이래 큰 폭으로 증가해 오다 1985-1990년의 987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서 계속해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총 이동자들을 시·도내 이동과 시·도간 이동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1975-1980년 기간만을 예외로 하고는 시·도간 이동이 시·도내 이동보다 많다. 최근 5년간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시·도간 이동자가 많아 전체 이동자의 57.3%에 이르고 있으며 시·도내 이동자는 40.8%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이동의 추세 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총 이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시·도간

이동자의 비율이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인데 이는 대도시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주지 교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총 이동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니면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농촌인구의 이출 압력의 완화, 또 대도시내에서의 주거 안정에 의한 이동 요인의 감소 등에도 기인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더불어 국외에서 전입한 기타이동도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점차 활발해 저가고 있는 국제화에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2절 시·도간 인구이동

이제 이와 같은 총 인구이동을 좀 더 세분화해서 시·도별로 전입과 전출 그리고 순 이동을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에서 보면 우선 서울의 경우 전입은 최근 5년 동안에 그 이전 1995-2000년보다 오히려 늘어나 101만 명이 전입하였고 전출은 거꾸로 감소해 147만 명이 전출하였다. 따라서 5년 동안의 순 이동은 1995-2000년보다 감소한 45만 6천명의 전출 초과를 보인다.

서울의 이동만을 놓고 보면 최근 5년간의 이동 패턴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서울의 전입자 수는 1985-90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5-2000년 5년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해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0-2005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었는데 거꾸로 다시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전출도 2000년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2005년에 이르면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로의 인구집중 압력이 1990년을 고비로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가 최근 5년에는 다시 반전되어 인구집중 압력이 커진 것을 의미해 매우 흥미롭다.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를 보면 부산과 울산의 경우는 순 이동의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5년과 그 이전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표 2> 시·도간 인구이동, 1965-2005

(단위: 천 명)

	전입					전출					순이동				
	65-70	75-80	85-90	95-00	00-05	65-70	75-80	85-90	95-00	00-05	65-70	75-80	85-90	95-00	00-05
서울	1,191	1,256	1,333	971	1,015	248	753	1,377	1,656	1,471	943	503	-44	-685	-456
부산	309	539	373	216	198	127	221	348	400	380	182	318	25	-184	-182
대구	-	-	292	201	179	-	-	213	248	244	-	-	79	-47	-64
인천	-	-	413	339	290	-	-	174	279	312	-	-	239	60	-23
광주	-	-	186	164	143	-	-	122	144	144	-	-	64	20	-1
대전	-	-	199	210	196	-	-	96	152	163	-	-	103	58	33
울산	-	-	-	110	94	-	-	-	111	96	-	-	-	-1	-2
경기	346	905	1,457	1,680	1,787	320	437	727	908	892	26	468	730	772	896
강원	103	105	123	164	148	184	275	299	178	178	-81	-170	-176	-14	-29
충북	56	73	122	169	148	164	208	190	143	152	-108	-135	-68	26	-4
충남	99	166	137	262	263	308	332	326	199	217	-209	-166	-189	63	46
전북	55	65	81	133	99	205	274	267	169	182	-150	-209	-186	-36	-83
전남	58	89	140	171	113	277	429	437	226	225	-219	-340	-297	-55	-112
경북	146	264	245	275	246	303	400	453	281	295	-157	-136	-208	-6	-49
경남	98	296	360	283	284	307	385	372	262	254	-209	-89	-12	21	30
제주	14	22	29	36	35	12	25	33	31	34	2	-3	-4	5	1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그러나 나머지 광역시인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전입은 줄고 전출은 비슷하거나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전출 초과로 인한 마이너스 순 이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인천과 광주도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에 순 이동이 전출초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인천의 경우 1995-2000년 기간에는 순 이동이 6만 명 이었으나 2000-2005년에는 2만 3천명의 마이너스 순 이동을 기록하고 있다. 7개의 특별시나 광역

시 중에서 대전을 제외한 모든 대도시가 순 이동에 있어 마이너스를 보여 과거 서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 도시에서도 대도시권이 형성되면서 근교 지역의 교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이하게 대전만이 비록 그 이전보다 순 이동의 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플러스의 순 이동을 보이고 있어 이채롭다.

한편 도중에서는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 플러스의 순 이동을 보이는 곳이 경기, 충남, 경남, 그리고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제주 등 네 곳이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는 전입은 지속적으로 늘고 전출은 감소해 순 이동의 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2000-2005년 사이에 경기도는 178만 명이 전입하고 89만 명이 전출하여 90만 명의 전입초과를 기록하고 있다. 또 경남도 순 이동의 양이 1995-2000년의 2만1천명에서 2000-2005년에는 3만 명으로 증가해 서울대도시권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산대도시권에서도 교외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과 그 이전 5년간의 시·도간 이동에서 또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 유출지역인 강원, 전북, 전남 등 지역에서 인구이동으로 인한 마이너스 순 이동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충북의 경우는 1995-2000년에는 순 이동이 플러스였으나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도간 이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을 개관해 보면 최근에 이르러 인구이동의 패턴이 다시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제 이와 같은 시·도간 이동의 패턴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각 도의 총 이출자중 도외 이출비율과 그중에서 서울 이출 비율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 도별 총 이동자의 도외 및 서울 이동 비율, 1965-2005

(단위: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0-2005	
	도외	서울	도외	서울	도외	서울	도외	서울	도외	서울
경기	68.5	78.4	58.8	71.2	61.6	60.5	51.3	47.6	44.2	52.1
강원	63.0	47.3	71.6	36.7	72.4	29.1	68.7	27.5	68.8	27.2
충북	74.9	51.8	76.5	36.1	68.3	28.4	70.1	20.3	70.2	20.5
충남	75.9	63.3	69.7	47.0	81.7	28.2	76.2	20.1	74.6	19.7
전북	65.1	63.4	71.0	49.3	63.7	41.9	62.6	30.8	67.7	26.4
전남	57.9	62.8	61.3	47.3	79.6	30.4	74.6	20.8	77.3	18.5
경북	49.0	43.6	38.1	32.0	71.1	16.6	70.4	14.6	71.8	14.1
경남	70.6	21.5	64.7	15.3	53.1	15.6	55.6	13.4	53.2	14.3
제주	50.0	41.7	62.5	32.0	55.9	33.3	52.5	32.3	53.9	29.6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우선 표에서 보면 전체 시·군·구간 이동자 중에서 타도로 이동한 이동자의 비율이 높은 도는 전남, 충남, 경북, 충북의 순으로서 대체로 70%에서 77% 가까이 타도로 진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5년 전인 1995-2000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타도로의 진출 비율이 가장 낮은 도는 경기도로서 44.2%만이 타도로 진출하였다. 최근 5년간의 인구이동 경향을 그 이전 5년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도에서는 큰 변화 없이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는 도외 이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 내에는 이출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유인 요소들이 다른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기도와는 반대로 전북과 전남은 타도 이출자의 비율이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들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 유출 지역들로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인구를 자체 도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타도로 유출시키고 있다.

또 타도전출자 중에서 서울로 이동한 이동자의 비율을 보면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4%에서 30%의 도외 이동자들이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는 도외 이동자의 52%가 서울로 이동하고 있어 서울로부터 많은 인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 서울로도 많은 인구를 내 보내고 있어 서울과의 인구이동이 매우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미 서울과 그 주변 경기도 지역을 포함하는 서울대도시권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

대도시권내에서의 단거리 이동이 매우 빈번함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한편 서울로의 이출비율이 낮은 도는 경북, 경남, 전남, 충남으로서 이들 도에서는 도외 전출자의 20%미만만이 서울로 이동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이들 도들의 중심에 광역 대도시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위에 큰 도시가 없는 강원도와 전북은 서울로의 이동 비율이 26-27%로 높게 나타난다.

제 4 장 수도권 인구이동

1절 수도권 인구이동추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수도권에 초점을 맞추어서 최근 5년간의 인구이동의 변화를 분석하려한다. <표 4>는 수도권의 이동을 좀 더 자세히 보기위해서 수도권 내 이동, 수도권 내외로의 진출과 전입, 그리고 순 이동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수도권으로의 전입을 보면 최근 5년간이 그 전보다 전입자 수가 약간 증가하였다. 즉 2000-2005년간 수도권으로의 총 전입자는 126만 명으로서 1995-2000년의 113만 명과 비교했을 때 13만 명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수도권으로의 전입자의 증가는 1995-2000년 기간이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침체기였기 때문에 전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최근에 들어서서 그 전 추세로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표4> 수도권의 인구이동, 1965-2005

(단위: 천명,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0-2005
수도권내 이동	373	747	1,656	1,962	1,953
경기 → 서울	251	311	440	432	465
→ 인천	-	-	102	122	103
인천 → 서울	-	-	64	65	68
→ 경기	-	-	65	119	167
서울 → 경기	122	436	825	1,098	1,058
→ 인천	-	-	160	126	93
수도권외 진입	1,164 (100.0)	1,414 (100.0)	1,547 (100.0)	1,130 (100.0)	1,261 (100.0)
서울 →	940 (80.8)	945 (66.8)	829 (53.6)	535 (47.3)	548 (43.5)
인천 →	-	-	151 (9.8)	96 (8.5)	100 (8.0)
경기 →	224 (19.2)	469 (33.2)	567 (36.6)	499 (44.2)	612 (48.6)
수도권외 진출	195 (100.0)	443 (100.0)	622 (100.0)	881 (100.0)	722 (100.0)
서울 →	126 (64.6)	317 (71.6)	392 (63.0)	432 (49.0)	320 (44.3)
인천 →	-	-	45 (7.2)	95 (10.8)	78 (10.7)
경기 →	69 (35.4)	126 (28.4)	185 (29.8)	354 (40.2)	324 (44.9)
수도권 내외간 순이동					
수도권	969 (100.0)	971 (100.0)	925 (100.0)	249 (100.0)	539 (100.0)
서울	814 (84.0)	628 (64.7)	437 (47.2)	103 (41.4)	228 (42.3)
인천	-	-	106 (11.5)	1 (0.04)	22 (4.0)
경기	155(16.0)	343 (35.3)	382 (41.3)	145 (58.2)	289 (53.6)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이제 이들 전입자의 목적지를 보면 서울과 인천은 그 이전 기간보다 약간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대폭 증가해 1995-2000년의 49만 9천명에서 최근 5년간에는 61만 1천명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전입자가 증가한 것은 주로 경기도로의 전입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전입자 전체에 대한 각 목적지별 비율도 서울과 인천은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전입과는 반대로 수도권 외로의 전출은 최근 5년간이 그 이전 5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 즉 2000-2005년간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전출은 72만 2천명으로서 그 이전의 88만 1천명보다 15만 9천명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출자 감소의 폭은 서울이 오히려 경기도보다 커서 서울에서는 11만 2천명의 전출자의 감소를 기록 한 반면 경기도에서는 3만 명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입과 전출의 결과 수도권의 순 이동은 대폭 늘어나 2000-2005년에는 53만 9천명의 전입 초과를 기록하여 그 이전 기간보다 29만 명의 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순 이동에 있어서 서울은 12만 5천명이, 인천은 2만 1천명이, 그리고 경기도는 14만 4천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1990년대 후반기의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잠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주춤하였다가 2000년 들어 다시 과거처럼 인구집중추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한편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은 과거보다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즉 2000-2005년간 수도권 내에서 이동한 총 이동자는 195만 명으로서 그 이전 1995-2000년의 196만 명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이를 서울, 인천, 경기도등 목적지 별로 보면 서울을 목적지로 하는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은 1995-2000년의 49만 7천명에서 2000-2005년에는 53만 3천명으로 증가한 반면 인천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경기도는 그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최근 5년간에는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을 향한 이동이 과거보다 더 활발해진 것을 알 수 있겠다.

이제 이와 같은 수도권의 인구이동이 전국의 시·도간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표에서 보면 2000-2005년의 5년간 전국의 5세 이상 인구 중 시·도의 경계를 벗어나서 이동을 한 사람은 모두 523만 8천명이다. 이들 중에서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은 126만 1천명이고, 수도권에서 거주하다가 수도권 외로 전출해 나간 사람이 72만 2천명이다. 또 195만 3천명은 수도권내의 다른 시·도로 이동한 사람들이다.

지난 1965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전국 시·도간 이동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70%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 비중은 1995년부터는 점차로 증가하기 시작해 1995-2000년에는 73.8%, 그리고 최근 5년간에는 75.1%로 증가하였다.

이들 증가 요인을 다시 세분해서 보면 수도권에서의 전입 비중은 1965년의 47.4%에서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해 1995-2000년에는 21.0%로 감소했었으나 최근 5년에 다시 24.1%로 그 비중이 늘어났다. 이에 반해서 수도권 외로의 전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5년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표 5> 전국이동 중 수도권 이동의 비중

(단위: 천 명,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0-2005
수도권외에서 전입	1,164 (47.4)	1,414 (37.8)	1,547 (28.5)	1,130 (21.0)	1,261 (24.1)
수도권외로 전출	195 (7.9)	443 (11.8)	622 (11.4)	881 (16.4)	722 (13.8)
수도권내 이동	373 (15.2)	747 (20.0)	1,656 (30.5)	1,962 (36.4)	1,953 (37.3)
합계	1,732 (70.5)	2,604 (69.6)	3,825 (70.4)	3,973 (73.8)	3,936 (75.1)
전국 시·도간 이동	2,457 (100.0)	3,739 (100.0)	5,435 (100.0)	5,386 (100.0)	5,238 (100.0)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한편 수도권내의 시·도간 이동비중은 1965년 이래 일관성 있게 증가해 1965-1970년의 15.2%에서 2000-2005년에는 37.3%로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국의 시·도간 이동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비중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 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록 그 비중은 커지고 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동자의 절대 수는 최근 5년이 그 전보다 감소하기 시작해 1995-2000년의 397만 3천명에서 2000-2005년에는 393만 6천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시·도 간 이동자의 총수도 1985-1990년의 543만 5천명을 최고로 그 이후 점차 감소해 1995-2000년에는 538만 6천명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523만 8천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국의 총 시·도간 이동자수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동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전입자수는 절대 수에서 그리고 그 비중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따라서 2000-2005년에는 그 전과 비교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2절 수도권 전입자의 전 거주지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본바와 같이 1990년대 말에 잠시 주춤했던 수도권으로의 전입이 2000년대 초에 다시 되 살아나고 있는데 이들의 전 거주지는 어디인가? 이제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6>은 수도권 전입자의 전 거주지를 백분비로 정리한 것이다.

2000-2005년 기간 중 수도권 전입자 총수는 126만 1천명인데 시·도 지역별로 수도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배출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와 충남으로 각각 수도권 전입자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 다음으로는 부산과 전북으로 9%가 넘는 비율을 보인다.

5년 전인 1995-2000년과 비교해 보면 수도권 전입자의 주요 배출 지역은 그리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즉 1995-2000년에도 수도권 전입자의 주요 배출지는 강원, 부산, 충남, 전북으로서 순위는 다소 바뀌었지만 최근 5년간과 다르지 않아 과거의 패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전입자 중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1995-2000년과 최근을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증가한 도는 대구, 광주, 대전 등의 광역시와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이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한 지역은 전남으로서 1995-2000년에 8.9%에서 최근에는 7.6%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수도권 전입자 중에서 전남에서 이주한 이동자의 비율은 1975-1980년에는 20.3%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 광주가 광역시로 독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져 최근까지도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수도권 전입자의 전거주지, 1965-2005

(단위: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0-2005
부산	5.8	5.5	7.6	9.8	9.5
대구	-	-	4.3	6.3	6.6
광주	-	-	4.1	5.6	6.0
대전	-	-	3.2	6.2	6.7
울산	-	-	-	2.4	2.2
강원	10.2	12.3	12.7	10.4	9.8
충북	9.3	8.6	7.5	6.5	6.7
충남	22.0	18.2	13.5	9.5	9.8
전북	13.2	13.6	12.7	9.5	9.2
전남	18.0	20.3	14.8	8.9	7.6
경북	13.4	12.7	8.7	7.8	8.0
경남	6.8	6.0	7.0	6.4	6.5
제주	0.2	0.8	1.1	1.6	1.6
외국 및 미상	0.9	2.0	2.7	9.0	9.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입자(천명)	1,163	1,415	1,1549	1,134	1,261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앞에서 분석한 수도권 전입자의 각 시·도별 비중은 각 시·도의 인구규모에 영향을 받아서 인구가 많은 시·도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표 7>에서는 각 지역의 인구규모를 감안한 수도권으로의 이출률을 비교함으로써 각 지역과 수도권과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각 지역의 인구는 인구이동의 시작 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최근 5년의 각 시·도의 수도권 이출률을 보면 적게는 경남의 2.8%에서 많게는 강원 8.3%의 사이에서 분포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경남은 그 이전 시기와의 비교를 위해서 편의상 울산을 포함한다. 울산을 포함한 경남의 수도권 이출률이 가장 낮은 것은 경남지역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대해서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경남지역에는 부산과 울산 등 대도시가 잘 발달해 있고, 또 동남해안 공업벨트를 포함한 다수의 취업기회가 존재하는데 비해서 수도권과는 멀리 떨어진 것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수도권으로의 이출률, 1965-2005

(단위: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0-2005
부산	4.7	3.2	3.4	3.2	3.3
대구	-	-	3.3	3.2	3.4
광주	-	-	7.1	5.6	5.6
대전	-	-	5.7	6.1	6.1
강원	6.5	9.3	11.4	8.7	8.3
충북	7.0	8.0	8.3	5.8	5.7
충남	8.8	8.7	9.9	6.6	6.7
전북	6.1	7.8	8.9	6.2	6.1
전남	5.2	7.2	8.1	5.3	4.8
경북	3.5	3.7	4.5	3.6	3.7
경남1)	2.5	2.6	3.1	2.9	2.8
제주	1.8	2.7	3.5	3.9	3.9

주) 울산 포함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반대로 인구이동 측면에서 수도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인데 2000-2005년 동안에 강원도 주민의 8.3%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강원도는 과거의 자료를 보아도 1975년 이래로 수도권으로의 이출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근접해 있으면서 지역 내 인구를 흡인할 만한 대도시가 발달해 있지 못하고 아울러 충분한 산업기반도 갖추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인구이동의 이출률 측면에서 강원도 이외에 수도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은 충남으로 6.7%의 이출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전과 전북으로 각각 6.1%의 이출률을 보인다. 최근 5년간의 수도권으로의 이출률을 그 전 5년과 비교해 보면 많은 지역에서 이출률이 같거나 약간만 차이가 나거나 하여 거의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출률에 있어서 다소 변화가 있는 지역은 강원과 전남으로서 강원도의 경우는 이출률이 1995-2000년의 8.7%에서 최근에는 8.3%로 줄어들었으며, 전남의 경우에도 역시 5.3%에서 4.8%로 감소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출률의 변화는 이들 두 지역의 수도권에 대한 인구이동 압력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지 주목된다.

3절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

앞에서 우리는 지역 간 인구이동의 분석을 통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압력이 1990년대 후반기의 경제 침체기를 거치면서 다소 완화되었으나 2000년대 전반기에는 그 추세가 반전되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그 전 5년과 비교해 다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압력이 아직도 지방에 과거처럼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 정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이때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수도권으로 전입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전입이유를 정확히 안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인구센서스에서는 이동이유를 묻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간접적으로 수도권 전입자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얻고자 한다.

이제 <표 8>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1995-2000년과 최근 2000-2005년의 5년간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전입자와 같은 기간 중에 수도권 외로 전출해 나간 전출자, 그리고 계속해서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서로 비교한 것이다.

먼저 최근 5년간 수도권 전입자와 전출자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우선 이동자의 성에 있어서는 전입자와 전출자간에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즉 수도권 전입자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전입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전출자 중에는 거꾸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이와 같이 전입자 중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경향은 1995-2000년 기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출자 중에서는 남녀의 비가 거의 비슷했었으나 최근에는 전출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많아 다소 변모된 양상을 보인다.

한편 수도권 전입자와 전출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전입자의 경우는 15세에서 29세 사이에서 전출자보다 그 비율이 높는데, 특히 20-24세와 25-29세 연령층에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예컨대 전입자 중에서는 20-24세 연령층의 비율이 13.7%인데 비해서 전출자의 경우는 7.9%이며, 마찬가지로 25-29세 연령층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19.0%, 11.8%로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표 8>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

(단위: %)

	구분	1995-2000			2000-2005		
		전입자	전출자	거주자	전입자	전출자	거주자
성	남자	47.5	50.9	49.4	46.9	53.3	49.0
	여자	52.5	49.1	50.6	53.1	46.7	51.0
연령	14세 이하	13.7	20.0	22.4	13.8	16.5	20.2
	15-19	6.4	4.5	7.6	5.5	3.7	6.3
	20-24	15.7	7.2	6.4	13.7	7.9	6.2
	25-29	22.1	14.4	9.1	19.0	11.8	7.8
	30-34	14.3	17.6	9.6	15.1	15.6	9.3
	35-39	9.8	14.4	9.9	10.5	13.3	9.4
	40-44	6.5	8.1	9.4	7.7	8.5	9.3
	45-49	3.4	4.0	6.7	4.8	6.6	8.8
	50-54	1.9	2.4	5.2	2.6	3.8	6.2
	55-59	1.3	2.0	4.3	1.9	3.2	4.9
	60이상	4.9	5.5	9.4	5.5	9.0	11.6
교육	불취학	5.4	7.0	13.3	4.3	6.5	10.4
	초등학교	12.2	17.2	16.6	11.6	14.8	15.3
	중학교	7.1	9.0	12.4	6.5	7.8	11.5
	고등학교	31.0	34.5	34.6	25.7	28.8	32.0
	대학교	43.3	31.5	22.7	45.6	37.0	27.7
	대학원이상	1.2	0.9	0.4	6.3	5.1	3.0
혼인상태	미혼	41.1	23.3	28.6	42.7	28.2	29.3
	유배우	52.7	70.0	63.0	50.3	62.8	61.0
	사별	4.2	4.1	6.2	4.1	4.9	6.4
	이혼	2.0	2.6	2.2	2.9	4.1	3.3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61.7	62.5	62.3	56.0	53.3	51.2
	미취업	38.3	37.6	37.8	44.0	46.7	48.8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이와는 반대로 14세 이하와 30세 이상에서는 전출자에서 그 비율이 높는데 특히 전입자와 전출자간 차이가 큰 연령층은 14세 이하와 35-39세, 그리고 60세 이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입자와 전출자간의 연령분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수도권 전입자 중에는 학업이나 취업기회에 이끌려서 전입하는 젊은 층이 많다는 것이며, 거꾸로 전출자 중에서는 은퇴에 따른 노년층의

전출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95-2000년에도 그대로 발견되고 있었는데 다만 그 때와 다른 점은 60세 이상의 노년층에 있어서 그 차이가 더 커 졌다고 하는 점이다.

한편 전입자와 전출자간의 학력수준의 차이를 보면 전입자의 학력이 전출자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그 차이는 대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전입자의 경우 대학교 재학이나 졸업의 비율은 45.6%이나 전출자의 경우는 37.0%이다. 따라서 수도권 전입자 중에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흥미 있는 것은 비이동자인 거주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학교 학력 소유자의 비율이 27.7%로서 전입자와 전출자 모두와 비교해서 매우 낮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그것이 전입이든 혹은 전출이든 간에 교육과 관련된 이동을 상당수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즉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서 전입했다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또 상당수가 취업과 동시에 수도권 외로 전출하는 경향이다. 또 다른 해석은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관련된 해석으로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전입자와 전출자간의 학력수준의 차이는 5년 전인 1995-2000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었는데 다만 최근에 와서는 전입자와 전출자 모두에서 대학교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5년전보다 높아져 최근의 학력 수준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다.

앞에서 드러난 전입자와 전출자간의 연령 분포의 차이는 그대로 혼인상태에 반영되어 전입자에 있어서는 전출자보다 미혼의 비율이 높고, 거꾸로 유배우의 비율은 전출자에 있어서 더 높다. 한편 경제활동 상태에 있어서는 전입자와 전출자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취업자 비율이 각각 56.0%, 53.3%로 전입자에 있어서 그 비율이 조금 높다.

경제활동상태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현상은 1995-2000년과 비교해 이동자나 비이동자 모두에서 취업자의 비율이 최근에 낮아졌다는 점이다. 즉 1995-2000년에는 취업자 비율이 대체로 60%를 상회하고 있었으나 2000-2005년에는 50%대에 머물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수도권으로의 전입자는 전출자에 비해 여자가 많으며, 연령은 상대적으로 젊어 20대의 연령층이 전입자 중에 많다. 학력수준은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미혼의 비율이 전입자에게서 높다. 이와 같은 최근 수도

권 이동자의 특성은 그 이전인 1995-2000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큰 변화가 없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절 수도권 내 지역별 이동자의 특성

앞에서는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을 수도권 전체로 묶어서 분석하였으나 이제 이들의 특성을 보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수도권을 중심도시인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들 수도권의 두 지역으로의 전입과 전출 그리고 이들 지역 간의 수도권 내 이동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수도권 이동자의 남녀별 성을 보면 대체로 수도권 내 이동과 수도권 외에서의 전입자 중에는 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전출자에서는 남자가 많다. 그런데 수도권 전입자를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한 경우와 지방에서 경기나 인천으로 전입한 경우를 나누어서 보면 서울로 전입한 이동자 중 여자는 54.5%로 경기나 인천으로 전입한 경우의 51.6%보다 여자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수도권 전입자 모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이 아니고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한 사람들 중에 여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겠다. 이처럼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로의 전입자 중에서 여자가 많은 것은 주로 여성취업과 관련된 이동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입의 경우와는 달리 수도권 전출자중 서울에서 전출한 경우와 경기 인천에서 전출한 경우 간에는 두 경우 다 남자가 여자보다 많지만 이동자의 성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연령 분포에 있어서는 수도권 전입자중 특히 20-24, 25-29세의 젊은 층의 유입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한 흐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한 이동자 중 20-24세의 비율이 19.4%, 그리고 25-29세의 비율은 22.5%인데 비해서 지방에서 경기나 인천으로의 이동자 중 같은 연령층의 비율을 각각 10.9%와 18.1%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그중에서도 20-24세 연령집단의 차이가 더 큰데 이는 주로 서울에 소재한 대학으로의 대학생의 이동의 결과로 보여 진다.

이제 이들 이동자의 연령 분포를 수도권 이동의 6개의 흐름별로 비교해보면 지방에서 서울로의 전입은 주로 20대가 주도하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 경기나 인천의 흐름에서는 20대 후반과 30대의 비율이 특히 높다. 여기에 비해서 수도권에서의 전출 이동의 경우는 서울에서 전출하거나 경기 인천에서 전출하거나 상관없이 모두 30대 전반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

대 후반과 30대 전반에서 비율이 높다.

<표 9> 수도권내 지역별 이동자의 특성, 2000-2005

(단위: %)

	구분	수도권 내 이동		수도권 외 전입		수도권 외 전출	
		경기/인천 > 서울	서울 > 경기/인천	지방 > 서울	지방 > 경기/인천	서울 > 지방	경기/인천 > 지방
성별	남자	48.8	49.7	45.5	48.4	53.6	53.1
	여자	51.2	50.3	54.5	51.6	46.4	46.9
연령	14 이하	18.2	13.6	11.0	15.5	13.2	19.2
	15-19	4.9	2.7	6.5	5.0	2.9	4.4
	20-24	7.2	5.1	19.4	10.9	6.8	8.8
	25-29	11.9	11.1	22.5	18.1	12.8	11.1
	30-34	14.7	18.6	12.9	16.4	17.8	13.9
	35-39	13.1	13.5	7.5	11.4	12.6	13.9
	40-44	10.1	7.1	6.5	7.7	8.0	9.0
	45-49	7.0	5.9	4.5	4.5	6.7	6.5
	50-54	3.8	5.2	2.7	2.3	4.6	3.3
	55-59	2.7	5.2	1.8	1.9	4.0	2.5
	60이상	6.3	12.1	4.7	6.2	10.7	7.5
교육 정도 (1)	불취학	4.8	5.0	3.4	5.0	6.2	6.7
	초등학교	13.8	12.9	9.1	13.2	12.7	16.4
	중학교	7.9	7.4	5.2	7.1	7.0	8.5
	고등학교	26.5	29.6	21.3	30.0	26.6	30.7
	대학교	40.7	39.7	54.9	40.4	40.8	34.0
	대학원 이상	6.3	5.4	6.1	4.3	6.8	3.7
교육 정도 (2)	불취학	4.8	5.0	3.4	5.0	6.2	6.7
	초등학교	13.8	12.9	9.1	13.2	12.7	16.4
	중학교	7.9	7.4	5.2	7.1	7.0	8.5
	고등학교 재학/수료/중퇴	3.2	1.8	2.8	2.9	1.5	2.5
	고졸	23.3	27.8	18.5	27.0	25.0	28.1
	대학교 재학/수료/중퇴	7.1	5.7	15.8	7.1	9.1	10.8
	대졸	33.6	33.9	39.1	33.3	31.7	23.2
	대학원 재학/수료/중퇴	1.3	1.3	2.2	1.1	1.5	1.0
	대학원졸	5.0	4.2	3.9	3.2	5.3	2.7
혼인 상태	미혼	31.0	23.9	55.3	36.4	28.1	28.3
	배우자 있음	61.1	67.9	38.3	55.9	62.7	62.9
	사별	4.1	5.0	3.8	4.6	5.4	4.4
	이혼	3.8	3.2	2.6	3.1	3.8	4.4
경제 활동 상태	취업(일하였음+일시휴직)	56.9	54.4	54.6	58.0	54.6	52.3
	미취업	43.1	45.6	45.4	42.0	45.4	47.7
직업	전문/기술	32.3	28.5	36.0	28.1	27.5	22.6
	행정/관리	4.0	5.1	1.8	2.1	5.2	3.7
	사무	24.6	23.0	26.0	21.5	17.5	14.4
	판매	11.7	10.7	10.6	7.9	8.0	8.7
	서비스	9.5	8.8	11.3	10.2	11.4	10.9
	농림어업	0.1	1.2	0.2	0.6	8.5	9.4
	생산/운수/장비/노무	17.8	22.7	14.1	29.5	21.9	30.4

자료: 통계청, 2005년 인구센서스 2% 표본의 자료

이와 같은 연령 분포는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데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흐름에서는 특히 30대 전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이동자의 연령분포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이동과 서울에서 수도권 외 지방으로의 이동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층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즉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이동에서는 12.1%, 서울에서 수도권 외로는 10.7%로서 다른 인구 이동 흐름에서 보여주는 6% 안팎의 비율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 이는 노년층의 경우 은퇴나 자녀들의 출가 이후에 서울 외곽의 근교나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수도권 내 지역별 이동자의 교육정도는 각 급 학교의 재학과 수료, 중퇴, 졸업을 다 합쳐서 보면 수도권 내 6개의 모든 이동의 흐름에서 대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대학교 학력의 비중은 각 흐름마다 달라서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자 중에서 54.9%로 가장 높고 경기 인천에서 지방으로의 이동자중의 34.0%로 가장 낮다. 이 두 흐름을 제외한 다른 이동에서는 대학교 학력의 비율이 대체로 40%정도를 나타낸다.

이제 이들 중에서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수도권 내·외로 이동하는 젊은 층의 규모를 추정해 보기 위해서 <표 9>에서는 교육정도를 재학, 수료, 중퇴와 졸업으로 다시 세분하여 그 비율을 산출하였다. 먼저 대학 졸업자의 비율을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에서 서울로의 흐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아서 39.1%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 인천에서 지방으로의 이동자중에서 23.2%로 가장 낮다. 또 나머지 흐름 중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자중에는 33%가량이 대졸 학력을 갖고 있으며 서울에서 지방으로 전출해 나간 이동자중에는 이보다 조금 그 비율이 낮아 31.7%를 보인다.

한편 대학 재학이나 수료, 중퇴의 비율을 보면 이들 흐름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데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에서는 그 비율이 15.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반면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흐름에서는 5.7%로 가장 낮다. 또 이 비율은 서울에서 지방의 흐름에서는 9.1%, 경기 인천에서 지방으로는 10.8%를 보여 수도권 관련 이동자중의 상당수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참고로 2005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보면 대학교 재학, 수료, 중퇴자를 다 합친 인구 중에서 대학교 재학자의 비율은 79%가량이다.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 흐름에서 미혼자의 비율이

55.3%로 가장 높고 지방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흐름에서 36.4%로 그 다음으로 높다. 미혼자의 비율은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흐름에서 가장 낮아 23.9%를 보이는데 이는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이동은 주로 기혼 층의 주택관련 이동이거나 혹은 은퇴 등의 가족관련 이동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제활동상태는 수도권 내 지역별 이동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으나 취업자의 비율이 지방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흐름에서 58.0%로 가장 높고 거꾸로 경기 인천에서 지방으로의 이동에서 52.3%로 제일 낮다.

이제 이들 취업자들의 직업 분포를 보면 수도권 외든지 수도권 내에서든지 서울로 향한 이동의 흐름에서 전문 기술직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즉 이 비율은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에서는 36.0%로 가장 높고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의 흐름에서는 32.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한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전출의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27.5%, 경기 인천에서는 22.6%로 가장 낮다. 이에 비해서 생산 운수 장비 노무직의 경우에는 전문 기술직의 경우와는 정 반대로 서울로 향한 이동의 흐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낮아 예컨대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에서는 14.1%를 보인다. 그러나 이 비율을 경기 인천에서 지방으로의 흐름에서는 30.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방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이동에서 29.5%로 높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두가지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우선 고급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전문 기술직은 여전히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지역에 생산직 노무자를 유인 할 수 있는 취업기회가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5 장 수도권외의 인구집중

앞에서 우리는 최근 5년간인 2000-2005년의 인구이동 분석에서 전국의 시도간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외의 이동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로의 전출이나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량은 최근 5년간에 1995-2000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외에서의 전입은 거꾸로 그 이전보다 약 13만 명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수도권 내외간의 순 이동도 1995-2000년에 24만 9천명의 전입초과에서 2000-2005년에는 53만 9천명의 전입초과로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최근 5년 동안의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특징은 1995-2000년 기간 중 경기 침체로 인하여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잠시 완화되었으나 2000-2005년에는 다시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 인구집중 추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구이동으로 인한 수도권외의 인구집중도를 정리한 것이 <표 10>이다. 표에서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는 10년 간격으로, 그리고 1990년 이후는 5년 간격으로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수도권외의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표 10> 수도권외의 인구집중, 1960-2005

(단위: 천 명, %)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서울	2,445	5,525	8,364	10,613	10,231	9,895	9,820
경기도1)	2,749	3,353	4,934	7,974	9,958	11,459	12,946
수도권2)	5,194	8,879	13,298	18,587	20,189	21,354	22,766
전국	24,989	31,434	37,436	43,411	44,609	46,136	47,279
서울/전국	9.8	17.6	22.3	24.4	22.9	21.5	20.8
경기도/전국	11.0	10.7	13.2	18.4	22.3	24.8	27.4
수도권/전국	20.8	28.2	35.5	42.8	45.3	46.3	48.2

주1) 인천 포함.

2) 수도권 = 서울+경기도

자료: 경제기획원(1963, 1972, 1982a): 통계청(1993, 1997a, 2002a, 2006)

먼저 전국인구에 대한 서울인구의 비중은 199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4%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는 감소하기 시작해 2005년에는 20.8%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서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의 인구비중은 꾸준히 그 비중이 늘어나 2005년에는 27.4%에 달하였다. 경기도의 인구 비중이 서울보다 더 커진 시기는 2000년으로서 이때 경기도는 전국인구의 24.8%인데 비해서

서울은 21.5%로 인구 비중이 역전되었다.

2005년에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48.2%로서 1960년 이래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 인구비중의 증가 폭이 최근 2000-2005년의 5년간에는 1.9% 포인트로서 지난 1995-2000년의 증가폭인 1.0% 포인트의 두 배 가량 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정도가 지난 1995-2000년보다 더 심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의 심화경향은 <표 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1>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는 10년 간격으로, 그리고 그 이후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5년 간격으로 전국 인구 증가분에 대한 수도권 인구 증가분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면 전국 인구 증가분에 대한 서울 인구 증가분의 비중은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거의 50%에 가까웠으나 그 이후 감소해 1990-1995년 기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그 마이너스의 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고 있어 최근 2005년에는 마이너스 6.6%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과는 대조적으로 경기도의 인구증가분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1990-95년 기간에는 165.6%에 까지 이르렀었다. 그러나 이 비율은 1995-2000년에는 98.3%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2000-2005년에는 다시 증가해 130.1%에 이른다.

따라서 수도권 전체로 보면 이 비중은 1990-95년에 133.7%를 기록하였으나 1995-2000년에는 76.3%까지 감소하였었고 최근 5년간에는 다시 123.5%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에 전국에서 증가한 인구를 상회하는 인구가 수도권에서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근 들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수도권의 인구증가분, 1960-2005

(단위: 천 명, %)

	1960-1970	1970-1980	1980-1990	1990-1995	1995-2000	2000-2005
서울	3,080	2,839	2,249	-382	-336	-75
경기도1)	605	1,580	3,040	1,984	1,501	1,487
수도권2)	3,685	4,419	5,289	1,602	1,165	1,412
전국	6,445	6,002	5,975	1,198	1,527	1,143
서울/전국	47.8	47.3	37.6	-31.9	-22.0	-6.6
경기도/전국	9.4	26.3	50.9	165.6	98.3	130.1
수도권/전국	57.2	73.6	88.5	133.7	76.3	123.5

주1) 인천 포함.

2) 수도권 = 서울+경기도

자료: 경제기획원(1963, 1972, 1982a): 통계청(1993, 1997a, 2002a, 2006)

제 6 장 요약과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2005년에 실시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을 분석하고 그 이전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이 연구에서는 인구 이동을 시·군·구의 행정 구역을 벗어나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총량은 1985-90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감소해 2000-2005년에는 914만 1천명이 이동하였다. 이동률은 20.8%로서 5명당 1명 꼴로 이동을 경험하였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도간 이동이 시·도내 이동보다 많다.

시·도간 인구이동분석에서 드러난 최근의 인구이동 특징은 과거 1990년대 후반기의 경기 침체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완화경향이 최근 2000-2005년에는 다시 반전되어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로의 전입이 이전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국 시·도간 이동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한편 수도권 전입자의 전 거주지나 각 지역별 수도권으로의 이출률에 있어서는 과거와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수도권으로의 전입자는 전출자에 비해 여자가 많으며, 연령은 상대적으로 젊어 20대가 많다. 학력수준은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월등히 높으며 미혼의 비율이 전입자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은 5년 전인 1995-2000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특히 서울로 전입하는 이동자들의 학력 수준이 가장 높고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때 서울 전입자의 학력이 높은 것은 대학 진학을 위한 이동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데에도 기인한다.

이상과 같은 최근의 인구이동패턴에 관한 분석이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는 최근 들어서 수도권의 인구집중경향이 다시 심화되고 있으므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수도권에 대한 규제의 강화나 인위적인 지방으로의 인구의 분산 배치보다는 지방에서 인구를 흡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행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제는 인구이동

의 분석이 시·도간 분석에 더하여 대도시권 단위로도 이루어져야 하는 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대도시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주변에서는 이미 대도시권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행정구역의 의미가 옅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대도시권 내외의 이동 분석이 보다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이다.

제 7 장 참 고 문 헌

- 김남일, 최순, 박우순, 양기석. 1997. 『인구이동과 농촌지역 인구 특성 변화』. 통계청.
- 김대영, 이효구. 1976.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특징, 1965-70』. 한국개발연구원.
- 문현상, 한영자. 1989. 『수도권 인구집중과 생활권간 인구이동분석』.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이한순, 이우리. 1983. “한국내 인구이동의 패턴변화에 관한 계량적 연구, 1960-80을 중심으로.” 『인구문제논집』 제24권.
- 최인현, 윤종주, 김수봉, 정기원, Huguet. 1989. “인구이동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85 인구 및 주택센서스 인구종합분석 보고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최진호. 1982.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1권.
- _____. 1986. “인구분석 및 이동의 특성과 전망.” 『한국인구학회지』. 제9권.
- _____. 1994. “한국의 인구이동 패턴 변화와 수도권의 인구이동.” 『한국인구학회지』. 제 17권.
- _____. 1997. “인구이동패턴의 변화, 1960-1990.” 『인구변화와 삶의 질』. 일신사.
- _____. 2002. “인구분포와 국내 인구이동.” 『한국의 인구』. 제13장. 통계청
- 최진호, 최병선. 1993. 『지역간 인구 불균형 분포의 원인과 결과』. 통계청.
- Kim, Dae Young and John Sloboda. 1981. "Migration and Korean Development."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Population Policy, a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 Noh, Hee-Bang. 1991. "The Spatial Pattern and Process of Migration in Korea, 1960-1985."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3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은 기 수
(서울대학교)

〈표 목차〉

<표 1> 전국 지역별 통근·통학인구비율 및 주간인구지수	70
<표 2> 주간인구지수 120 이상인 7대 대도시 시구, 1995-2005	73
<표 3> 주간인구지수 90 이하인 주요 시구, 2005	76
<표 4> 연령별 통근·통학 인구비율의 변화, 1995-2005	76
<표 5> 통근·통학형태별 연령구조, 1995	78
<표 6> 통근·통학형태별 연령구조, 2000	78
<표 7> 통근·통학형태별 연령구조, 2005	78
<표 8> 직업별 통근·통학형태, 1995	80
<표 9> 직업별 통근·통학형태, 2000	80
<표 10> 직업별 통근·통학형태, 2005	80
<표 11>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 만 12세 이상 인구 중 다른 시군구 통근·통학 인구 비율	83
<표 12> 수도권내 주간인구 이동유형	85
<표 13> 서울 내 주간인구 이동유형의 변화	86
<표 14> 서울의 유입·유출 비 및 주간인구지수의 변화	88
<표 15> 인천 및 경기 시부 주간인구지수의 변화	90
<표 16> 주간인구지수가 100이상인 서울의 구별 주간인구 유입지, 2005	91
<표 17> 경기의 일부 시별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주간유출인구의 통근·통학지, 2005	94
<표 18> 인천 및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 2005	97

(그림 목차)

(그림 1) 통근·통학인구의 변화: 1995, 2000, 2005	72
(그림 2) 주간인구지수의 변화: 1995-2005	75
(그림 3) 연령별 통근·통학인구 비율의 변화, 1995-2005	77
(그림 4) 연령별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의 변화, 1995-2005	79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은기수 (서울대)

제 1 장 연구목적과 대상

1절 연구목적

인구학에서 인구이동 연구라 함은 주로 1년 전 거주지 혹은 5년 전 거주지를 파악해서 현재의 거주지와 비교한 후 지난 1년 동안 혹은 지난 5년 동안 인구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구이동이라는 것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인구현상임을 고려해 볼 때 1년 전 혹은 5년 전 거주지를 파악하고 현재의 거주지와 비교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인구이동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는, 인구이동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더구나 이 정보를 이용하여 출발지와 목적지를 판별하는 인구이동 연구는 자칫 잘못하면 인구이동의 실상을 왜곡시킬 위험성도 안게 된다.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던 근대화 초기에 1년 전 혹은 5년 전 거주지와 현재의 거주지를 비교하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부분 그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인구이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인구이동도 중요해졌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매일 일어나는 인구이동개념에 기반을 둔 일일 인구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근·통학인구 혹은 주간인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통근·통학인구 혹은 주간인구에 대한 인식의 대두는 다음과 같은 전제들을 바탕으로 한다. 서울의 경우 1960년대에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시작되었다. 인구이동의 최종 목적지는 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였다. 때문에 서울은 금세 농촌에서 몰릴듯 몰려오는 이동인구로 포화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농촌에서 도시로 밀려오는 대규모의 이동인구를 수용할 주택 부족 현상과 더불어 모든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농촌에서 도시로 밀려오는 이농민들은 서울에서 직업을 찾고 일을 하더라도 잠자리는

서울에 마련하지 못한 채 서울 주위 경기도에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이유로 아침 출근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이 되면 서울 외곽에서 서울 내로 들어가려는 인구가 줄을 이었고, 저녁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이들을 수용할 만한 교통시설이 항상 문제가 되었다.

다른 한 편,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두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에 있겠다. 물론 고정된 일자리도 있지만, 일터는 언제나 변할 가능성이 있고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도 고정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 중, 고, 대학교 등 학년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터와 직장이 일치하지 않고, 거주지와 직장이 별개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일일 인구이동은 인구학의 새로운 연구주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교통과 주택 등에 관련한 행정 분야에서도 핵심관건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2005년 인구센서스 2% 원자료를 바탕으로 일일 인구이동 현상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전국적인 차원의 일일 인구이동에 대한 간략한 검토를 시작으로 이후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일일 인구이동의 특성에 관해 살펴 보려고 한다. 이미 본 분석에 앞서 필자는 1995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1995년과 2000년의 일일 인구이동을 분석한 바 있다(은기수, 2002). 이에 선행 연구결과와 2005년 인구센서스 분석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일일 인구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래는 일일 인구이동이 더 적합한 표현이겠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인구센서스에서는 통근·통학자라는 개념과 주간인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 인구이동이라는 표현대신에 통근·통학인구와 주간인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일일 인구이동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2절 연구대상

인구학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인구개념으로 상주인구가 있다. 그리고 인구를 파악할 때는 상주주의(de jure principle)와 현주주의(de facto principle)의 개념으로 파악한다(권태환·김두섭, 2002). 어느 방식으로 파악하든 그 인구는 상주인구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된다. 우리나라 센서스의 경우 원래는 조사당시 개개인이 머무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파악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통상적으로 거주하거나 15일 이상 머무를 목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이 상주지가 되기 때문에 센서스 당시 일시적으로 이동 중인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동 중인 사람이 머무는 숙박지는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런 원칙으로 파악된 인구가 바로

상주인구이다.

상주인구는 인구학적으로는 매우 유용하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상주인구 이외의 새로운 인구개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실제 생활에서 각종 행정서비스를 유발하는 인구는 상주인구가 아닌 유동인구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동인구는 정확한 측정이 힘들고,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에서 산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이외의 새로운 인구로 통계 산출이 가능한 인구개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가장 유효한 인구개념이 바로 주간인구라 하겠다. 주간인구는 상주인구와는 달리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인구를 가리킨다. 이는 일단 상주인구를 기본으로 하되 상주인구 가운데서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 활동하는 인구는 제외되며, 아울러 비록 다른 지역에 상주하지만 주요 활동 시간대에는 이 특정 지역에 유입되어 활동하는 인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를 간단히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은기수, 2002: 526).

$$\begin{aligned} \text{주간인구} &= \text{상주인구} + \text{주간유입인구} - \text{주간유출인구} \\ &= \text{비통근} \cdot \text{통학자수} + \text{지역내 통근} \cdot \text{통학자수} \\ &\quad + \text{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통근} \cdot \text{통학자수} \end{aligned}$$

이 연구에서는 일단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일 인구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일 인구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위해서 1995년과 2000년 그리고 2005년의 인구및주택총조사 보고서와 해당년도 인구센서스의 2% 표본 원자료가 이용되었다.

제 2 장 기존 연구 검토

일일 인구이동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필자가 1995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를 이용해 주간인구를 분석하면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해 보았을 때에도 필자의 연구 외에는 일일 인구이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일일 인구이동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미 5년 전에 출판된 은기수(2002)의 연구에서 간단히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 바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간단히 기존연구를 짚어보고자 한다.

주간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어쩌면 우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통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는 사람들이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어디서 어디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하고 어느 시간대에 얼마나 시간이 걸려 이동하는지 정보를 얻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인구센서스에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라는 조사항목 및 결과가 포함되게 되었다. 다른 한 편, 대도시 중심부의 구청장들은 새로운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과거 관선구청장 시절에는 각 대도시의 중심부가 가장 핵심적인 구청이었고, 구청장 자리도 제일 요직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민선구청장으로 바뀌면서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구청장의 위세가 결정되고, 정부의 각종 교부금도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다보니 상주인구가 작은 대도시 중심부의 구는 과거와 달리 구청장의 위세나 행정적인 대우가 오히려 하락하였다. 상주인구는 작지만 중심부의 역할과 위력은 과거와 다름이 없는데도 중심구의 위상은 민선자치단체 시절에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심구의 경우 상주인구는 다른 주변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모든 행정, 금융, 서비스 시설 등이 주로 대도시 중심구에 몰려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다른 주변 구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행정서비스가 상주인구보다도 유동인구에 의해 더 많이 유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결정되는 모순된 현상에 대도시 중심구는 불만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대도시 중심부는 상주인구보다는 자신들에게 여러 면에서 유리한 새로운 인구개념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1997년 은기수의 연구는 서울시 중구청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한 중구청 장기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서울시 중구의 요구는 상주인구보다는 실질적인 중요성이 더 큰 유동인구를 새로운 행정인구개념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필자가 보기에 유동인구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 산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상주인구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인구개념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필자가 통계청에서 산출하고 있는 새로운 인구를 살펴본 바, 주간인구 개념이 현재 상태에서

중심구에 가장 적합한 인구개념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미 통계청에서도 인구센서스를 통해 주간인구가 산출되고 있었고, 누구도 인정하는 인구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일일 인구이동 개념에 부합되면서도 이해관계가 걸린 여러 기관에서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인구개념으로 주간인구 개념을 제시하였다.

2000년에 출판된 대도시 도심부의 연구에 수록되어 있는 필자의 또 다른 연구를 보자(은기수, 2000). 이 연구는 대도시 도심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의 일환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심부의 상주인구와 주간인구를 대비시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주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주간에 일하는 인구의 규모는 여전히 많은 현상을 대비시켜 도심부의 공동화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즉, 외국의 대도시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다시 도심부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지만, 한국 특히 서울의 도심부의 경우에는 도심부에 거주하고 있다 떠난 인구가 되돌아오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도심부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주간인구가 사라지면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필자는 일일 인구이동을 좀 더 사회학적인 개념과 연결시켜 분석하기에 이른다(은기수, 2001). 이 2001년 연구는 서울 및 인근 외곽지역에서 일일 인구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구를 중심으로 그들의 계급적인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누가 도심에 살고 있으며, 또 누가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도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생업을 도심에서 영위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계급적 지위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검토하면서 사회학계에서는 최초로 일일 인구이동을 경험하는 집단과 동일한 생활 장소에 머무르면서 그 곳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집단의 계급적인 성격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은기수의 2002년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2000년 센서스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2000년 및 그 이전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가능한 거슬러 올라가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주간인구 추세의 변동을 살펴보고, 통근·통학의 동학을 살펴본 연구였다. 은기수(2002)의 연구를 통해 2000년까지 일일 인구이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에서 일일 인구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울에서 서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로 이동하는지, 또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매일 인구이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서울의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2년 은기수의 연구를 계승하고 있다. 때문에 이 연구는 거의 동일한 문제의식 속에서 2000년까지의 일일 인구이동의 특성을 2005년의 인구센서스까지 이어보면 어떤 연속성과 단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연구로 요약될 수 있겠다.

제 3 장 전국 통근·통학인구

먼저 전국적인 수준에서 통근·통학인구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주간 인구를 구성하는 인구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통근·통학인구 이기 때문에 먼저 전국적인 수준에서 통근·통학인구의 실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절 통근·통학인구 및 주간인구

다음 <표 1>은 1995, 2000, 2005년 등 세 시점에서 전국의 각 지역에서 통근·통학인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통근·통학인구가 핵심적인 요소인 주간인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전국 지역별 통근·통학인구비율 및 주간인구지수

(단위: %)

지역	통근·통학인구비율			주간인구지수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서울	64.6	63.7	61.3	105	105	106
부산	61.5	58.7	56.5	98	98	98
대구	60.9	58.9	57.6	96	97	96
인천	63.1	63.1	61.6	96	95	95
광주	62.9	61.2	60.9	98	98	97
대전	62.0	61.5	60.0	98	99	98
울산	-	63.0	62.6	-	101	101
경기	62.8	63.9	62.6	93	95	95
강원	61.6	60.7	57.8	101	101	101
충북	64.6	64.6	61.5	101	101	101
충남	66.3	66.1	65.1	103	104	105
전북	65.8	63.5	59.8	100	100	100
전남	68.4	66.9	62.4	101	101	102
경북	65.0	63.4	61.8	104	103	104
경남	65.6	64.2	62.7	102	102	101
제주	70.6	68.9	56.7	100	100	100

주) 주간인구지수=주간인구/상주인구*100

자료: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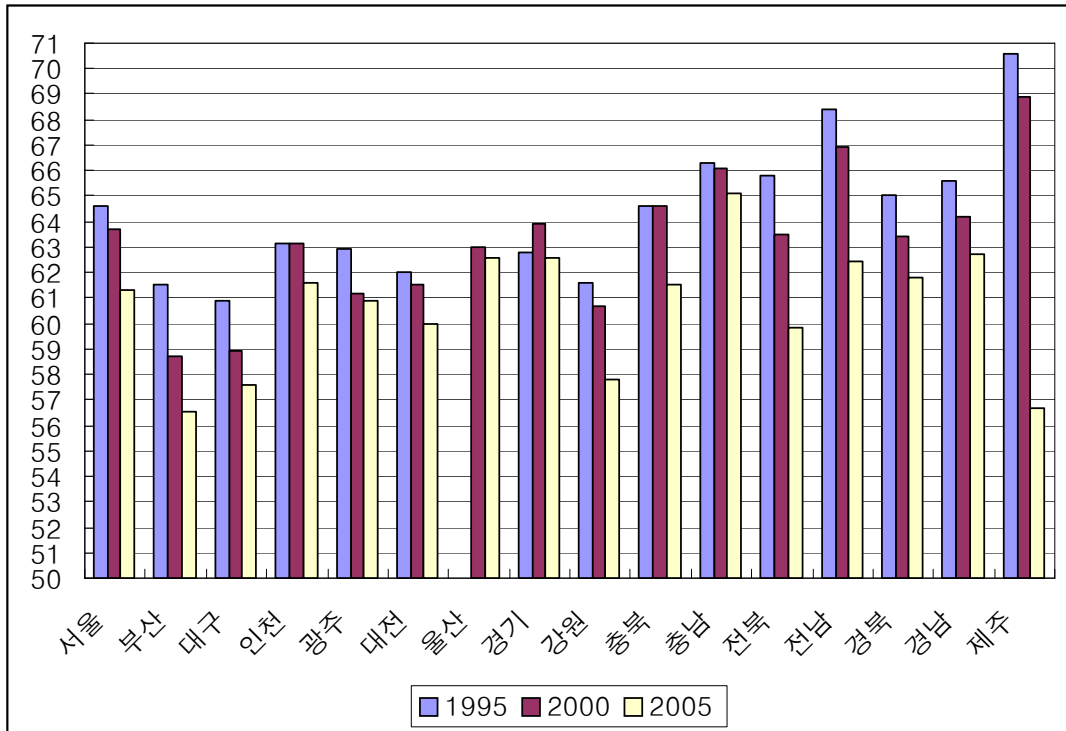
<표 1>을 보면 각 지역의 인구 가운데 매일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60%대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95년의 경우 각 지역의 상주인구 가운데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은 대구로 60.9%였다. 서울의 경우 전체 인구의 64.6%가 통근·통학을 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 통근·통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제주 전체 인구의 70.6%가 통근·통학인구였다.

2000년에는 통근·통학인구의 비율이 60% 이하로 내려간 지역이 나타났다. 부산과 대구의 전체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는 각각 58.7%와 58.9%로 나타나 통근·통학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약간 하회하였다. 서울의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도 63.7%로 1995년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2000년에 통근·통학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제주 지역에서도 68.9%로 이전의 70%에 약간 못 미쳤다. 전반적으로 2000년은 1995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통근·통학인구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지역이 1995년에 62.8%에서 2000년에 63.9%로 약간 상승했을 뿐 나머지 시도지역에서는 통근·통학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05년에도 여전히 관찰되고 있다. 2005년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60% 이하인 지역이 더 늘어났다. 부산 56.5%, 제주 56.7%, 대구 57.6%, 강원 57.8%, 전북 59.8% 등 전국에서 5개 시도의 통근·통학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60% 아래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에도 2005년에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61.3%로 낮아졌다. 전체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65.1%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1995년 이래 전체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다음 (그림 1)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통근·통학인구의 변화: 1995, 2000, 2005



(그림 1)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통근·통학인구의 감소는 제주도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주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2005년으로 오면서 통근·통학인구의 감소가 전반적인 추세로 관찰되고 있다.

통근·통학인구의 감소는 주간인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 지역에서 통근·통학인구가 유출되면 주간인구가 줄어들고, 통근·통학인구가 유입되면 주간인구가 늘어난다. 결국 유입과 유출인구의 차이에 의해 어느 특정지역의 주간인구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일단 통근·통학인구의 절대적 규모의 감소로 주간인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앞의 <표 1>은 주간인구지수의 변화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일일 인구이동이 시나 도의 경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유입과 유출은 서로 상쇄되어 주간인구의 규모나 상주인구의 규모는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주간인구지수는 주간인구를 상주인구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산출되는데, <표 1>에 따르면 전국의 각 시도의 주간인구지수는 2005년 현재 최소 95(인천)에서부터 최고 106(서울)으로 나타난다. 즉 인천은 주로 인구가 일일 인구이동을 통해 인천 밖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고, 반면에 서울은 일일 인구이동을 통해 서울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서울로 들어와 일을 하는 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은 1995년 이래 전체 인구 가운데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였지만, 주간인구지수는 1995년과 2000년 현재 105에서 2005년에는

106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즉 서울 내에서 통근·통학을 하는 인구는 감소한 반면 주간에 서울 외에서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가 1995년이나 2000년에 비해 약간 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다음으로 주간인구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충남이다. 충남의 1995년 현재 주간인구지수는 103이었지만, 2000년에는 104로 그리고 2005년에는 105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에서는 주간인구가 상주인구에 못 미치고 있다. 즉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지역에서는 통근·통학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보다 더 많은 것이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에 활동하는 인구인 주간인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 아래 <표 2>는 주간인구지수 120이상인 지역을 골라 주간인구지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주간인구지수 120 이상인 7대 대도시 시구, 1995-2005

(단위: 인구지수)

1995		2000		2005	
지역	주간인구지수	지역	주간인구지수	지역	주간인구지수
서울중구	395	서울중구	292	서울중구	354
부산중구	249	서울종로구	216	서울종로구	251
서울종로구	244	부산중구	191	부산강서구	213
인천중구	191	대구중구	168	부산중구	197
대구중구	167	서울강남구	166	대구중구	186
서울강남구	160	인천중구	145	서울강남구	182
서울영등포구	150	광주동구	141	인천중구	171
광주동구	140	서울영등포구	138	서울서초구	140
서울용산구	135	부산강서구	133	광주동구	140
대전유성구	134	서울용산구	131	서울용산구	134
서울동대문구	126	서울동대문구	130	서울영등포구	133
서울서초구	125	서울서초구	121	부산동구	130
		대전유성구	120		

자료: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1995년 이래 주간인구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의 중구이다. 서울 중구의 상주인구는 급속히 감소하여 2005년 현재 128,44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울의 중구는 서울의 최도심부이고 현재도 정부기관, 각 회사의 본점, 금융기관, 백화점 등 서비스업의 본점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상주인구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주간에 서울 중구로 출근하여 일을 하는 주간인구는 많고, 이를 주간인구 대 상주인구의 비로 계산하면 전국에서 가장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1995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395로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의 규모가 거의 4배에 이르렀다. 2000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295로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의 규모가 3배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감하였지만, 2005년에는 다시 주간인구지수가 354로 증가하였다.

서울 종로구도 서울 중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구도심의 한 부분이면서 여전히 중요한 일터이기도 하다. 1995년에 서울 종로구의 주간인구지수는 249로 상주인구에 대해 주간인구의 규모가 약 2.5배에 이르렀다. 2000년에는 이 규모가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 다시 주간인구지수가 251로 1995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서울의 부심부이지만 현재는 새로운 도심부나 다름없는 지역이 서울의 “강남”지역이다. 서울의 강남구의 주간인구지수는 1995년에 160, 2000년에 166, 2005년에 18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어느 면에서는 서울의 중심이 강남으로 옮겨간 듯한 인상을 주는데, 주간인구지수의 변화는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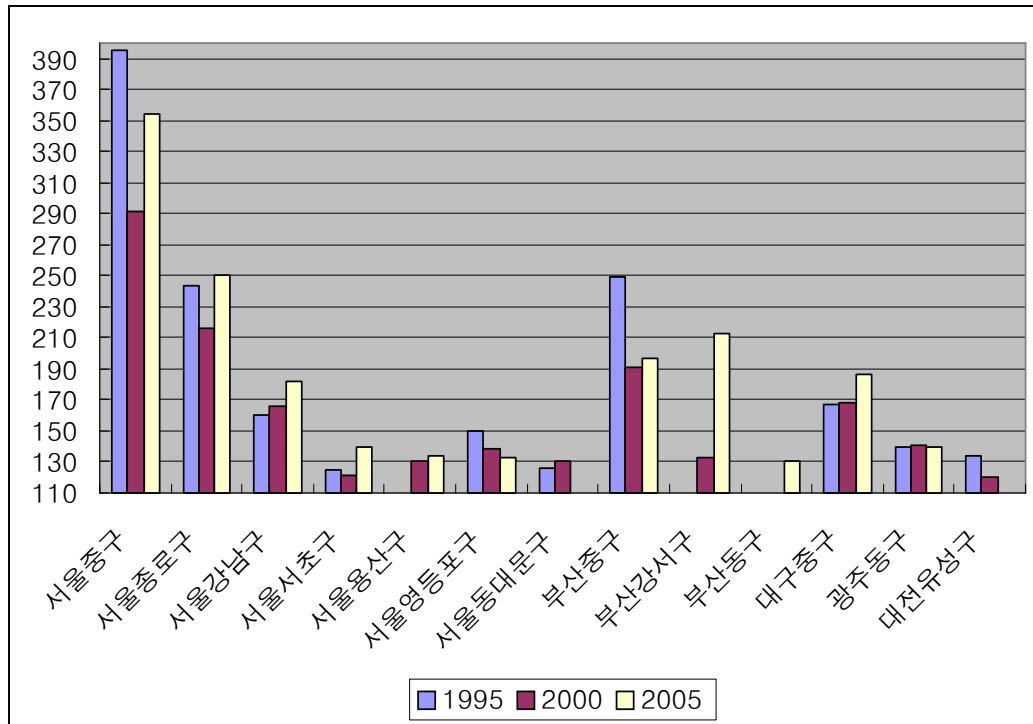
서울의 강남구와 함께 “강남”지역을 대표하는 서울 서초구의 경우 주간인구지수가 1995년에는 125에서 2000년에는 121로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140으로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강남구와 서울의 서초구를 소위 “강남”지역의 핵심지역으로 본다면 2000년을 지나서 2005년에는 서울의 “강남”지역이 상주인구 가운데 유출되는 인구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간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1997년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서울의 “강남”지역은 새로운 서울의 중심부로 부상했고, 주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 몰려드는 지역이 되어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에 서울의 강북지역에 위치한 서울의 동대문구는 1995년과 2000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120을 넘어 동대문구로 유입되는 인구의 규모가 컸으나 2005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120 이하로 낮아져 더 이상 대규모의 주간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 아니다. 대전의 유성구도 주간인구지수가 1995년과 2000년에는 120 이상이었던지만, 2005년에는 120 이하로 낮아졌다.

서울을 벗어나 부산으로 가보면, 부산의 강서구는 주간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에는 부산의 강서구는 주간인구지수가 108이었다. 그러나 2000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133로 높아졌고, 2005년에는 주간인구지수가 213으로 크게 높아졌다. 부산 강서구는 부산의 최도심부인 부산의 중구보다도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의 규모가 제일

큰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부산의 동구도 1995년과 2000년에는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의 규모가 120을 넘지 않았는데, 2005년에는 주간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큰 지역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주간인구지수의 변화: 1995-2005



반면에 대도시 가운데 주간인구지수가 90이하인 지역도 여럿 있다. 이 지역은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가 오히려 최소 10% 이상 낮은 지역이다. 즉 이들 지역은 베드타운의 기능이 강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업이나 일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주간에 유입되는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서울의 경우 도봉구가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가 가장 작은 지역이다. 도봉구 이외에도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관악구, 양천구, 강서구, 노원구 등은 서울에서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부산의 경우에는 북구, 수영구, 해운대구가 이에 해당한다. 인천에서는 부평구와 계양구가 상주인구 가운데 유출되는 인구를 유입인구가 상쇄하지 못해 주간인구지수가 낮다(<표 3> 참조).

<표 3> 주간인구지수 90 이하인 주요 시구, 2005

(단위: 인구지수)

지역	주간인구지수	지역	주간인구지수
서울 도봉구	76	부산 해운대구	84
부산 북구	77	서울 강서구	85
울산 중구	78	인천 부평구	85
서울 중랑구	79	인천 계양구	85
서울 강북구	79	광주 남구	85
서울 은평구	80	서울 노원구	86
서울 관악구	81	대구 동구	86
인천 연수구	82	대구 서구	87
서울 강동구	83	대구 수성구	89
부산 수영구	83	대전 서구	89
서울 양천구	84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2절 통근·통학인구의 특성

통근·통학인구의 특성은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소절에서는 일단 통근·통학인구의 특성을 연령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 <표 4>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연령별 통근·통학 인구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연령별 통근·통학 인구비율의 변화, 1995-2005

(단위: %)

연령	1995	2000	2005
12-14	99.6	99.6	98.9
15-19	89.5	88.8	87.7
20-24	62.8	62.0	60.4
25-29	60.9	63.9	66.3
30-34	59.1	61.7	62.6
35-39	61.7	64.6	64.9
40-44	62.9	65.1	66.2
45-49	61.5	62.7	62.9
50-54	58.7	57.0	57.1
55-59	53.6	49.2	47.8
60-64	29.9	41.2	37.4
65세 이상		23.2	21.6

주) 1995년은 60세 이상의 인구중 통근·통학 인구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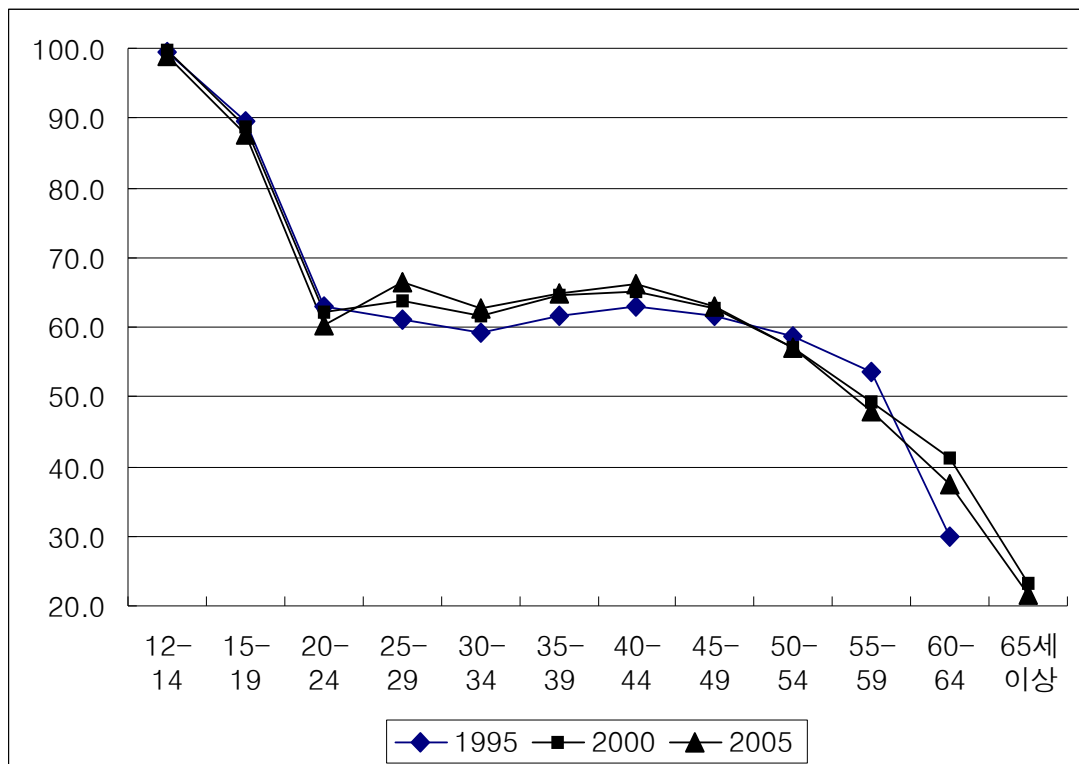
자료: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표 4>를 보면 먼저 통근·통학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10대임을 알 수 있다. 14세까지의 인구 가운데 98% 이상이 통학을 하고 있다. 이 연령층은 원칙적으로 노동하는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학업을 위해 통학하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 설사 같은 지역 내에서 통학을 하더라도 이 연령층은 매일 거의 대부분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19세까지의 연령집단에서도 2005년 현재 87% 이상이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10대는 어느 연령층보다도 통근·통학의 비율이 큼을 <표 4>를 통해 알 수 있다.

20대에 이르면 통근·통학의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15-19세 연령집단의 통근·통학 인구의 비율이 최소 88%에 달했었는데, 20-24세 연령집단 가운데 통근·통학 인구의 비율은 2005년 현재 60%로 급격히 감소한다. 그러다 25-29세 연령집단에서는 이 비율이 다시 2005년 현재 66%로 다시 증가한다.

10대에 비하면 20대 이상의 통근·통학 인구비율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대부터 40대까지는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 연령층의 통근·통학 인구비율은 최소 60%에서 최대 66% 정도에 걸쳐 있다. 그러나 50대에 접어들면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다. 2005년 현재 50-54세의 통근·통학 인구비율은 57%, 55-59세는 48%로 낮아지고, 60-64세 연령집단에서는 다시 37%로 낮아짐을 볼 수 있다.

(그림 3) 연령별 통근·통학인구 비율의 변화, 1995-2005



시기별 변화를 보면 10대와 20대 초반까지는 1995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꾸준히 감소한다. 그러나 2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는 오히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꾸준히 증가한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연령에 따른 통근·통학인구의 비율만을 보기 때문에 정확히 해석하기 어렵지만, 이 중년층에서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여성들이 노동력시장에 진출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50대 및 그 이상의 연령층에 이르면 증가와 감소가 혼재되어 있다. 고령인구의 고용기회와 확대 혹은 고령층에서 일하려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통근·통학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고령연령층에서 실제로 통근하는 인구의 규모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표 5>부터 <표 7>까지는 전체 인구를 비통근·통학 및 통근·통학의 형태에 따라 연령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5> 통근·통학형태별 연령구조, 1995

(단위: %)

이동형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비통근·통학	3.88	33.11	39.45	37.73	43.49	69.50
같은 시군구내	75.79	34.33	37.01	40.45	41.04	27.06
다른 시군구로	20.33	32.56	23.54	21.82	15.46	3.44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6> 통근·통학형태별 연령구조, 2000

(단위: %)

이동형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비통근·통학	4.85	31.03	36.54	35.43	46.24	69.92
같은 시군구내	78.45	37.14	39.77	42.86	39.13	27.02
다른 시군구로	16.70	31.84	23.69	21.70	14.63	3.06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2000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7> 통근·통학형태별 연령구조, 200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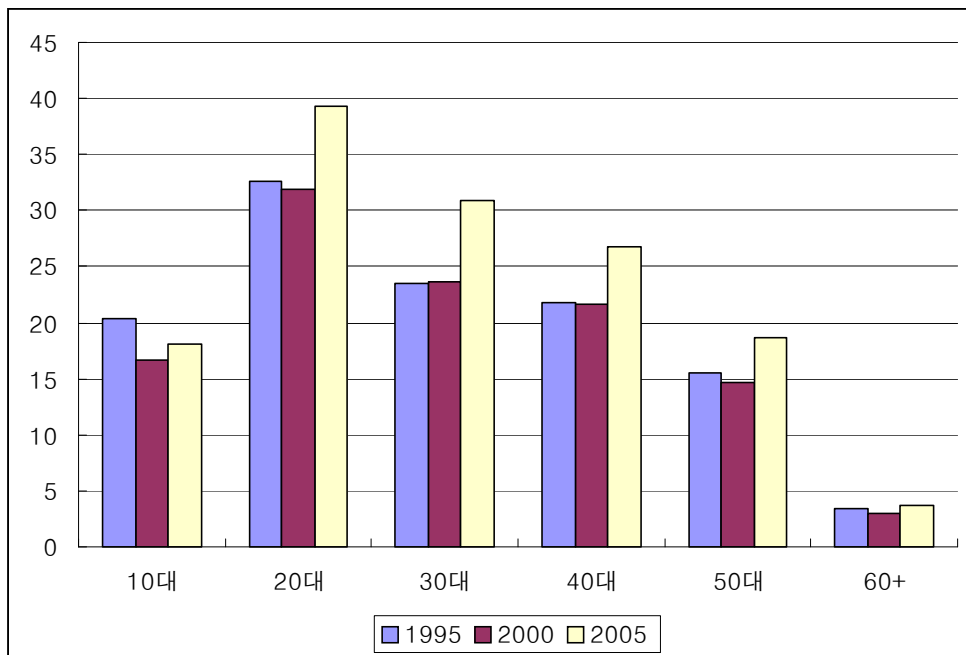
이동형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비통근·통학	4.45	30.85	36.07	34.81	45.19	68.48
같은 시군구내	77.41	29.82	32.99	38.54	36.22	27.78
다른 시군구로	18.14	39.33	30.94	26.84	18.59	3.74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2000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10대는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연령층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가장 높지만, 이들은 대다수가 같은 시군구 내에서 통근·통학을 한다. 2000년에 10대 가운데 78.5%는 같은 시군구내에서 통근·통학을 했고, 1995년과 2005년에도 이 비율은 최저 76%에 달했다.

그러나 20대 이상은 비통근·통학, 같은 시군구내 통근·통학,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의 추세가 10대와는 상이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1995년부터 시기가 지날수록 다른 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과 2000년 사이에는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에 증가가 나타난다. 10대는 감소하는데 20대 및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2000년 이후 왜 증가하는지 그 이유를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통근·통학인구 가운데 다른 시군구도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2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모두 한결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4) 연령별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의 변화, 1995-2005



다음은 통근·통학 인구의 특성을 직업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 <표 8>부터 <표 10>은 비통근·통학, 같은 시군구내 통근·통학, 다른 시군구내 통근·통학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직업별 통근·통학형태, 1995

(단위: %)

이동형태\직업	1	2	3	4	5	6	7	8	9	10
비통근·통학	4.31	5.37	3.65	2.11	23.83	18.73	6.13	8.74	9.20	8.75
같은 시군구내	43.53	44.79	44.92	47.08	53.03	50.03	92.67	55.81	59.95	62.96
다른 시군구로	52.16	49.84	51.43	50.81	23.14	31.24	1.20	35.45	30.84	28.29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직업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준전문가, 4. 사무직, 5. 서비스직, 6. 판매직,
7. 농림어업직, 8. 기능직, 9. 장치, 조립직, 10. 단순노무직
자료: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9> 직업별 통근·통학형태, 2000

(단위: %)

이동형태\직업	1	2	3	4	5	6	7	8	9	10
비통근·통학	3.53	3.88	3.46	2.17	16.03	11.91	0.41	6.34	7.53	7.09
같은 시군구내	46.96	49.84	48.72	52.19	62.03	57.98	97.82	59.89	61.95	67.10
다른 시군구로	49.50	46.28	47.82	45.64	21.94	30.11	1.76	33.77	30.52	25.80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직업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준전문가, 4. 사무직, 5. 서비스직, 6. 판매직,
7. 농림어업직, 8. 기능직, 9. 장치, 조립직, 10. 단순노무직
자료: 2000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10> 직업별 통근·통학형태, 2005

(단위: %)

이동형태\직업	1	2	3	4	5	6	7	8	9	10
비통근·통학	4.71	4.19	3.96	2.78	12.69	9.65	5.00	6.20	7.60	7.82
같은 시군구내	39.90	41.83	42.40	40.24	58.04	50.59	93.33	52.53	54.55	60.84
다른 시군구로	55.38	53.98	53.64	56.97	29.27	39.76	1.67	41.27	41.27	31.34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직업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준전문가, 4. 사무직, 5. 서비스직, 6. 판매직,
7. 농림어업직, 8. 기능직, 9. 장치, 조립직, 10. 단순노무직
자료: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먼저 <표 10>의 2005년의 직업별 통근·통학형태를 보자. 10개의 범주로 구분된 직업 가운데 통근·통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시에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직업군은 서비스직이다. 2005년 현재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12.7%는 통근·통학을 하지 않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서비스직 다음으로 통근·통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직업은 판매직이다. 2005년 현재 판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9.65%는 통근·통학을 하지 않고 거주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지에서 일하는 경우는 2005년 현재 3% 미만이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57%가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고위 임원직이나 관리직, 전문가, 준전문가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거의 모두 통근·통학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여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

그러나 기능직, 장치·조립직,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 통근·통학을 하더라도 같은 시군구내에서 움직이는 비율이 다른 시군구로 확대하여 이동하는 비율보다 더 높다.

이를 요약하면 사무직 이상의 직업 위세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부분 통근·통학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시군구보다는 다른 시군구로 넘어서 통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통근을 하지 않고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이들의 경우에 통근을 하더라도 다른 시군구로 넘어 통근하는 비율보다는 같은 시군구내에서 통근을 하며 일하는 비율이 높다. 기능직 등 직업 위세가 낮은 직종에서는 통근을 하는 비율이 높지만 살고 있는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에 위치한 곳에서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다른 시군구로 넘어 통근하는 비율보다 높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세 개 시점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서 직업별 통근·통학 인구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서비스직과 판매직에서 비통근·통학의 인구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직의 경우 1995년에 출퇴근을 하지 않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23.8%였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0년에는 16%로 감소하고, 2005년에는 12.7%로 감소하고 있다. 판매직의 경우에도 비통근·통학의 비율이 1995년에는 18.7%에서 2000년에는 11.9%로 크게 감소하고, 2005년에 이 비율이 9.65%로 약간 더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감소한 비통근·통학인구가 대부분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직과 판매직을 제외한 다른 직종에서도, 농림어업직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직종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제 4 장 수도권 통근·통학인구

제 3 장에서는 전국 수준에서 통근·통학과 주간인구의 특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통근·통학인구의 연령별, 직업별 특성을 통해 각각의 인구특성을 살펴보았다. 모든 분석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의 문제가 수도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의 분석은 수도권에 한정하여 좀 더 자세히 통근·통학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절 수도권 통근·통학 형태

우리는 <표 1>을 통해 이미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의 통근·통학 인구의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서울 전체 인구가운데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근·통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은 1995년 64.6%, 2000년 63.7%, 2005년 61.3%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일일 인구이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에는 서울보다 약간 낮지만 1995년 63.1%, 2000년 63.1%, 2005년 61.6% 등 역시 60% 이상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일 인구이동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에서는 1995년 62.8%, 2000년 63.9%, 2005년 62.6% 등으로 역시 경기도 지역에서도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매일 매일 일일 인구이동을 경험하고 있다.

통근·통학인구 가운데 우리의 관심은 같은 시군구보다도 다른 시군구로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인구에 있다. 왜냐하면 상주인구와 주간인구를 구별 짓는 제일의 요소가 상주인구 가운데 다른 시군구로 유출되는 인구와 다른 시군구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다음 <표 11>은 서울의 각 구별로 그리고 인천 및 경기도의 여러 시 지역별로 각 지역에서 매일 다른 시군구로 유출되는 인구가 각 지역의 상주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 만 12세 이상 인구 중 다른 시군구 통근·통학 인구 비율
(단위: %)

지역	1995	2000	2005	지역	1995	2000	2005
서울 전체	35.2	30.8	36.1	인천	30.2	26.2	31.2
종로구	26.5	24.5	28.5	수원	17.8	19.6	38.9
중구	24.5	24.4	24.7	성남 수정	22.2	21.7	36.8*
용산구	32.2	27.5	34.1	성남 분당	38.0	33.5	36.4
성동구	25.9	31.3	36.6	의정부	28.4	29.5	29.1
광진구	35.2	31.7	37.8	안양	30.9	31.2	37.5
동대문구	31.1	24.7	31.8	부천	27.7	26.5	35.0
중랑구	35.7	31.3	35.9	광명	38.9	36.3	36.6
성북구	35.4	29.9	36.0	평택	10.3	10.0	11.3
강북구	40.2	33.2	37.6	동두천	17.4	16.4	19.0
도봉구	39.5	38.3	39.7	안산	15.0	18.5	29.6
노원구	37.6	33.7	35.5	고양 덕양	36.1	30.7	34.1
은평구	36.6	29.8	34.5	고양 일산		29.9	34.9*
서대문구	34.6	31.1	38.2	과천	44.3	41.1	38.0
마포구	34.4	29.6	37.5	구리	34.4	32.9	33.6
양천구	37.7	35.3	38.4	남양주	24.9	29.8	27.2
강서구	33.6	29.4	36.9	오산	23.4	28.0	35.4
구로구	34.9	33.4	38.7	시흥	32.6	30.7	26.7
금천구	37.1	31.5	34.3	군포	40.1	38.7	37.1
영등포구	31.1	29.0	36.5	의왕	43.1	43.0	41.6
동작구	41.1	33.8	41.6	하남	35.2	33.6	30.6
관악구	37.6	30.9	38.7	용인	10.8	25.3	31.0
서초구	36.1	31.1	37.0	파주		14.3	16.9
강남구	30.9	24.9	30.1	이천		8.6	8.6
송파구	34.3	29.5	33.9	안성		11.1	11.1
강동구	32.5	32.3	35.2	김포		17.9	20.4
				양주		13.4	23.3
				여주			8.5
				화성			22.3
				광주			25.3
				연천			7.2
				가평	7.1		
				양평	8.5		
				포천	6.7		

주) 성남 수정은 2005년에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를 포함, 고양 일산은 2005년 고양 일산동구와 일산 서구를 포함함.

자료: 1995, 2000,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서울에서 구별 인구 가운데 매일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작은 구는 중구이다. 중구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1995년 24.5%, 2000년 24.4%, 2005년 24.7% 등 거의 변함이 없으면서 25%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구 다음으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구의 전체 인구 가운데 30%에 못 미치는 구는 종로구이다. 종로구의 경우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1995년에 26.5%, 2000년에 24.5%, 2005년에 28.5%로 중구보다는 높지만, 다른 구보다는 낮으면서 30%미만만이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는 주간인구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서울의 도심부 지역에 거주하는 상주인구 가운데 매일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서울의 모든 구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이는 중구나 종로구의 경우처럼 주간인구가 높은 데에는 다른 구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많지만, 중구나 종로구에 거주하는 상주인구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정도도 다른 구에 비해 훨씬 적고, 이 또한 중구나 종로구의 주간인구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구나 종로구를 제외한 서울의 다른 구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30-42% 사이에 놓여 있다. 2005년 현재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임의로 몇 개 꼽아보면, 먼저 동작구를 들 수 있다. 동작구의 경우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이 무려 41.6%에 달한다. 전체 인구(실제로는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의 경우)의 40% 이상이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면서 주간에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동작구의 상주인구 가운데 많은 인구는 동작구보다는 다른 시군구에 생업의 터전을 두고 있는 것이다. 동작구 다음으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은 도봉구이다. 도봉구는 앞에서 이미 주간인구지수가 서울 및 대도시 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역임을 확인했었다. 그런데 도봉구의 인구 가운데 매일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비율은 동작구보다는 약간 낮은 39.7%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도봉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하거나 공부할 때 다른 시군구로 옮겨가 일하거나 공부하고, 반면에 다른 시군구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주간에는 인구가 대폭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즉 도봉구는 상주인구 중심의 베드타운의 속성이 강하다.

서울의 새로운 도심부의 하나인 강남구의 경우에는 구도심부인 중구나 종로구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강남구에서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1995년에 30.9%에서 2000년에 24.9%로 크게 감소했다가 2005년에는 다시 30.1%로 증가한다. 그러나 강남구도 주간인구지수가 매우 높은 지역이고, 이는 유출인구가 적거나 유입인구가 많아야 가능한 현상인데, 다른 시군구로 유출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유출인구가 적으면서 동시에 유입인구는 많아 결과적으로 주간인

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인천의 경우 매일 다른 시군구로 인구이동을 하는 경우는 2005년 현재 31.2%이다.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10명 중 3명은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 지역에 있는 시 지역에서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과천, 군포, 의왕이 눈에 띈다. 의왕에서는 1995년에 43.1%, 2000년에 43%, 2005년에 41.6%의 인구가 경계를 넘어 이동하면서 일이나 공부를 하였다. 비율이 매우 높으면서 시기별로 변화율도 크지 않다. 과천의 경우 1995년에는 일하는 인구의 44.3%가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0년에는 41.1%로 감소하더니 2005년에는 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래도 과천시는 여전히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군포시의 경우 1995년에는 40.1%, 2000년에는 38.7%, 2005년에는 37.1%로 지속적으로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높은 비율로 다른 시군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

이와는 반대로 1995년부터 2005년에 이르면서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통근·통학 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몇 지역이 있다. 성남 수정과 중원 지역에서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비율은 1995년에는 22.2%였다. 그러나 2005년에 이르면 이 비율이 36.8%로 크게 증가한다. 안양의 경우에도 1995년에는 30.9%에 머물러 있었지만 2005년에는 이 비율이 37.5%로 증가하였다. 부천의 경우에도 1995년에 27.7%였던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는 비율이 2005년에는 35%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안산의 경우에도 1995년에 15%에서 2005년에 29.6%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오산의 경우에도 1995년에 23.4%에서 2005년에 35.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 인천 및 경기 일원에서 다른 시군구로 일일 인구이동을 하지만 이들의 이동 방향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아래 <표 12>에서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에서 일일 인구이동을 하고 있는 주간인구들의 이동유형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점검하여 인구이동의 방향에 관한 일차적인 이해를 하고자 한다.

<표 12> 수도권내 주간인구 이동유형

(단위: %)

이동유형	1995	2000	2005
서울 → 서울	52.0	42.1	39.9
서울 → 인천	1.2	1.2	1.0
서울 → 경기	7.8	10.2	8.0
인천 → 서울	2.5	3.0	2.2
인천 → 인천	7.5	5.3	6.6
인천 → 경기	1.4	2.3	2.2
경기 → 서울	17.5	20.1	16.5
경기 → 인천	1.1	1.4	1.6
경기 → 경기	8.9	14.4	22.0
합	100.0	100.0	100.0

자료: 1995, 2000,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전체 인구 가운데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가 수도권의 주간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에 52%에서 2000년에 42% 그리고 2005년에는 39.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경기지역에서 경기지역으로 일일 인구 이동하는 주간인구의 비율은 1995년 8.9%에서 2000년에 14.4% 그리고 2005년에는 22%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일일 인구 이동하는 주간인구가 수도권의 주간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에 17.5%에서 2000년에는 20%로 증가하였지만, 2005년에는 16.5%로 1995년의 수준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

<표 12>에 제시된 수도권 내 주간인구의 이동유형은 중요한 점을 말해주고 있다. 수도권이 확장되면서 과거에는 서울에 집중되었던 일자리가 이제 서울 밖으로도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과거에는 서울에 일자리가 있어도 서울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경기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간에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았다면, 이제는 서울이 일터의 측면에서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경기 지역에 살면서 같은 경기 지역으로 통근·통학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서울 내에서 움직이는 주간인구의 비율은 수도권의 주간인구 전체 가운데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의 비율은 전체 수도권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에서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통근·통학자들의 이동유형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다음 <표 13>은 서울 내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이동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 서울 내 주간인구 이동유형의 변화

(단위: %)

이동유형	1995	2000	2005
강북 → 강북	37.4	35.9	33.9
강북 → 강남	15.4	16.7	17.4
강남 → 강북	19.8	19.4	18.6
강남 → 강남	27.4	28.0	30.1
합	100.0	100.0	100.0

주) 여기서 강남, 강북은 순수히 한강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자료: 1995, 2000,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서울내에서 주간인구의 이동유형을 살펴보면 2005년 현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간인구의 이동유형은 강북에서 강북으로 이동하는 이동유형

이다. 이 유형이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주간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37.4%에서 2000년에는 35.9% 그리고 2005년에는 다시 33.9%로 감소하고 있다. 비록 2005년에 33.9%로 감소하였어도 네가지 인구이동 유형 가운데에서는 제일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주요 이동유형은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유형이다. 서울 내의 주간인구 가운데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1995년에 27.4%에서 2000년에는 28%로 그리고 다시 2005년에는 30.1%로 증가하고 있다. 강북에서 강북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비율의 변화는 적지만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동하는 유형은 아주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과 더불어 이러한 현상은 서울 내에서 주간인구의 흐름이 강남으로 옮겨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2절 수도권 주간인구의 변화

이제 이 절에서는 수도권 주간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표 14>를 통해서 서울의 주간인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자. 서울에서 유출되는 인구에 비해 유입되는 인구의 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이다. 1995년에는 유출인구에 비해 유입인구가 13배, 2000년에는 거의 10배, 2005년에는 12배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간인구지수도 1995년에는 395, 2000년에는 292, 그리고 2005년에는 다시 354를 기록하고 있다. 중구 다음으로 유입에 대한 유출의 인구비가 높은 곳은 종로구이다. 종로구의 유입 대 유출 인구 비는 1995년에 6.5, 2000년에 6.4, 그리고 2005년에 7.0을 기록하고 있다. 중구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유출에 비해 유입이 매우 높은 지역의 하나이다. 이 결과 주간인구지수가 1995년에는 244, 2000년에는 216 그리고 2005년에 다시 251로 증가하였다.

서울 구 도심부의 두 구를 제외하면 서울 강남구의 유입 대 유출 비가 가장 크다. 서울 강남구의 유입 대 유출 인구 비를 살펴보면 1995년에 2.9, 2000년에 3.9, 그리고 다시 2005년에는 4.0을 기록하여 중구나 종로구 등은 2000년에 유입 대 유출 인구비가 감소하지만, 강남구는 감소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유입 대 유출의 비가 1이면 유입인구와 유출인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주간인구가 상주인구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입 대 유출의 비가 1 이하로 내려가면 상주인구를 제외한다면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 된다. 은평구의 유입 대 유출의 비는 1995년에 0.4, 2000년에도 0.4 그리고 2005년에는 0.3을 기록하여 유입에 비해 유출이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은평구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곳으로 서울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이 역시 유입에 비해 유출이 많은 곳이고, 이처럼 주간에 유출인구가 많은 곳은 결국 베드타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14> 서울의 유입·유출 비 및 주간인구지수의 변화

(단위: 비율)

구	유입/유출			주간인구지수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지수의 변화량 1995-2000	지수의 변화량 2000-2005
종로구	6.5	6.4	7.0	244	216	251	-28	35
중구	13.1	9.8	12.0	395	292	354	-103	62
용산구	2.1	2.3	2.1	135	131	134	-4	3
성동구	1.4	1.1	1.0	115	104	100	-11	-4
광진구	0.4	0.7	0.8	80	92	94	12	2
동대문구	1.8	2.4	1.4	126	130	112	4	-18
중랑구	0.4	0.4	0.3	78	83	79	5	-4
성북구	0.9	0.9	0.9	96	98	97	2	-1
강북구	0.2	0.4	0.4	69	82	79	13	-3
도봉구	0.6	0.5	0.3	83	81	76	-2	-5
노원구	0.5	0.4	0.5	80	85	86	5	1
은평구	0.4	0.4	0.3	79	84	80	5	-4
서대문구	1.3	1.4	1.3	112	110	108	-2	-2
마포구	1.1	1.2	1.2	102	106	106	4	0
양천구	0.4	0.4	0.5	76	82	84	6	2
강서구	0.7	0.7	0.5	90	93	85	3	-8
구로구	1.3	1.1	1.0	111	101	101	-10	0
금천구	0.5	0.6	1.0	80	89	99	9	-10
영등포구	2.5	2.5	2.0	150	138	133	-12	-5
동작구	0.5	0.6	0.7	81	90	91	9	1
관악구	0.5	0.6	0.4	81	88	81	7	-7
서초구	1.7	1.7	2.2	125	121	140	-4	19
강남구	2.9	3.9	4.0	160	166	182	6	16
송파구	0.7	0.8	0.9	90	95	97	5	2
강동구	0.5	0.5	0.4	84	86	83	2	-3

자료: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서울에 이어서 인천을 비롯한 경기 지역의 주간인구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인천에서도 인천 중구는 중심부답게 유출인구에 비해 유입인구가 훨씬 많다. 그래서 유입 인구 대 유출인구의 비를 구하면 인천 중구는 1995년에 4.6, 2000년에 3.7 그리고 2005년에 4.9를 기록하여 2000년에 일시적으로 주간인구의 규모가 감소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천 중구를 제외하면 2005년에 파주시의 유입인구 대 유출인구의 비가 4.0에 이르러 유출인구에 비해 유입인구가 4배나 많음을 알 수 있다. 인천의 각 구를 포함하여 경기도에 속한 각 시의 유입 대 유출인구의 비를 구하여 보면, 결론적으로 비가 1.0을 넘어서 상주인구를 제외하면 주간인구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은 인천동구(1.4), 인천 남동구(1.2), 평택시(1.3), 과천시(1.5), 시흥시(1.0), 이천시(1.6), 안성시(1.6), 김포시(1.4), 화성시(2.6), 광주시(1.0) 정도에 불과하다. 그 외의 수많은 경기시 지역에서는 유입 인구보다는 유출 인구가 더 많다.

인천 및 경기 지역에서 유입에 비해 유출 인구가 많은 곳의 몇 예를 들면 인천 연수구는 1995년에는 유입 대 유출의 비가 0.2에 불과했다. 이곳은 2005년에 유입 대 유출의 비가 겨우 0.4를 기록했다. 인천 계양구도 1995년에 0.3, 2000년에 0.3을 기록했고, 2005년에 0.5 수준에 도달했다. 성남시나 의정부시, 고양시, 군포시, 의왕시 그리고 안양시도 유입 인구에 비해 유출 인구의 폭이 훨씬 크다.

2005년 현재 유입 인구에 비해 유출 인구가 더 많아 유입 대 유출의 비가 1 이하 이면서도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인 지역은 단 곳도 없다. 즉 유입에 비해 유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배출 요인이 강한 지역의 성격상 주간에 다른 곳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인천 및 경기 시부 주간인구지수의 변화

(단위: 비율)

구	유입/유출			주간인구지수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지수의 변화량 1995-2000	지수의 변화량 2000-2005
인천 중구	4.6	3.7	4.9	191	145	171	-46	26
인천 동구	1.0	1.7	1.4	100	115	112	15	-3
인천 남구	1.0	1.1	0.9	100	101	96	1	-5
인천 연수구	0.2	0.3	0.4	64	78	82	14	4
인천 남동구	0.9	0.9	1.2	98	98	106	0	8
인천 부평구	0.9	0.5	0.5	96	89	85	-7	-4
인천 계양구	0.3	0.3	0.5	74	86	85	12	-1
인천 서구	0.8	0.8	0.8	96	96	95	0	-1
수원시	1.1	1.0	0.6	102	99	93	-3	-6
성남시	0.5	0.5	0.7	82	89	92	7	3
의정부시	0.7	0.6	0.5	93	89	87	-4	-2
안양시	0.6	0.8	0.7	89	94	92	5	-2
부천시	0.5	0.6	0.6	86	91	90	5	-1
광명시	0.3	0.3	0.4	71	80	80	9	0
평택시	0.9	1.1	1.3	99	101	103	2	2
동두천시	0.9	0.9	0.6	99	98	92	-1	-6
안산시	1.3	1.2	0.9	105	103	98	-2	-5
고양시	0.3	0.4	0.5	76	85	88	9	3
과천시	1.1	1.1	1.5	102	105	115	3	10
구리시	0.6	0.7	0.6	85	92	90	7	-2
남양주시	0.5	0.3	0.3	87	84	85	-3	1
오산시	1.5	1.0	0.7	112	100	93	-12	-7
시흥시	0.9	0.7	1.0	96	94	101	-2	7
군포시	0.4	0.4	0.5	76	83	86	7	3
의왕시	0.4	0.4	0.4	75	80	81	5	1
하남시	0.3	0.6	0.8	76	88	94	12	6
용인시	1.0	1.2	0.8	115	104	95	-11	-9
파주시	1.9	1.0	1.0	98	100	100	2	0
이천시	1.9	1.7	1.6	107	105	104	-2	-1
안성시	0.8	1.9	1.6	106	108	106	2	-2
김포시	2.8	1.9	1.4	125	114	106	-11	-8
화성시			2.6			129		
광주시			1.0			99		
양주시			0.9			98		
포천시			4.0			118		

주)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는 1995년에는 군부이었음.

자료: 1995, 200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3절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

서울의 주간인구지수는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지역을 총괄하여 주간인구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사이에 오고가는 현황을 분석한 표를 보았을 때 인구가 서울로 몰려든다고 말할 정도의 서울의 위상이 지금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절에서는 서울의 각 구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순으로 5개 지역을 골라 살펴보자. 1995년과 2000년은 이미 은기수(2000)에서 상세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2005년만 예를 들기로 한다.¹⁾

1. 통근·통학 유입, 유출지

다음 <표 16>은 서울의 구 가운데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인 구만 뽑은 후 각각의 구에 유입되는 유입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부터 낮은 곳으로 다섯군데를 뽑아 보여주고 있다.

<표 16> 주간인구지수가 100이상인 서울의 구별 주간인구 유입지, 2005
(단위: 순위, %)

구 \ 유입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종로구	서대문구(6.57)	성북구(6.49)	노원구(6.02)	고양시(5.73)	은평구(5.60)
중구	고양시(5.38)	노원구(5.22)	성북구(4.57)	마포구(4.45)	성동구(4.37)
용산구	동작구(5.58)	관악구(4.84)	영등포구(4.76)	마포구(4.56)	인천시(4.35)
성동구	광진구(9.75)	노원구(5.89)	동대문구(5.83)	중랑구(5.34)	송파구(4.63)
동대문구	중랑구(11.90)	노원구(8.07)	성북구(7.87)	광진구(5.46)	도봉구(4.51)
서대문구	은평구(10.00)	고양시(9.20)	마포구(8.79)	강남구(4.40)	강서구(4.15)
마포구	고양시(8.53)	서대문구(7.35)	은평구(6.63)	강서구(5.90)	인천시(5.45)
구로구	인천시(10.60)	부천시(9.62)	광명시(7.66)	양천구(6.98)	영등포구(6.26)
영등포구	강서구(8.75)	양천구(8.38)	구로구(7.05)	인천시(6.60)	관악구(5.52)
서초구	성남시(8.15)	강남구(8.09)	관악구(7.50)	동작구(6.62)	용인시(4.72)
강남구	성남시(7.94)	송파구(7.67)	관악구(5.95)	서초구(5.31)	동작구(3.94)

자료: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먼저 서울 외곽에 건설되었던 신도시들이 서울에서 상주인구 혹은 통근·

1) 1995년과 2000년 현재 서울에서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에 어디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지는 은기수(2002)에서 상세히 분석했다. 지면의 한계상 1995년과 2000년의 분석은 여기서 생략한다. 자세한 내용은 은기수(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통학인구로 서울의 각 구에 주간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표 16>을 통해 살펴보자. 고양시는 중구에 유입되는 통근·통학인구 중 가장 많은 유입인구를 제공하고 있다. 마포구의 경우에도 새로 유입되는 인구 가운데 고양시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종로구에 유입되는 인구 가운데 고양시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종로구에 네 번째로 많은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에는 서초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중 가장 많은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고(8.15%), 강남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다(7.94%).

인천시의 경우에는 구로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다(10.60%). 이외에도 영등포구에 유입되는 인구 중 인천시 출신이 6.6%로 제4위를 차지하고 있고, 마포구에 유입되는 인구 가운데는 인천시가 5.45%로 제5위를 달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리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용인지역에서는 서초구에 공급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5위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간인구를 서초구에 공급하고 있다.

서울 지역 내에서는 노원구가 서울의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지역에 유입인구를 많이 보내고 있다.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에 유입되는 인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유입인구가 노원구에서 온다. 종로구에 유입되는 인구 중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역시 노원구에서 온다.

도봉구와 함께 주간인구지수가 낮은 곳 가운데 하나인 서울의 은평구는 서대문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서대문구에 보내고 있다. 서대문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제일 많은 인구가 은평구에서 오는 것이다. 마포구 또한 은평구에서 많은 주간인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마포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은평구에서 오고 있다. 도심부인 종로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주간인구도 은평구에서 오고 있다. 이처럼 주간인구지수가 낮은 은평구는 서울의 도심부 및 도심부에 인접한 서울의 중심 지역에 많은 주간인구를 보내고 있다.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낮은 곳이 도봉구였는데, 의외로 도봉구가 배출하는 인구가 서울에서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곳으로 유입되는 비율은 적은 것 같다. 동대문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인구가 도봉구에서 올 뿐, 다른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서울 지역에 도봉구의 주간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것은 아님을 <표 16>은 보여준다.

서울의 한강 이남 지역이면서 우리가 소위 “강남”이라 부르는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를 보면 서초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주간인구가 강남구에서 유입된다. 다른 한 편 강남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주간인구 또한 서초구에서 유입된다. 이처럼 강남구와 서초구는 소위 서울의 “강남”을 형성하면서 강남구에 살면서 통근·통학은 서초구로 하거나, 서초구에 살면서 통근·통학은 강남구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한 편 서울의 관악구는 서울의 신 도심부인 강남과 영등포 지역에 주간인구를 많이 보내는 배후지역활을 하고 있다. 관악구는 서초구와 강남구에 주간인구를 많이 유입시키는데, 강남구와 서초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중 각각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서울의 관악구에서 온다. 여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유입인구는 주위의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그리고 인천시에서 많이 온다. 그러나 관악구도 영등포구에 주간인구를 많이 보내는 순서로 보면 다섯 번째로 영등포구에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있다.

서울의 입장에서는 서울 내에서 일일 인구이동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지만, 서울 외곽에 위치한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주간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지역이 서울일 수도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경기 내에서 일일 인구이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서울 주위의 도시는 소위 서울의 위성도시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상주는 서울 외곽에서 하지만, 주간에는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²⁾

<표 17>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서울 주위의 경기도 시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첫 번째 유입지는 단연 서울의 강남구라는 점이다. 용인시(32%), 성남시(30%), 군포시(20.3%), 수원시(19.6%), 안양시(17%), 과천시(16%), 하남시(15.6%), 남양주시(13.9%), 구리시(13.3%), 인천시(10.9%), 광명시(10%), 고양시(9.8%), 의정부시(8.7%), 부천시(8.7%) 등 서울의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시 지역에서 주간에 배출하는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5개 지역에 서울의 강남구가 포함되어 있다.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서초구도 서울의 소위 “강남”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의 시 지역에서 서울로 배출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서초구에 유입되는 인구도 비중이 크다. 과천에서 주간에 서울로 배출하는 주간인구의 가장 많은 인구가 서초구(27%)로 유입된다. 용인시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주간인구도 20%가 역시 서초구로 유입된다. 성남시(15.6%), 안양시(15%), 군포시(14%), 수원시(13%)도 서울로 배출하는 주

2) 여기에 관한 분석도 1995년과 2000년에는 은기수(2002)에서 상세하게 이루어졌다. 1995년과 2000년에 관해서는 은기수(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간인구들이 가는 곳 가운데 역시 서초구로 주간인구를 많이 보내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에는 서초구에 아주 많은 주간인구를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광명시를 떠나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인구가 서초구(6.37%)로 유입되고 있다.

<표 17> 경기의 일부 시별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주간유출인구의 통근·통학지, 2005³⁾
(단위: 순위, %)

구 \ 유입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인천시	영등포구(12.62)	강남구(10.94)	구로구(10.24)	중구(7.20)	강서구(6.54)
수원시	강남구(19.62)	서초구(12.88)	중구(7.57)	영등포구(6.86)	용산구(5.32)
성남시	강남구(30.02)	서초구(15.59)	송파구(14.04)	중구(6.17)	종로구(3.78)
의정부시	노원구(15.33)	도봉구(11.38)	종로구(8.78)	강남구(8.68)	동대문구(7.81)
안양시	강남구(17.04)	서초구(15.15)	중구(8.20)	금천구(7.85)	영등포구(6.94)
부천시	영등포구(12.17)	구로구(11.80)	강서구(9.19)	강남구(8.67)	양천구(7.21)
광명시	구로구(15.50)	금천구(15.33)	영등포구(10.68)	강남구(9.99)	서초구(6.37)
고양시	중구(13.04)	종로구(10.72)	강남구(9.76)	영등포구(9.33)	서대문구(8.79)
과천시	서초구(27.05)	강남구(15.98)	중구(9.43)	관악구(7.79)	종로구(7.38) 동작구(7.38)
구리시	강남구(13.34)	광진구(10.84)	중랑구(10.08)	송파구(8.24)	성동구(7.63)
남양주시	강남구(13.90)	중랑구(9.24)	노원구(8.74)	동대문구(8.54)	중구(7.75)
군포시	강남구(20.29)	서초구(14.08)	구로구(8.59)	중구(8.41)	영등포구(6.58)
용인시	강남구(31.96)	서초구(20.05)	송파구(9.08)	중구(5.74)	종로구(4.46)
하남시	강동구(28.60)	송파구(19.14)	강남구(15.64)	광진구(4.94)	중구(4.73)

자료: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강남구와 서초구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소위 “강남”이라고 간주한다면 서울 주위의 경기 시지역에 살면서 통근·통학은 강남으로 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용인시의 경우 서울로 주간인구로 배출하는 인구 가운데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로 유입되는 인구를 합하면 용인시가 서울로 배출하는 주간인구의 52%가 서울의 “강남”지역으로 일일 인구이동하고 있다. 과천시의 경우에도 배출하는 주간인구의 43%가 서울의 “강남”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에는 36%, 군포시의 경우에는 34%, 수원시의 경우에는 32%, 안양시의 경우에는 32% 등 매우 높은 비율로 서울의 “강남”지역으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 주위의 경기도 시지역은 서울의 “강남”지역에 주간인구를 공급하는 배후지 역할을 하고 있다.

3) 이 표에 제시된 주간인구는 인천과 경기도를 떠나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만을 다루고 있다.

서울 내에서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서울 중구이다. 서울 중구는 상주 인구가 13만 명이 채 안 되는, 상주인구가 매우 작은 지역이다. 그러나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에 통근·통학으로 유입되는 주간인구가 많아 주간인구지수는 매우 높다. 이처럼 높은 주간인구지수를 기록하는 데는 고양시와 중구 주위의 서울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임을 우리는 <표 16>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시지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들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지역에 서울의 최도심부인 중구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의 “강남”지역에 유입시키는 인구의 규모에 비하면 비록 적다고 해도, 서울 중구는 경기도에서 주간에 서울로 배출하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5대 지역의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 고양시(13%), 과천시(9.4%), 군포시(8.4%), 안양시(8.2%), 수원시(7.6%), 인천시(7.2%), 성남시(6.2%), 용인시(5.7%), 하남시(4.7%) 등에서 서울로 배출하는 주간인구가 서울지역으로 유입되는 5대 지역의 하나로 서울의 중구가 위치하고 있다.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는 서울의 전통적인 도심부이고,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서울의 부심부이자 최근에는 새로운 도심부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의 다른 한 축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등포지역이다. 영등포 지역도 역시 서울 인근의 경기도 시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의 하나이다. 영등포 지역은 인천시가 서울로 배출하는 주간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주간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다(12.6%). 인천시 외에도 부천시(12.2%), 고양시(9.3%), 수원시(6.9%), 안양시(6.9%), 군포시(6.6%)의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가 역시 서울의 도심부의 하나인 영등포 지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서울의 인근에 있는 경기 시지역 가운데 서울의 중심부나 부도심부로 주간인구를 별로 많이 보내지 않는 곳은 의정부시이다. 의정부시에서 서울로 유출되는 주간인구는 주로 노원구와 도봉구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경우에도 서울의 구도심부인 종로구에 8.8%의 주간인구가 들어가고 있고, 강남구에도 8.7%의 주간인구가 들어가고 있어서 꼭 서울의 중심부나 부도심부로 주간인구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다만 상대적으로 서울의 중심부나 부도심부에 배출하는 인구의 규모가 다른 경기 시 지역에 비해 작다는 것일뿐 역시 주간인구의 상당량이 서울로 유입되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강동구에 가장 많은 주간인구가 유입되고 있고(28.6%), 서울의 “강남”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송파구에도 서울로 배출되는 주간인구의 19%가 유입되고 있다. 하남시는 서울 강남구에 15.6%의 주간인구를 보내면서 동시에 중구에도 4.7%의 하남시 주간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이처럼 <표 17>은 서울의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시 지역에서 서울로 배출하는 주간인구 가운데 소위 서울의 새로운 도심부인 “강남”지역에 가장 많은 인구를 공급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경기도 시 지역은 서울 “강남”지역에 주간인구를 공급하는 배후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 통근·통학 소요시간

서울의 외곽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 밖에 상주하면서 통근·통학을 서울로 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 외곽의 경기도 지역에 살면서 서울로 오고 가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다음 <표 18>을 통해 살펴보자.⁴⁾

먼저 30분 이내의 통근·통학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20%를 넘는 경우는 광명시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경우이다. 광명시에서 서울시로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22.2%는 30분 이내에 자신의 일터에 도착한다. 이보다는 못하지만 과천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16%는 30분 이내의 시간이 걸린다. 하남시의 경우에는 18.7%가 30분 이내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로 인접한 강동구로 출퇴근하는 주간인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30분에서 45분 사이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과천시(42.4%), 구리시(41.3%), 성남수정, 중원구(38.6%), 하남시(38%), 성남분당구(34.5%), 광명(34.1%), 고양덕양(32.6%)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 하는 경우 단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힘들다.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 군포시(56.3%)와 의왕시(50.7%)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의 50% 이상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의 시간을 들여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다. 용인시(47.8%), 안양시(47.3%), 수원시(46%), 고양, 일산(45.4%), 광주(44.6%), 부천(40.4%), 안산(41%) 등은 서울로 일일 인구 이동하는 주간인구의 40% 이상이 1시간-1시간 30분 사이의 시간을 들여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그 외의 경기 지역에서는 동두천과 과천, 하남, 이천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의 30% 이상이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

때로는 1시간 30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통근·통학하기도 한다. 혹은 두 시간 이상을 걸리면서 서울로 통근·통학하기도 한다. 동두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주, 이천, 포천, 안성 등지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할 때도 2시간 이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2시간 이상 걸리

4) 2000년의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은 은기수(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평택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우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42%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의 시간을 들여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의 시간을 들여 통근·통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은 평택 이외에도 오산, 이천, 시흥, 안산, 수원, 화성 등지이다. 이에 못 미치지만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주간인구의 29%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의 시간을 들여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다.

이들의 교통수단에 따라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서울의 배후지 역할을 하면서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는 이들 지역에서 서울로 오고가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들의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표 18> 인천 및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 2005 (단위: %)

출발지	15분미만	15-29분	30-44분	45-59분	60-89분	90-119분	120분 이상
인천	0.2	1.2	11.7	4.1	42.7	28.6	11.5
수원	0.0	0.2	8.6	5.2	46.0	31.0	9.0
성남 수정, 중원	0.6	10.2	38.6	10.4	30.6	8.2	1.4
성남 분당	0.1	2.9	34.5	11.3	36.5	11.6	3.2
의정부	0.8	5.2	26.8	7.5	35.4	18.6	5.7
안양	0.5	3.9	27.4	10.2	47.3	9.7	1.1
부천	1.1	5.5	27.6	6.2	40.4	15.5	3.8
광명	4.2	18.0	34.1	6.5	30.3	6.4	0.5
평택	0.0	0.0	1.7	1.7	38.3	41.7	16.7
동두천*	0.0	0.0	0.0	6.4	27.7	23.4	42.6
안산	0.2	0.4	10.8	3.9	41.0	31.0	12.9
고양 덕양	0.1	4.5	32.6	9.2	39.0	12.9	1.7
고양 일산	0.1	1.0	19.5	9.2	45.4	20.3	4.5
과천	3.4	12.7	42.4	12.2	28.2	0.8	0.0
구리	1.7	11.5	41.3	8.5	30.1	6.5	0.5
남양주	0.1	5.1	23.3	8.0	39.4	18.4	5.7
오산*	0.0	0.0	4.7	9.3	30.2	39.5	16.3
시흥	0.0	2.3	18.8	3.6	32.6	30.6	12.1
군포	0.2	0.7	16.8	9.1	56.3	14.8	2.1
의왕	0.0	2.5	24.3	9.1	50.7	12.0	1.5
하남	2.7	16.0	38.0	3.5	25.7	6.4	2.9
용인	0.1	0.2	13.0	8.8	47.8	21.4	8.7
파주	0.0	0.0	10.1	3.2	39.3	26.7	20.7
이천*	0.0	0.0	0.0	3.6	28.6	39.3	28.6
안성*	5.0	5.0	0.0	5.0	30.0	30.0	25.0
김포	0.3	4.3	26.8	6.2	35.6	18.6	8.2
화성	0.0	1.1	7.7	4.4	37.4	34.1	15.4
광주	0.6	0.9	22.9	9.3	44.6	17.5	4.2
양주	1.0	2.0	8.3	5.4	33.3	30.9	19.1
포천*	0.0	0.0	14.3	6.1	30.6	20.4	28.6

주) * 60 사례 이하임.

자료: 200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제 5 장 결론

이 연구는 인구학적 연구에서는 사실상 지금껏 무시되어 온 일일 인구이동을 다루고 있다. 인구학적 연구에서 인구이동은 1년 사이의 이동을 단기이동으로 간주하고, 1년 이상의 사이에 이루어진 인구이동을 장기이동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대개 단기이동의 경우 1년 사이에 거주지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장기이동의 경우 5년 사이에 거주지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나 단기이동이든 장기이동이든 이동의 경험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얼마든지 반복이동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1년 전 거주지와 5년 전 거주지 정보를 이용해서 장단기 인구이동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제약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인구학적 연구에서는 소외되어 왔지만, 현실 생활 속에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는 인구이동은 역시 일일 인구이동이다. 통계청의 자료 생산 측면에서 보면 통근·통학과 주간인구라고 표기되어 있는 인구이동이 바로 일일 인구이동에 해당된다. 전 인구의 절반가까이가 서울 및 경기 지역, 즉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시도의 경계를 넘어 매일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는데, 그중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인구이동의 방향과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농현상이 오래 전부터 일어났지만 서울로 오는 모든 이동 인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 주위에 수많은 위성도시가 건설되어왔다. 그래서 생업은 서울에서 영위하지만 상주는 서울 주위의 수도권에서 하는 생활유형이 오래 전부터 자리게 되었다.

이 연구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통근·통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별, 각 지역별 유출과 유입, 주간인구지수를 통해 살펴 본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통근·통학 인구가 각 지역별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학업을 위해 거의 대부분 통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0대의 학업에 따른 통학 양상에서 20대로 건너가면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갑자기 낮아진다. 그래서 20대부터 30대 및 40대까지는 통근·통학자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그러다 50대부터는 다시 통근·통학자의 비율이 낮아진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직업에 따른 통근·통학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판매직과 서비스직이 상대적으로 통근·통학을 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직업위세가 강한 직종에서는 거의 50% 이상이 다른 시군구도 통근을 하면서 생업을 영위하는 현상이 강하다. 반면에 직업위세가 약한 직종에서는 다른 시군구로 통근하기 보다는 같은 시군구 내에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시계열적으로는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일 인구이동은 수도권에서 그 의미가 더 강하다. 이 연구는 수도권의 인구이동 현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내의 일일 인구이동에서 서울 내에서 주간 인구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일일 인구이동을 하는 전체 이동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경기도 내에서 주간 인구이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하면서 비단 서울에서만 생업을 영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울 밖의 경기도 지역에서도 수도권의 인구가 생업을 영위하며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에서 주간인구지수가 120이상인 지역을 골라 그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가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았다. 또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가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지도 살펴보았다. 서울의 경우 서울 내에서도 중구, 종로구를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부, 강남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하는 강남 부도심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등포 부도심부가 있고, 이들 지역은 인천, 일산, 분당 등의 신도시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많지만 소위 서울의 베드타운 지역과 각 도심부의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주간인구가 많음을 확인했다.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주간인구의 경우 가장 많은 경우는 강남구와 서초구로 대표되는 소위 서울의 “강남” 지역으로 가장 많은 주간인구가 유입되고 있었다. 이들 주간인구는 “강남” 지역만이 아니라 중구로 표현되는 구 도심부에도 많이 유입되고 있었다.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과천 등지에서는 비교적 통근·통학을 통해 서울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은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거의 한 시간에 가까운 통근·통학 시간을 걸러 서울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다. 때로는 두 시간에 가깝거나 두 시간 이상을 들여 서울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통근·통학자도 경기 지역에는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일일 인구이동을 다루어 한국인의 매일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수도권의 일일 인구이동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한국 사회의 최 중심지인 서울 및 주위의 지역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인구이동을 통해 서울 내에서도 과연 어디가 한국사회의 중심지역인지에 관해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일일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학술적인 의의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일일 인구이동의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매일 가장 많은 주간인구가 몰리는 지역이 어디인지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중심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동방향과 이동에 걸리는 시간, 이동에 이용하는 수단의 분석을 통해 교통행정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교통정책을 펼치는데 중요한 기본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에 관한 분석을 했고, 이러한

분석이 앞으로 수도권에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일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현실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면서 인구 학자들 사이에서는 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 이 분야의 연구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제 6 장 참고문헌

- 권태환·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 은기수. 1997. “주야간활동인구 개념” 『비전 중구 2000-상주인구회복과 인간위주 환경조성을 위한 장기발전방안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_____. 2000. “도심부의 인구문제” 김창석 외 공저. 『도시중심부연구』. 제7장. 서울:보성각.
- _____. 2001.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계층구조 비교분석: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4권 제1호.
- _____. 2002. “제15장.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김두섭·박상태·은기수(편). 『한국의 인구』 2. 통계청.
- 통계청. 1997. “우리나라 인구의 거주지 이동 및 통근·통학 현황” 제3회 통계의 날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 통계청.

4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 방법에 관한 연구

- 2000년 인구센서스자료와 2005년 인구센서스자료
비교분석을 통하여 -

박 수 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목차〉

<표 1> 고령자(65세이상) 규모 및 추이	107
<표 2> 조사대상의 지역별 분포	113
<표 3>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포	115
<표 4> 고령자의 성별 인구학적 특성	116
<표 5> 조사대상의 경제활동 상태 분포	118
<표 6> 조사대상의 구직활동 분포 (2000년)	119
<표 7> 고령취업자의 근로장소 분포 (2005년)	119
<표 8> 성별 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	120
<표 9> 취업별 고령자의 인구학적 특성	120
<표 10> 조사대상의 거주상태 분포	121
<표 11> 조사대상의 가구유형과 세대구성 분포	122
<표 12> 고령자의 활동상태(2000년)	123
<표 13> 고령자의 활동제약 여부(2005년)	124
<표 14> 성별 고령자의 활동제약 여부	124
<표 15> 취업별 고령자의 활동제약 여부	124
<표 16> 고령자의 생계수단과 부양자(2000년)	125
<표 17>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2005년)	126
<표 18> 성별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2005년)	127
<표 19>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안 4범주(2005년)	127
<표 20> 개인적 특성별 고령자의 생계수단(2000년)	129
<표 21> 개인적 특성별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법(2005년)	130
<표 22> 가구유형별 고령자의 생계수단(2000년)	132
<표 23> 가구유형별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법(2005년)	133
<표 24> 활동상태별 고령자의 생계수단(2000년)	134
<표 25> 활동제약별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법(2005년)	135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 방법에 관한 연구

- 2000년 인구센서스자료와 2005년 인구센서스자료 비교분석을 통하여 -

박 수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1 장 연구목적과 대상

1절 연구목적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초저출산, 초고령화에 대해서 위기감만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하나의 추세로 인정하고 고령사회에 적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생활실태에 대한 충분한 실증적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적·학문적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기획되었다. 우리의 정책적·학문적 관심은 ‘은퇴 이후의 여유로운 노년기’에 대한 것보다는 우선 늘어만 가는 노인(단독)가구의 생계 방안이 무엇인지 하는 데 모아져 있다. 이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고령자들이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부양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가 하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고령자의 생계수단과 생활비 충당방안을 경험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예정된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계수단 및 주 부양자는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처음 조사되었다. 2005년 인구센서스에서는 주 부양자는 빠지고 대신 세는 나이 61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고령화시대에 고령자부담이 전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지 오래다. 따라서 표본조사가 아닌 센서스에서 고령자의 현재 생활비 부담에 관한 항목은 고령화시대의 고령자부양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2절 연구대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0년 인구센서스와 2005년 인구센서스의 만60세 이상 고령자이며 연구주제는 고령자의 생계수단과 생활비 충당방안이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2000년 고령자와 2005년 고령자의 성, 연령, 혼인지위, 학력, 경제활동상태, 직종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5년간 고령 집단의 생활상과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 두 시기 고령자의 가족구성, 세대구성 등 고령자의 거주상태(living arrangement)를 파악하고, 고령자가 주 부양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피부양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그 다음 성, 연령, 교육, 혼인상태, 경제활동 등의 특성과 가족구성 등 개인적인 차원과 가족의 차원에서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안에 관한 문항은 2000년 인구센서스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주제는 2000년과 2005년의 인구센서스를 함께 분석해서 지난 5년 사이에 고령자의 현재 생활비 충당 방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개인적인 수준의 특성상 차이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고령층의 자립 혹은 부양 문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시행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기여할 것이다.

제 2 장 기존 연구 검토

1절 고령화 추세와 고령자의 삶에 대한 선행 연구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365천명으로 총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총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부터 2005년의 기간 동안 29.4% 증가하여 총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고령 인구는 남성이 39.8%, 여성이 60.2%로 고령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여성의 증가율이 26.2%이었던 반면 남성의 증가율은 34.9%로 나타나 남성의 고령화 현상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표 1> 고령자(65세이상) 규모 및 추이

(단위 : 천명,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총인구	37,407	40,420	8.1	43,390	7.3	44,554	2.7	45,985	3.2	47,026	2.3
65세이상	1,446	1,750	21.0	2,262	29.3	2,640	16.7	3,372	27.7	4,365	29.4
남 자	539	652	20.9	811	24.3	975	20.2	1,287	32.1	1,736	34.9
여 자	907	1,097	21.0	1,452	32.3	1,666	14.7	2,084	25.2	2,629	26.2
구성비	3.9	4.3		5.2		5.9		7.3		9.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고령자의 인구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5년 현재 고령자의 연령별 분포는 65세-69세가 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세-74세 28.7%, 75세-79세 17.6% 등의 순이었으며 80세 이상으로 갈수록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80세 이상 고령자의 분포는 15.2%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고령집단내의 연령별 분포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80세 이상의 초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2000년 현재 80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476,965명으로 고령인구 내 비율은 14.1%였다. 그러나 2005년 현재 80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665,547명으로 늘어났고 전체 고령인구 내 비율도 15.2%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고령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이 55.4%, 사별이 42.9%, 이혼과 미혼이 각각 1.1%, 0.5%로 나타났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무학이 33.5%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졸업이 37.0%, 중학교 10.9%, 고등학교 11.4%등의 순이며, 대학 이상은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령남성의 경우 무학의 비중이 15.5%로 크게 감소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 고령여성은 무학(45.3%)과 초등학교 졸업(38.7%)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학력수준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7).

세대구성별로는 2005년 현재 전체 고령인구 중 33.0%가 1세대 가구에 분포하고 있고, 다음으로 2세대 가구(24.9%)와 3세대 가구(2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0년에만 해도 3세대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을 떠올릴 때,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1세대 가구나 1인 노인가구의 증대 현상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다(통계청, 2007). 이는 또한 전체 고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인구 집단 내에서 고령여성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시간이나 여가활동의 비중이 높고, 노동에 배분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여성의 경우, 고령남성에 비해 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경험이 적고,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인구 중 32.6%인 1,585,432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령남성의 36.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고령여성은 25.9%만이 이에 해당하였다.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은 남녀 모두 농업 및 임업(73.8%)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의 경우는 도매·소매업과 보건복지공공개인서비스업 및 기타에 해당되었다. 종사상 지위로는 고령남성의 경우 자영자가 73.8%로 가장 높았던 반면 고령여성의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74.0%로 가장 많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통계청, 2007).

한편 노인들의 유급노동시간은 노인 자신의 건강상태나 연령, 직종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수미·선보영·김진옥, 2005; 김진옥, 2006; 박수미, 2007).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5세-69세의 낮은 연령층이 38.4%, 70대가 27.9%로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연령과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가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노인의 유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직종을 들 수 있다. 노인의 생활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정경희, 2001),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세 시간 이상 긴 유급노동시

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의 경우 은퇴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농현상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노인들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노인 시기는 신체가 약해지고 경제적 수입이 감소되는 등 단독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부양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들면 가사노동의 양과 내용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행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노인들에 대한 가사노동의 요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문숙재, 1996), 결혼 상태나 세대구성 등의 요인에 따라 고령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세대 가구나 1인 노인가구의 경우, 노인이라 할지라도 청소 및 정리, 음식준비 등의 기본적인 가사활동은 노인 스스로가 담당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여성의 경우 젊었을 때와 다름없이 주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박수미·선보영·김진옥, 2005).

고령의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시간이 유지되는 가사노동과 달리 노인들의 가족보살피기 관련 시간은 현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연령까지는 손자녀의 출산이나 아이돌보기, 집안 보살핌 등 가정의 주변역할을 분담하거나 육아 또는 가사돌보기의 경험자로서 기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동거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들의 가사노동의 양과 내용이 저하됨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여가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따라서 ‘재생산을 위한 활력’으로 여겨지는 일반성인의 여가와 달리 노인의 여가는 매일 매일의 생활 전체이며, 취미나 오락, 자기개발 등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다양하고 전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여성의 경우 고령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이들에게 여가시간을 어떻게 조직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조경옥, 2005). 고령자의 여가유형은 성별이나 연령,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상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사회적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이가옥 외, 1995), 고령남성의 여가활동의 종류가 3.1개인 반면 고령여성은 2.4개로 고령여성이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못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하는 여가활동수가 적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에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절 노인의 생활비 충당에 관한 연구 동향

노인의 소득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빈곤노인가구 실태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김영숙, 2002; 최현수·류연규, 2003). 이들 연구에선 노인단독가구와 비노인가구간의 소득 격차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인단독가구가 빈곤가구일 확률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혹은 노인 가구의 소득이 건강, 만족도 등과 같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백경숙·권용신, 2007).

노인 가구의 소득원을 분석한 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효미(2007)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단독 가구 혹은 가구주가 60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소득원천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소득에 있어서 노인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기별 변화 추이를 보면 노인가구의 실질소득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8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근로소득 39.2%, 사회보험소득 27.6%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의 경우 단독 혹은 1세대인 비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88.5%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평균소득액을 항목별로 볼 때, 근로소득이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였으며 연간 403만 7천 원으로 나타났다. 비노인가구의 연평균 총소득이 1천 937만원인 점에 비교해 보면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무려 5배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반면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을 제외한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은 단독 또는 1세대 비노인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목별 소득이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 평균해 보면, 이전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 28.4%, 사회보험소득 9.7% 순이었다. 노인가구의 상당수가 이전소득에 의존해 가구경제를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전소득의 구성을 상세히 살펴보면, 친척/친지보조금이 67.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효미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인가구의 소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의 근로여부이지만 가구주가 은퇴한 이후에는 여전히 자녀 혹은 친지에 의한 부양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김수완·조유미(2006)는 노인계층의 소득구성 방식,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노인가구 유형의 특징과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소득구성 변화

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가구별 총소득의 차이를 고려하여 소득구성을 분석함으로써 소득원별 빈곤제거효과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 및 사적이전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둘째, 연령에 따라 근로소득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지만 70세 미만까지도 근로소득의 비중은 전체 소득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가 고소득, 고연령일수록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에 의해 근로소득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고소득 계층일수록 소득구성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은 노인단독가구에 비해 성인자녀동거가구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74%로 미루어 보아 근로소득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상당부분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들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공적연금 수급비율은 높지 않으나 일단 수급하는 경우 가구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급가구에서는 공적연금 급여가 없는 대신 사적연금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이는 외국에서 사적이전이 거의 없고 공적연금이 근로소득과 대체관계에 있는 것과 차별적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노인가구 집단별 빈곤율과 소득원별 빈곤제거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연령이 높거나 일하지 않을 경우,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않을 경우, 노인단독가구인 경우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익기(1993)는 1990년 7월 10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에 살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하였다. 직업을 가진 노인은 전체의 13.6%의 비율로 나타났다. 직업 이외의 소득원은 부동산 임대료, 자녀들로부터의 보조, 연금이나 공적부조 등이 있었다. 소득원의 수는 대체로 한 가지에 머무르고 있으나 응답노인의 20%는 두 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 소득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득원으로는 절대다수인 73.4%가 가족이 주는 돈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소득이 8.1%, 이자나 주식 등의 소득 7.3%, 부동산 소득 6.9%, 연금 2.2%, 공적부조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생활비 보조사항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57.3%가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보조자를 살펴보면, 장남이 75.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맏며느리외 며느리 11.2%, 차남이하 6.9%, 맏며느리 3.9%, 배우자 2.3%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취업을 원하는 노인의 비율은 높으나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설사 취업한 경

우라도 직업소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취업노인의 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대다수의 노인은 취업이외의 수단에 의해 소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소득원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가족으로부터의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고령층의 생활비 충당방안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Williamson과 Smeeding(2004)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받는 사회보험금과 임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룩셈부르크 임금 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5개 OECD국가들 간의 비교연구를 하였다. 20년 동안의 합성 코호트를 추적하여 사적 임금과 사회보험금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노인의 대다수가 소득 중 대다수를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보험금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런 보험금 수급 여부가 여성노인이 자신의 빈곤 정도를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정년퇴직과 공적연금 이전에 관대한 나라에 사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빈곤의 수준이 낮았다. 또한 이 경우에 주택은 특히 중요한 변수로서 나타났다. 노인 주택소유자들일수록 노인 임대주택 거주자들보다 빈곤할 확률이 낮았다. 주택의 가치가 높을수록, 주택은 노인들에게 중요한 부양의 원천이 될 것이다.

제 3 장 고령자의 개인적 특성의 변화

이 장에서는 2000년 고령자와 2005년 고령자의 개인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5년간 고령집단의 생활상과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 두 시기 고령자의 가족구성, 세대구성 등 고령자의 거주상태(living arrangement)의 변화도 파악하고자 한다.

1절 고령자의 인구학적 특성

2000년과 2005년 인구센서스를 통해 본 고령자의 지역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변화 추세가 읍면부 지역의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고 동부 지역의 고령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60.14%이었던 반면 2005년에는 동 비율이 55.28%로 감소하였다. 2000년에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고령자가 분포해 있는 지역은 서울로서 서울에 전체 고령자의 16.88%가 거주하였다. 반면 2005년 서울 거주 고령자 비율은 전체의 14.73%로 감소했으며 그 결과 2005년 고령자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고령자의 14.78%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고령자의 지역 분포는 이후 고령자의 직종, 산업 분포와도 일관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2> 조사대상의 지역별 분포

(단위: 명, %)

		2000년	2005년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17538(16.88)	20540(14.73)
	부산광역시	7343(7.07)	8877(6.37)
	대구광역시	4649(4.48)	5544(3.98)
	인천광역시	4229(4.07)	5214(3.74)
	광주광역시	2346(2.26)	2975(2.13)
	대전광역시	2218(2.14)	2723(1.95)
	울산광역시	1290(1.24)	1591(1.14)
	경기도	15536(14.96)	20608(14.78)
	강원도	4680(4.51)	6411(4.60)
	충청북도	4348(4.19)	6192(4.44)
	충청남도	6381(6.14)	8852(6.35)
	전라북도	6602(6.36)	9790(7.02)
	전라남도	7884(7.59)	12492(8.96)
	경상북도	9473(9.12)	13991(10.04)
	경상남도	8063(7.76)	12046(8.64)
읍면부	제주도	1303(1.25)	1567(1.12)
	동부	62472(60.14)	77068(55.28)
	읍면부	41411(39.86)	62345(44.72)
합계		103883(100.0)	139413(100.0)

<표 3>은 고령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분포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까닭에 2000년이나 2005년 모두 여성고령자의 비율이 남성고령자의 비율보다 조금 높다. 그러나 그 차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서 고령집단내의 남성 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추세는 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급속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가구의 증가와 연관되는 현상으로서 2000년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가 전체의 52.12%였던 데 비해 2005년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는 전체의 57.48%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노인부부가 가구주 부부를 이루는 비율은 2000년 74.25%에서 2005년 81.05%로 증가하였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3세대 가구 비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고령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령화의 정도가 더욱 진척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8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전체의 9.2%였던 데 비해 2005년에는 동 비율이 10.88%로 증가했다. 고령집단 내에 초고령집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또한 고령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자의 비중이 70% 가량 되어 고령층이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5년 고령자의 교육수준이 좀 더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고령자 가운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는 전체의 6.66%인 데 비해 2005년에는 동 비율이 7.3%로 증가하였다.

고령자의 생활세계 역시 다른 생애주기집단과 마찬가지로 성별로 매우 다르다(박수미·선보영·김진옥, 2005). <표 4>는 고령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성별로 나눠본 것이다. 먼저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연령계급별 분포를 보면 80세 이상 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근소한 차이이지만 2000년에 비해 2005년 80세 이상에서 차지하는 여성고령자의 비중이 조금 감소하였다.

고령집단의 혼인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별한 사람들의 90% 가량이 여성고령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고령층의 여성 가운데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여성이 많은 까닭에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고령자의 여성가구주 비율 역시 34%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고령집단의 성별 교육수준을 살펴본 결과, 고령집단 교육수준의 성별격차 역시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령집단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여성고령자의 혼인지위, 교육수준 등이 매우 열악하여 이들 집단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표 3>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포

(단위: 명, %)

		2000년	2005년
성별	남자	42491(40.90)	58059(41.65)
	여자	61392(59.10)	81354(58.35)
연령	60세이상-65세 미만	35854(34.51)	40249(28.87)
	65세이상-70세 미만	27986(26.94)	37694(27.04)
	70세이상-75세 미만	18438(17.75)	28737(20.61)
	75세이상-80세 미만	12053(11.60)	17559(12.59)
	80세이상-85세 미만	6148(5.92)	9968(7.15)
	85세이상	3404(3.28)	5206(3.73)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55179(53.12)	80131(57.48)
	가구주의 배우자	21946(21.13)	32858(23.57)
	자녀	60(0.06)	153(0.11)
	자녀의 배우자	89(0.09)	98(0.07)
	가구주의 부모	22826(21.97)	25648(24.69)
	배우자의 부모	2261(2.18)	
	조부모	561(0.54)	
	손자녀 및 그 배우자	8(0.01)	20(0.02)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	12(0.01)	
	형제자매, 그 배우자	154(0.15)	258(0.19)
	기타 친인척 (형제자매의자녀및그배우자)	8(0.01)	301(0.29)
	기타 친인척 (부모의형제자매및그배우자+기타친 인척)	293(0.28)	
	기타동거인	485(0.47)	555(0.40)
교육정도**	안 받았음	36973(35.61)	41977(30.11)
	초등학교	37585(36.19)	51802(37.16)
	중학교	10971(10.57)	17454(12.52)
	고등학교	11390(10.97)	17998(12.91)
	대학교(4년제 미만)	1622(1.56)	8957(6.42)
	대학교(4년제 이상)	4523(4.36)	
	대학원(석사과정)	534(0.51)	1225(0.88)
	대학원(박사과정)	244(0.23)	
합계	103883(100.0)	139413(100.0)	

주1) * 2000년 가구주와의 관계 결측값=1

2) ** 2000년 교육정도 결측값=41

<표 4> 고령자의 성별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2000년		2005년		합계
		남	여	남	여	
5세 단위 나이	60세이상-65세 미만	16662(46.47)	19192(53.53)	18788(46.68)	21461(53.32)	40249(100.0)
	65세이상-70세 미만	12050(43.06)	15936(56.94)	16822(44.63)	20872(55.37)	37694(100.0)
	70세이상-75세 미만	6881(37.32)	11557(62.68)	11768(40.95)	16969(59.05)	28737(100.0)
	75세이상-80세 미만	4158(34.50)	7895(65.50)	6188(35.24)	11371(64.76)	17559(100.0)
	80세이상-85세 미만	1954(31.78)	4194(68.22)	3155(31.65)	6813(68.35)	9968(100.0)
	85세이상	786(23.09)	2618(76.91)	1338(25.70)	3868(74.30)	5206(100.0)
10세 단위 나이	60세 이상-70세 미만	28712(44.97)	35128(55.03)	35610(45.69)	42333(54.31)	77943(100.0)
	70세 이상-80세 미만	11039(36.20)	19452(63.80)	17956(38.79)	28340(61.21)	46296(100.0)
	80세 이상	2740(28.69)	6812(71.31)	4493(29.61)	10681(70.39)	15174(100.0)
혼인 상태	미혼	139(35.01)	258(64.99)	256(38.44)	410(61.56)	666(100.0)
	배우자 있음	37708(59.57)	25597(40.43)	50971(58.25)	36529(41.75)	87500(100.0)
	사별	4196(10.74)	34867(89.26)	5755(11.72)	43360(88.28)	49115(100.0)
	이혼	431(39.94)	648(60.06)	1077(50.52)	1055(49.48)	2132(100.0)
가구주 와의 관계	가구주	37011(67.07)	18168(32.93)	52511(65.53)	27620(34.47)	80131(100.0)
	가구주의 배우자	388(1.77)	21558(98.23)	573(1.74)	32285(98.26)	32858(100.0)
	자녀	38(63.33)	22(36.67)	107(69.93)	46(30.07)	153(100.0)
	자녀의 배우자	7(7.87)	82(92.13)	18(18.37)	80(81.63)	98(100.0)
	가구주의 부모	4323(18.94)	18503(81.06)	4502(18.00)	20509(82.00)	25011(100.0)
	배우자의 부모	447(19.77)	1814(80.23)			
	조부모	1(12.50)	7(87.50)	0(0.0)	0(0.0)	0(0.0)
	손자녀 및 그 배우자	3(25.00)	9(75.00)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	44(7.84)	517(92.16)			
	형제자매, 그 배우자	54(35.06)	100(64.94)	108(41.86)	150(58.14)	258(0.19)
	기타 친인척 (형제자매의자녀및그 배우자)	1(12.50)	7(87.50)	90(25.79)	259(74.21)	349(100.0)
	기타 친인척 (부모의형제자매및그 배우자+기타친인척)	73(24.91)	220(75.09)			
기타동거인	101(20.82)	384(79.18)	150(27.03)	405(72.97)	555(100.0)	
교육 정도	안 받았음	7264(19.65)	29709(80.35)	8014(19.09)	33963(80.91)	41977(100.0)
	초등학교	14782(39.33)	22803(60.67)	19768(38.16)	32034(61.84)	51802(100.0)
	중학교	6588(60.05)	4383(39.95)	9918(56.82)	7536(43.18)	17454(100.0)
	고등학교	7935(69.67)	3455(30.33)	12135(67.42)	5863(32.58)	17998(100.0)
	대학교(4년제 미만)	1275(78.61)	347(21.39)	7129(79.59)	1828(20.41)	8957(100.0)
	대학교(4년제 이상)	3913(86.51)	610(13.49)			
	대학원(석사과정)	488(91.39)	46(8.61)	1095(89.39)	130(10.61)	1225(100.0)
대학원(박사과정)	226(92.62)	18(7.38)				
합계		42491(40.90)	61392(59.10)	58059(41.65)	81354(58.35)	139413(100.0)

주) 각 변수마다 성별 분포를 보이기 위한 표이므로 row percentage를 제시하였음.

2절 고령자의 경제활동

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본 것이 <표 5>이다. 2000년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의 비율이 32.48%에서 2005년에는 34.77%로 약간 증가했다. 2005년에 증가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주로 자영업자의 비중 증가와 연관된다. 또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의 직업 및 산업 분포를 보면 <표 2>에서 살펴본 읍면부 거주 고령층의 증가와 일맥상통하게 농림어업직종, 농림어업 산업의 비중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2005년에는 2000년에 비해서 숙박및음식점업과 운수업 등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것 역시 자영업자의 증가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반적으로 2000년에서 5년이 경과한 2005년에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은 근소하나마 증가했지만 증가한 분야가 주로 농림업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영업 형태로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인구센서스 조사에는 고령층의 구직활동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¹⁾. <표 6>을 보면 2000년 당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70,118명 중 8.52%인 5,977명이 구직활동을 했다고 응답함으로써 실업자로 파악되었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5,977명 가운데에서도 20.53%에 달하는 1,227명이 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즉 고령층 내부의 취업요구는 실제 취업률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은 2005년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장소를 표로 제시한 것으로서 고령취업자의 63.09%가 야외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등 고령층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준다고 하겠다. 물론 이것 역시 고령취업자의 대부분이 농림어업, 운수업, 자영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되는 것이다.

1) 2005년 인구센서스에도 고령층의 구직활동에 대한 설문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2005년 2% 인구센서스 자료에 이 설문항이 제공되지 않아 분석하지 못했다.

<표 5> 조사대상의 경제활동 상태 분포

(단위: 명, %)

		2000년	2005년
경제활동상태	취업(일하였음)	33402(32.17)	48470(34.77)
	취업(일시휴직)	320(0.31)	
	미취업	70118(67.53)	90930(65.23)
종사상지위	임금 근로자	6811(20.20)	8964(18.49)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18178(53.91)	27343(56.41)
	고용원을 둔 사업주	1361(4.04)	1633(3.37)
	무급 가족 종사자	7372(21.86)	10529(21.72)
직업	의회의원	1156(3.43)	1070(2.21)
	전문가	749(2.22)	1006(2.0)
	기술공	612(1.81)	1006(1.47)
	사무직	578(1.71)	951(1.96)
	서비스직	1159(3.44)	1620(3.34)
	판매직	2433(7.22)	2757(5.69)
	농림어업	21508(63.78)	32224(66.49)
	기능원	981(2.91)	1461(3.01)
	장치, 기계조작	973(2.89)	1461(3.4)
	단순노무	3571(10.59)	4978(10.27)
	분류불능(군인포함)	-	34(0.07)
산업	농업, 임업, 어업	21852(64.80)	32637(67.35)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1880(5.57)	2277(4.70)
	건설업	961(2.85)	1092(2.25)
	도매및소매업	2789(8.27)	3458(7.14)
	숙박및음식점업	1040(3.08)	1596(3.29)
	운수업	666(1.97)	1106(2.28)
	통신업	23(0.07)	59(0.12)
	금융및보험업	245(0.73)	242(0.50)
	부동산및임대업	1305(3.87)	1841(3.80)
	사업서비스업	742(2.20)	1163(2.40)
	공공행정	329(0.98)	459(0.95)
	교육서비스업	480(1.42)	663(1.3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44(0.72)	362(0.75)
	오락문화	192(0.57)	254(0.52)
	기타공공수리	792(2.35)	1060(2.19)
	분류불가능 (가사서비스업,국제및외국기관포함)	182(0.54)	193(0.40)
합계		33722(100.0)	48462(100.0)

<표 6> 조사대상의 구직활동 분포 (2000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직여부	찾아 보지 않았음	64141	91.48
	찾아 보았음	5977	8.52
합계		70,118	100.0
일할 수 있었는지	일할 수 있었음	1227	20.53
	가사, 학업, 질병 등 때문에 일할 수 없었음	4750	79.47
합계		5,977	100.0

<표 7> 고령취업자의 근로장소 분포 (2005년)

(단위: 명, %)

		2005년
근로장소	사업장(건물 및 땅)	12928(26.67)
	자기 집	2526(5.21)
	남의 집	486(1.0)
	거리	1221(2.52)
	야외 작업현장	30578(63.09)
	운송수단	587(1.21)
	기타	143(0.3)
합계		48469(100.0)

이번에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실태를 성별로 살펴보겠다. <표 8>을 보면,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은 2000년에 42.98%, 2005년에 44.21%로 근소하나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층이고 그에 따라 취업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고령여성이 숫적으로 고령남성보다 많고 고령여성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가 경제적 필요와 연관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고령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참여율 자체는 큰 문제일 것이다. 그나마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고용형태나 직종, 산업 분포를 살펴보아도 고령여성들의 열악한 생활세계를 짐작할 수 있다. 고령취업자 가운데 무급가족 종사자로 일하는 집단의 95% 가량이 여성이며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령여성의 비율은 불과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전반적인 고령취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취업률도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바로 이 점에서 증가하는 고령집단의 인적자본량(human capital) 증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8> 성별 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

		2000년		2005년		합계
		남	여	남	여	
경제 활동 상태	취업(일하였음)	19157(57.35)	14245(42.65)	27040(55.79)	21430(44.21)	48470(100.0)
	취업(일시휴직)	192(60.0)	128(40.0)			
	미취업	23122(32.98)	46996(67.02)	31015(34.11)	59915(65.89)	
총 사 상 지 위	임금 근로자	4742(69.92)	2069(30.38)	6191(69.07)	2773(30.93)	8964(10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12904(70.99)	5274(29.01)	18964(69.36)	8379(30.64)	27343(100.0)
	고용원을 둔 사업주	1190(87.44)	171(12.56)	1399(85.67)	234(14.33)	1633(100.0)
	무급 가족 종사자	513(6.96)	6859(93.04)	485(4.61)	10044(95.39)	10529(100.0)
직업	의회의원	1091(94.38)	65(5.62)	989(92.43)	81(7.57)	1070(100.0)
	전문가	665(88.79)	84(11.21)	872(86.68)	134(13.32)	1006(100.0)
	기수공	539(88.07)	73(11.93)	619(86.69)	95(13.31)	714(100.0)
	사무직	477(82.53)	101(17.47)	770(80.97)	181(19.03)	951(100.0)
	서비스직	413(35.63)	746(64.37)	597(36.85)	1023(63.15)	1620(100.0)
	판매직	1290(53.02)	1143(46.98)	1428(51.80)	1329(48.20)	2757(100.0)
	농림어업	10973(51.02)	10535(48.98)	15951(49.50)	16273(50.50)	32224(100.0)
	기능원	704(71.76)	277(28.24)	1117(76.45)	344(2.55)	1461(100.0)
	장치, 기계조작	871(89.52)	102(10.48)	1498(91.01)	148(8.99)	1646(100.0)
	단순노무	2325(65.11)	1246(34.89)	3170(63.68)	1808(36.32)	4978(100.0)
	분류불능(군인포함)	-	-	23(67.65)	11(32.35)	34(100.0)

주) 각 변수마다 성별 분포를 보이기 위한 표이므로 row percentage를 제시하였음.

<표 9> 취업별 고령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2000년			2005년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일하였음	일시적휴직			
나 이	60세이상-65세 미만	16074(44.83)	159(0.44)	19619(54.72)	18811(46.74)	21435(53.26)
	65세이상-70세 미만	10087(36.04)	83(0.3)	17815(63.66)	15332(40.68)	22359(59.32)
	70세이상-75세 미만	4573(24.81)	49(0.27)	13812(74.93)	9172(31.92)	19563(68.08)
	75세이상-80세 미만	1991(16.52)	15(0.12)	10045(83.35)	3711(21.14)	13847(78.86)
	80세이상-85세 미만	560(9.11)	12(0.2)	5575(90.69)	1172(11.76)	8795(88.24)
	85세이상	117(3.47)	2(0.06)	3252(96.47)	272(5.23)	4931(94.77)
교 육 정 도	안 받았음	10220(27.64)	100(0.27)	26651(72.09)	12705(30.27)	29268(69.73)
	초등학교	13481(35.87)	130(0.35)	23973(63.79)	20519(39.61)	31280(60.39)
	중학교	3587(32.69)	42(0.38)	7343(66.93)	6050(34.66)	11403(65.34)
	고등학교	3663(32.16)	28(0.25)	7699(67.59)	5864(32.59)	12131(67.41)
	대학교(4년제 미만)	499(30.76)	6(0.01)	1117(68.87)	2731(30.50)	6224(69.50)
	대학교(4년제 이상)	1535(33.94)	11(0.01)	2977(65.82)		
	대학원(석사과정)	240(44.94)	2(0.37)	292(54.68)	601(49.06)	624(50.94)
대학원(박사과정)	178(72.95)	1(0.41)	65(26.64)			
합계		33402(32.17)	320(0.31)	70118(67.53)	48470(41.65)	90930(58.35)

주) 각 변수마다 취업여부별 분포를 보이기 위한 표이므로 row percentage를 제시하였음.

3절 고령자의 거주상태(living arrangement)

<표 10>은 고령자의 거주상태를 주택 점유형태, 주인가구 여부, 거처 종류 별로 살펴본 것이다. 2000년에 비해 2005년 자가 소유 비율이 2.4%가량 높아졌다. 그와 동시에 월세 비율도 0.2% 가량 높아져서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고령집단내의 이질화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했다. 거처종류는 단독주택 비율이 67% 가량 되어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근소하나마 아파트의 비율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의 단독주택 거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향과 연관된다.

<표 10> 조사대상의 거주상태 분포

(단위: 명, %)

		2000년		2005년	
점유형태	자기 집	81374(78.35)		112516(80.71)	
	전세(월세 없음)	12282(11.83)		12056(8.65)	
	월세(보증금있는월세)	4977(4.79)	7378(7.1)	10560(7.57)	
	월세(보증금없는월세)	1341(1.29)			
	월세(사글세)	1060(1.02)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	2821(2.72)		4281(3.07)	
주인가구	주인가구	81216(78.51)		112516(80.71)	
	주인 아닌 가구(대표가구)	12886(12.46)		26897(19.29)	
	주인 아닌 가구(기타 세 들어 사는가구)	9351(9.04)			
거처종류	단독주택	69934(67.32)		93285(66.91)	
	아파트	22464(21.62)		33324(23.90)	
	연립주택	4827(4.65)		10012(7.18)	
	다세대주택	2331(2.24)			
	비거주용 건물(상가, 등)내 주택	3897(3.75)		2184(1.57)	
	기타(오피스텔)	11(0.01)	480(0.41)	608(0.44)	
	기타(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21(0.02)			
	기타(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45(0.04)			
	기타(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 기타)	353(0.34)			
합계	103883(100.0)		139413(100.0)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에서 5년이 경과한 2005년 고령층의 가구유형과 세대구성의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 노인만으로 된 가구의 증가이다. 2000년 고령층의 가구유형 가운데

가족과 함께 사는 혈연가구는 전체의 85.25%에서 2005년 82.31%로 감소한 반면, 노인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은 14.29%에서 17.26%로 증가하였다. 또한 가족과 함께 사는 혈연가구의 경우에도 노인부부만이 사는 가구가 2000년엔 30.1%였던 것이 2005년에는 43.28%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는 2000년에 전체의 44.85%였던 것이 2005년에는 60.5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앞서 고령층의 연령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고령층 내부의 초고령집단의 증가에도 기인하며 남성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부부가구의 비중도 늘어난 데 기인한다. 이와 같은 노인가구의 증가는 인구의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와는 별도로 또 다른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상이라고 하겠다.

<표 11> 조사대상의 가구유형과 세대구성 분포

(단위: 명, %)

		2000년	2005년
가구유형	혈연가구	88556(85.25)	114747(82.31)
	비혈연가구	484(0.46)	599(0.43)
	1인가구	14843(14.29)	24067(17.26)
세대구성*	1인가구	14843(14.29)	24067(17.34)
	부부	31270(30.1)	49664(35.78)
	부부+형제자매	26(0.03)	48(0.03)
	부부+기타 친인척	33(0.03)	194(0.14)
	가구주+형제자매	166(0.16)	40(0.03)
	가구주+기타 친인척	143(0.14)	220(0.16)
	1세대 기타	405(0.39)	558(0.40)
	부부+자녀	13814(13.3)	17186(12.38)
	부+자녀	732(0.7)	1008(0.73)
	모+자녀	4202(4.04)	5504(3.97)
	부부+양친	744(0.72)	888(0.64)
	부부+한부모	3527(3.4)	4936(3.56)
	부부+자녀+부부형제자매	30(0.03)	21(0.02)
	조부모+손자녀	1563(1.5)	2216(1.60)
	2세대 기타	5187(4.99)	6873(4.95)
	부부+자녀+양친	5749(5.53)	4828(3.48)
	부부+자녀+한부모	12701(12.23)	11526(8.30)
	3세대 기타	7473(7.19)	8389(6.04)
	4세대 이상	786(0.76)	648(0.47)
	합계		103883(100.0)

주)* 2005년 결측값=599(비혈연가구)

4절 고령자의 건강 상태

고령자의 건강 상태는 2000년 인구센서스 조사에서는 집안활동과 바깥활동을 혼자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물어보았고 2005년 인구센서스 조사에서는 두 개의 범주로 구성된 활동제약 여부 문항으로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2> ~ <표 15>에 나타나 있다.

2000년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가운데 집안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61%이며 바깥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38%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령자의 활동상태는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표 12> 고령자의 활동상태(2000년)

(단위: 명, %)

집안활동	혼자 할 수 있음	100088	96.39
	혼자 할 수 없음	3750	3.61
바깥활동	혼자 할 수 있음	98249	94.62
	혼자 할 수 없음	5589	5.38
합계		103883	100.0

2005년에는 좀 더 상세하게 고령자의 활동제약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감각기관, 학습능력, 육체적 활동 등에 대한 질문에서 이들 모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의 72.45%였고, 걷기 등 육체적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3.64%였다. 두 번째 범주의 활동제약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일상생활 관련 활동, 취업 활동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9.93%이며 쇼핑 등에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4.71%였다. 이때 특기할 만한 것은 취업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95.11%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2005년에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34.77%에 불과했다. 결국 고령집단의 취업 요구는 매우 큰 반면 실제로 이들이 나가서 일할 만한 일자리가 태부족이라는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활동제약 여부의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것이 <표 14>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고령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활동상에 제약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고령여성의 평균연령이 고령남성보다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취업별로 살펴본 활동제약 여부 역시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활동상태가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표 13> 고령자의 활동제약 여부(2005년)

(단위: 명, %)

활동제약1	시각, 청각, 언어 장애	6874(4.93)
	학습의 어려움 등 정신적 제약(치매포함)	3788(2.72)
	걷기 등 육체적 제약(중풍포함)	32951(23.64)
	없음	101003(72.45)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9229(6.62)
활동제약2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안 돌아다니기	6330(4.54)
	쇼핑, 병원가기, 집밖 돌아다니기	20511(14.71)
	취업활동(16세 이상)	6819(4.89)
	없음	111432(79.93)

<표 14> 성별 고령자의 활동제약 여부

(단위: 명, %)

		남	여	합계
활동제약 1 (해당 경우만1 이며 해당하지 않으면 공란)	시각, 청각, 언어 장애	2852(41.49)	4022(58.51)	6874(100.0)
	학습의 어려움 등 정신적 제약(치매포함)	1295(34.19)	2493(65.81)	3788(100.0)
	걷기 등 육체적 제약(중풍포함)	10816(32.82)	22135(67.18)	32951(100.0)
	없음	44880(44.43)	56123(55.57)	101003(100.0)
활동제약 2 (해당 경우만1 이며 해당하지 않으면 공란)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3145(34.08)	6084(65.92)	9229(100.0)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안 돌아다니기	2356(37.22)	3974(62.78)	6330(100.0)
	쇼핑, 병원가기, 집밖 돌아다니기	6762(32.97)	13749(67.03)	20511(100.0)
	취업활동(16세 이상)	2291(33.60)	4528(66.40)	6819(100.0)
	없음	48590(43.61)	62842(56.39)	111432(100.0)

주) 각 변수마다 성별 분포를 보이기 위한 표이므로 row percentage를 제시하였음.

<표 15> 취업별 고령자의 활동제약 여부

(단위: 명, %)

		취업	미취업	합계
활동제약 1 (해당 경우만1 이며 해당하지 않으면 공란)	시각, 청각, 언어 장애	1317(19.16)	5557(80.84)	6874(100.0)
	학습의 어려움 등 정신적 제약(치매포함)	397(10.48)	3391(89.52)	3788(100.0)
	걷기 등 육체적 제약(중풍포함)	7170(21.76)	25780(78.24)	32951(100.0)
	없음	40137(39.74)	60864(60.26)	101003(100.0)
활동제약 2 (해당 경우만1 이며 해당하지 않으면 공란)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1691(18.32)	7538(81.68)	9229(100.0)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안 돌아다니기	530(8.37)	5800(91.63)	6330(100.0)
	쇼핑, 병원가기, 집밖 돌아다니기	3351(16.34)	17160(83.66)	20511(100.0)
	취업활동(16세 이상)	1059(15.53)	5760(84.47)	6819(100.0)
	없음	43194(38.76)	68235(61.24)	111432(100.0)

주) 각 변수마다 취업여부별 분포를 보이기 위한 표이므로 row percentage를 제시하였음.

제 4 장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 방안

1절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 방안 분포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안에 대한 질문은 2000년 조사와 2005년 조사에서 각각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2000년 조사에서는 고령자의 생계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응답 항목으로는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②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 받음, ③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전부 지원 받음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서 고령자를 부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였다. 이에 비해 2005년 조사에서는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이 무엇인지를 묻고 응답 항목으로 ①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② 예금,적금, ③ 국민.공무원.교직원연금, ④ 개인연금(은행,보험 등) ⑤ 부동산 ⑥ 함께 사는 자녀 ⑦ 따로 사는 자녀 ⑧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 ⑨ 기타(주식, 채권, 증권 + 친인척 + 이웃, 종교, 사회단체보조 포함) 등이 응답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2005년 조사에서는 생활비 원천을 두 가지까지 중복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2000년 고령자의 생계수단을 살펴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의 43.72%였고 나머지 56.28%는 자녀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서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정도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고령자를 부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 역시 장남, 그 외의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등 가족에 의존하는 비율이 91%를 넘어서 고령자들이 대부분 가족관계내의 이전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고령자의 생계수단과 부양자(2000년)

(단위: 명, %)

		빈도	비율
생계수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45397	43.72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 받음	40681	39.18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전부 지원 받음	17760	17.1
부양자종류	장남, 며느리	32490	55.59
	그 외의 아들, 며느리	13549	23.18
	딸, 사위	6317	10.81
	기타 친척	701	1.2
	정부 사회단체	4764	8.15
	기타	620	1.06
	합계	103883	100.0

2005년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응답건수 177,020개의 생활비 원천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일,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생활비 원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59%였다. 그밖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비 원천은 역시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서 함께 사는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18.08%,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24.55%로서 전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42.63%나 되어 고령자 집단의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예금이나 적금, 연금, 부동산 등 자산소득이 생활비의 원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눈에 띄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65%에 불과했다. 2000년도 고령층의 생계수단 응답결과나 2005년 고령층의 생활비 원천 응답결과에서 공히 발견되는 것은 고령집단의 경제적 자립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점과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거의 전적으로 가족의 이전소득과 같은 매우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표 19>는 2005년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을 내용별로 크게 4가지 범주로 재분류한 것으로 4가지 범주는 ① 자신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 ② 자산소득, 연금, ③ 자녀로부터 지원, ④ 정부,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이다.

<표 17>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2005년)

(단위: 명, %)

		2005년
고령자 생활비 원천 (중복선택 가능)	본인.배우자의 일,직업	52380(29.59)
	예금,적금	13132(7.42)
	국민.공무원.교직원연금	11552(6.53)
	개인연금(은행,보험 등)	2817(1.59)
	부동산	7915(4.47)
	함께 사는 자녀	32000(18.08)
	따로 사는 자녀	43461(24.55)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10004(5.65)
	기타 (주식, 채권, 증권 + 친인척 + 이웃, 종교, 사회단체보조 포함)	3759(2.12)
	합계	177020(100.0)

<표 18> 성별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2005년)

(단위: 명, %)

		남	여	합계
고령자 생활비 원천 (중복선택 가능) 1순위	본인.배우자의 일,직업	27733(36.71)	24647(24.29)	52380(29.59)
	예금,적금	6648(8.80)	6484(6.39)	13132(7.42)
	국민.공무원.교직원연금	6942(9.19)	4610(4.54)	11552(6.53)
	개인연금(은행,보험 등)	1556(2.06)	1261(1.24)	2817(1.59)
	부동산	4033(5.34)	3882(3.83)	7915(4.47)
	함께 사는 자녀	8825(11.68)	23175(22.84)	32000(18.08)
	따로 사는 자녀	15097(19.99)	28364(27.95)	43461(24.55)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3329(4.41)	6675(6.58)	10004(5.65)
	기타(주식, 채권, 증권 + 친인척 + 이웃, 종교, 사회단체보조 포함)	1377(1.82)	2382(2.35)	3759(2.12)
합계	75540(100.0)	101480(100.0)	177020(100.0)	

<표 19>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안 4범주(2005년)

(단위: 명, %)

		빈도	비율
생활비 충당방안	자신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	52380	30.23
	자산소득, 연금	35416	20.44
	자녀로부터 지원	75461	43.55
	정부, 사회단체로부터 지원	10004	5.77
합계		173261	100.00

2절 고령자의 개인적 특성별 생활비 충당 방안

2000년 고령자의 생계수단을 개인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83.4%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수입만으로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75.34%가 자녀 등 다른 수입원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나 다른 단체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고령자 집단 중에서 가장 젊은 층인 60세~64세 연령계층에서도 자신 또는 배우자의 수입만으로 살고 있는 비율은 64.18%에 지나지 않았다.

혼인상태별로 생계수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신이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간다는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사별한 고령자보다 이혼한 고령자의 경우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간다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이혼자가 사별자보다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자녀 등 다른 수입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성별로 생계수단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고령남성 가운데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전체의 59.09%인 데 비해 여성은 동 비율이 33.08%에 불과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여러 지표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적자본, 고연령, 낮은 취업 비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고령여성의 생계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생계수단 여부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일률적으로 자신이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높아서 경제적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고령자의 개인특성별 생활비 원천을 살펴보면(<표 21> 참조), 취업자의 경우 전체의 67.24%가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 전체의 60.02%가 자녀의 지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고령자의 취업 자체는 고령자 자신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볼 때 고령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이들의 생활비 충당방법에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미취업자의 경우 저축이나 연금, 부동산 등 자산소득으로 살아가는 비율도 24.08%로 취업자의 경우보다 높지만 미취업자 가운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도 8.02%로 높았다.

<표 20> 개인적 특성별 고령자의 생계수단(2000년)

(단위: 명, %)

	노인생계수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 받음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전부 지원 받음	합계
경제 활동 상태	취업(일하였음)	27855(83.4)	5039(15.09)	507(1.52)	33401(100.0)
	취업(일시휴직)	248(77.81)	64(20.0)	7(2.19)	320(100.0)
	미취업	17293(24.66)	35578(50.74)	17246(24.6)	70117(100.0)
나이	60세이상-65세 미만	23010(64.18)	9761(27.23)	3081(8.59)	35852(100.0)
	65세이상-70세 미만	13471(48.14)	10454(37.36)	4060(14.51)	27985(100.0)
	70세이상-75세 미만	5802(31.48)	8688(47.14)	3942(21.39)	18432(100.0)
	75세이상-80세 미만	2326(19.3)	6330(52.53)	3395(28.17)	12051(100.0)
	80세이상-85세 미만	634(10.31)	3472(56.48)	2041(33.2)	6147(100.0)
	85세이상	154(4.57)	1976(58.62)	1241(36.81)	3371(100.0)
나이	60세이상-70세 미만	36481(57.15)	20215(31.67)	7141(11.19)	63837(100.0)
	70세이상-80세 미만	8128(26.66)	15018(49.27)	7337(24.07)	30483(100.0)
	80세 이상	788(8.28)	5448(57.24)	3282(34.48)	9518(100.0)
혼인 상태	미혼	147(37.12)	66(16.67)	183(46.21)	396(100.0)
	배우자 있음	37834(59.77)	19126(30.22)	6338(10.01)	63298(100.0)
	사별	7012(17.95)	21120(54.07)	10930(27.98)	39062(100.0)
	이혼	403(37.35)	369(34.2)	307(28.45)	1079(100.0)
성별	남자	25095(59.09)	12757(30.04)	4617(10.87)	42469(100.0)
	여자	20302(33.08)	27924(45.5)	13143(21.42)	61369(100.0)
교육 정도	안 받았음	10695(28.93)	17317(46.84)	8959(24.23)	36971(100.0)
	초등학교	17423(46.36)	14566(38.76)	5595(14.89)	37584(100.0)
	중학교	5741(52.33)	3821(34.83)	1409(12.84)	10971(100.0)
	고등학교	6664(58.52)	3485(30.6)	1239(10.88)	11388(100.0)
	대학교(4년제 미만)	1057(65.17)	416(25.65)	149(9.19)	1622(100.0)
	대학교(4년제 이상)	3164(69.95)	991(21.91)	368(8.14)	4523(100.0)
	대학원(석사과정)	436(81.65)	68(12.73)	30(5.62)	534(100.0)
	대학원(박사과정)	217(88.93)	17(6.97)	10(4.1)	244(100.0)

연령별로 생활비 충당방법을 살펴보면 예상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의외로 연령이 낮을수록 자산소득이나 연금소득 의존도도 높아서 고령집단내의 초고령집단이 경제적으로 매우 열세인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60대 초반집단의 높은 자산소득 비율은 고령사회가 우리의 예정된 미래인 만큼 서서히 노후를 준비해 온 이들 집단의 생애전략이 어느 정도 드

러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혼인상태별로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법을 살펴보면 2000년 고령자 생계 수단의 응답결과와 마찬가지로 유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 의존비율이 높은 반면 이혼자, 사별자의 순으로 근로소득 의존비율이 낮아지고 대신 자녀 의존 비율이 높아진다. 성별로 생활비 충당방법을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의 근로소득 비율이 남성보다 낮지만 2000년에 비해 2005년에 이와 같은 성별 격차는 현격히 감소하였다.

<표 21> 개인적 특성별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법(2005년)

(단위: 명, %)

	생활비 충당방법	근로소득	자산소득, 연금	자녀로부터 지원	정부, 사회단체로부터 지원	합계
경제 활동 상태	취업(일하였음 + 일시휴직)	43869(67.24)	9404(14.41)	10627(16.29)	1341(2.06)	65241(100.0)
	미취업	8511(7.88)	26010(24.08)	64828(60.02)	8662(8.02)	108011(100.0)
나이	60세이상-65세 미만	21458(42.87)	12928(25.83)	14338(28.65)	1324(2.65)	50048(100.0)
	65세이상-70세 미만	16619(34.73)	11060(23.12)	18005(37.63)	2162(4.52)	47846(100.0)
	70세이상-75세 미만	9330(25.74)	6872(18.96)	17535(48.37)	2512(6.93)	36249(100.0)
	75세이상-80세 미만	3634(16.82)	3050(14.12)	12713(58.84)	2210(10.23)	21607(100.0)
	80세이상-85세 미만	1101(9.42)	1107(9.47)	7043(60.23)	1223(10.46)	11694(100.0)
	85세이상	238(4.09)	399(6.86)	4607(79.20)	573(9.85)	5817(100.0)
나이	60세이상-70세 미만	38077(38.9)	23988(24.5)	32343(33.04)	3486(3.56)	97894(100.0)
	70세이상-80세 미만	12964(22.41)	9922(17.15)	30248(52.28)	4722(8.16)	57856(100.0)
	80세 이상	1339(7.65)	1506(8.6)	12870(73.5)	1796(10.26)	17511(100.0)
혼인 상태	미혼	149(28.01)	105(19.74)	10(1.88)	268(50.38)	532(100.0)
	배우자 있음	42608(37.99)	28135(25.09)	24473(21.82)	3981(3.55)	112157(100.0)
	사별	9027(15.48)	6773(11.62)	37251(63.88)	5260(9.02)	58311(100.0)
	이혼	596(26.36)	403(17.82)	767(33.92)	495(21.89)	2261(100.0)
성별	남자	27733(37.39)	19179(25.86)	23922(32.26)	3329(4.49)	74163(100.0)
	여자	24647(24.87)	16237(16.38)	51620(52.09)	6675(6.74)	99098(100.0)

3절 고령자의 가구특성별 생활비 충당 방안

고령자의 가구특성별 생활비 충당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2000년 고령자의 가구유형별 생계수단을 살펴보면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45.45%가 자신이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반면, 노인단독가구는 33.6%만이 자신의 소득으로 살아간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만을 놓고 볼 때,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고령층일수록 자녀와 떨어져 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보다는 고령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 속하여 유배우 상태에 있는 집단들, 즉 고령자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경제적 자립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05년 가구특성별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법을 살펴보면 2000년 조사결과와 같은 패턴이 그대로 발견된다.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단독가구의 24.09%가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간다고 응답한 데 비해 혈연가구의 동 비율은 31.45%이다. 자녀에 대한 의존비율 역시 노인단독가구가 혈연가구보다 높고 노인단독가구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비율도 높다. 즉 이를 통해서 노인단독가구가 상대적으로 고령층이어서 여성가구가 많을 것이며 동시에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집단임을 알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밖에 유배우 상태의 고령자 집단 즉 부부가 함께 사는 집단에서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높고 자녀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2> 가구유형별 고령자의 생계수단(2000년)

(단위: 명, %)

	노인 생계수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 받음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전부 지원 받음	합계
가구 유형	혈연가구	40244(45.45)	34500(38.97)	13796(15.58)	88540(100.0)
	비혈연가구	158(42.13)	93(24.8)	124(33.07)	375(100.0)
	1인가구	4978(33.6)	6079(41.03)	3758(25.37)	14815(100.0)
	비혈연6인이상가구	17(15.74)	9(8.33)	82(75.93)	108(100.0)
세대 구성	1인 가구	5153(33.68)	6181(40.4)	3964(25.91)	15298(100.0)
	부부	20580(65.82)	7849(25.1)	2838(9.08)	31267(100.0)
	부부+미혼형제자매	10(38.46)	12(46.15)	4(15.38)	26(100.0)
	가구주+미혼형제자매	21(63.64)	4(27.71)	8(24.24)	33(100.0)
	부부+기타친인척	95(57.23)	46(27.71)	25(15.06)	166(100.0)
	가구주+친인척	42(29.37)	58(40.56)	43(30.07)	143(100.0)
	1세대 기타	209(52.51)	114(28.64)	75(18.84)	398(100.0)
	부부+미혼자녀	9081(65.74)	3699(26.78)	1034(7.49)	13814(100.0)
	편부+미혼자녀	340(46.45)	297(40.57)	95(12.98)	732(100.0)
	편모+미혼자녀	1069(25.45)	2275(54.15)	857(20.4)	4201(100.0)
	부부+양친	225(30.24)	390(52.42)	129(17.34)	744(100.0)
	부부+편부모	1160(32.89)	1547(43.86)	820(23.25)	3527(100.0)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12(40.0)	14(46.67)	4(13.33)	30(100.0)
	부부+미혼손자녀	831(53.17)	536(34.29)	196(12.54)	1563(100.0)
	2세대 기타	1490(28.74)	2444(47.14)	1251(24.13)	5185(100.0)
	부부+미혼자녀+양친	1659(28.86)	3088(53.71)	1002(17.43)	5749(100.0)
	부부+미혼자녀+편부모	1238(9.75)	7754(61.05)	379(29.2)	12701(100.0)
	3세대 기타	1994(26.69)	3965(53.08)	1511(20.23)	7470(100.0)
	가구주를 포함한 혈연인	186(23.66)	405(51.53)	195(24.81)	786(100.0)
	기타	2(40.0)	3(60.0)	0(0.0)	5(100.0)
합계	45397(43.72)	40681(39.18)	17760(17.10)	103838(100.0)	

<표 23> 가구유형별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법(2005년)

(단위: 명, %)

	생활비 충당방법	근로소득	자산소득, 연금	자녀로부터 지원	정부, 사회단체로 부터 지원	합계
가구 유형	세대유형가구	45228(31.45)	30845(21.45)	62001(43.12)	5716(3.98)	143790(100.0)
	비혈연가구	196(33.11)	99(16.72)	167(28.21)	130(21.96)	592(100.0)
	1인가구	6956(24.09)	4472(15.49)	13293(46.03)	4158(14.4)	28879(100.0)
세대 구성	1인가구	6956(24.09)	4472(15.49)	13293(46.03)	4158(14.4)	28879(100.0)
	부부	25987(40.39)	16737(26.02)	18856(29.31)	2753(4.28)	64333(100.0)
	부부+형제자매	15(30.0)	19(38.0)	10(20.0)	6(12.0)	50(100.0)
	부부+기타 친인척	73(31.74)	72(31.3)	71(30.87)	14(6.09)	230(100.0)
	가구주+형제자매	9(25.0)	8(22.22)	8(22.22)	11(30.56)	36(100.0)
	가구주+기타 친인척	40(18.1)	55(24.89)	71(32.13)	55(24.89)	221(100.0)
	1세대 기타	214(36.33)	145(24.62)	154(26.15)	76(12.9)	589(100.0)
	부부+자녀	8268(37.90)	5930(27.18)	7208(33.04)	408(1.87)	21814(100.0)
	부+자녀	337(27.65)	276(22.64)	535(43.89)	71(5.82)	1219(100.0)
	모+자녀	1186(17.68)	876(13.06)	4229(63.03)	419(6.24)	6710(100.0)
	부부+양친	294(26.06)	162(14.36)	650(57.62)	22(1.95)	1128(100.0)
	부부+한부모	1420(24.32)	788(13.49)	3500(59.93)	132(2.26)	5840(100.0)
	부부+자녀+부부형 제자매	6(42.86)	5(35.71)	2(14.29)	1(7.14)	14(100.0)
	조부모+손자녀	959(33.85)	626(22.1)	1008(35.58)	240(8.47)	2833(100.0)
	2세대 기타	1633(20.21)	1233(15.26)	4457(55.17)	756(9.36)	8079(100.0)
	부부+자녀+양친	1451(23.44)	1046(16.9)	3597(58.11)	96(1.55)	6190(100.0)
	부부+자녀+한부모	1145(8.43)	1276(9.4)	10943(80.61)	211(1.55)	13575(100.0)
3세대 기타	2031(19.98)	1501(14.76)	6210(61.08)	425(4.18)	10167(100.0)	
4세대 이상	160(21.0)	90(11.81)	492(64.57)	20(2.62)	762(100.0)	
합계		52184(30.22)	35317(20.45)	75294(43.61)	9874(5.72)	172669(100.0)

4절 고령자의 활동제약 여부별 생활비 충당 방안

이번에는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생활비 충당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2000년의 경우 <표 24>를 보면, 집안활동과 바깥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각각 13.68%, 13.87%만이 자신의 소득으로 살아간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자녀나 다른 단체에 의존하여 살아간다고 응답하였다.

2005년의 경우 감각기관, 학습능력, 육체적 활동 등에 대한 질문에서 이들 모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34.43%가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살아간다고 응답했다(<표 25> 참조). 학습의 어려움 등 정신적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나 정부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두 번째 범주의 활동 제약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일상생활 관련 활동, 취업 활동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33.03%가 자신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근로소득 의존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특히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 의존도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활동제약을 갖고 있는 고령층의 생활비 충당 방법은 거의 전적으로 자녀와 정부에 의존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24> 활동상태별 고령자의 생계수단(2000년)

(단위: 명, %)

	노인생계수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 받음	자녀 또는 다른 사람, 단체로부터 전부 지원 받음	합계
집안 활동	혼자 할 수 있음	44884(44.84)	38668(38.63)	16536(16.52)	100088(100.0)
	혼자 할 수 없음	513(13.68)	2013(53.68)	1224(32.64)	3750(100.0)
바깥 활동	혼자 할 수 있음	44622(45.42)	37793(38.47)	15834(16.12)	98249(100.0)
	혼자 할 수 없음	775(13.87)	2888(51.67)	1926(34.36)	5589(100.0)

<표 25> 활동제약별 고령자의 생활비 충당방법(2005년)

(단위: 명, %)

	생활비 충당방법	근로소득	자산소득, 연금	자녀로부터 지원	정부, 사회단체 로부터 지원	합계
활동 제약 1	시각, 청각, 언어 장애	1521 (17.8)	1123 (13.15)	4574 (53.54)	1158 (13.55)	8543 (100.0)
	학습의 어려움 등 정신적 제약(치매포함)	566 (12.35)	564 (12.31)	2704 (59.01)	641 (13.99)	4582 (100.0)
	걷기 등 육체적 제약(중풍포함)	8333 (20.29)	6036 (14.69)	21262 (51.76)	4758 (11.58)	41078 (100.0)
	없음	42720 (33.43)	28402 (22.23)	50792 (39.75)	4461 (3.49)	127772 (100.0)
활동 제약 2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1971 (17.27)	1468 (12.86)	6329 (55.44)	1431 (12.54)	11416 (100.0)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안 돌아다니기	931 (12.13)	1058 (13.78)	4490 (58.49)	1043 (13.59)	7677 (100.0)
	쇼핑, 병원가기, 집밖 돌아다니기	4321 (17.04)	3546 (13.98)	13812 (54.46)	3237 (12.76)	25360 (100.0)
	취업활동(16세 이상)	1370 (16.27)	1159 (13.76)	4553 (54.07)	1190 (14.13)	8421 (100.0)
	없음	45980 (33.03)	30486 (21.9)	57054 (40.99)	5679 (4.08)	139199 (100.0)

제 5 장 맺음말

지금까지 2000년 고령자와 2005년 고령자의 성, 연령, 혼인지위, 학력, 경제활동상태, 직종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5년간 고령집단의 생활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고령자의 생활비 부담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은 성, 연령, 교육, 혼인상태, 경제활동 등의 특성과 가족구성 등 개인적인 차원과 가족의 차원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우리 사회 고령자의 생활상에서 두드러진 변화상은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등 노인만으로 된 가구의 증가이다. 노인 단독가구이든 노인부부가구이든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가구는 2000년에 전체의 44.85%였던 것이 2005년에는 60.5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고령층 내부의 초고령집단의 증가에도 기인하며 남성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부부가구의 비중도 늘어난 데 기인한다. 이와 같은 노인가구의 증가는 인구의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와는 별도로 또 다른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상이라고 하겠다.

또한 2000년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의 비율이 32.48%에서 2005년에는 34.77%로 약간 증가했다. 2005년에 증가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주로 자영업자의 비중 증가와 연관된다. 또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의 직업 및 산업 분포를 보면 2005년에 읍면부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증가한 것과 맥을 같이 하여 농림어업직종, 농림어업 산업의 비중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00년 고령자의 생계수단을 살펴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부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의 43.72%였고 나머지 56.28%는 자녀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서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정도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고령자를 부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 역시 장남, 그 외의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등 가족에 의존하는 비율이 91%를 넘어서 고령자들이 대부분 가족관계내의 이전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건수 177,020개의 생활비 원천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일,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생활비 원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59%였다. 그밖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비 원천은 역시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서 함께 사는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18.08%,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24.55%로서

전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42.63%나 되어 고령자 집단의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예금이나 적금, 연금, 부동산 등 자산소득이 생활비의 원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눈에 띄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65%에 불과했다. 2000년도 고령층의 생계수단 응답결과나 2005년 고령층의 생활비 원천 응답결과에서 공히 발견되는 것은 고령집단의 경제적 자립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점과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거의 전적으로 가족의 이전소득과 같은 매우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사회 고령층의 생활세계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으며 경제적 자립도도 매우 취약한 편이다. 그러나 몇 가지 변화의 조짐들은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온 흔적을 엿보게도 한다. 2000년 인구센서스조사와 2005년 인구센서스조사의 고령층 생활비 충당방안을 비교분석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의 미래인 고령집단의 삶의 질이 고양될 수 있도록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의 경우 고령층의 소득원이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간에 대체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사회에선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간에 대체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활비 충당 방식은 사적이전소득에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인 만큼 가족구조의 변화, 고령층의 거주형태의 변화에 따라 고령층의 생계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특히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현상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고령층 생계의 상당 부분을 가족지원과 같은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염려스런 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고령층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준의 공적연금 설계와 집행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2008년에 시행될 예정인 기초노령연금의 포괄 범위와 지원금 수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층 소득원의 또 다른 축인 근로소득의 질적, 양적 수준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외국의 경우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고령취업자의 직종, 산업, 종사상 지위 등을 통해서 살펴본 고령자의 일자리 특성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령층 대상 일자리 창출 정책 못지않게 고령층에 대한 직업훈련, 사회교육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정책도 병행함으로써, 점점

더 길어지는 노년기에 고령층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 결과 고령층 내부의 다양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맞춤형 고령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층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그 안에는 성별·주거형태별·교육수준별로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고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초고령 기간이 길고 단독가구 비율이 높은 여성고령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며, 상대적으로 활기찬 노년전기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정책도 요구된다.

제 6 장 참고 문헌

- 김수완·조유미. 2006.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빈곤율 분석.” 『사회복지연구』 29:5-37.
- 김영숙. 2002. “도시 빈곤노인 가계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관한 연구: 일반가계, 일반노인 가계 및 빈곤노인 가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13(3): 95-119.
- 김익기. 1993. 『서울시 노인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행정논집.
- 김진옥. 2006. “한국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실증연구 - 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권 제8호.
- 문숙재. 1996. 『생활시간연구』. 신정
- 박수미·선보영·김진옥. 2005.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수미. 2007. “한국고령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 일, 무급가족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통권 제72권 1호: 5-30.
- 백경숙·권용신. 2007. “노년기의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연구.” 『노인복지연구』 35: 87-106.
- 이가옥 외. 1995. 『노인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2001. “노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61호.
- 조경옥. 2005. “여성 노인의 건강 지위, 사회적 지지와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7권 봄호.
- 최현수·류연규. 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최효미. 2007. 『노인가구의 소득 원천』. 노동리뷰.
- 통계청. 2004. 『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생활시간량편』. 통계청.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2006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 Williamson, James M, and Timothy M. Smeeding. 2004. “Sliding into Poverty? Cross-National Patterns of Income Source Change and Income Decay in old Age.” *CRR working paper* 2004-25.

5

산업 및 직업별 근로 장소 유형

이 성 용
(강남대학교)

<표 목차>

<표 1> 직업구조의 변화, 1995-2005	146
<표 2> 직업구조의 성별 변화, 1995-2005	147
<표 3> 직업별 성비 변화, 1995-2005	148
<표 4> 산업구조의 변화, 1995-2005	149
<표 5> 산업구조의 성별변화, 1995-2005	150
<표 6> 산업구조의 성비변화, 1995-2005	152
<표 7> 종사상 지위의 구성비 변화, 1995-2005	152
<표 8>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구성비 변화, 1995-2005	153
<표 9> 종사상 지위의 성비 변화, 1995-2005	154
<표 10_1> 연령별 직업 분포	156
<표 10_2> 연령별 직업 분포	156
<표 11_1>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	157
<표 11_2>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	157
<표 12> 취업자의 연령별 종사상지위	158
<표 13> 취업자의 연령별 교육수준	159
<표 14> 취업자의 연령별 거주지	160
<표 15> 성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161
<표 16> 연령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161
<표 17> 교육수준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162
<표 18> 거주지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163
<표 19> 직업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163
<표 20> 산업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165
<표 2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166

산업 및 직업별 근로 장소 유형

이성용 (강남대)

제 1 장 연구의 의의 및 목적

김대중 정부는 1997년 말 IMF의 정책 요구에 따라 금융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정부의 금융부문 구조개혁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말 33개의 은행 중 1/3인 11개의 은행을 정리하였고, 종금사는 70%, 신용금고는 33.8%를 정리하였다(금융감독위, 2000.9; 여기서 이종선(2002: 26) 재인용). 금융기관의 구조개혁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들의 해직과 직결된다. 1998년 1단계 은행구조조정으로 은행을 떠난 일반직원은 그 당시 전체 인원 11만 4,919명중 34%인 3만 9,015명에 달했다. 또한 한 연구에 의하면 1996년 1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 은행권(신용보증기금 등 포함) 퇴직인원은 총 78,642명에 달한다고 한다(김동환, 2001).

게다가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란 명목 하에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 정리해고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제도 등은 수많은 기업의 노동자들을 그들의 직장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구조개혁도 많은 직원을 해고당하였다. 물론 2000년 이후 경기가 회복된 뒤 그 자리들이 상당부분 채워졌다. 하지만 상당부분 그 자리는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등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었다(이종선, 2002; 채구목, 2002).

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산업, 직업 그리고 종사상 지위의 구조에 분명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이 틀림없다. 은기수(2002)는 1995년과 2000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995년과 2000년 산업구조와 직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구조는 1995년에 비해 2000년 제조업분야의 비율은 감소하고 서비스분야의 분야는 증가하고 있다. 또 직업구조 역시 고위직, 전문직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군 및 판매 서비스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기능공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그리고 일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러한 추세가 경기가 약간 회복된 2000년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는 20005년 센서스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해방이후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였다. 급격한 사회변동은 세대마다 각 성원들을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하기 쉽다. 특히 1950년대 초등학교 의무교육, 1969년 중학교 무시험제, 1970년대 고등학교 연합시험제도, 그리고 1980년대 대학의 졸업정원제 제도 등은 개인이 종사할 산업과 직업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연령별로 종사하는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그리고 교육수준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센서스에 처음으로 근로 장소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전에는 직업, 산업, 종사상의 지위, 경제활동상태, 취업여부, 취업형태, 취업시간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었고, 조사되어 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조사된 적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부문에서 탈락한 경제활동인구들이 자영업 중심의 비공식부문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고정된 근로 장소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페들러라고 표현되는 길거리 혹은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무급종사자들 가운데는 가족노동을 배경으로 한 자영업이 많고, 이들 또한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하는지 충분한 정보가 없다. 이런 실정에서 이번 2005 인구센서스에 포함된 근로 장소에 관한 항목을 중심으로 직업별,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및 성, 연령, 교육 등은 인구학 변수까지 함께 고려하여 근로 장소가 얼마나 다양한지 분석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1995년, 2000년 2005년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외환위기 전후로 산업, 직업, 그리고 종사상지위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2005년 센서스 자료에 근거하여 연령별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지위 구조를 분석한다. 셋째, 2005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 장소 유형을 직업별,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및 성, 연령, 교육수준에 따른 관계를 분석한다.

제 2 장 직업, 산업 및 종사상 지위의 구조 변화: 1995-2005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급격히 변화하였다. 1995년 1차 산업 11.8%, 2차 산업 23.6%, 3차 산업 55.1%에서 2000년 1차 산업 10.6%, 2차 산업 20.3%, 3차 산업이 61.6%를, 그리고 2005년에는 1차 산업이 7.9%, 2차 산업 18.5%, 3차 산업 73.5%로 변화하였다(노동연구원, 2006). 이는 외환위기 직후 뿐 아니라 2000년 이후에도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감소하는 반면 3차 산업은 증가하는 방식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제조업위주의 산업사회에서 서비스업 위주의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정이환, 2004).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동은 당연히 직업구조의 변동도 동반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으로 해고당한 많은 노동자들이 대안으로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최문경·이명진, 2005), 종사상지위 구조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1절 직업별 변화

<표 1>를 통해 직업구조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비율은 2000년 약간 증가하였다가 2005년 대폭 감소하였다.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의 비율은 1995년 이래 계속 상승하는 반면, 기술공 및 준전문가는 감소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전문직’과 ‘기술공, 준전문가’를 동일하게 전문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정이환, 2004), 서로 다른 추세를 보인다.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종사할 것으로 추측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비율을 1995년 이래 거의 비슷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 판매종사자의 비율은 1995년과 2000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다가 2005년 갑자기 떨어졌다. 사무종사자의 비율은 1995년 이래 계속 상승하고 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비율은 2000년 상당한 폭으로 하강했다가 2005년 상당한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은 1995년 이후 급상승했다(2005년 자료의 분류불능을 단순노무자로 합한다면 그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직업구조의 변화, 1995-2005

직업분류	(단위: %)		
	1995	2000	2005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3	4.6	3.4
전문가	5.7	8.9	9.3
기술공 및 준전문가	11.1	7.4	8.4
사무 종사자	11.5	14.3	15.3
서비스 종사자	8.6	9.7	9.3
판매종사자	12.6	12.7	10.5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6.0	13.6	15.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7	10.6	9.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8	10.6	10.6
단순 노무 종사자	5.5	7.6	7.3
분류불능			0.7
합계	100.0	100.0	100.0

<표 2>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성별에 따른 직업구성비의 변화를, 그리고 <표 3>은 직업부문별 성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직업부문에서 남성의 구성비는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구성비는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3>에서 이 부문의 성비가 비록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이 직업 부문에서 남성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말한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그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증가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고, 그 결과 성비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집단 종사자의 비율은 남녀 모두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급격히 하락했지만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약간 급반등했다. 하지만 성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의 하락에 대기업을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술공 및 준전문가들(이들테면 제조업분야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해고가, 그리고 2000년 이후의 반등에는 서비스 부문 기술공 및 준전문가들(이들테면, 교육서비스업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진입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부문은 1995년 남자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사무종사자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다.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부문 종사자의 비율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비율보다 더 하강하였다. 여성의 경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강한 반면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비율은 2000년 하강하였다가 2005년 약

간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문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성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성비의 추세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2005년 급상승한 반면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무 종사자 집단과 판매종사자 집단도 남성과 여성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 및 판매종사자 집단과는 반대로, 사무종사자 집단의 성비는 1995년에 비해 2000년 이후 증가하였다. 이는 1995년 이후 전문직 집단과 판매종사자 집단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수로 새로이 진입하는 반면, 사무 종사직은 여전히 새로이 진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여전히 많음을 암시한다.

서비스 종사직은 1995년 이래 여성이 압도적인 직업 부문이다. 남녀 모두 구성비는 2000년 약간 상승했다가 2005년 다시 하강하였다. 그러나 성비가 계속 하강하는 추세는 여전히 새로이 이 부문에 진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더 많음을 암시한다.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비율도 2000년 약간 상승했다가 2005년 다시 하강하였다. 그러나 성비는 2005년 와서 약간 하강했다.

요컨대, 제2차 산업관련 직업 종사자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3차 산업관련 종사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3차 산업 관련 직업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진입이 외환위기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 직업구조의 성별 변화, 1995-2005

(단위: %)

직업분류	남자			여자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6.3	6.9	5.0	0.6	0.9	0.9
전문가	5.8	8.3	7.8	5.8	9.8	11.5
기술공 및 준전문가	12.4	8.4	9.4	8.7	5.9	6.8
사무 종사자	9.7	13.1	14.3	14.8	16.3	16.7
서비스 종사자	5.2	5.8	5.6	14.8	16.1	15.0
판매종사자	10.7	10.4	8.8	16.2	16.6	13.1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2.7	11.3	13.3	21.7	17.2	19.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7.0	13.6	13.0	7.8	5.6	4.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2	14.3	14.0	4.7	4.5	5.4
단순 노무 종사자	5.8	7.9	7.9	4.9	7.1	6.5
분류불능			1.0			0.2
합계	100.0		100.0		100.0	

<표 3> 직업별 성비 변화, 1995-2005

(단위: 비율)

직업분류	1995	2000	2005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904.4	1,283.8	828.9
전문가	176.9	139.4	104.7
기술공 및 준전문가	259.3	231.7	213.5
사무 종사자	120.5	131.3	131.8
서비스 종사자	64.6	59.1	57.7
판매종사자	120.9	102.6	103.7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08.7	108.1	104.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99.5	397.0	488.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44.4	530.1	402.6
단순 노무 종사자	215.7	183.7	187.9
분류불능			735.4
전체 취업자 성비	183.7	165.1	154.5

2절 산업별 변화

<표 4>는 1995년에서 2005년까지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나타낸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산업 부문, 건설업, 그리고 도매업 및 소매업 등 네 부문의 취업자 비율은 1995년 65.5%, 2000년 58.0%, 2005년 56.2%로 감소하였지만, 1995이래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취업자들이 특정 산업 부문들에 집중되어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의 종사자 비율은 직업구조에서와 마찬가지로, 2000년 하락했지만 2005년 상승했다.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을 1995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계속 하강하고 있다. 건설업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통신업종사자와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행정,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문들의 증가는 서비스업 관련 직업 종사자들, 이를테면 사무종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율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 비율의 감소는 직

업부문에서 판매종사자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비율은 1995년과 2000년에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2005년 하강하였다. 직업구조와 마찬가지로 성별 구성비와 성비의 변화를 살펴보자.

<표 4> 산업구조의 변화, 1995-2005

(단위: %)

산업분류	1995	2000	2005
농업 임업, 어업	16.4	13.8	16.2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24.1	21.3	18.6
건설업	8.6	7.2	7.1
도매 및 소매업	16.9	15.7	14.3
숙박 및 음식점업	6.4	7.5	7.5
운수업	4.6	4.8	4.3
통신업	0.8	1.2	1.1
금융 및 보험업	3.6	3.7	3.1
부동산 및 임대업	1.5	1.7	2.3
사업서비스업	2.9	4.3	5.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8	3.9	3.8
교육서비스업	5.3	6.0	6.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7	2.3	3.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3	1.8	1.9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8	4.3	4.2
분류불능(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0.4	0.5	0.5
합계	100.0	100.0	100.0

<표 5>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성별에 따른 산업구성비의 변화를, 그리고 <표 6>은 산업부문별 성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 5>는 남성과 여성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산업부문이 다름을 보여준다. 남성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건설업,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여성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집중적인 네 개의 산업부문 종사자의 비율은 남녀 모두 감소하고 있다. 남자는 1995년 68.8%, 2000년 60.6%, 2005년 59.8%로 감소하였고, 여자는 1995년 70.5%, 2000년 64.9%, 2005년 61.5%로 감소하였다. 남자보다 여자가 특정 산업부문에 더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5년과 2000년 사이 남녀 각각 집중적인 네 개의

산업부분 종사자 비율의 급격한 하락률은 외환위기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전반적으로 미친 영향력을 말해준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탈산업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었는데(정이환 2004), 네 개의 산업분문은 탈산업사회에서 중시되는 산업분야라기보다 산업사회에서 중시되는 산업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 종사자 비율은 남녀 모두 2000년 감소했다가 2005년 다시 상승하였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비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뒤에 보여주겠지만, 이 부문 종사자의 높은 연령대를 비추어 볼 때, 성비의 감소는 여성보다 낮은 남성의 기대수명을 상당히 반영할 것이다. 즉 이 부문의 새로운 종사자들은 많은 경우 남녀가 동시에 진입해오지만 남성의 낮은 평균수명으로 인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그리고 빨리 이 부문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표 5> 산업구조의 성별변화, 1995-2005

(단위: %)

산업분류	남자			여자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농업 임업, 어업	13.5	11.5	13.5	22.2	17.7	20.2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26.8	24.1	22.0	19.2	16.6	13.4
건설업	12.1	10.5	10.8	2.2	1.6	1.5
도매 및 소매업	16.4	14.5	13.5	17.8	17.8	15.6
숙박및 음식점업	3.7	4.3	4.4	11.3	12.8	12.3
운수업	6.5	7.0	6.3	1.0	1.1	1.2
통신업	0.9	1.4	1.4	0.5	0.9	0.7
금융 및 보험업	2.8	2.9	2.6	5.1	5.0	3.8
부동산 및 임대업	1.8	2.2	2.7	0.9	1.0	1.5
사업서비스업	3.3	5.0	6.2	2.2	3.1	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9	5.0	4.7	1.9	2.0	2.3
교육서비스업	3.8	4.0	4.0	7.8	9.4	10.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	1.3	1.6	2.9	4.0	6.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3	1.9	2.0	1.2	1.6	1.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3	4.3	4.2	2.8	4.3	4.2
분류불능(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0.3	1.0	1.1	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부문의 종사자 비율은 남녀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이는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취업자의 이동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남성보다 여성의 더 많은 이동을 반영한다. <표 6>의 성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건설업은 운수업과 더불어 남성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종

사하는 부문이다. 1995년과 2005년 성비 추세를 보면, 건설업의 성비는 증가한 반면 운수업의 성비는 감소하였다. 이는 건설업에 비해 운수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도매 및 소매업 부문의 종사자 비율은 남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여자는 2005년에 갑자기 하락하였다. 성비는 2000년 상당히 하락하여 2005년 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숙박과 음식점 부문은 남녀 모두 외환위기 이후 그 비율이 증가했다. 이 부문의 성비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말한다¹⁾.

통신업은 남성의 구성비 비율이 외환위기 증가한 이후 그 수준으로 남아 있는 반면, 여성의 구성비 비율은 2000년 증가하였다가 2005년 약간 감소하였다. 성비는 비교적 높으며, 2000년 감소하였다가 2005년 증가하였다.

금융 및 보험업은 남성이 여성이 거의 같은 비율로 근무하고 있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문의 남성과 여성의 종사자 비율은 2005년 감소하였다.

부동산과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부문은 남성과 여성 모두 그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성비는 2005년 상당히 감소하였다. 부동산과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그리고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은 남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구성비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문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종사하고 있고 성비는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직업구조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2차 산업 부문의 종사자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3차 산업 부문 종사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또 3차 산업 부문에 남성 노동자들보다 여성 노동자들의 진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 부문은 자영업자가 50%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하는 비교적 높은 비율(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종사하는 부문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이 부문의 많은 남성 종사자들이 다른 산업 부문 혹은 실직상태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표 6> 산업구조의 성비변화, 1995-2005

(단위: 비율)

산업분류	1995	2000	2005
농업 임업, 어업	113.4	107.8	103.0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산업	256.4	239.8	253.0
건설업	1,040.4	1098.5	1104.0
도매 및 소매업	169.0	134.8	133.1
숙박 및 음식점업	60.3	55.1	55.0
운수업	1,175.7	1,032.4	821.5
통신업	345.7	258.8	286.9
금융 및 보험업	98.6	94.2	106.2
부동산 및 임대업	349.6	353.3	273.7
사업서비스업	274.9	265.9	230.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66.4	403.9	316.2
교육서비스업	89.7	71.0	60.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3.1	52.0	39.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95.1	197.4	168.7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85.2	163.2	154.2
분류불능(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49.8
전체 취업자 성비	183.7	165.1	154.5

3절 종사상지위 변화

<표 7>은 1995-2005년 사이 종사상 지위의 구성비 변화를 나타낸다. 임금 봉급 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2000년에 그 비율이 약간 증가했지만 2005년 다시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계속해 하강하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가족 종사자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7> 종사상 지위의 구성비 변화, 1995-2005

(단위: %)

종사상 지위	1995	2000	2005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7.2	6.7	6.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주	22.0	22.3	23.7
무급가족 종사자	10.7	9.2	9.3
임금·봉급근로자	60.1	61.8	60.7
합계	100.0	100.0	100.0

<표 8>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성별에 따른 종사상지위의 구성비의 변화를 나타낸다. <표 8>은 성비에 따라 종사상지위의 구성비 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성은 임금 봉급근로자 다음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 가족 종사자 순인 반면, 여성은 봉급근로자 다음으로 무급 가족 종사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순이다. 이러한 순서는 1995년에서 2005년까지 변하지 않았다.

<표 8>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구성비 변화, 1995-2005

(단위: %)

종사상 지위	남자			여자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9.4	8.9	8.4	3.2	3.1	3.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주	25.3	26.0	28.1	15.9	16.2	16.8
무급가족 종사자	1.9	1.6	1.6	26.8	21.6	21.2
임금·봉급근로자	63.3	63.4	61.8	54.1	59.1	58.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세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여주는 임금·봉급근로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추세를 보여준다. 남성은 그 구성비가 1995년과 2000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5년 급감한 반면, 여성은 2000년 급등했다가 2005년 미미한 감소를 하였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의 구성비는 남자는 계속 감소한 반면, 여자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남녀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였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여성의 경우 2000년 급락하였고, 2005년에도 약간 감소하였지만, 남자는 2000년 약간 떨어진 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남성은 외환위기 이후 임금 봉급 근로자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이동한 반면,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의 상당수가 임금 봉급 근로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표 9>은 종사상 지위의 범주별 성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남자 4-5명당 여자 1명이라는 높은 성비를 보여주는 반면 무급가족 종사자는 그 반대로 여자 7-10명당 남자 1명이라는 낮은 성비를 나타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임금 봉급 근로자도 높은 성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그 성비는 감소하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많은 여성들이 임금 봉급 근로자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진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9> 종사상 지위의 성비 변화, 1995-2005

(단위: 비율)

종사상 지위	1995	2000	2005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548.7	478.1	416.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주	293.1	264.9	258.6
무급가족 종사자	13.0	12.3	11.8
임금·봉급근로자	214.9	177.4	162.1
전체 평균 성비	183.7	165.1	154.5

제 3 장 연령별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 및, 근로 장소의 구성 분포: 2005년 센서스

1절 연령별 직업구조 분포

<표 10>은 2005년 센서스에서 계산한 연령별 직업 분포를 나타낸다. 연령에 따라 높은 비율로 근무하는 직업의 유형이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30대 미만의 경우, 사무직(26.8%)과 전문가(16.1%), 기술공(12.7%), 판매직(10.5%), 장치, 기계조작(10.2%), 서비스직(9.2%), 기능원(7.2%) 등에서 약 93%가 종사하고 있다. 30-39세의 취업자는 동일한 직업군—하지만 많이 근무하는 순서는 다르다. 사무직(21.5%), 전문가(12.7%), 기술공(11.9%), 판매직(11.2%), 장치 기계조작(11.2%), 기능원(11.0%), 서비스직(9.0%)—에서 약 88%가 근무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1956-1965년 출생자)인 만40-49세는 위의 직종에서 약 77.5%가 근무하고 있다. 베이비붐 바로 이전 세대인 만50-59세 취업자는 위의 직종에서 약 60%가 종사하고 있다. 40세 미만의 취업자와 만40-59세의 취업자들을 비교할 때, 만40-59세의 취업자는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집단인 의회의원 직종에는 40세 미만보다 더 높은 비율로 종사하지만 또한 직업위세가 낮은 집단인 단순 노무직에도 더 높은 비율로 근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베이비붐 직전세대는 베이비붐세대보다 높은 비율로 농업과 어업 분야 그리고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더불어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60세 이상의 경우는 매우 높다. 특히 70세 이상의 취업자 경우는 무려 약 85%가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다 젊은 세대일수록 보다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반면 나이가 먹은 세대일수록 단순노무직과 농업 어업 분야에서 종사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 관련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베이비붐세대와 베이비붐 직전 세대가 다른 세대들에 비해 가장 높은 직업위세의 직업군인 의회의원과 낮은 직업군인 단순노무직에 높은 비율로 종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다가올 고령화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진입할 연령대에서 가장 심한 양극화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표 10_1> 연령별 직업 분포

(단위: %)

	의회의원	전문가	기술공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업 어업
전체	3.4	9.3	8.4	15.3	9.3	10.5	15.8
30세 미만	0.4	16.1	12.7	26.8	9.2	10.5	1.6
30-39세	2.4	12.7	11.9	21.5	9.0	11.2	3.3
40-49세	5.3	7.8	7.6	13.3	11.8	12.0	8.9
50-59세	5.5	5.2	5.1	7.7	10.4	10.5	22.5
60-69세	2.7	2.4	1.8	2.4	4.1	6.5	58.9
70세 이상	1.0	1.2	0.7	0.9	1.4	3.8	84.6

<표 10_2> 연령별 직업 분포

(단위: %)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	단순 노무	분류불능(군인포함)	합계
전체	9.5	10.6	7.3	0.7	100.0
30세 미만	7.2	10.2	3.9	1.4	100.0
30-39세	11.0	11.2	5.0	0.8	100.0
40-49세	12.0	13.1	7.7	0.6	100.0
50-59세	9.9	11.6	11.4	0.4	100.0
60-69세	3.9	4.5	12.6	0.1	100.0
70세 이상	1.0	0.7	4.6	0.0	100.0

2절 연령별 산업구조 분포

30세 미만의 취업자는 약 66%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22.6%), 도매 및 소매업(16.9%), 사업서비스업(8.9%), 교육서비스업(9.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0%)에 근무하고 있다. 만 30-39세의 취업자는 약 58%가, 만40-49세 취업자는 49%, 만50-59세 37.5%, 만60-69세 19.7%, 70세 이상은 불과 8.4%만이 위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표 11 참조). 이는 세대별로 종사하는 그리고 종사해왔던 산업부문이 연령별로 극명히 차이나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 베이비붐세대와 그 이후 세대의 취업자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에 가장 높은 비율로 종사하고 있지만 베이비붐 이전세대는 농업 임업 어업에 가장 높은 비율로 종사하고 있다. 이는 직업구조의 분포분석과 마찬가지로, 베이비붐세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세대는 많이 종사

하고 있는 산업 부문이 달라지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11_1>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

(단위: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체	16.2	18.6	7.1	14.3	7.5	4.3	1.1	3.1
30세 미만	1.7	22.6	4.6	16.9	6.6	2.6	1.6	4.2
30-39세	3.5	22.3	8.2	16.3	6.4	4.0	1.6	4.6
40-49세	9.1	21.5	9.3	15.1	10.1	5.2	1.1	3.1
50-59세	22.9	14.7	8.0	12.8	8.9	6.5	0.7	1.7
60-69세	59.7	5.9	3.0	8.1	4.1	3.0	0.2	0.6
70세 이상	85.5	1.9	0.5	4.9	1.3	0.5	0.0	0.1

<표 11_2>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

(단위: %)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기타 공공수리	분류불능	전체
전체	2.3	5.4	3.8	6.4	3.3	1.9	4.2	0.5	100.0
30세 미만	1.0	8.9	3.3	9.9	8.0	3.3	4.1	0.5	100.0
30-39세	1.7	7.2	4.9	8.1	3.9	2.3	4.6	0.4	100.0
40-49세	2.2	4.0	4.1	6.1	2.3	1.6	4.6	0.6	100.0
50-59세	3.3	3.7	3.9	4.6	1.7	1.3	4.5	0.8	100.0
60-69세	4.7	3.0	1.1	1.8	0.9	0.7	2.7	0.5	100.0
70세 이상	1.5	0.9	0.6	0.3	0.4	0.2	1.0	0.2	100.0

주) 분류불능에는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 기관포함.

3절 연령별 종사상 지위 분포

<표 12>는 연령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나타낸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과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40-49세를 정점으로 상승하였다가 하락한다.

연령별 직업 구성, 산업 구성 그리고 종사상 지위 구성의 분포가 보여주듯이, 연령별로 각 분포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연령별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상당부분 설명할 수 있다

<표 12> 취업자의 연령별 종사상지위

(단위: %)

	임금노동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합계
전체	60.7	23.7	6.4	9.3	100.0
30세 미만	91.7	4.1	1.2	3.0	100.0
30-39세	75.6	13.6	5.8	5.1	100.0
40-49세	57.4	23.7	9.9	8.9	100.0
50-59세	44.8	33.5	8.5	13.2	100.0
60-69세	23.3	50.8	4.0	21.8	100.0
70세 이상	6.9	69.9	1.8	21.4	100.0

4절 연령별 교육수준 분포

우리나라의 교육 개혁은 1954년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시작되었다. 1959년 초등학교 취학률이 96.4%에 도달했다. 그 후 1969년 7월 15일 교육혁명이라고 불리는 중학교 무시험제가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된 후 1970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6대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1971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중학교 무시험제도는 1956년생 이후의 출생자에게 그 이전의 출생자보다 높은 중학교 진학률을 제공했다. 그 후 4년 뒤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는 고등학교를 본고사 대신 연합고사를 통하여 진학하게 하였다. 국가연합고사제도는 1975년 대구, 광주, 인천에서, 1979년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에서, 1980년에는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등 2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베이비붐세대의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표 13>은 연령별 교육수준을 나타낸다. 1945년 이전 출생자들인 60세 이상의 노인들에서는 확실히 초등학교 수준이하가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물론 70세 이상이 더 낮은 교육수준을 보여주지만, 만60-69세 취업자의 경우도 무려 약 62%가 초등학교 이하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개혁은 만 50-59세(1945년부터 1955년까지의 출생자)의 교육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인 취업자의 비율이 약 27.2%로 이전 연령대보다 무려 35%가 감소하였다.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인 취업자 비율은 만40-49세 취

업자에서는 다시 7.3%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만 40세 이하의 취업자 경우에는 초등학교 수준이하가 1%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취업자의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70세 이상의 취업자는 불과 3.8%만이 대졸이상이었지만, 만60-69세 8.2%, 만50-59세 18.6%, 만40-49세 33.6%, 만30-39세 52.9%, 만30세 미만 65.6%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교육수준의 향상은 연령별 취업자산업구조, 직업구조, 그리고 종사상 지위 구조의 차이를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음이 틀림없다.

<표 13 > 취업자의 연령별 교육수준

(단위: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합계
전체	4.0	11.6	10.2	36.3	33.7	4.3	100.0
30세 미만	0.1	0.2	1.2	32.9	62.8	2.8	100.0
30-39세	0.1	0.7	2.9	43.5	46.6	6.3	100.0
40-49세	0.5	6.8	14.2	44.2	28.6	5.0	100.0
50-59세	2.7	24.5	21.9	32.3	15.0	3.6	100.0
60-69세	18.2	44.0	15.1	14.5	6.7	1.5	100.0
70세 이상	45.2	38.4	6.3	6.3	3.2	0.6	100.0

5절 취업자의 성별 연령별 거주지 분포

앞의 연령별 직업구조와 산업구조 분석에서 만50세 이상의 취업자에서 농업, 어업, 임업의 종사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성별에 따른 연령별 거주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14>는 취업자의 연령별 거주지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취업자의 거주지 비율은 농촌보다 도시가 거의 3배에 달한다. 남성 취업자 230, 52명 중 도시거주자는 171,555(74.4%), 농촌거주자는 58,968명(25.6%)이며, 여성취업자 149,210명 중 도시거주자는 102,660명(68.8%), 농촌거주자는 46,500명(31.2%)이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감소되며, 오히려 만60세 이상 취업자의 경우는 오히려 도시보다 농촌 거주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 남성과 여성을 분류하여 분석했을 때도 만60세를 기점으로 하여 도시보다 농촌거주자의 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만60세 이상에서 도시와 농촌 거주지는 남

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여성의 경우 농촌 노인 여성이 도시의 노인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표 14> 취업자의 연령별 거주지

(단위: %)

	전체		남자(60.7%)		여자(39.3%)		합계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전체	72.2	27.8	74.4	25.6	68.8	31.2	100.0
30세 미만	84.9	15.1	82.1	17.9	87.4	12.6	100.0
30-39세	82.2	17.8	82.0	18.0	82.6	17.4	100.0
40-49세	77.9	22.1	79.7	20.3	74.8	25.2	100.0
50-59세	66.4	33.6	72.1	27.9	56.1	43.2	100.0
60-69세	36.4	63.6	45.3	54.7	24.7	75.2	100.0
70세 이상	15.8	84.2	18.4	81.6	12.8	87.2	100.0

제 4 장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및 거주지별 근로 장소 유형

1절 성별 연령별 근로 장소 분포

<표 15>는 성별로 본 근로 장소의 분포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업장, 자기 집, 남의 집 그리고 야외작업현장에서 약간 더 높은 비율로 근무하는 반면, 거리와 운송수단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근무하고 있다. 야외작업현장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남성보다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좀 더 근무하는 경향이 있다.

<표 15> 성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단위: %)

	사업장 (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 현장	운송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남성	70.0	2.6	1.3	4.0	18.4	3.7	100.0
여성	70.7	4.8	2.9	2.6	18.8	0.2	100.0

<표 16>은 연령별로 분석한 취업자의 근로 장소 분포를 나타낸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업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낮아지며, 야외작업현장에서 일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한다. 자기집과 거리에서 근무할 확률은 50대까지 계속 높아진 후 감소한다. 남의 집에서 일할 가능성은 자신의 집에서 일할 가능성보다는 작은 변동을 보이지만, 40대까지 높아지다가 낮아진다. 운송수단에서 근무할 가능성도 40대까지 증가하다가 낮아진다.

<표 16> 연령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단위: %)

	사업장 (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 현장	운송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30세 미만	90.5	1.1	1.7	2.2	3.7	0.9	100.0
30-39세	82.5	2.5	1.9	3.6	7.4	2.2	100.0
40-49세	73.7	3.8	2.3	4.0	13.3	3.0	100.0
50-59세	59.0	5.7	2.1	4.3	25.4	3.5	100.0
60-69세	32.1	5.4	1.2	2.8	56.8	1.6	100.0
70세 이상	14.0	4.7	0.6	1.8	78.7	0.2	100.0

2절 교육수준별 거주지 별 근로 장소 분포

<표 17>은 교육수준에 따른 취업자의 근로 장소를 나타낸다. 사업장에서 근무할 확률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자기 집과 남의 집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중학교 수준까지 높아지다가 고등학교 이후 수준에서는 낮아진다. 거리에서 일할 가능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정점으로 낮아진다. 야외작업현장에서 일할 가능성은 교육수준이 높아갈수록 낮아진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업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야외작업현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교육수준이 낮아지는 우리나라 교육수준 실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 17> 교육수준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단위: %)

	사업장 (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 현장	운송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무학	14.4	3.9	1.0	2.5	78.0	0.2	100.0
초등학교	30.2	5.0	1.7	3.0	58.7	1.4	100.0
중학교	53.0	6.3	2.6	4.8	29.5	3.9	100.0
고등학교	74.0	3.6	2.1	4.8	11.8	3.8	100.0
대학교	88.8	2.2	1.8	2.2	4.0	1.0	100.0
대학원	95.4	2.0	0.9	0.5	1.1	0.2	100.0

<표 18>은 거주지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를 나타낸다. 농촌의 취업자에 비해 도시의 취업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야외작업현장에서 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아마 이러한 차이는 농촌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높은 비율을 반영할 것이다. 도시의 취업자에 비해 농촌 취업자는 자기집에서 일할 가능성은 높지만 남의 집, 거리 그리고 운송수단에서 일할 가능성은 낮다.

<표 18> 거주지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단위: %)

	사업장 (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 현장	운송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도시	82.0	2.8	2.2	4.0	6.4	2.6	100.0
농촌	39.9	5.3	1.0	2.0	50.2	1.6	100.0

3절 직업별 근로 장소 분포

<표 19>는 직업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를 나타낸다. 의회의원, 전문가, 사무직 등의 직업을 가진 취업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90%이상으로 매우 높다. 그 다음으로 사업장에서 일할 가능성은 기술공,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단순노무직, 그리고 농업어업 순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불과 10.5%에 불과하다.

자기 집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서비스직과 판매직이며, 남의 집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기술공과 기능원이다. 거리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판매직과 장치 기계조작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높다. 야외작업 현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과 기능원이 높다. 운송수단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장치 기계 조작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비교적 높을 뿐, 다른 직업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매우 낮은 편이다.

<표 19 > 직업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단위: %)

	사업장 (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 현장	운송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의회의원	90.7	2.9	0.7	0.4	5.0	0.3	100.0
전문가	95.7	2.6	0.5	0.2	1.1	0.0	100.0
기술공	87.1	2.8	4.5	2.1	3.0	0.5	100.0
사무직	95.9	1.5	0.5	0.9	1.0	0.2	100.0
서비스직	84.3	9.6	2.8	2.1	0.8	0.3	100.0
판매직	77.3	7.2	2.1	11.4	1.2	0.8	100.0
농업어업	10.5	1.9	0.2	0.1	87.3	0.1	100.0
기능원	74.3	3.9	4.1	1.2	16.2	0.2	100.0
장치 기계조작	66.4	1.5	0.5	8.5	5.7	17.5	100.0
단순노무	55.6	2.8	5.8	9.5	23.7	2.7	100.0
분류불능	94.3	2.0	0.5	0.8	1.4	0.9	100.0

4절 산업별 근로 장소 분포

<표 20>은 산업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를 나타낸다.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근무하는 취업자들은 약 90%이상이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 그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 기타 공공수리 등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이 80%대의 높은 확률을 보인다. 통신업 종사자는 약 74%, 건설업 종사자는 약 51.6%, 그리고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는 단지 11%만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자기 집에서 근무할 확률은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들이 가장 높은 확률(11.3%)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공공수리, 도매 및 소매업 등이 5%이상의 수준을 보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집단은 5%도 안 되는 낮은 수준을 보인다.

남의 집에서 근무하는 확률이 5%이상인 산업부문의 종사자는 단지 교육서비스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뿐이며 나머지 산업부문의 종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육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남의 집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이거나 과외선생이기 때문에 남의 집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거리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 종사자들은 운수업, 통신업이며 그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들이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들 산업 종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종사자들은 5%미만이 거리에서 근무한다.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들이 압도적으로 높고, 건설업 종사자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 다음으로 사업서비스업 종사자가 5%를 넘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 종사자들이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5%가 안 된다. 운송수단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운수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통신업 종사자들이 약 6.7%로 5%를 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 종사자들은 거의 1% 이하이다.

<표 20 > 산업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단위: %)

	사업장 (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 현장	운송 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농업, 임업, 어업	11.0	1.9	0.2	0.1	86.6	0.2	100.0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93.4	2.2	0.7	1.1	1.8	0.8	100.0
건설업	51.6	1.0	3.8	1.5	41.0	1.1	100.0
도매및 소매업	80.1	6.1	1.8	9.1	1.5	1.5	100.0
숙박및 음식점업	82.9	11.3	2.7	2.6	0.3	0.2	100.0
운수업	40.4	0.8	0.9	17.4	4.5	35.9	100.0
통신업	74.0	0.7	1.3	13.9	3.5	6.7	100.0
금융 및 보험업	88.4	0.4	1.8	8.6	0.6	0.2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92.2	3.1	1.4	1.0	1.9	0.4	100.0
사업 서비스업	87.2	2.0	2.0	1.4	7.1	0.3	100.0
공공행정	89.4	0.2	0.6	4.5	4.7	0.6	100.0
교육서비스업	89.6	2.6	5.6	1.1	0.3	0.9	100.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6.4	1.6	0.8	0.4	0.2	0.6	100.0
오락문화	89.8	4.0	0.8	1.0	4.0	0.5	100.0
기타 공공수리	81.1	9.7	2.9	2.5	2.7	1.2	100.0
분류불능	47.8	7.8	41.7	1.1	1.3	0.3	100.0

5절 종사상 지위별 근로 장소 분포

<표 21>은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를 나타낸다. 임금 노동자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들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사업장 다음으로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다음이 거리, 운송수단, 남의 집 그리고 자기 집 순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사업장 다음으로 자기 집, 야외작업현장, 남의 집, 거리, 운송수단의 순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장과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비슷한 정도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거리, 운송수단, 남의 집 순이다. 하지만 무급가족 종사자는 야외작업현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업장, 자기집, 거리, 남의 집, 그리고 운송수단 순이다.

<표 2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근로 장소

(단위: %)

	사업장 (건물 및 땅)	자기 집	남의 집	거리	야외작업 현장	운송수단	합계
전체	70.3	3.5	1.9	3.5	18.6	2.3	100.0
임금노동자	86.1	0.5	1.9	3.0	6.3	2.2	10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8.9	9.0	2.5	6.2	39.6	3.8	100.0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88.2	4.9	1.3	0.9	4.1	0.5	100.0
무급가족 종사자	34.6	8.3	0.7	1.4	54.9	0.2	100.0

제 5 장 마치는 말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부문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부문은 증가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이래 가장 높지만 계속 감소하여 왔다. 이 부문에 관련되는 직업군인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비율도 계속 감소했지만, 이상하게도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비율은 감소하지 않았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행정,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문들의 증가는 서비스업 관련 직업 종사자들, 이를테면 사무종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율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 비율의 감소는 직업부문에서 판매종사자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1차 산업인 농업 어업 임업 등의 산업 및 직업 종사자의 비율은 2000년에 감소하였다가 2005년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종사자 지위는 성별을 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성별에 따라 종사상지위의 구성비 순위가 달라진다. 남녀 모두 임금봉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그 다음의 순위에서 남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주가, 여자는 무급 가족종사자가 차지한다. 이는 여성의 무급 가족종사자의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최근에 올수록 남자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도 2005년 감소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반면 무급 가족 종사자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연령별 분석에서 예상한 것과 같이 연령에 따라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의 구조 그리고 교육수준 등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와 같은 전문가 직업군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무직 역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농업, 어업 그리고 단순 노무자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인다. 산업부문에서도 농업, 임업 어업 부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서비스산업 관련 부문인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

지사업 부문 등은 연령이 낮은 수록 높은 비율을 보인다.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산업 부문은 베이비붐세대까지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베이비붐이전세대에서는 갑자기 낮은 비율을 보인다. 종사상 지위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낮아진다.

이러한 상이한 연령별 직업, 산업 그리고 종사상 지위의 분포는 연령별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령별 교육수준 차이는 매우 현격하다. 만60세 이전 세대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62%이고 대학이상 교육수준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약 3.8%에 불과했다. 그러나 베이비붐세대인 2005년 만40-49세 사람들의 교육수준은 불과 7.3%만이 초등학교 수준 이하였고, 약 33.6%가 대학 이상의 수준을 받았다. 그리고 30-39세는 약 52.9%, 30세 미만은 약 65.6%가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초등학교 수준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불과 1%가 안 되었다.

취업자의 거주지 분포에서도 도시가 농촌보다 거의 3배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하지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러한 차이는 감소되며, 60세 이상의 취업자에서는 오히려 농촌의 비율이 도시의 비율보다 더 높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는 농촌의 여성노인이 도시의 여성노인보다 훨씬 높은 취업률을 보인다.

근로 장소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직업별, 산업별, 종사상지위별로 차이를 보인다. 남녀 취업자 모두 사업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가장 높지만, 남성은 여성에 비해 거리와 운송수단에서, 여성은 남성이 비해 자기 집과 남의 집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사업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았으며,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낮았다. 이는 농업임업어업등의 종사자들 대부분이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하고, 그들의 연령이 대체로 높기 때문에 연령이 높을수록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교육수준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장에서 그리고 낮을수록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도 교육수준과 연령과의 높은 상관관계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이 틀림없다.

직업별 근로 장소의 분석결과는 농업어업, 판매직, 장치 기계 조작, 기능원 그리고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대부분 직업부문의 종사자는 80%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어업, 단순노무직, 기능원 등은 근로 장소가 야외작업현장에 높은 비율을 보인다. 특히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은 무려 87.3%가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를 한다. 장치 기계조작 직업군은 운송수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산업별 근로 장소 분석에 따르면, 직업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농업, 어업, 임업 산업 분야 종사자가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 다음으로 건설업 종사자들이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다. 운수업과 통신업은 특성상 거리와 운송수단이 근무 장소가 될 확률이 높다. 이 네 개의 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80%가 넘는다.

마지막으로 종사상 지위별 근로 장소 분석에서는 임금노동자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사업장보다 오히려 야외작업현장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다. 이것은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아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거나 무급가족종사자로서 근무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 6 장 참고문헌

- 김동환. 2001. “금융인력 실업 및 재취업 대책,” 한국금융연구원편, 『주간금융동향』 (2001.8).
- 유홍준·김월화. 2006. “한국 직업지위 지수: 과거와 현재,” 『한국사회학』 40집 6호: 153-186.
- 은기수. 2002. “경제활동: 직업과 산업.” 『한국의 인구』.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 315-348.
- 이종선. 2002.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사회학』 36집 3호: 25-45.
- 정이환. 2004. “서비스산업화와 노동의 변화.” 『한국사회학』 38집 4호: 159-186.
- 정이환. 2002. “비정규노동의 성격과 요인.” 『한국사회학』 36집 1호: 83-112.
- 조혜선. 2002.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6집 1호: 145-169.
- 채구목. 2002.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원인 분석 및 과제.” 『한국사회학』 36집 5호: 143-169.
- 최문경. 2005. “자영업, 선택인가? 한국과 미국.” 『한국사회학』 39집 1호: 21-51.
-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시장현황과 고용정책의 과제』 .

6

한국인의 활동장애: 고령자를 중심으로

조 영 태
(서울대학교)

<표 목차>

<표 1> 65세 이상 인구의 성별, 연령별 활동장애 유병율	179
<표 2>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표준화 시각, 청각, 언어장애 유병율	180
<표 3> 65세 이상 인구의 지역에 따른 연령표준화 시각, 청각, 언어장애 유병율	183
<표 4>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표준화 학습장애 유병율	185
<표 5> 65세 이상 인구의 지역에 따른 연령표준화 학습장애 유병율	186
<표 6>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표준화 신체적 장애 유병율 ..	188
<표 7> 65세 이상 인구의 지역에 따른 연령표준화 신체적 장애 유병율	189
<표 8>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표준화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장애 유병율	191
<표 9> 65세 이상 인구의 지역에 따른 연령표준화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장애 유병율	192
<표 10>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표준화 ADL 유병율	194
<표 11> 65세 이상 인구의 지역에 따른 연령표준화 ADL 유병율	195
<표 12>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표준화 IADL 유병율	197
<표 13> 65세 이상 인구의 지역에 따른 연령표준화 IADL 유병율	198

한국인의 활동장애: 고령자를 중심으로

조영태 (서울대)

제 1 장 연구목적과 대상

1절 연구목적

최근 오래 사는 것과 동시에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과 활동장애 없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건강수명이 동시에 증가되어 오긴 하였지만, 건강수명의 증가 속도가 평균수명의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여 오히려 인생에서 활동제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윤병준·김정근 1996; 권영훈 등 2002)가 보고되면서 더욱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활동제약의 원인은 다양하다. 교통사고, 상해사고, 낙상 등 사고로 인한 활동장애가 있을 수 있고, 급성질환에 의해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의 수행이 제한될 수 있고, 또 고령으로 인한 노쇠와 함께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함께 수반되어 장기적으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모두 활동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활동제약은 주로 노인들에게서 많이 발견되지만 젊은 인구에게 활동제약은 노인 인구에게보다 더욱 심각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활동제약은 많은 나라들이 그 사회의 보건지표를 산출하는데 반드시 포함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이처럼 매우 중요한 보건지표인 활동제약 혹은 활동장애에 대하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활동제약 수준을 살펴보고, 인구 집단에 이 활동제약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활동제약의 종류는 어떠한 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적 수준에서 활동제약과 관련된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매 4년마다 조사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해 생성되어 왔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5년 조사에서 전체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600개의 조사구로부터 13,345가구가 포함되었고,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통해 활동제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비록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우리나라보건 지표의 대표적인 통계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사구를 선정하는데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그동안 변화된 지역 인구의 수와 구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활동제약의 현황을 파악하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가운데 2% 샘플 자료가 이용되고, 여기에는 약 892,000명의 전 국민을 대표하는 조사대상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는 그 어떤 자료를 이용한 활동장애에 대한 연구들에 비해 가장 대표적인 모집단 추정치를 산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2절 연구대상

활동제약에 관한 질문은 샘플조사에 포함되는 다른 질문 문항들과 달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처음 수록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보건 지표 생산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활동제약과 관련한 질문이 수십여 가지 포함되어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활동제약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활동제약에 관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이다. 하지만 응답자에게 질문된 문항들은 모두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역시 포함된 것들이고, 단지 신체적인 제약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제약도 포함하고 있어 비록 간단하지만 많은 정보를 응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미국 인구센서스의 샘플 조사도 활동제약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 2005년에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 샘플 조사에 포함된 문항과 매우 유사하며 서로 비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활동제약에 대한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의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즉 일상생활능력에서의 장애를 파악하는 것이다.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에 대한 질문은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정신적 제약이 있습니까?”이고, 응답자는 “시각·청각·언어장애”, “치매”, “중풍”, “걷기, 계단 오르기, 들고 운반하기 등 육체적 제약”, “학습의 어려움,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그리고 “없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되었다. 일상생활능력에서의 장애를 파악하는 질문을 “다음과 같은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까?”이며, 응답자들은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안 돌아다니기”, “쇼핑, 병원가기, 집밖 돌아다니기”, 혹은 “없음” 가운데에서 해당되는 곳에 모두 답하게 되어있다. 이 가운데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에 관한 응답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일상활동 수행에서의 어려움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응답은 각각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과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을 측정하는 도

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샘플 서베이에는 활동제약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 장애가 서로에게 완전 독립적인 것은 아니지만 서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며 둘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만의 장애보다 더욱 활동의 제약이 크게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래의 분석도 각 장애에 대하여 독립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상활동 수행에서의 어려움의 경우는 ADL이 IADL에 비해 다소 중증의 활동장애 수준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ADL이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등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들에서의 제약을 의미하는 반면 IADL은 그보다는 다소 일상적인 활동들에서의 제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DL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IADL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활동제약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질적으로 인구주택센서스의 조사표에도 응답자가 해당되는 모든 문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2장 기존 연구 검토

인간이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나의 의지 혹은 신체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와 정신적인 기능의 쇠퇴로 인해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전자는 법적인 구속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후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년기에 겪게 되는 공통적인 경험이다. 예전 사망의 주요 원인이 전염병이나 급성질환이며 사망률이 매우 높아 평균수명이 낮았던 시기에는 신체와 정신적인 기능의 쇠퇴로 인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인구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평균수명은 증가하였지만 인생의 많은 기간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활동에 제약을 받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고나 만성질환 등과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오는 경우를 활동장애라고 부르며, 한 사회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주는 지표들 가운데 하나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의 사회지표를 조사할 때 주관적인 건강인식과 함께 활동장애는 거의 누락되지 않는 보건분야의 지표 가운데 하나로 조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조사”, 유럽의 “EuroQol”, 미국의 “Social Indicators Survey”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국내의 활동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국내의 연구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심층 분석 가운데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와 2005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한국고령자패널조사”의 원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활동장애와 관련된 부분을 심층 분석한 장숙량(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 건강 및 보건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활동장애에 대한 매우 자세한 정보들을 응답자에게 요구하였고, 19세 이상 성인 모두를 응답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반면 한국고령자패널은 4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비록 고령자들의 삶에 활동장애가 차지하는 매우 크지만 이 조사는 이외에 경제활동, 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활동장애에 대한 질문은 다소 제한적이다. 하지만 통시적으로 조사되는 패널설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 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활동장애에 관한 매우 심도 깊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심층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6.5%가 활동장애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서 활동장애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에게 있어 관절염, 당뇨, 고혈압, 뇌혈관 질환, 치매 등 만성질환과 함께, 비록 실질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의 하나가 되어버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 활동장애가 더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들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더 긴 것을 고려하면 여성들이 활동장애를 지니고 살게 되는 기간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김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ADL과 IADL의 경우는 우리나라 노인의 17.8%와 46.0%가 각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역시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서 그 발생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고령자패널 자료의 분석을 실시한 장숙량(2006)의 연구에서도 위와 비슷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는데, 먼저 연령별로 볼 때 65세 미만의 성인 집단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ADL은 약3%대, IADL은 약 7%대 미만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후 연령대들이 모두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65-74세의 노인에게서는 두 가지 일상활동장애 모두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장애율을 보였다는 것인데, 이 연령대 즈음하여 남성들의 사망률이 여성들에 비해 높은 것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소득 수준에 따른 분석에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ADL과 IADL이 모두 더 많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두 연구는 활동장애와 관련한 최근의 경향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먼저 응답자의 선정 과정인데, 두 조사 모두 응답자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지만, 16개 시도차원의 대표성을 전혀 띠고 있지 못해, 활동장애의 지역 간 분포 현황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소지역 추정법을 이용하여 16개 시도의 현황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말 그대로 추정치일 뿐이고 그 추정의 결과도 연령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샘플자료는 위 두 자료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을 극복하고 있는데, 전 인구의 약 2%에 달하는 약 90만 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활동장애가 주로 나타나는 65세 이상 인구도 이들 가운데 10%인 약 9만 명이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5년 당시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일치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방대한 샘플의 크기는 비록 본 조사가 활동장애 혹은 건강이나 보전에 대해 특화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모수의 추정치를 산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히 시도 간 활동장애율의 차이를 밝혀내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원이 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제 3 장 한국인의 활동장애 실태

이 장에서는 다양한 원인과 형태의 활동장애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된 바대로 활동장애는 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에게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연구의 대상 연령집단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활동장애 6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장애 유형은 “신체장애(중풍 포함)”이었는데, 전체 설문 참가자 약 90만 명 가운데 4.8%인 42,635 명이 신체장애를 지니고 있다고 답하였고, 이들 중 65.8%가 65세 이상의 응답자였다. 물론 나머지 34.2%가 작은 수는 아니지만, 주로 60세 이후의 응답자들이 그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역시 65세 즈음하여 활동장애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활동장애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활동제약의 육체적·정신적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한 활동제약의 유형이다. 즉 전자는 원인으로 볼 수 있고 후자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이러한 구분이 충분히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전자와 후자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며 실제 설문에서도 해당되는 모든 장애 유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서로 큰 연관성이 있는 장애를 동일한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원 설문에서 활동제약의 원인 가운데 “학습의 어려움,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과 “치매”를 하나의 “학습장애” 유형으로, “걷기, 계단 오르기, 들고 운반하기 등 육체적 제약”과 “중풍”을 “신체장애”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나머지 활동장애의 유형은 설문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활동장애가 노인인구들에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노인인구의 인구/사회적인 특징들을 고려하였다.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직업,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 등이 그것이다. 활동장애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그 발생 및 유병빈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든 분석에서 필요한 경우 연령 표준화를 실시하였고, 남성과 여성을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1절 6가지 활동장애 유형별 유병율

다음 <표 1>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6가지 활동장애 유병율을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1> 65세 이상 인구의 성별, 연령별 활동장애 유병율

(단위: %)

장애 종류 연령	시각 청각 언어장애		학습장애 (치매 포함)		신체장애 (중풍 포함)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옷 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 안 보행		쇼핑 병원가기 집 밖 보행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65-69세	3.3	2.9	1.5	1.8	15.3	22.4	3.8	4.8	3.1	3.0	8.8	12.1
70-74세	5.5	4.5	2.6	2.5	22.7	31.0	6.4	7.4	4.6	4.9	13.7	18.1
75-79세	8.6	6.8	3.5	4.4	32.1	38.4	9.3	10.8	7.0	7.1	20.7	24.8
80-84세	12.9	11.7	5.7	7.0	37.2	43.4	14.6	16.1	9.6	10.2	27.1	31.9
85세 이상	18.9	18.4	9.1	13.3	43.5	47.5	21.2	25.0	14.4	17.5	33.9	41.4
전체*	6.1	6.1	2.7	3.8	22.8	31.9	6.9	9.2	5.1	6.1	14.5	20.4

주) *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각 장애 변수별 응답율(%)

먼저 전체 유병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신체장애(중풍포함)로 인한 활동제한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남자 22.8%, 여자 31.9%), IADL인 쇼핑, 병원가기, 및 집 밖 보행이 그 뒤를 이었다 (남자 14.5%, 여자 20.4%). 다른 장애 유형들은 남녀 모두 10%를 넘지 않았다. 대부분의 활동장애 유형들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의 유병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신체장애와 IADL에서 남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시각, 청각, 언어장애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장애 유형에서 연령이 높아지면서 활동장애 비율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앞서 가장 높은 유병율을 기록했던 신체장애와 IADL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장애 유형들은 가장 낮은 연령대(65-69세)와 가장 높은 연령대(85세 이상)의 유병 비율차이가 거의 두 배 혹은 그 이상 나타났는데, 위 두 유형에서는 그 차이가 약 1.5배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신체장애와 IADL은 많은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그 발병 시기가 매우 빠른 연령층임을 시사하는 것이고, 다른 활동장애들은 비록 발병의 시기는 빠르지 않지만 고령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절 시각, 청각, 언어장애

다음 <표 2>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시각, 청각, 언어장애가 어떠한 양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장애 유병 비율을 각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모든 분석에 연령표준화를 실시하였고 남녀를 나누어 분석하였으므로 각 특성들

의 구분 사이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표 2>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표준화 시각, 청각, 언어장애 유병율
(단위: %)

특성	성	구분	연령표준화 장애율
결혼 상태	남자	미혼	14.57
		배우자 있음	6.07
		사별	6.49
	여자	이혼	5.85
		미혼	8.49
		배우자 있음	4.90
		사별	6.59
종교	남자	이혼	7.44
		무교	6.32
		불교	5.75
		기독교	5.89
		천주교	5.69
	여자	기타	6.84
		무교	6.68
		불교	5.66
교육 수준	남자	기독교	5.87
		천주교	5.85
		기타	5.65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7.01
	여자	중학교 졸업	5.69
		고등학교 졸업	5.32
		대학(교)졸 혹은 이상	3.47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6.32
직업	남자	중학교 졸업	3.76
		고등학교 졸업	3.79
		대학(교)졸 혹은 이상	5.10
		의원/전문가/준전문가	1.34
		사무직	2.86
		서비스/판매직	5.51
		농림어업	4.92
	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1.04
		단순노무	2.45
		직업 없음	7.04
		의원/전문가/준전문가	0.95
		사무직	2.27
		서비스/판매직	3.57
		농림어업	5.36
남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4.87	
	단순노무	8.49	
	직업 없음	6.36	

먼저 결혼 상태별 시각, 청각, 언어 장애 노인의 비율을 보면 남자의 경우 미혼이 다른 결혼 상태에 비해 훨씬 높은 장애율을 나타냈다. 즉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에 비해 미혼 노인은 두 배 이상 높은 시청각 및 언어 장애율을 보였다. 여성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였지만 남자만큼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종단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혼인이 먼저인지 활동장애가 먼저인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미혼이라는 혼인 상태가 활동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고, 반대로 장애로 인해 혼인을 못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만 집중하기로 한다. 이혼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본 유형으로 인한 활동장애를 더욱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종교인데,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와 활동장애와는 서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종교는 신앙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 이외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활동장애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교가 다른 삶의 특성들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연구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단순히 어떠한 종교를 지니고 있는지 만이 아니라 그 종교가 삶에 얼마나 용해되어 있는지 혹은 종교성(religiosity)이 얼마나 높은지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교의 유무 여부와 종류만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을 표준화한 후, 남녀 모두 종교의 유무 혹은 종교가 있는 경우 어떠한 종교를 지니고 있는지와 시청각, 언어장애와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남녀 모두에 있어서 무교일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본 장애율이 다소 높는데 주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교육수준은 노인인구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건강 연구에서 한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은 소득, 직업, 그리고 교육수준에 의해 파악되는데, 노인은 대부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은퇴로 인해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가장 적합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지표가 된다. 교육은 대부분 30세 이전에 모두 마치지기 때문인데, 교육과 함께 최근 노인 관련 연구에서는 자산(wealth)을 사회경제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자산 정보가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수준만이 분석에 고려되었다. 연령을 표준화한 후 교육은 남자에게 있어 시청각 및 언어장애와 매우 뚜렷한 역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학교 졸업 혹은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에 비해 초등학교만을 졸업하거나 그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노인들이 두 배 이상 이 장애를 지니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다소 다른데, 중고졸자에 비해 대학교 졸 혹은 이상교육을 받은 고등교육

노인이 이 장애에 대한 유병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로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은 노인인구에게 사회경제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여기서는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의 직업과 본 장애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는데, 점점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에서도 직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커져가고 있고 실제로 사회에서도 이들의 노동참여 혹은 유지를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직업과 장애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전문직 혹은 사무직에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이 장애를 겪고 있는 비율이 크게 낮게 나타났다. 예외적인 것은 기능원/장치/기계조작의 소위 블루칼라 집단인데, 이는 시청각 장애가 있을 때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매우 큰 제약이 따르므로 역의 인과관계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표 3>은 노인인구의 시각, 청각, 그리고 언어장애가 연령을 표준화 하였을 때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낸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별 대표성 있는 활동장애율을 산출한 것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만이 지니고 있는 장점이다. 남자의 경우 서울시가 가장 낮은 장애율을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도시지역을 나타내는 시지역이 도지역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와 함께 비교적 시청각 및 언어장애의 비율이 높았다. 제주도와 강원도 지역에 살고 있는 남성 노인인구의 본 장애비율이 매우 높는데, 가장 낮은 수준인 서울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에게도 거의 유사한 패턴의 활동장애가 발견되는데, 서울시가 가장 낮고, 제주와 강원도 지역에 시청각 언어장애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시지역이면서 동시에 젊은 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울산광역시의 노인인구 시청각 및 언어장애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이 지역이 공단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단에서의 작업환경이 은퇴 후 노인들에게 이러한 장애를 가져다 준 것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단지역의 환경이 간접적으로 노인들에게 시청각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시각, 청각, 혹은 언어 장애는 남자 노인들에게는 미혼의 혼인상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낮은 교육수준, 그리고 농림어업 혹은 무직의 직업 상태와 다소 높은 관련성을 보였고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장애율을 보였다. 여자 노인들의 경우 미혼, 낮은 교육수준, 단순노무 혹은 무직일 경우 이 장애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울산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율을 보였다.

<표 3> 65세 이상 인구의 지역에 따른 연령표준화 시각, 청각, 언어장애 유병율
(단위: %)

성	지역	연령표준화 장애율
남자	서울특별시	4.63
	부산광역시	4.77
	대구광역시	5.34
	인천광역시	6.64
	광주광역시	7.19
	대전광역시	5.71
	울산광역시	7.02
	경기도	5.55
	강원도	8.43
	충청북도	6.35
	충청남도	4.75
	전라북도	6.14
	전라남도	7.60
	경상북도	6.83
	경상남도	6.27
	제주도	8.38
	여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5.25
대구광역시		5.68
인천광역시		5.44
광주광역시		7.16
대전광역시		3.78
울산광역시		8.55
경기도		5.52
강원도		7.44
충청북도		5.43
충청남도		4.69
전라북도		6.18
전라남도		7.56
경상북도		7.56
경상남도		6.38
제주도		7.76

3절 학습장애 (치매포함)

<표 4>는 치매를 포함한 노인인구의 학습장애가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 모든 통계는 연령이 보정되었다. 먼저 결혼 상태별 학습장애를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미혼 노인인구에서 학습장애나 치매의 유병율이 다른 혼인 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물론 정신적인 지체가 이들로 하여금 혼인의 기회를 낮추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미혼으로 살아오게 된 다른 이유들이 정신적인 측면의 장애 유발요인이 될 수도 있다.

남녀 공히 종교의 유무는 물론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신지체와 그리 큰 관련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성경이나 불경 등을 읽고, 교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혹은 종교를 통한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것이 정신적인 노화를 예방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종교성이 고려된다면 종교와 정신적인 노화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교육수준을 보면 연령표준화 학습장애율이 남녀 모두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주목할 만큼 낮은 장애율이 발견되었는데, 가장 높은 교육수준과 가장 낮은 교육수준 간의 장애율 차이가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서 더욱 컸다. 특히 대졸 혹은 그 이상자 여성 노인의 학습장애율이 1.83인데 같은 교육수준의 남성 노인의 학습장애율은 1.91로 나타났는데, 비록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이 결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집단에서 여성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는 것은 매우 선택적인 인구집단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업별 학습장애율은 남녀 모두 직업이 없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로 인한 직업선택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표준화 학습장애 유병율
(단위: %)

특성	성	구분	연령표준화 장애율
결혼 상태	남자	미혼	13.49
		배우자 있음	2.65
		사별	3.17
		이혼	3.39
	여자	미혼	8.47
		배우자 있음	3.13
		사별	3.96
종교	남자	무교	2.71
		불교	2.62
		기독교	2.81
		천주교	3.06
		기타	2.93
	여자	무교	4.14
		불교	3.34
		기독교	4.04
		천주교	3.24
		기타	4.64
교육 수준	남자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3.09
		중학교 졸업	2.27
		고등학교 졸업	2.58
		대학(교)졸 혹은 이상	1.91
	여자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3.94
		중학교 졸업	2.50
		고등학교 졸업	2.72
		대학(교)졸 혹은 이상	1.83
직업	남자	의원/전문가/준전문가	0.00
		사무직	0.00
		서비스/판매직	0.96
		농림어업	1.21
		기능원/장치/기계조작	0.15
		단순노무	1.74
		직업 없음	3.67
	여자	의원/전문가/준전문가	1.84
		사무직	0.00
		서비스/판매직	0.74
		농림어업	1.53
		기능원/장치/기계조작	0.27
		단순노무	1.01
		직업 없음	4.17

<표 5> 65세 이상 인구의 지역에 따른 연령표준화 학습장애 유병율

(단위: %)

성	지역	연령표준화 장애율
남자	서울특별시	2.69
	부산광역시	1.88
	대구광역시	3.23
	인천광역시	2.23
	광주광역시	2.72
	대전광역시	2.92
	울산광역시	1.16
	경기도	2.46
	강원도	3.16
	충청북도	3.58
	충청남도	1.73
	전라북도	3.53
	전라남도	3.31
	경상북도	2.88
	경상남도	2.65
	제주도	2.53
	여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3.36
대구광역시		3.54
인천광역시		2.99
광주광역시		4.29
대전광역시		3.51
울산광역시		4.18
경기도		3.32
강원도		3.85
충청북도		3.59
충청남도		3.32
전라북도		5.04
전라남도		4.49
경상북도		3.78
경상남도	3.88	
제주도	4.27	

<표 5>는 지역별 연령표준화 학습장애 유병율을 나타낸다. 앞선 시청각 및 언어장애 보다 지역간 유병율의 차이가 그리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발견되는데, 남자는 울산광역시가 1.16으로 가장 낮았고 충청북도가 3.58로 가장 높았다. 여자는 인천광역시가 2.99로 가장 낮았고 전라북도가 5.04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치매를 포함한 학습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흥미로운 발견은 바로 울산광역시이다. 이 지역의 남성 노인의 학습장애율은 매우 낮은 편인데, 여성 노인의 그것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병을 위

한 경제적/심리적인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치매를 비롯한 학습장애는 미혼이고,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이 현재 없는 노인 인구집단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지역에 따른 주목할 만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절 신체적 장애 (중풍 포함)

다음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장애의 분포를 살펴보자. 이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지니고 있는 활동 장애 가운데 가장 많은 유병율을 보이는 것이 중풍을 포함한 신체적 장애이다. 신체적 장애는 걷기, 계단 오르기, 들고 운반하기 등 육체적 제약을 의미하는데, 골다공증이나 관절염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오기도 하지만 고령으로 인한 노쇠현상으로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결혼 유형별 신체적 장애율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낮은 수준의 장애 유병율을 보였고, 사별, 이혼, 그리고 미혼 순으로 유병율이 상승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유병율이 가장 낮았지만 남성과 달리 미혼, 사별 그리고 이혼의 순서로 장애 유병율이 증가하였다. 65세 이상의 연령에도 미혼인 경우 신체적인 장애는 혼인을 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 미혼 노인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신체적 장애율은 장애가 이들의 혼인에 장애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신체적인 장애가 발생하여 이혼하게 되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이혼 이후에 한국에서 여성이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육체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장애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논리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이혼을 경험하여 홀로 살아가는 여성노인들은 높은 신체적 장애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앞선 장애 유형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유무와 종류는 남녀 모두에게 주목할 만한 신체적인 장애분포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은 남녀 모두 신체적 장애와 역의 관계를 보였다. 그런데 비록 여성이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신체적 장애의 유병율이 더 높았지만, 가장 높은 교육수준과 가장 낮은 교육수준과의 신체적 장애율을 비교해 보면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에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별 차이를 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신체적 활동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신체적 장

애가 노인으로 하여금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역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표 6>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표준화 신체적 장애 유병율
(단위: %)

특성	성	구분	연령표준화 장애율
결혼 상태	남자	미혼	30.21
		배우자 있음	22.73
		사별	24.25
		이혼	26.37
	여자	미혼	32.38
		배우자 있음	30.08
		사별	33.26
		이혼	39.59
종교	남자	무교	23.07
		불교	23.55
		기독교	22.20
		천주교	20.43
		기타	21.94
	여자	무교	31.70
		불교	32.50
		기독교	31.96
		천주교	30.04
		기타	31.68
교육 수준	남자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26.46
		중학교 졸업	21.92
		고등학교 졸업	18.62
		대학(교)졸 혹은 이상	13.45
	여자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33.13
		중학교 졸업	25.30
		고등학교 졸업	22.09
		대학(교)졸 혹은 이상	21.35
직업	남자	의원/전문가/준전문가	5.78
		사무직	11.18
		서비스/판매직	9.86
		농림어업	19.06
		기능원/장치/기계조작	9.59
		단순노무	12.29
		직업 없음	26.61
	여자	의원/전문가/준전문가	18.06
		사무직	16.88
		서비스/판매직	20.58
		농림어업	27.00
		기능원/장치/기계조작	15.28
		단순노무	24.08
		직업 없음	33.44

교육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별 신체 장애율의 격차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 연령대의 여성들의 경제적인 삶은 남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지위의 효과가 남편의 그것에 의해 상쇄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65세 이상 인구의 지역에 따른 연령표준화 신체적 장애 유병율 (단위: %)

성	지역	연령표준화 장애율
남자	서울특별시	16.62
	부산광역시	22.14
	대구광역시	24.52
	인천광역시	22.17
	광주광역시	24.26
	대전광역시	20.13
	울산광역시	23.52
	경기도	19.25
	강원도	27.65
	충청북도	24.91
	충청남도	20.84
	전라북도	24.64
	전라남도	26.55
	경상북도	26.11
	경상남도	26.26
	제주도	28.31
	여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30.40
대구광역시		33.74
인천광역시		31.09
광주광역시		35.05
대전광역시		27.62
울산광역시		32.27
경기도		27.25
강원도		35.15
충청북도		32.61
충청남도		27.25
전라북도		36.21
전라남도		36.81
경상북도		35.60
경상남도		34.56
제주도		39.36

신체적 장애 유병율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도 여성도 연령표준화 장애율이 시지역에 비해 도지역이 다소 높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남녀 공히 서울지역의 노인들이 신체적 장애로부터 가장 자유로웠고, 제주도의 노인들이 신체적 장애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절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장애

지금까지 활동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의 유형별로 그 분포를 알아봤다. 이제는 원인보다는 활동장애 자체가 어떠한 유형을 지니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 활동장애의 유형은 배우기, 기억하기, 그리고 집중하기의 장애이다. 이 장애는 신체적인 측면보다는 정신적이거나 감성적인 측면에서 활동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앞서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들 가운데 치매를 포함하는 학습장애로부터 발생된 장애와 관련이 깊다.

다음 <표 8>은 이러한 유형의 장애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낸다. 먼저 결혼 상태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미혼인 경우에 배우기, 기억하기, 그리고 집중하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높았다. 한편 남자에게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노인인구가 이러한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가장 낮은 반면 여자는 이혼한 경우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치매를 포함한 학습장애에서와 동일한 발견이다.

종교가 없는 노인들이 종교가 있는 노인들에 비해 배우기, 기억하기, 그리고 집중하기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주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초등학교졸업 혹은 그 이하로 매우 낮은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배우기, 기억하기, 그리고 집중하기에 장애를 겪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데, 남자는 8.23%가 여자는 9.75%가 그러하였다.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들과 이들의 본 장애유형에 있어서의 차이는 남자는 두 배 이상, 여자도 거의 두 배에 가깝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들과 대학교 졸업 이상자들의 이 장애 유병율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약 2% 포인트) 여자들의 경우 거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최소한 65세 이상 연령대에겐 학력이 남자들에게 사회적 삶의 매우 중요한 특성인 반면 여성에게는 학력이 매우 낮지 않는 한 그렇지 않은 한국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직업적 구분으로 본 사회경제적 수준과 배우기, 기억하기, 그리고 집중하기의 제약은 뚜렷한 관계가 드러나는데, 전문직 혹은 사무직에 있는 노인들이 농림어업이나, 기능원/장치/기계조작 혹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인들에 비해 이러한 종류의 활동제한을 훨씬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활동장애의 선택성으로 인해 직업이 없는 경우 매우 높은 장애율을 나타내었다.

<표 8>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표준화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장애 유병율

(단위: %)

특성	성	구분	연령표준화 장애율
결혼 상태	남자	미혼	19.00
		배우자 있음	6.76
		사별	7.87
		이혼	8.70
	여자	미혼	12.88
		배우자 있음	8.19
		사별	9.69
종교	남자	무교	7.06
		불교	6.67
		기독교	6.63
		천주교	6.75
		기타	8.08
	여자	무교	10.03
		불교	8.88
		기독교	9.14
		천주교	7.80
		기타	9.53
교육 수준	남자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8.23
		중학교 졸업	6.00
		고등학교 졸업	5.57
		대학(교)졸 혹은 이상	3.79
	여자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9.75
		중학교 졸업	4.59
		고등학교 졸업	5.29
직업	남자	의원/전문가/준전문가	0.72
		사무직	1.33
		서비스/판매직	1.87
		농림어업	5.46
		기능원/장치/기계조작	2.06
		단순노무	4.03
		직업 없음	8.16
	여자	의원/전문가/준전문가	2.32
		사무직	3.02
		서비스/판매직	5.11
		농림어업	7.36
		기능원/장치/기계조작	6.45
		단순노무	6.33
		직업 없음	9.63

<표 9>는 이 장애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시지역에 비해 도지역이 노인들의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제약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발견은 울산광역시인데, 남자의 이 장애 유병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반면(5.66%), 여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10.98%). 역시 유사한 결과가 앞선 학습장애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이 지역 여성노인을 위한 정신보건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남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비록 연령이 보정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광주광역시, 제주도, 강원도, 혹은 전라도와 같이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곳에서 정신적인 활동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9> 65세 이상 인구의 지역에 따른 연령표준화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장애 유병율 (단위: %)

성	지역	연령표준화 장애율
남자	서울특별시	5.54
	부산광역시	4.67
	대구광역시	7.14
	인천광역시	5.41
	광주광역시	7.49
	대전광역시	5.54
	울산광역시	5.66
	경기도	6.00
	강원도	8.40
	충청북도	7.89
	충청남도	4.87
	전라북도	8.26
	전라남도	9.12
	경상북도	7.63
	경상남도	8.45
	제주도	7.92
여자	서울특별시	7.37
	부산광역시	6.79
	대구광역시	8.54
	인천광역시	7.86
	광주광역시	12.38
	대전광역시	7.75
	울산광역시	10.98
	경기도	7.46
	강원도	9.87
	충청북도	8.66
	충청남도	7.28
	전라북도	11.60
	전라남도	11.80
	경상북도	10.95
	경상남도	10.40
	제주도	11.62

6절 ADL 활동장애 유병율

한 사회 혹은 개인의 활동장애를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ADL과 IADL이다. 이 두 지표는 그 사회의 삶의 질을 연구하는 데에도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혹은 미국의 Social Indicator's Survey, 유럽의 EuroQol에도 다수의 삶의 질 질문과 함께 ADL과 IADL이 함께 질문되어진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ADL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집안 내에서 돌아다니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기초적인 일상을 하는데 있어서 혼자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서 다소 심각한 수준의 활동장애를 의미한다. <표 10>은 ADL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들의 사회적인 특성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낸다. 모든 유병율 계산에 연령이 보정되었다.

먼저 혼인상태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미혼인 경우가 높은 연령표준화 ADL장애율을 보였는데, 남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약 5%인 반면 미혼은 9%에 달했다. 여자는 그보다는 다소 차이가 작은 편이지만 여전히 미혼 여성노인에게서 ADL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녀 모두 이혼을 경험한 경우 ADL 장애율이 다소 높았는데, 장애로 인해 이혼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혼이 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편이 더욱 적절하다. 종교의 유무는 남자에서는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여성은 종교가 없을 때 ADL 유병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종교의 종류별로 보면 세 가지 대표적인 종교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여자의 기타 종교는 ADL과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장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은 교육수준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ADL 장애 유병율도 높이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남자의 경우 대졸 혹은 이상의 노인은 3.28%,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의 노인은 5.55%가 ADL을 겪고 있었고, 여성은 각각 4.89%와 6.22%이었다. 직업별 유병율을 보면 직업이 없는 경우가 남녀 각각 7.24%와 6.91%로 다른 직업 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증의 활동장애로 볼 수 있는 ADL이 있을 경우 어떠한 유형이라도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직업 유형과 상관없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ADL 유병율은 높지 않게 나타났다.

<표 10>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표준화 ADL 유병율
(단위: %)

특성	성	구분	연령표준화 장애율
결혼 상태	남자	미혼	8.79
		배우자 있음	5.11
		사별	5.05
	여자	이혼	6.27
		미혼	8.15
		배우자 있음	5.73
		사별	6.15
종교	남자	이혼	7.12
		무교	4.94
		불교	4.98
		기독교	5.40
		천주교	5.37
	여자	기타	4.67
		무교	6.73
		불교	5.40
		기독교	5.78
		천주교	5.93
교육 수준	남자	기타	7.21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5.55
		중학교 졸업	4.88
		고등학교 졸업	4.59
	여자	대학(교)졸 혹은 이상	3.28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6.22
		중학교 졸업	4.48
		고등학교 졸업	5.57
직업	남자	대학(교)졸 혹은 이상	4.89
		의원/전문가/준전문가	0.84
		사무직	2.68
		서비스/판매직	1.41
		농림어업	1.63
		기능원/장치/기계조작	0.37
		단순노무	0.89
	여자	직업 없음	7.24
		의원/전문가/준전문가	0.48
		사무직	0.74
		서비스/판매직	1.79
		농림어업	2.26
		기능원/장치/기계조작	0.54
		단순노무	0.68
직업 없음	6.91		

<표 11> 65세 이상 인구의 지역에 따른 연령표준화 ADL 유병율

(단위: %)

성	지역	연령표준화 장애율
남자	서울특별시	3.99
	부산광역시	4.52
	대구광역시	4.95
	인천광역시	5.93
	광주광역시	3.85
	대전광역시	5.75
	울산광역시	4.61
	경기도	4.32
	강원도	5.77
	충청북도	5.31
	충청남도	4.20
	전라북도	5.90
	전라남도	6.15
	경상북도	5.02
	경상남도	6.17
	제주도	6.92
여자	서울특별시	5.42
	부산광역시	6.07
	대구광역시	5.48
	인천광역시	6.77
	광주광역시	5.84
	대전광역시	6.47
	울산광역시	5.38
	경기도	5.27
	강원도	6.28
	충청북도	5.39
	충청남도	4.73
	전라북도	7.65
	전라남도	7.00
	경상북도	6.27
	경상남도	6.60
	제주도	6.46

<표 11>은 옷 입고, 목욕하고, 밥 먹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등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활동이 제한된 노인들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낸다. 앞서 다른 장애들에서 시지역에 비해 도지역의 장애 유병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남성과 여성 모두 ADL의 지역 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러 가지 활동장애를 현재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이 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그것이 집안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ADL은 지역 간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록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아도 남자는 서울의 ADL 유

병율이 가장 낮고, 제주도와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다소 높은 유병율을 보였고, 여자는 충청남도가 4.73%로 가장 낮고, 전라남도가 7.00%로 다소 높아, 지역 간 차이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7절 IADL 활동장애 유병율

앞서 분석한 ADL과 함께 일반적으로 활동장애의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들 가운데 하나인 IADL을 살펴보자. IADL은 ADL보다는 다소 경미한 활동장애로 여겨지는데, 집 안에서는 그다지 상관이 없지만 밖에 나가서 장을 보거나, 병원을 가고, 혹은 다른 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활동이 편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음 <표 12>에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이 IADL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제시되어 있다.

먼저 혼인 상태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미혼으로 남아 있는 노인들 사이에서 도구적 활동장애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의 IADL 유병율이 남녀 각각 14.37%와 19.15%인 반면 미혼 노인들은 22.94%와 22.82%로 높게 나타났는데, 여자들에게서 보다 남자 노인들의 미혼과 이 활동장애 유병율이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남자는 아니었지만, 여자의 경우 이혼과 IADL이 큰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AD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활동장애가 이혼을 촉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마도 이혼을 경험한 여성이 스스로 생계를 이끌어 나가면서 많은 질병에 노출되고 그것에 적절한 의료적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그들에게 IADL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종교의 유무와 종류는 남녀 모두 연령이 표준화 되었을 경우 유병율에 그다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별 IADL 장애 유병율을 보면,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 혹은 그 이하의 낮은 교육수준과 이 활동장애가 매우 큰 연관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남자들에게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장애율이 두드러지게 낮아지고 있는데, 여자들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를 제외하면 활동장애 유병율이 그다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배우기, 기억하기, 그리고 집중하기에 제한이 있는 경우와 매우 유사한 결과인데, 한국 사회에서 교육수준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다른 의미를 지니는지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남자들에게 있어 교육은 사회적 삶의 차별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반면 여자들에게는 매우 낮은 수준의 교육인 경우를 제외하면 교육 수준은 삶의 궤적을 그리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직업이

없는 경우가 IADL의 유병율이 가장 높았는데, 역시 장애로 인한 무직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 가운데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IADL 유병율이 남녀 공히 매우 높았는데, 밖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표 12>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표준화 IADL 유병율 (단위: %)

특성	성	구분	연령표준화 장애율
결혼 상태	남자	미혼	22.94
		배우자 있음	14.37
		사별	15.54
	여자	미혼	14.14
		배우자 있음	22.82
		사별	19.15
종교	남자	이혼	21.15
		무교	23.35
		불교	14.77
		기독교	14.16
	여자	천주교	14.72
		기타	13.23
		무교	14.38
		불교	21.09
교육 수준	남자	기독교	19.79
		천주교	20.66
		기타	18.85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21.67
	여자	중학교 졸업	16.76
		고등학교 졸업	13.39
		대학(교)졸 혹은 이상	11.99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7.93
직업	남자	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21.20
		중학교 졸업	15.07
		고등학교 졸업	13.32
		대학(교)졸 혹은 이상	14.40
		의원/전문가/준전문가	2.55
		사무직	6.43
		서비스/판매직	5.67
	여자	농림어업	9.60
		기능원/장치/기계조작	3.39
		단순노무	4.27
		직업 없음	18.19
		의원/전문가/준전문가	5.77
		사무직	6.96
		서비스/판매직	8.56
남자	농림어업	13.53	
	기능원/장치/기계조작	10.21	
	단순노무	12.62	
	직업 없음	22.09	

<표 13> 65세 이상 인구의 지역에 따른 연령표준화 IADL 유병율

(단위: %)

성	지역	연령표준화 장애율
남자	서울특별시	9.86
	부산광역시	13.25
	대구광역시	15.61
	인천광역시	14.72
	광주광역시	16.06
	대전광역시	11.43
	울산광역시	13.33
	경기도	11.60
	강원도	15.96
	충청북도	16.14
	충청남도	13.56
	전라북도	17.04
	전라남도	18.51
	경상북도	15.75
	경상남도	17.03
	제주도	19.05
	여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19.51
대구광역시		20.98
인천광역시		21.12
광주광역시		23.24
대전광역시		17.44
울산광역시		20.10
경기도		16.57
강원도		20.73
충청북도		21.54
충청남도		17.61
전라북도		25.03
전라남도		25.05
경상북도		21.79
경상남도		22.87
제주도		24.14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생계를 위한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위 <표 13>은 IADL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 남자

들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들 가운데 IADL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았는데, 유병율이 9.86%로 나타났다. 이는 유병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제주도의 19.05%의 절반 수준이다. 유병율이 높은 다른 지역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등 이었다. 여자의 경우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IADL 유병율이 15.21%로 가장 낮았는데, 가장 높은 유병율을 보인 지역인 전라남도의 25.05%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었다. 남자들과 유사하게 제주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등의 여성 노인들이 수단적 활동장애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들에 비교하여 가장 낮은 IADL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노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실제로 건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지역의 제반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 인구가 어렵지 않게 바깥 생활을 하는데 유리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도 상대적으로 낮은 IADL 유병율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유형의 활동장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제 4 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한국인의 활동장애율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특히 노인 인구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ADL과 IADL을 동시에 고려할 때 19세 이상 전체 성인 가운데 한국인은 8.3%가 미국인은 4.3%가 각각 2005년과 2003년에 활동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의 노인들만으로 고려의 대상을 한정하면 65-74세까지 한국은 29.8%, 미국은 9.9%가, 75세 이상은 한국 54.0% 미국 29.2%로 그 격차가 훨씬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물론 두 나라가 건강이나 활동제약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미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활동장애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에게 분명히 중요한 보건문제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하나는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인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의 보건학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된 보건 정책에 대한 것이다.

먼저 인구주택총조사의 보건학적 활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자. 본 연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장애가 원인과 유형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고찰을 시도하였다. 물론 노인인구의 활동장애에 대한 국내 연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인구를 커버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장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발견과 결과는 다른 연구들이 수행하지 못한 제한점을 잘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보건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산출용 자료인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샘플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전국적인 통계를 산출하기는 하였지만 활동제한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추정치로 밖에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활동제한의 원인과 유형도 인구주택총조사가 오히려 더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그리고 지역 수준의 활동장애 유병율을 산출하는데 있어 더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방대한 샘플의 크기와 활동장애에 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는 비록 그 목적이 특별히 보건과 활동장애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노인들의 활동장애율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함께 인구주택총조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거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65-74세 노인들의 ADL과 IADL 유병율이 본 연구에서는 남녀를 나누지 않더라도 약 10%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활동장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기 시작한 것이 2005년이 처음이므로 발견된 유병율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이 조사가 더욱 크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샘플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활동제한에 관한 결과와의 큰 차이는 보건학계와 관련 부처에서 진지하게 검증해 봐야할 사안이라 사료된다.

비록 유병율 자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 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활동제한의 분포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결과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거의 대부분의 활동제한의 원인과 유형에서 더 고통을 겪고 있고,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활동장애 유병율이 낮으며, 특히 미혼인 경우 모든 활동제한 유형과 원인에서 가장 높은 유병율을 보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들의 활동장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남자들은 교육수준과 활동장애율이 대부분 역의 관계를 보였지만, 여자들은 가장 낮은 교육수준을 제외하면 다른 교육수준 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비록 selection효과가 매우 크겠지만, 직업적 위세도 거의 모든 활동장애 유형과 원인에서 유병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 노인인구가 활동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비록 본 연구가 횡단면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인과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추론할 때 연구에서 고려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장애의 발생과 유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현재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 인구집단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을 시행하여야 함도 제시하는 결과이다.

지역으로 보았을 때 비록 본 연구가 연령을 모두 보정한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대부분의 활동장애에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큰 시도의 장애 유병율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 유병율을 보였는데,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제로 이들 지역에 활동장애를 가진 노인이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의 경제발전과 복지제도 및 시설개선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주된 수혜자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다른 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활동장애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역이 지역 내 인구/사회적 특성이 노인들의 활동장애를 어떻게 분포시키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비록 수가 많지 않더라도 조금 더 많은 건강 혹은 보건관련 질문들이 인구주택총조사 설

문에 포함된다면 앞으로 더욱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 5 장 결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국가와 사회에서 저출산현상을 사회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려고 부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고령 인구의 부양 때문이다. 만일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없다면 지금과 같이 비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용인의 수준이 더욱 높았을 것이다. 계속 증가하게 될 평균수명과 이 증가속도에 못 미치는 건강기대수명은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인구의 활동을 제약하여 노인을 독립적이고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활동제약의 유형과 원인에 대하여 사회적 분포를 확인하고 고찰하였다. 전체 국민의 2%에 달하는 큰 샘플을 확보한 인구주택총조사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동장애와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간의 관계에 대한 것들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전국적 수준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가 실시되었고 국내의 다른 어떠한 조사도 시도별 대표성 있는 유별을 차이를 발표해오지 못해온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중앙의 보건 당국은 물론 특히 지방정부의 노인 복지와 보건정책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젊은 연령대의 인구보다는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노인인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들이 얼마나 노동참여를 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의 취로사업과 같은 노동의 강도와 질이 매우 낮은 노동참여가 아니라 그들이 40-50대를 지나면서 축적해 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노동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의 최우선 결정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노인 인구의 건강이고 활동제약의 가능성을 줄여가는 일이다. 이는 노인인구의 노동참여는 물론 활동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의료/복지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져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남자 23% 여자 32%가 다양한 유형의 신체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활동에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남자 15% 여자 20%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장애 발병 시기를 늦추고 유병율을 낮추는 일에 더욱 많은 사회적 관심과 자원의 투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2% 샘플자료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제 6 장 참고문헌

- 윤병준, 김정근. 1996. “장애제거 기대여명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 제19권 123-137.
- 권영훈, 이종규, 도영경, 윤석준, 김창엽, 김용익, 신영수. 2002. “국민건강면접조사를 이용한 한국인의 장애보정기대여명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제35권 331-339.
- 장숙량. 2006. “Findings from Pilot data on Health.” Unpublished Report,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The second Advisory Panel Meeting. October 12-13, 2006. Sonoma. California.

7

가구 구성 및 주거 실태를 통해 본 주택 공급의 재편 방안

장 세 훈
(동아대학교)

〈표 목차〉

<표 1> 인구 및 가구 변동 추이: 1980-2005년	210
<표 2> 가구 구성 및 가족형태: 2000-2005년	213
<표 3> 1인 가구의 변화 추이: 1980-2005년	213
<표 4> 노인 가구의 변화 추이: 1980-2005년	215
<표 5> 한 부모 가구의 변화 추이: 1980-2005년	216
<표 6> 전국의 가구별 주거 유형: 1980-2005년	217
<표 7> 가구 형태별 주거 유형: 1980년, 2005년 비교	218
<표 8> 주거공간의 규모 변화: 1980-2005년	219
<표 9> 주거빈곤 가구의 추이: 1980-2005년	219
<표 10> 일반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1980-2005년	221
<표 11> 타지 주택 소유 가구의 구성: 2005년	224
<표 12> 연평균 주택 공급 추이: 1971-2005년	226
<표 13> 주택 관련 주요 지표 추이: 1970-2005년	227
<표 14> 전국의 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 1980-2005년	228
<표 15> 주택 규모의 변화 추이: 1980-2005년	229
<표 16> 주택 유형별 공가 발생의 원인: 2005년	232

(그림 목차)

(그림 1)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 1980-2005년	211
(그림 2) 세대별 가구 구성: 1980-2005년	212
(그림 3) 전국의 일반가구 및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2005년	214
(그림 4) 1인 가구의 도·농별 인구 분포: 2005년	215
(그림 5)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1980-2005년	222
(그림 6) 노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1980-2005년	223
(그림 7) 한 부모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1980-2005년	224

가구 구성 및 주거 실태를 통해 본 주택 공급의 재편 방안

장세훈 (동아대)

제 1 장 문제제기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던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에 직면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농으로 대변되는 대규모의 인구이동에서 빚어진 주택 수급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주거 불안 문제는 도시문제의 관건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공급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해 왔다. 특히 주거 위기가 극심했던 1980년대 후반부터 주택 200만호 건설을 필두로 신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함으로써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그 결과 2005년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5.9%에 달하는 등,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아파트로 상징되는 근대적 주거공간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주거 규모 및 시설 또한 크게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주거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 양상은 우리 사회에서 주택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또 주택 재고 물량의 부족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이 크게 완화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택(House)이라는 양적인 차원, 물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Housing)라는 질적인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Turner, 1976; 1979), 이러한 낙관적 전망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총량적인 주택 수요(House Demands)는 일정 정도 충족시켜 주었지만, 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요구, 즉 주거 소요(Housing Needs)에 제대로 부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택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던 그간의 노력들을 되돌아보면, 이 같은 논의가 결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님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주어진 기한 내에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이를 위해 민간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방안은 무엇인가, 주택 건설을 통해 안정된 적정 수익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등과 같이 주택 공급의 주체인 정부와 기업의 관점에서 신규 주택이 건설되고 공급되어 왔다. 그 반면에 주택 수요의 주체인 집 없는 서민의 입장은 제대로 대변되지

도 못했고, 또 거의 고려되지도 않았다(손경환, 2005). 극심한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주택은 짓기도 전에 팔려 나가는 ‘선분양(先分讓)’의 대상이어서,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총량적 수준에서 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수요를 무시한 무분별한 주택 공급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촉발해서 주택 자원의 ‘사회적 낭비’, 이른바 ‘가치잠식(Devaluation)’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는 주택 공급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며, 보다 효과적인 주택 분배 방식은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할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택 소요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구 구성이 크게 바뀌어 과거와 같은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주택의 대량 공급, 대량 소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었다. 한부모 가정과 1인 단독 가구, 노인 가구 등과 같이 과거에는 예외적인 가구 형태로 여겨지던 가구들이 크게 늘어나 ‘부모+자녀’로 구성된 ‘표준 가구’를 더 이상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여길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최근 확산되는 가구 유형들이 불안정하고 취약한 형태의 가구들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서도 주거복지를 고려하는 등 좀 더 많은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가구 구성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고려해서 주택 소요 계층이 누구인가를 판별해 내는 한편,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주택 분배 방식은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가구 구성 및 주거 실태의 변화 추이와 주택 공급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주택의 수요와 공급 간의 조응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가구 형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2장), 이에 따른 가구별 주거 및 주택소유 실태를 점검한다(3장). 다음으로 4장에서는 주택 재고 현황이 어떠하고, 신규 주택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고, 5장에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구 구성의 변화와 주택 공급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가구-주택의 부조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상의 연구를 위해 이 글에서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삼고, 기타 주택과 관련한 총량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 시기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25년간으로 한정한다. 이는 그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가구 구성이 1980년대 이후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고,¹⁾ 정부가 주택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도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같은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가구와 주택 간의 부조응 문제가 발생하

1) 이는 가구의 구분 기준이 1980년을 기점으로 변경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 혈연 관계를 중시한 ‘보통가구’ 개념에 기초했다면, 1980년 이후에는 비혈연관계의 구성원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일반가구’ 개념이 사용되었다(정의철, 2002: 29). 이는 가구 구성의 변화를 개념적으로 수용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이것이 단순한 주택 재고 물량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주택 문제를 낳기 때문에, 분석 시기를 이 시기로 국한시켜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 2 장 가구의 변화 추이

가구는 흔히 “취사와 기타 기본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단위”를 가리킨다(UN, 1998). 이에 근거해서 통계청(2006)에서는 가구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총가구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모든 형태의 집단 생활이 포함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이와 구분해서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가구주 및 가족, 친척 등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를 ‘보통가구’로 정의했고, 대다수 연구가 보통가구 개념을 중심으로 가구 구성을 살펴왔다.

그러나 보통가구 개념은 지나치게 혈연을 강조한 나머지 그 구성이 다양해지고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구성되는 현대 사회의 가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1980년부터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5명 이하의 사람들이 집단시설 이외의 거처에서 가구주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서 1인 또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모여 취침, 취사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일반가구’로 규정하고,2) 이에 근거해서 가구의 구성 및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통계청, 2006). 따라서 이하의 논의에서도 일반가구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가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인구 및 가구 변동 추이: 1980-2005년

(단위: 천명, 천가구, %)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총인구 (증가율)	37,436 (1.53)	40,448 (1.56)	43,411 (1.42)	44,609 (0.55)	46,136 (0.68)	47,279 (0.49)
일반가구 (증가율)	7,969 (3.69)	9,571 (3.73)	11,355 (3.48)	12,958 (2.68)	14,312 (2.01)	15,887 (2.11)
평균가구원	4.54	4.09	3.71	3.34	3.12	2.88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우리 사회는 전쟁, 해외 이주 등의 일시적인 사회적 격변을 제외하고는 20세기 내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표 1>에서 보듯이, 1980년 이후에도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는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980년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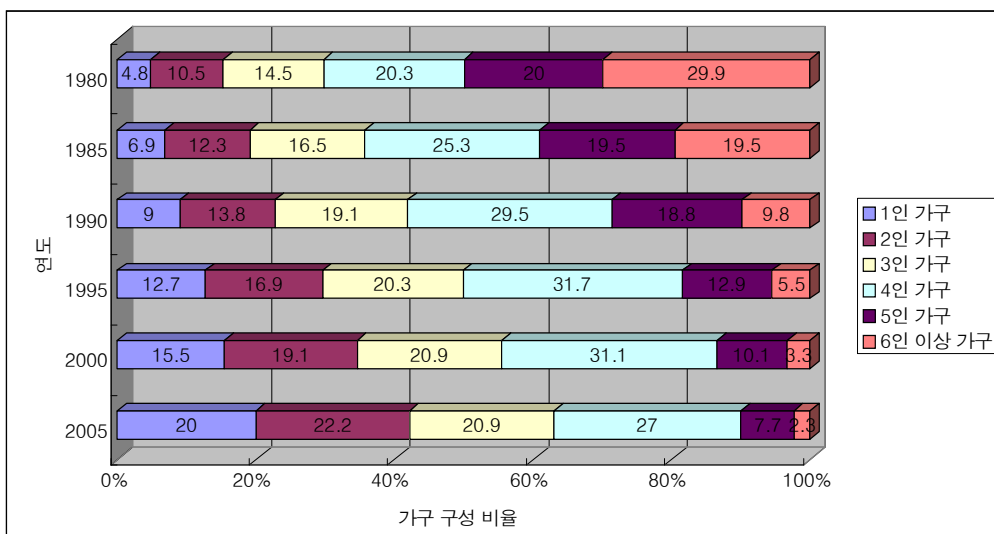
2) 구체적으로 일반가구에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가 포함된다(통계청, 2006).

반기 1.5%에서 2000년 전반기 0.5%로 격감하는 등, 인구 증가 추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일반가구도 꾸준히 증가해서, 1980년 797만여 가구였던 것이 2005년 1,589만여 가구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은 총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반면에, 일반가구의 그것은 그보다 훨씬 완만한 속도로 감소해서 2000년대 전반기에도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구 규모의 축소가 인구 증가 추세의 둔화를 일정 정도 상쇄하는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균 가구원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 4.54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4명 이하로 감소했고, 2005년에는 3명 이하로 까지 줄어들었다. 따라서 인구 증가 추세가 빠르게 둔화되더라도 가구의 증가 추세는 그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가구원 수별로 일반가구를 구분해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림 1)을 보면, 1인 가구는 1980년 4.8%에서 2005년 20.0%로 크게 늘어난 반면에, 6인 이상 가구는 29.9%에서 3.3%로 격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올수록 그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2000-2005년 사이에 1인 가구는 42.5%나 증가한 데 반해, 5인 이상 가구는 17.7% 감소했다. 전체적으로는 1-2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가구는 꾸준히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5인 이상 가구는 격감하는 반면에, 3-4인 가구는 점증해 오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급속한 사회변동 과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리적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가구 규모가 단축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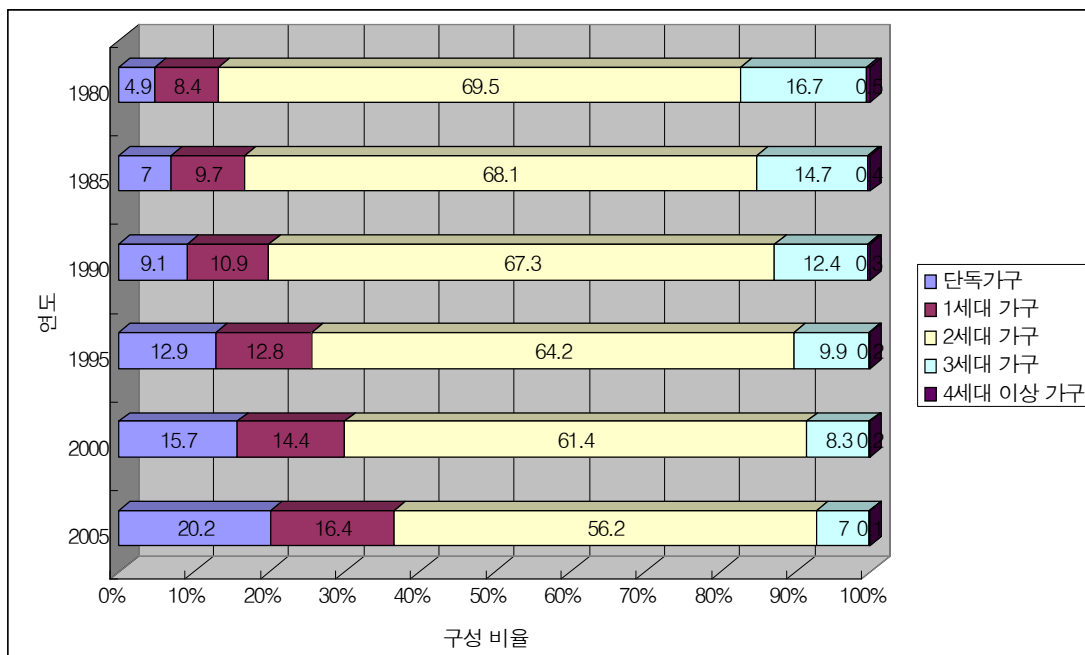
(그림 1)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 1980-2005년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가구 규모가 이처럼 축소되면서, 가구의 세대 구성도 과거에 비해 단순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1세대 가구가 앞서 살펴본 1인 가구에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1980년 8.4%였던 것이 2005년 16.4%로 늘어났다. 그 반면에 4세대 이상 가구는 0.5% 수준이던 것이 0.1% 수준으로 줄어 거의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3세대 가구는 16.7%에서 7.0%로 격감했다. 다만 근대적 가족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던 2세대 가구는 69.5%에서 56.2%로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그림 2) 참조). 이 같은 소가족화 경향은 출산율의 감소, 핵가족화 추세,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른 결과이다(권태환·박영진, 1995; 김정석, 2002: 252).

(그림 2) 세대별 가구 구성: 1980-2005년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이처럼 세대 구성이 단순해지지만, 각 세대별 내부구성은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과거에 비해 세대 구성이 안정적인 가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예컨대 2세대 가구 중 가장 대표적인 가족 형태가 ‘부부+자녀’ 가구인데, 이처럼 안정적인 가족 형태는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표 2>를 보면, 2세대 가구 중에서 ‘부부+자녀’ 가구는 2000년 48.7%였던 것이 2005년에는 42.8%로 감소하고, 편부, 편모로 이루어진 한 부모 가구가 7.9%에서 8.7%로, 또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조손 가구가 0.3%에서 0.4%로 늘어났다. 이는 최근에 올수록 이혼, 사별 등이 늘어나 가족 해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불안정한 가구 형태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2> 가구 구성 및 가족형태: 2000-2005년

(단위: 천가구, %)

가구 구분	2000년		2005년	
	1인 가구	2,224	15.7	3,171
1세대 가구	2,034	14.4	2,575	16.4
2세대 가구	8,696	61.4	8,807	56.2
부부+자녀	(6,892)	(48.7)	(6,702)	(42.8)
한부모 가구	(1,124)	(7.9)	(1,370)	(8.7)
조손가구	(45)	(0.3)	(58)	(0.4)
3세대 가구	1,176	8.3	1,093	7.0
4세대 가구	22	0.2	16	0.1
합계(혈연가구)	14,152	100.0	15,662	100.0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그렇다면 이처럼 불안정한 가구 형태, 이른바 ‘취약가구’들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이 같은 취약가구로는 흔히 1인 가구, 노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등을 손꼽고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표 3> 1인 가구의 변화 추이: 1980-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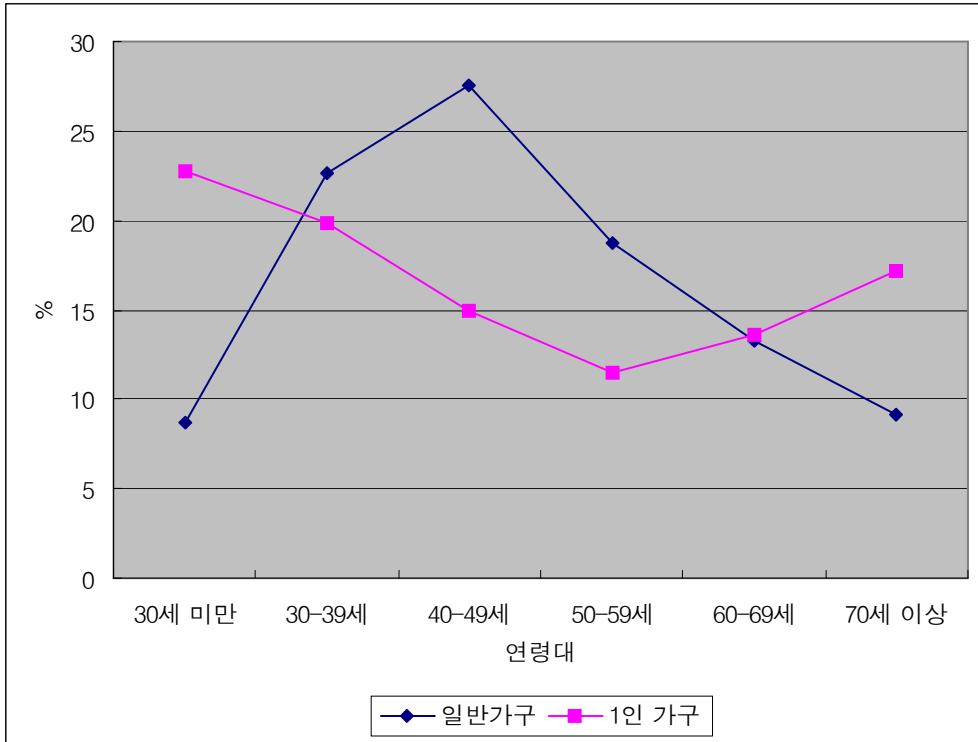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

연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일반가구(A)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동 지역(B)	4,670	6,331	8,463	10,032	11,230	12,745
읍·면 지역(C)	3,299	3,240	2,892	2,926	3,082	3,142
1인 가구(D)	383	661	1,021	1,642	2,224	3,171
D/A(%)	(4.8)	(6.9)	(9.0)	(12.7)	(15.5)	(20.0)
동 지역(E)	220	428	723	1,185	1,642	2,440
E/D(%)	(57.5)	(64.7)	(70.8)	(72.2)	(73.8)	(76.9)
읍·면 지역(F)	163	233	298	457	582	731
E/B(%)	(4.7)	(6.8)	(8.5)	(11.8)	(14.6)	(19.1)
F/C(%)	(4.9)	(7.2)	(10.3)	(15.6)	(18.9)	(23.3)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먼저 1인 가구를 살펴보면, 1980년 38만여 가구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2005년에는 약 317만 가구로 4반세기만에 8배 이상 증가했고,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8%에서 20.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표 3> 참조). 이는 1인 가구가 더 이상 예외적인 가구가 아니라 독자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그림 3) 전국의 일반가구 및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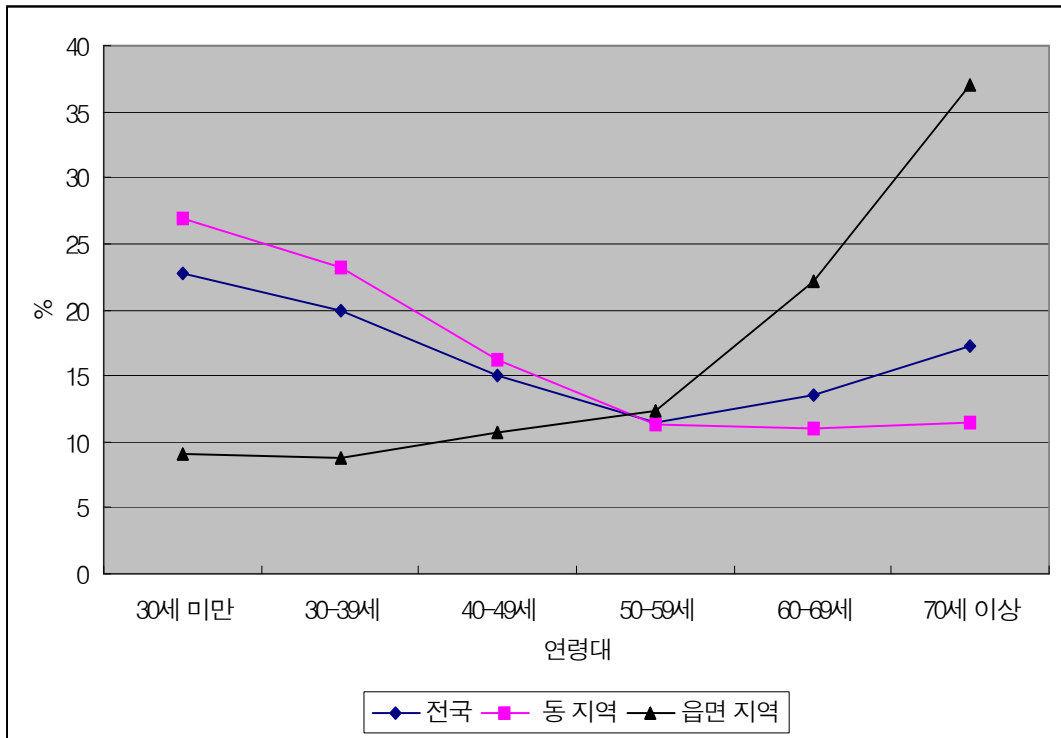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다음으로 1인 가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30세 미만의 청년층에서 많이 몰려 있고, 중·장년층에서 서서히 감소하다가 70세 이상 고령층에 다시 몰리는 U자형 분포도를 그리고 있다. 이는 30-50대의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고 30대 미만의 청년층과 60대 이상의 노령층 비중이 낮아 역U자형 분포를 그리는 일반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난다(그림 3) 참조).

그런데 1인 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농촌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에서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 동 지역의 1인 가구는 1980년 22만여 명에서 2005년 244만여 명으로 늘어났는데, 읍·면 지역에서는 16만여 명에서 73만여 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도시 지역에 1인 가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도·농 지역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가구 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증가율이 농촌 지역보다 높지만 일반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2005년간 4.7%에서 19.1%로 늘어난 데 반해, 농촌 지역에서는 가구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1인 가구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비중이 4.9%에서 23.3%로 늘어났다(<표 3> 참조).

(그림 4) 1인 가구의 도·농별 인구 분포: 2005년



자료: 통계청,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그렇다면 도시와 농촌의 1인 가구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는 2005년 현재 1인 가구의 연령별 구성에 대한 도·농간 비교에서 잘 드러난다. 동 지역의 경우에는 30세 미만의 청년층에 전체의 1/4 이상이 몰려있는 반면에, 읍·면 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와 달리 70세 이상 고령인구층의 비중을 보면, 동 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11.4%에 불과한데, 읍·면 지역에서는 이들의 비중이 37.1%에 달하고 있다(<그림 4> 참조). 이를 통해 우리는 1인 가구의 전국적 연령별 분포가 보여주는 U자형이 결과적으로는 청년층 1인 가구는 도시 지역에, 고령층 1인 가구는 농촌 지역에 몰려 있음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4> 노인 가구의 변화 추이: 1980-2005년

(단위: %)

가구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노인 가구 비중	5.9	5.8	8.5	9.7	12.2	17.9
도시 노인 가구 비중	3.8	4.0	5.6	6.4	8.4	11.7
농촌 노인 가구 비중	8.9	9.3	17.1	20.6	25.2	36.1

주) 노인 가구 = 노인 단독가구 + 노인 부부 가구.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다음으로 노인 가구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 가구의 비중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표 4>에 따르면, 1980년에 5.9%에 지나지 않았던 노인 가구가 2005년에는 17.9%로 급증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청·장년층이 도시로 떠나고 노인 인구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꾸러진 농촌 지역에서 보다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동부 지역의 노인 가구는 1980-2005년간 3.8%에서 11.7%로 증가한 데 반해, 읍·면부 지역 노인 가구는 같은 기간 동안 8.9%에서 36.1%로 증가했다(<표 4> 참조).

<표 5> 한 부모 가구의 변화 추이: 1980-2005년

(단위: 천가구, %)

가구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일반 가구(A)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한부모 가구(B)	744	848	889	960	1,124	1,370
B/A(%)	9.33	8.86	7.83	7.41	7.85	8.62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마지막으로 한 부모 가구를 살펴보자. 한 부모 가구는 다른 취약 가구들에 비교할 때, 그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동안 1980년 한 부모 가구의 비중이 9.3%로 가장 높았는데, 점차 줄어들어 1995년 7.4%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정이 나빠져 가족 해체 현상이 늘어나면서, 한 부모 가구의 비중도 커지기 시작해서 2000년에는 7.9%, 2005년에는 8.6%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제 3 장 가구별 주거 및 주택 점유 실태

1절 가구별 주거 실태

지난 25년간 가구 규모 및 구성과 관련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들 가구의 주거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먼저 <표 6>에서 거처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거 유형이 크게 변모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표 6> 전국의 가구별 주거 유형: 1980-2005년

(단위: 천호, %)

주거 유형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단독주택	7,107 (89.7)	7,838 (82.2)	8,506 (75.3)	7,716 (59.8)	7,103 (49.9)	7,064 (45.1)
아파트	391 (4.9)	863 (9.0)	1,678 (14.9)	3,478 (26.9)	5,238 (36.8)	6,629 (42.3)
연립/다세대 주택	205 (2.6)	442 (4.6)	729 (6.4)	1,139 (8.8)	1,294 (9.1)	1,695 (10.8)
영업용건물 내 주택	224 (2.8)	393 (4.1)	388 (3.4)	576 (4.5)	593 (4.2)	282 (1.8)
주택 합계	7,926 (100.0)	9,536 (100.0)	11,301 (100.0)	12,909 (100.0)	14,227 (100.0)	15,670 (100.0)
주택 이외의 거처	43	35,820	54	49	84	217
거처 총계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1980년에는 5%도 안되는 가구만이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1985년에는 그 비율이 10%에 육박했고, 1995년에는 전체 가구의 1/4 이상이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전체 가구의 2/5 이상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에 반해 1980년 전체 가구의 대다수가 단독주택에서 생활했는데, 1990년에는 그 비중이 3/4로 줄었고, 2000년에 이미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2005년에는 다시 45%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그 외에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도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2005년에도 10% 수준에 머물러 지배적인 주거 유형으로 자리 잡지는 못한 실정이다.

<표 7> 가구 형태별 주거 유형: 1980년, 2005년 비교

(단위: %)

1980년	일반가구	1인 가구	노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단독주택	89.7	86.2	90.8	91.1
아파트	4.9	4.4	2.9	2.8
연립/다세대 주택	2.6	1.8	2.4	2.4
영업용건물 내 주택	2.8	7.6	3.9	3.7
합계	100.0	100.0	100.0	100.0

2005년	일반가구	1인 가구	노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단독주택	45.1	67.6	73.6	64.8
아파트	42.3	20.1	18.9	24.1
연립/다세대 주택	10.8	6.6	5.8	8.7
영업용건물 내 주택	1.8	5.7	1.7	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1980,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서구 선진국에서는 빈곤층이나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중하층용 주택으로 낙인찍힌 아파트가 우리 사회에서는 역설적이게도 근대적 생활양식의 상징이자 안락하고 쾌적한 중산층용 주거공간으로 받아들여져 주거 선호 1순위로 자리 잡으면서, 크게 확산될 수 있었다(박철수, 2006; 천현숙, 2002). 또한 만성적인 주택 과부족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대량의 주택 공급이 필요했던 정부로서도 대규모 단지 형태로 주택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에, 아파트 중심의 주거생활 확산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단지형 아파트가 공급된 지 40여년 만에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아파트 공화국’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줄레조, 2007).

아파트가 극소수 중상층의 주거 공간이었던 1980년대에는 가구 형태에 따른 주거 유형의 차이를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즉 1980년에는 1인 가구, 노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등과 같은 취약 가구나 일반 가구 모두 90% 가까이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가 중산층의 보편적 주거로 자리 잡은 최근에는 이러한 양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반 가구에서는 단독주택 거주 가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에, 취약가구에서는 적게는 해당 가구의 2/3, 많게는 3/4이 여전히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아파트 거주 가구가 20% 수준을 맴돌고 있다(<표 7> 참조). 이는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의 상당수가 노령층이어서 전통적인 단독주택 거주를 선호하는 한편으

로,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만한 경제적 여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었지만, 그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미미해서 취약 가구 가운데 그 수혜 대상이 적은 탓도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가 보편적 주거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취약 가구는 이로부터 소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8> 주거공간의 규모 변화: 1980-2005년

(단위: 개, 명)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가구 당 평균 사용 방 수(개)	2.2	2.2	2.5	3.1	3.4	3.6
방 당 평균 가구원 수(명)	2.10	1.87	1.48	1.08	0.92	0.81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그렇다면 주거공간의 규모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먼저 가구 당 평균 사용 방수를 보면, 1980년 한 가구가 평균 2.2개의 방을 사용했는데, 2005년에는 3.6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의 성장으로 일반 국민의 소비 수준이 향상되어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축 주택의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단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방 당 평균 가구원 수에서도 1980년 2.1명에서 2005년 0.8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표 8> 참조). 이는 2명이 방 한 칸을 나눠 쓰던 시절에서 1명이 한 방을 사용하던 시기를 거쳐 이제는 가구원 1명이 방 한 칸 이상을 사용하는 시대로 이행해 왔음을 보여준다. 신축 주택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및 가구 분할의 진전으로 가구 당 평균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서, 가구 당 평균 사용 방 수의 증가 속도보다 방 당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 속도가 더욱 빠르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표 9> 주거빈곤 가구의 추이: 1980-2005년

(단위: 천 가구, %)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일반가구(A)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방수 기준 주거빈곤 가구(B)	4,686	4,917	2,770	1,335	372	170
(B/A)	(58.8)	(51.4)	(24.4)	(10.3)	(2.6)	(1.1)
3인 이상 단칸방 거주 가구(C)	1,785	1,952	1,408	388	100	56
(C/A)	(22.4)	(20.4)	(12.4)	(3.0)	(0.7)	(0.4)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이 같은 주거공간의 확장은 중산층 이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주거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주거빈곤 가구들도 협소한 주거공간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에서 서서히 벗어나, 주거빈곤 가구 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9>에서 방수를 기준으로 주거빈곤 정도를 측정하는 건설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에 근거해서 주거빈곤 가구의 규모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살펴본 결과,³⁾ 1985년까지도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주거면적과 관련해서 주거빈곤 가구 범주에 속했는데, 그 비중은 1990년 1/4 이하로 떨어졌고, 1995년에는 1/10 수준으로, 그리고 2005년에는 총 가구의 1.1%인 17만 가구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또 가구원이 3명 이상인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하는 비중을 살펴보다도, 1980년에는 전체 가구의 22.4%인 179만여 가구가 이처럼 곤궁한 처지에 놓였는데, 2005년에는 총 가구의 채 0.5%도 되지 않는 6만여 가구만이 이 범주에 속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25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의 대량 공급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 근대적 주거양식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주거면적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주거빈곤 가구의 비중도 격감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주거문제가 완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절 가구별 주택 점유 실태

주택의 자가소유율, 즉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은 1990년의 49.9%를 정점으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1990년 이전에는 광범위한 도시화 과정에서 이농민들이 도시로 대거 이입했지만, 이들은 도시 지역의 높은 땅값이 반영된 주택 가격을 감당할 만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도시 지역에는 이미 그 이전부터 주택 과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고, 새로운 이농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의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도시화가 급진전되던 1980년대까지는 자가소유율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내 집 마련에 실패한 대다수의 이농민들은 셋집을 전전하며,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을 계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가계가 보다 윤택해지면서, 이들은 본격적으로 자가소유에 나설 경제적 여력을 갖추 수 있었다. 또한 호황

3) 최저주거기준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2005) 참조.

4) 그러나 2005년 현재 전국적으로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구가 21,561세대에 달하고, 도시 지역에만 15,314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통계청, 2007), 집이 없어 떠도는 노숙자(홈리스)도 대도시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의 시설이나 구조·성능,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서 주거빈곤층을 판별한다면 주거빈곤층의 절대 수는 더욱 불어난다(윤주현, 2002 참조). 따라서 그 절대 수는 크게 줄었지만 주거빈곤 문제가 우리 사회에 상존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수치 변화에 기대어 선불리 주거빈곤의 해소를 운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면에서 풀린 대규모 유희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하자,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주택가격 폭등이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욕구는 더욱 강렬해질 수밖에 없었다. 또 집값 상승으로 시 외곽 변두리로 내몰린 무주택 서민 가운데 수십 명이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 채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 대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에 앞장서게 되었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90; 한상진·한상연, 1990). 이처럼 주택 신규 공급 증대, 무주택 서민의 경제력 증진, 주택가격 폭등이라는 요인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자가소유율을 빠른 속도로 반등시킬 수 있었다.5)

<표 10> 일반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1980-2005년

(단위: %)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자가	4,672 (58.6)	5,127 (53.6)	5,667 (49.9)	6,910 (53.3)	7,753 (54.2)	8,828 (55.6)
전세	1,904 (23.9)	2,202 (23.0)	3,157 (27.8)	3,845 (29.7)	4,040 (28.2)	3,557 (22.4)
월세	1,231 (15.5)	1,892 (19.8)	2,173 (19.1)	1,876 (14.5)	2,113 (14.8)	3,012 (19.0)
무상 및 기타	162 (2.0)	350 (3.7)	358 (3.2)	328 (2.5)	406 (2.8)	490 (3.1)
합계	7,969 (100.0)	9,571 (100.0)	11,355 (100.0)	12,959 (100.0)	14,312 (100.0)	15,887 (100.0)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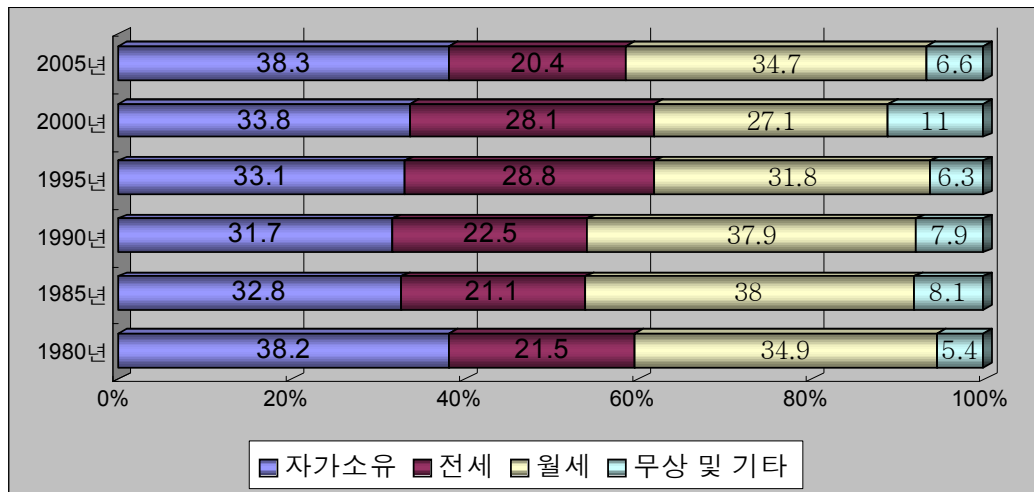
그렇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경제적 안정을 대표하던 중산층의 몰락 현상이 나타나고(신광영, 2003), 무주택 서민의 경우에는 고용 불안으로 주택금융 지원을 통한 장기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면서, 자가소유율의 상승 속도는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전반기 49.9%에서 53.3%로 3.4% 증가했던 자가소유율은 1995-2005년의 10년간 2.3% 증가하는 데 그쳐, 2005년의 자가소유율은 아직도 1980년의 그것에도 못 미치는 55.6%에 머물고 있다.

주택 점유 실태의 변화 추이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현상은 임차가구의 전세·월세 비율이다. 전세 가구가 1985년 23%에서 1995년 29.7%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5) 그러나 당시의 자가소유율 증가는 도시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농어촌 지역은 오히려 자가소유율이 감소하고 임차가구가 늘어났다. 이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이 주로 도시에 집중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김재익, 2002: 88)

1990년대 후반 일시 정체 상태를 겪다가 2005년 22.4%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월세 가구는 1980년 15.5%에서 출발해서 1985, 1990년 20% 수준으로 올랐다가 1995, 2000년에 다시 15% 이하로 떨어지고 2005년 또 다시 19%로 증가하는 등 물리코스트와 같이 등락을 거듭해 왔다. 그런데 최근의 전세 가구 감소, 월세 가구 증가 현상은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가옥주가 월세 입주 가구를 선호하는데다가, 임차가구 내에서도 늘어난 1인 가구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등, 가옥주와 세입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저리의 이자율과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우리 사회의 독특한 임대차 관계로 자리 잡았던 전세 제도는 갈수록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1980-2005년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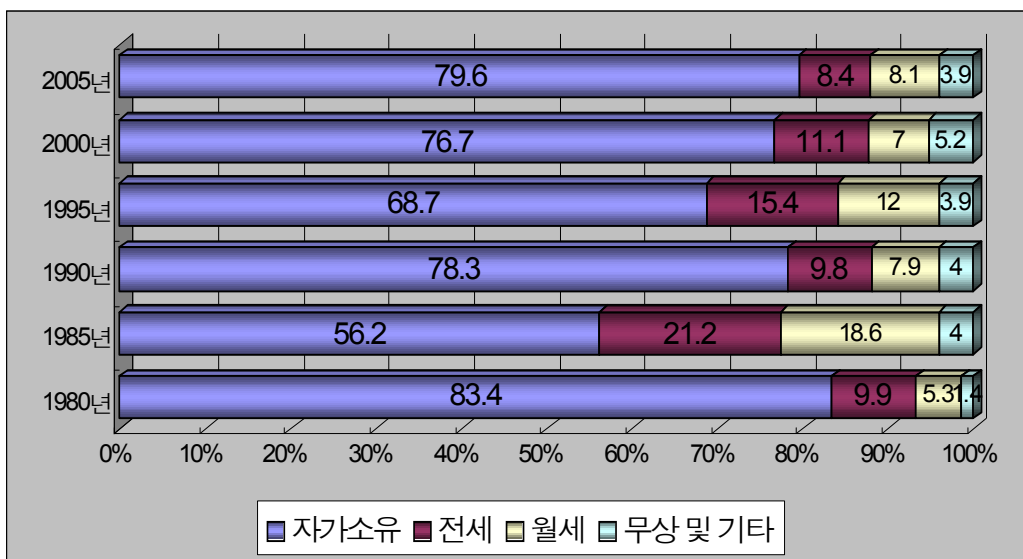
그렇다면 취약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점유 형태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 먼저 1인 가구를 살펴보자(그림 5 참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자가소유 비율이 30%대에 머물러 50%대를 맴도는 일반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 자산의 규모가 크고, 이러한 자산을 대부분 내 집 마련에 쏟아 붓기 때문에, 가구주 연령과 자가소유율은 서로 일정한 조응 관계에 있다(구본영, 1989; 김태일, 2000). 따라서 1인 가구의 상당수가 20-30대의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그림 4) 참조), 1인 가구의 자가소유율이 일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1인 가구의 임차 가구 중에서 전세 가구의 비중은 일반 가구와 비슷한 수준인데, 월세 가구의 비중은 30%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어, 월세 가구가 10%대에 머무는 일반 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유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 1인 가구들이 목돈을 필요로 하는 전세 형태보다 소액을 분할해서 지불하는 월세 형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1인 가구의 가구 규모가 단출하고 이주가 빈번하기 때문에, 정주를 필요로 하는 자가소유 방식을 덜 선호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에 올수록 1인 가구의 자가소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일반 가구의 주택 점유 추이와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반 가구의 변동 추이를 반영한 탓이지만, 노령화로 인해 1인 가구 내 노인 가구의 비중이 커지면서 농촌에 정주하며 낡은 집을 소유한 이들 가구가 자가소유 비중을 높이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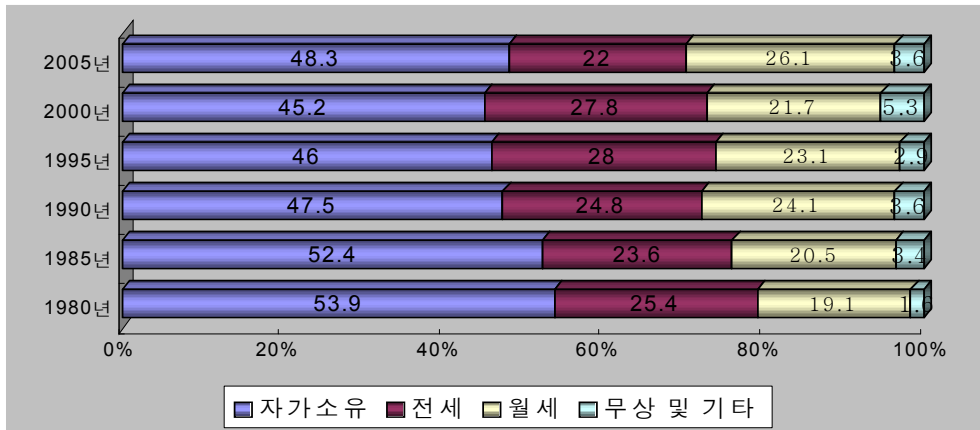
(그림 6) 노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1980-2005년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이러한 사실은 또 다른 취약 가구인 65세 노인들로 구성된 노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에는 노인 가구의 자가소유율이 83%에 달했고, 그 뒤로도 1985년을 제외하고는 70%대를 유지하는 등, 자가소유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이들은 정주형 생활을 하고 매월 임대료를 부담할 만한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월세 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그림 6) 참조). 이는 노인 가구가 주택 보유를 통해 자산 증식을 꾀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적어도 그 절반 가까이가 주택소유를 통해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의 주된 주거 문제는 주택 소유 문제보다는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낡고 허름한 건물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주거시설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윤주현 외, 2004).

(그림 7) 한 부모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1980-2005년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한 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1인 가구보다 주거 사정이 다소 낮지만, 일반 가구보다 자가소유 비중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1980년대까지는 일반 가구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다가, 1990년대부터 주거 사정이 악화되어 자가소유율에서의 차이가 벌어진 채 좁혀지지 않고, 월세 가구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7) 참조). 이는 한 부모 가구라는 취약한 가구 구성이 주택 보유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어느 정도일까? 유일하게 2005년 센서스에서 ‘타지 주택 소유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가구의 11.3%가 현재의 거주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때 자가소유 가구보다 전세가구나 무상 및 기타 보유 가구에서 타지 주택 소유의 비중이 더 높다는 사실이 흥미롭다(<표 11> 참조). 자가소유 중 타지 주택 소유 가구는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한 자산가, 또는 투기적 주택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타지 주택을 소유한 전세 가구는 취업, 교육 등의 이유로 내 집을 임대하고 현 거주지에 임차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주택 보유 형태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이다.

<표 11> 타지 주택 소유 가구의 구성: 2005년

(단위: 천가구, %)

가구 유형	자가	전세	월세	무상 및 기타	계
일반가구 중 타 주택 소유 (비율) [점유유형 내 비중]	1,047 (58.4) [11.9]	505 (28.2) [14.2]	163 (9.1) [5.4]	79 (4.4) [16.1]	1,794 (100.0) [11.3]
1인 가구 중 타 주택 소유	(42.4) [7.3]	(20.4) [6.6]	(23.0) [4.4]	(14.2) [14.3]	(100.0) [6.6]
노인 가구 중 타 주택 소유	(82.1) [7.3]	(9.9) [8.3]	(4.0) [3.5]	(4.0) [7.2]	(100.0) [7.1]
한 부모 가구 중 타 주택 소유	(63.2) [6.2]	(20.7) [7.4]	(11.6) [2.8]	(4.5) [5.2]	(100.0) [5.5]

자료: 통계청,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그런데 취약 가구들의 타지 주택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가구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표 11>에 따르면, 자가소유율이 비교적 높은 노인 가구가 일반 가구의 2/3 수준이고, 1인 가구나 한 부모 가구는 절반 수준을 맴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구 형태가 불안정한 취약 가구의 일부가 간신히 내 집을 장만할 수는 있지만, 일반 가구에서와 같이 주택 소유를 통한 자산 증식이나 ‘소유 주택의 임대 후 임차’에 나서기는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제 4 장 주택 재고 및 공급 추이

이상에서 주택 수요의 주체가 되는 가구의 변화 추이와 이들의 주거 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주택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1절 주택 공급 추이

앞서도 살펴보았다시피,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이 지속되던 ‘개발연대’에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이농민의 대대적인 유입으로 주택의 과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산꼭대기에서부터 하천변까지 빈 터만 있으면 우후죽순 격으로 지어져 대도시 전역을 뒤덮은 무허가판자집이 바로 그 증거였다. 정부 주도의 판자집 철거 조치가 강력하게 시행되었지만, 주택의 절대적 부족 상태에서 ‘철거-재축’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었다(김형국·하성규, 1998). 따라서 주거빈곤의 문제는 해소되기커녕 판자집 철거로 인한 주거불안만 키워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양상마저 보였다.

<표 12> 연평균 주택 공급 추이: 1971-2005년

(단위: 천호)

연도	1971-1975	1976-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연평균 신축 주택	144.2	227.4	203.2	412.2	625.2	466.6	541.8

자료: 건설교통부, 각년도, 『건설교통통계연보』.

특히 1980년대까지도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으로 주택 공급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에, 주택 신축이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를 따라잡기를 기대할 수 없었다. 실제로 GDP 대비 주택투자 규모는 1980년대 중반까지 4-5% 수준을 넘나들었는데, 국민경제 규모가 빈약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 건설 분야에 최소한의 투자만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1970년대 전반기에 연평균 약 14만호, 1970년대 후반기부터 약 20만호의 주택이 신축되었지만, 이는 도시의 폭발적인 가구 증가 추세에 비하면 ‘코끼리에 비스킷’, 또는 ‘언 발에 오줌 누기’였다. 따라서 1970년 78.2%였던 주택보급률은 1980년 71.2%, 1985년 69.8%까지 떨어졌다(<표 12>와 <표 13> 참조).

주택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무관심은 오래 가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에 따른 경기 과열과 유희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에 따른 투기 열풍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어, 주거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크게 고조되었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불안과 빈곤층의 주거빈곤 문제를 완화할 목적으로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한편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택 투자를 잠재우고, 다른 한편으로 영세민 대상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빈곤 문제에 대처하고자 했다(한상진·한상연, 1990).

<표 13> 주택 관련 주요 지표 추이: 1970-2005년

(단위: 천호, %)

연도	재고주택 (천호)	신축주택 (천호)	주택보급률 (%)	주택투자/GDP (%)	인구 천명 당 주택건설 호수
1970	4,360	115	78.2	4.2	3.6
1975	4,734	180	74.4	5.2	5.1
1980	5,319	212	71.2	5.5	5.6
1985	6,104	227	69.8	4.6	5.6
1990	7,357	750	72.4	8.8	17.5
1995	9,570	619	86.0	7.4	13.8
2000	11,472	433	96.2	4.3	9.2
2005	13,223	464	105.9	5.2	9.8

자료: 건설교통부, 각년도, 『건설교통통계연보』.

그 결과 1990년 GDP 대비 주택 투자율이 1985년에 비해 두 배 가량 뛴 8.8%까지 상승했고, IMF 외환위기가 닥치기 이전까지 주택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 추세가 이어졌다. 그 결과 1992년 58만여 호를 건설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6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었다.⁶⁾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도 1990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1995년 86%, 2000년 96.2%에 이르렀다(<표 12>와 <표 13> 참조). 이에 힘입어 주택 매매가격도 1990년 가격을 100으로 상정할 때, 1991년 99.5, 1993년 94.5, 1995년 91.5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주택 대량 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 투기 붐을 잠재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통계청, 각년도).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경기 침체, 신용 경색, 주택 수요 격감 등이 일어나면서, 주택시장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주택 관련 투자 및 건설 활동마저 크게 위축된 것은 아니었다. 외환위기 직후 2-3년을 제외하고는 GDP 대비 주택 투자

6) <표 13>에서 1980년대 후반의 주택 신축이 연평균 41만여 호로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으로 1990년 75만여호가 건설된 효과이다. 따라서 1990년을 제외한 1986-89년간 평균 주택 건설 호수는 33만여 호에 그친다. 그렇지만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과 중산층의 비약적 성장에 힘입어 공공부문의 전면적 개입 없이도 주택 공급이 그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비중이 5% 수준을 유지했고, 신축 주택도 평균 50만호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국민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주택 투자 비중이 낮아져도 투자의 절대 액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5년에는 주택보급률이 105.9%까지 올라섰다. 이는 총량적으로 주택이 가구 수보다 많아져 남아도는 상황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 사회는 1980년대 후반의 심각한 주거위기 상황을 계기로 주택 공급의 물줄기가 크게 바뀌면서, 만성적인 주택 과부족 상황을 벗어나는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재고 실태는 어떻게 변모해 왔을까?

2절 주택 재고 실태

빈집을 포함한 주택 총수는 1980년 약 543만 호에서 2005년 1,322만여 호로 779만여 호가 늘어나, 4반세기 동안 2.4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인구가 1.26배 증가하고, 주택 수요의 기초 단위인 가구가 1.99배 증가한 것에 비교해 볼 때, 이 같은 증가 속도는 엄청난 물량의 주택이 단기간 내에 공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기반을 두어서 1985년 70%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던 주택 보급률이 2005년에는 105.9%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택 물량이 단순히 증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의 형태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표 14>를 보면, 단독주택은 1980년 전체의 87.5%를 차지하며 보편적인 주택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같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택 재고에 변화를 몰고 온 것이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대대적인 건설이었다. 공동주택 공급의 급물살에 휩쓸려 단독주택은 이미 1990년대 전반기에 전체 주택 재고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2005년에는 총 주택의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표 14> 전국의 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 1980-2005년

(단위: 천호, %)

주택 유형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단독주택	4,652 (87.5)	4,719 (77.3)	4,727 (66.0)	4,337 (47.1)	4,069 (37.1)	3,985 (31.9)
아파트	374 (7.0)	822 (13.5)	1,628 (22.7)	3,455 (37.5)	5,231 (47.7)	6,627 (53.0)
연립/다세대주택	162 (3.0)	350 (5.7)	603 (8.4)	1,071 (11.6)	1,266 (11.6)	1,684 (13.5)
비거주용건물	131 (2.5)	213 (3.5)	202 (2.8)	343 (3.7)	393 (3.6)	199 (1.6)
사용주택 합계	5,319 (100.0)	6,104 (100.0)	7,160 (2.7)	9,205 (100.0)	10,959 (100.0)	12,495 (100.0)
빈집 (총주택 대비 %)	115 (2.1)	167 (2.7)	197 (2.7)	365 (3.8)	513 (4.5)	728 (5.5)
주택 총수	5,434	6,271	7,357	9,570	11,472	13,223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공동주택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 절약형’ 주택 유형이었기 때문에, 좁은 국토에, 특히 지가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 단기간 내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에 적합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과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대규모 주택 물량을 공급하려 했던 정부와 주택건설업체 모두가 공동주택 공급에 앞장섰던 것이다. 여기에 수요 측면에서는 근대적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중산층 가구의 열망까지 더해지면서, 이들 삼자간의 암묵적인 합의에 기초해서 공동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주거를 둘러싼 심각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도시의 자투리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공급에 주력했다.⁷⁾ 그 결과 1990년대 전반기 이들 주택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자투리 택지 공간이 점차 고갈되는데다가, 이들 주택이 단독주택 지역에 무분별하게 지어져 과밀화,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낳아 아파트와 달리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이왕기, 2005; 홍성기, 2001),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건립 열풍은 잦아들었다. 이와 달리 아파트 건축은 꾸준히 이어져온 까닭에, 2005년 드디어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아파트가 차지하며, 지배적인 주택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표 15> 주택 규모의 변화 추이: 1980-2005년

(단위: %)

주택 규모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9평 미만	10.8	6.3	3.5	2.8	2.3	2.0
9-19평	51.0	47.1	42.5	39.2	40.2	37.8
19-29평	25.4	29.2	31.5	36.2	36.2	38.2
29-39평	6.9	9.1	10.8	10.1	10.2	10.9
39-49평	3.1	4.1	5.2	5.2	5.0	5.1
49-69평	1.9	3.0	4.2	4.2	3.7	3.6
69평 이상	0.9	1.2	2.3	2.3	2.4	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건설교통부, 각년도, 『건설교통통계연보』.

이처럼 아파트가 신규 주택 공급의 주종을 이루고는 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주상복합건물들이 점차 들어서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오피스텔(원룸) 공급이 서

7) 아파트는 대부분 그 내부에서 주민의 자족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지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도심 주변의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서히 늘어나면서, 주택의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 유형의 변화와 함께 주택의 규모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왔다. <표 15>를 보면, 9평 미만의 소형 주택이 1980년 10.8%이었는데, 2005년에는 2%로 흔적만 남아 있을 정도로 줄어들었다. 9-19평 미만 주택도 같은 기간 동안 51%에서 37.8%로 상당히 감소했다. 그 반면에 19평 이상의 중형 이상 주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39평 이상의 대형 주택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더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열망이 주택의 규모에 그대로 반영되어 주택 평형이 갈수록 늘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 5 장 가구-주택의 부조응

1절 주택 수급의 불균형: 새로운 가구 유형에 대응한 주택 공급의 부족

주택 재고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주택 총량의 증대가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게 되면, 단순한 총량 확보가 더 이상 관심사일 수 없다. 이제는 무분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보다는 주택 수요를 감안한 적정 수준의 공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진정 주택보급률 100% 시대를 맞이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윤주현, 2002 참조), 이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주택 공급 과정에서 주택 수요의 주체가 되는 가구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택 수급의 불일치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는 등 주택의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좌우하던 과거와 달리, 1990년대부터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주택의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주택이 다양화된 것은 사실이다. 성냥갑 같이 획일화된 아파트 외관이 화려하고 다채롭게 바뀌고,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등과 같은 새로운 주거공간이 등장하는 등, 시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의 가구 변화 추이와 주택 공급 추이를 견주어 보면, 주택 공급이 가구 구성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 자원의 사회·경제적 낭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이 주택 규모의 문제이다. 앞서의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가구 당 가구원수는 최근에 올수록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1인 가구 및 1세대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에, 2세대 이상 가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가구 규모의 축소 및 가구 구성의 단순화는 가구 당 주거 소요 면적의 감축을 의미한다.⁸⁾

그런데 신축 주택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는 소형 주택의 감소와 중·대형 주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축 주택의 주종을 이루는 아파트의 경우, 1998년 이후 국민주택기금 적용 대상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85㎡)) 이하로 확장되어⁹⁾ 중형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주택 규모 확장 추세가 더욱 가

8) 물론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사생활(privacy) 공간으로서 주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주거 공간에 대한 1인 당 소요 면적이 늘어나고, 이는 가구별 주거공간의 확장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평균 가구원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가구 당 주거 소요 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 1998년 이전에는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의 주택에만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어 중·소형 아파

속되었다. 이에 더해 대형 주택일수록 단위 면적 당 건축비가 낮아져 높은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업체들이 중·대형 아파트 건설에 더욱 매진하게 되어, 신축 주택의 규모 키우기 경쟁은 더욱 가파르게 전개되었다.¹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본래 4-5인으로 구성된 2세대 가구, 이른바 ‘표준 가구’를 대상으로 설계된 주택 형태이다.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중·대형 주택은 2세대 가구라도 한 자녀 가구가 대다수인 최근의 가구 구성에 비한다면, ‘주거 공간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더해 사생활을 강조하는 아파트 주거가 확산되면서, 과거 단독주택에서와 같은 ‘1주택 다가구 거주’ 유형이 감소해서 주택 당 평균 가구원 수가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 따른 ‘주택 과소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이 같은 가구 규모와 주거 공간의 부조응으로 말미암아 신축 주택의 미분양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새로운 사회문제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주택 미분양 사태는 주택 수급 요인, 경기변동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한마디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가구의 주거 공간 수요를 넘는 중·대형 주택 공급도 그 한 축을 이룬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 <표 16>에서 보듯이, 2005년 현재 空家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주택의 22.2%가 미분양 및 미입주로 인해 빈 집이 되었고, 특히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은 그 비율이 38%와 23.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비교 자료가 없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주택보급률 100% 시대의 도래와 함께 특히 공동주택의 미분양 사태가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만성적, 고질적 현상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표 16> 주택 유형별 공가 발생의 원인: 2005년

(단위: %)

주택 유형	매매·임대, 이사	미분양, 미입주	현재 수리 중	일시적 이용	기타	합계
단독주택	42.0	3.5	2.8	42.5	9.2	100.0
아파트	35.1	38.0	1.5	12.4	13.0	100.0
연립주택	47.3	19.1	2.3	17.8	13.5	100.0
다세대주택	52.8	23.9	1.4	12.9	9.0	100.0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38.2	11.4	3.4	33.6	13.4	100.0
주택 총계	40.0	22.2	2.1	24.5	11.2	100.0

자료: 통계청,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트의 공급이 비교적 활기를 띠었는데, 그 적용 대상이 늘어나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이 급격히 감소했다.

10) 물론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이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 공급의 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물량이 적어 신축 아파트의 규모 확대 추세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김호철, 2002: 60).

이 같은 주택 자원의 사회적 낭비 또는 주거공간의 과소비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볼 문제로 주택 수요의 다양성에 대한 공급 주체 측의 무관심 또는 무대응 문제를 들 수 있다.

먼저 청년층을 중심으로 혼인 연령이 지연되어 장기간 미혼 상태로 생활하거나 또는 독신 생활을 고집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들이 경제적 역량을 갖춰 주택 소비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룸, 소형 아파트 등과 같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서종균, 2002: 131). 그러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선호하는 주택건설업체와 시대에 뒤쳐진 ‘표준 주택’ 공급에 주력하는 공공부문은 이러한 신규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앞서 보았다시피,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농촌 지역에서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1인 가구나 부부가구가 크게 늘고, 생애 동안의 자산 축적을 통해, 또 값싼 농촌 주택 구입의 용이성과 높은 자가소유 성향 탓에 이들의 자가소유 비중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다(<표 4> 및 <그림 6> 참조). 또한 전체 가구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에서 주택 부족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거의 없다. 따라서 도시의 청년층 1인 가구와 달리 신규 주택 공급이 절실하지 않다. 그보다는 주거설비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주현, 2002: 24). 따라서 농촌의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들의 경제력 수준에 걸맞으면서 주거시설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현존 주택의 개·보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배순석, 2001). 그러나 주택 신축에만 주력하는 주택건설업체나 농촌 노인층을 정책의 사각시대에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로 말미암아 이들의 주거 수요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2절 주택 소유의 불평등: 취약 가구의 주거 불안

1990년대 이후 주택의 대량 공급에 힘입어 50% 미만까지 떨어졌던 자가소유 가구의 비중이 최근 55.6%까지 올라섰지만(<표 10> 참조), 지난 25년간 자가소유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2.58%)은 일반가구(2.8%)나 주택 재고(3.62%)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대대적인 주택 신축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상당히 크게 기여했지만, 기왕의 주택 소유 가구들이 주택 소유를 통한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자가 이외의 주택을 매입해서 주택의 소유 집중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 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곳에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전체 일반 가구의 6.6%에 달하고 있다(<표 11> 참조).

이 같은 주택의 소유 집중으로 인해 주택보급률 100% 시대를 맞이했지만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은 여전히 주택문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가구 구성이 불안정한 취약 가구들의 경우에는 빈약한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부족, 가족 재생산 비용의 편중 부담 등으로 인해 자가소유의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따른 이주 압박, 철거 위협, 적정 주거 찾기의 어려움 등에 노출되어 안정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¹¹⁾

특히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등의 취약 가구가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어나는 이행국면에서 나타나는 일과성 가구 유형이거나 개인의 생애사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한시적 가구 유형이 아니라 하나의 정형화된 가구 유형으로 자리잡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더 이들의 주거 안정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가구 유형별 주택 소유의 불평등으로 인해 취약 가구들이 주거 불안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대책이 반드시 무주택 가구의 주택 소유 진작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변창흠, 2007a; 진보정치연구소, 2007). 왜냐하면 이들 취약 가구의 상당수가 고가의 도시 주택을 구입할 만한 경제적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소유의 불평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은 대부분 부동산 투기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으로 무주택 가구의 임차 조건이 악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주택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통해 이들의 주거 불안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취약 가구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주거 안정 방안을 채택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가운데 주거빈곤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또 주거빈곤 가구와 자가소유 가구 사이에 끼여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가구에게는 최근의 이른바 ‘반값 아파트’, 즉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 주택 등을 체계적으로 공급해서 염가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가구주택의 매입 후 임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변창흠, 2007b; 천현숙, 2005). 특히 이러한 취약 가구의 주거 안정 방안을 민간의 주택시장 논리에 내맡길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주택 수급의 주체들과 협의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해 가는 ‘주택 거버넌스 체제(Housing Governance System)’를 구축해서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주거복지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11) 취약 가구 가운데 농촌의 노인 가구 범주가 유일하게 자가소유 비중이 높아 주택의 소유 집중으로 인한 주거 불안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들은 주택의 노후화, 빈약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 생활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제 6 장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구 구성과 주택 공급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양자의 조응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그간의 가구 구성을 보면, 인구 증가에 따라 꾸준히 늘어난 가구 수는 가구 규모의 축소 및 세대 구성의 단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1인 가구, 노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등의 ‘취약 가구’가 늘어나면서, 과거와 달리 ‘부부+자녀’의 표준 가구가 더 이상 보편적인 가구 형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으로 가구별 주거 실태를 보면, 우선 주거 유형이 단독주택에서 근대적 주거양식으로 새롭게 자리 잡은 아파트로 그 무게중심을 옮겼다. 또한 방 한 칸 당 평균 가구원 수가 1명 이하로 줄어들 정도로 주거 면적이 늘어나서, 협소한 주거 공간 문제를 크게 완화시켰다. 그 결과 주거 문제로 고통 받는 주거빈곤 가구의 비중도 현저하게 감소했다.

또 주택 점유 형태에서는 1990년대부터 신규 주택 공급에 힘입어 자가소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에 비해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산 증식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의 소유 집중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약 가구 가운데 노인 가구를 제외한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의 상당수는 임차 가구로 머물며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더해 주택 공급 및 재고 실태를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 ‘주거 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주택 관련 투자 및 건설이 활발하게 일어나,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105.9%에 이르렀다. 또 그 과정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주상복합건물, 원룸 등 새로운 주택 유형이 새롭게 등장하며 주택의 형태를 다채롭게 했고, 주택 규모도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구 구성의 변화와 주택 공급이 조금씩 서로 어긋나면서, 가구-주택 간 관계의 부조응 문제가 새로운 주택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먼저 가구 규모가 줄고 세대 구성이 단출해지는데 반해, 주택 규모는 증가 일로에 있어, 주택 과소비 문제와 주택 미분양 사태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가구 구성이 다양해지는 데 반해 신축 주택은 ‘표준 가구’를 모델로 삼는 등, 주택 수요의 다양성이 주택 공급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주택 소유의 불평등이 점차 완화되고는 있지만, 취약 가구의 주거 불안 문제는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구-주택 간 부조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택 공

급 위주의 기존 시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택 수요의 주체가 되는 가구 구성의 변화에 대해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집중할 것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기초해서 향후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주택 공급 방식을 보다 다양화하고,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가구의 주거 문제에 대처할 정책적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7 장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 2005. 2005년도 주택업무편람.
- 건설교통부. 각년도. 『건설교통통계연보』.
- 구본영. 1989. “위성도시 주거지역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안양 및 부천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태환·박영진. 1995. “가구 구조와 가족 형태.” 권태환·김태현·최진호(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 김정석. 2002. “가족과 가구.” 김두섭·박상태·은기수(편). 『한국의 인구(1)』. 통계청.
- 김재익. 2002. “한국인의 주거환경 수준.” 윤주현(편). 『한국의 주택』. 통계청.
- 김태일. 2000.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른 고령자 주택 형태의 변화와 수요 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0권 3호. pp.37-50.
- 김형국·하성규(편). 1998. 『불량주택 재개발론』. 나남출판사.
- 김호철. 2002. “주택 재고 및 공가 분석.” 윤주현(편). 앞의 책.
- 민족민주운동연구소(편). 1990. 『주택문제의 인식과 대안』. 논장.
- 박철수. 2006. 『아파트의 문화사』. 살림.
- 배순석. 2001.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 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 변창흠. 2007a.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이념 평가와 향후 정책 과제』(현안진단 제72호). 코리아연구원(KNSI).
- 변창흠. 2007b.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의 평가와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1가구1주택 국민운동(편). 『긴급토론회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자료집』.
- 서종균. 2002. “가구 특성별 주거 수준.” 윤주현(편). 앞의 책.
- 손경환. 2005.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및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 구축 연구』. 국토연구원.
- 신광영. 2003. “중산층의 위기, 표준과 상승의 몰락.” 『당대비평』 제24호..
- 양세화. 1996. “주택유형과 주택소유 형태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편). 『자연과학 연구 논문집』 제5집 2호. pp.49-58.
- 윤주현. 2002. “주택보급률의 변화.” 윤주현(편). 앞의 책.
- 윤주현·강미나·송하승. 2004. 『인구 고령화와 노인 주거: 고령화 사회 노인 주거의 현황과 정책 과제』. 국토연구원.
- 이왕기. 2005. 『저층·고밀 노후 주거지역 정비 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정의철. 2002. “주택 소요 단위로서 가구 수 및 가구 구조의 변화.” 윤주현(편). 앞의 책.
- 줄레조, 발레리(Gelézéau, Valérie) (길혜연 옮김). 2007.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 진보정치연구소(편). 2007.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사회공공주택의 확보와 다주택 소유자의 ‘비거주 주택’ 처분 방안』.
- 천현숙. 2002. “아파트 주거문화의 특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 아파트 주거의 확산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 천현숙. 2005.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정책의 개선 방향』(국토정책 Brief 제84호). 국토연구원.
- 통계청. 각년도.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 총조사 보고서』.
- 통계청. 2006. 『2005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결과(가구·주택 부문)』.
- 한상진·한상연. 1990. 『알기쉬운 집의 경제학: 주택문제의 실상과 허상』. 실천문학사.
- 홍성기. 2001. “저층 고밀도 주택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안양과학대학 논문집』 제24집. pp.277-297.
- Turner, John. 1976. *Housing By People: Towards Autonomy in Building Environments*. London: Marion Boyars.
- Turner, John. 1979. “Housing in Three Dimensions: Terms of Reference for the Housing Question Redefined.” Bromley, Ray (ed.), *The Urban Informal Sector*. Oxford: Pergamon Press.
- UN. 1998. *United Nations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New York.

8

주거생활의 변화: 주택유형과 자가소유를 중심으로

윤 일 성
(부산대 사회학과)

<표 목차>

<표 1>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현황, 2005	243
<표 2>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 전국 가구, 2005	244
<표 3>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 도시 가구, 2005	245
<표 4> 가구주의 직업분포(직종별): 전국 가구주, 1985 - 2005	246
<표 5> 가구주의 직업분포(직종별): 도시 가구주, 1985 - 2005	247
<표 6> 자가소유율의 변화(직종별): 전국 가구주, 1985 - 2005	249
<표 7> 자가소유율의 변화(직종별): 도시 가구주, 1985 - 2005	250
<표 8> 직업별 주택소유와 주택유형: 전국 가구주, 2005	251
<표 9> 아파트 소유자의 직업분포: 가구주, 2005	252
<표 10> 규모별 아파트 소유자의 직업분포: 전국 가구주, 2005	253

주거생활의 변화: 주택유형과 자가소유를 중심으로

윤 일 성 (부산대 사회학과)

제 1 장 연구목적과 대상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의 주거생활은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이 글은 주택유형과 자가 소유를 중심으로 주거생활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과 계급 혹은 계층간의 관계는 서구 사회에서 한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주제이다(Hamnett, 1989; Forrest, Murie and Williams, 1990; Saunders, 1990). 이 논쟁에서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한 가구의 계급적 지위가 그 가구의 주거수준을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한 가구의 주거수준은 그 가구의 계급적 지위를 그대로 반영하는가? 중간계급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노동계급은 세를 들어 사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는가? 햄넛(Hamnett)의 표현대로 사회계층별 주택점유형태의 양극화(socio-tenurial polarization)가 진행되고 있는가?”(윤일성, 2002: 191).

주택과 계급 혹은 계층과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택을 소비하는 것은 가구 차원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구의 계급 혹은 계층적 지위가 고찰되어야 한다(홍두승, 1991). 센서스 2% 표본자료를 가지고 가구의 계급 혹은 계층적 지위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표본자료에는 한 가구의 가구원들의 직업이 다 나와 있지 않다. 또한 2005년도 2% 표본자료의 경우에는 대부분류로 직업분류가 되어 있어서 계급분류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중요한 한계가 있겠지만, 가구주의 직업을 가지고 가구의 계급 혹은 계층적 지위를 대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주택소비의 다양한 측면을 계급, 계층과 관련시켜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를 다룬다. 네 가지 유형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비주거용 주택)이 도시와 농촌에 어떻게 분포되어있는가 그리고 주택유형별로 주

택점유형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검토한다. 둘째,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자가소유율의 변화를 고찰한다. 전체 가구와 도시 가구를 비교하면서, 가구를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6개의 카테고리(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농림, 어업)로 분류한 다음, 직업군별 자가소유율 변화의 다양성을 분석한다. 셋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계층적 특성을 가구주의 직업이라는 변수를 매개로 하여 고찰한다. 현재 한국 사회 (혹은 서울 지역, 6대광역시 지역)의 아파트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배분되어 있는가를 검토한다.

제 2 장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

1절 주택현황과 주택유형

<표 1>은 2005년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현황을 보여준다. 먼저 2005년 현재 한국사회의 주택 총 재고량은 13,222,641호이다. 총재고량의 75.6%에 해당하는 약 1천만호의 주택이 도시지역에 있다. 1천3백만여 호의 전체 주택 중 52.7%에 해당하는 약 7백만 호가 아파트이다.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이 4,263,541호(32.2%), 연립과 다세대주택이 1,787,221호(13.5%), 비주거용(상가 등) 주택이 208,690호(1.6%) 있다.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주택은 도시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도시와 농촌에 거의 절반씩 위치한다.

<표 1>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현황, 2005

(단위: 호,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주거용	합계
도시	2,124,135 (49.8)	6,122,716 (87.9)	1,599,811 (89.5)	150,870 (72.3)	9,997,532 (75.6)
농촌	2,139,406 (50.2)	839,973 (12.1)	187,910 (10.5)	57,820 (27.7)	3,225,109 (24.4)
전국	4,263,541 (100) (32.2)	6,962,689 (100) (52.7)	1,787,221 (100) (13.5)	208,690 (100) (1.6)	13,222,641 (100) (100)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2절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

<표 2>는 전체 가구의 주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택유형과 주택점유 형태를 교차시켜 놓은 표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2005년 현재 전국에 13,222,641호의 주택이 있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수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5,670,271 가구이다. 1천5백6십여만 가구 가운데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56.1%에 해당하는 약 8백8십만 호이다. 전체 가구(일반가구)의 22.3%는 전세로, 18.5%는 월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포함)로 거주한다.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를 같이 고려해서 보면, 단독주택에 사는 가구는 자기집에서가 아니라 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자가 46.5%, 차가(전세+월세) 50.2%). 반면에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에 사는 가구는 약 65% 정도가 자기집에 거주한다. 상가 등 비주거용 주택에서 사는 가구는 세 들어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표 2>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 전국 가구, 2005

(단위: 호,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주거용	합계
자가	3,283,782 (46.5)	4,298,428 (64.8)	1,100,526 (64.9)	109,375 (38.8)	8,792,111 (56.1)
전세	1,659,086 (23.5)	1,372,486 (20.7)	412,784 (24.3)	54,683 (19.4)	3,499,039 (22.3)
월세	1,886,988 (26.7)	790,624 (11.9)	140,285 (8.3)	88,063 (31.3)	2,905,960 (18.5)
기타	234,272 (3.3)	167,455 (2.5)	41,834 (2.5)	29,600 (10.5)	473,161 (3.0)
합계	7,064,128 (100)	6,628,993 (100)	1,695,429 (100)	281,721 (100)	15,670,271 (100)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표 3>은 도시에 사는 가구만을 따로 떼어서,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를 교차시킨 표이다. <표 2>와 <표 3>을 비교해 보면, 도시 가구의 주거상황은 전국의 주거상황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도시 가구의 경우, 자기집에 사는 가구의 백분율이 52.2%로 전체 가구에 비해서 3.9% 낮게 나타난다. 이는 농촌 가구의 경우 자기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를 다 합쳐서 자가소유율을 계산하면(2005년의 경우 56.1%), 도시 가구의 자가소유율을 상회하는 결과를 낳는다.

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시 가구의 경우,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자기집에 사는 경우가 더 많고,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 주택에 사는 가구는 세를 들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특히 흥미롭다. 전국적으로 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46.5%가 자기집에 사는 반면에, 도시 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31.7%만이 자기집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도시 지역의 단독주택은 셋집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 도시 가구, 2005

(단위: 호,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주거용	합계
자가	1,561,046 (31.7)	3,910,896 (66.6)	995,177 (65.1)	80,321 (36.6)	6,547,440 (52.2)
전세	1,553,535 (31.5)	1,203,926 (20.5)	374,916 (24.5)	47,409 (21.6)	3,179,786 (25.3)
월세	1,681,536 (34.1)	640,621 (10.9)	126,777 (8.3)	72,698 (33.1)	2,521,632 (20.1)
기타	133,075 (2.7)	116,245 (2.0)	32,119 (2.1)	18,980 (8.7)	300,419 (2.4)
합계	4,929,192 (100)	5,871,688 (100)	1,528,989 (100)	219,408 (100)	12,549,277 (100)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제 3 장 자가소유의 변화: 가구주의 직업과 자가 소유의 제 측면들

1절 가구주 직업분포(직종별)의 변화

1. 전체 가구

<표 4>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가구주 직업분포의 변화를 보여 준다. 2005년 현재 가구주 직업은 전문직, 관리직 22.0%, 사무직 13.8%, 판매직 및 서비스직 16.8%, 생산직 24.2%, 단순노무직 8.1%, 농림, 어업 15.1%으로 분포되어 있다. (200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직업분포는 전문직, 관리직 21.1%, 사무직 15.3%, 판매직, 서비스직 19.8%, 생산직 20.1%, 단순노무직 7.3%, 농림, 어업 15.8%이다). 가구주의 직업분포와 전체인구의 직업분포를 비교해 보면, 가구주의 경우 전체인구에 비해서, 생산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판매직 및 서비스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가구주 직업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몇 가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비중이 많이 줄었다. 둘째, 전문직, 관리직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셋째, 판매직 및 서비스직과 생산직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

<표 4> 가구주의 직업분포(직종별): 전국 가구주, 1985 - 2005

(단위: %)

직업	1985	1995	2005
전문직, 관리직	9.2	23.9	22.0
사무직	11.9	9.2	13.8
판매직, 서비스직	21.9	17.5	16.8
생산직	30.3	28.2	24.2
단순노무직	-	6.9	8.1
농림, 어업	26.7	14.2	15.1
합계	100%	100%	100%
N	197,632	212,938	227,255

자료: 1985, 1995,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2. 도시 가구

<표 5>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 가구주 직업분포의 변화를 담고 있다. 2005년 현재 도시 가구주 직업은 전문직, 관리직 26.4%, 사무직 16.6%, 판매직, 서비스직 19.3%, 생산직 26.9%, 단순노무직 8.8%, 농림, 어업 2.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05년 도시 가구주 직업분포는 전국 가구주 직업분포와 조금 다르다. 먼저,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도시 가구주는 2.1%에 불과하다 (전국 가구주의 15.1%가 농림, 어업에 종사한다). 농림, 어업을 제외한 다른 직업군에 종사하는 도시 가구주의 비중은, 전국 가구주의 직업분포와 비교해 볼 때, 조금씩 높게 나타난다. 전국과 비교해 볼 때, 도시 가구주가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2.5% 정도, 전문직, 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4.4%가 높게 나타난다.

<표 5> 가구주의 직업분포(직종별): 도시 가구주, 1985 - 2005

(단위: %)

직업	1985	1995	2005
전문직, 관리직	12.2	28.1	26.4
사무직	15.9	10.7	16.6
판매직, 서비스직	28.6	19.8	19.3
생산직	39.2	31.4	26.9
단순노무직	-	7.6	8.8
농림, 어업	4.2	2.5	2.1
합계	100%	100%	100%
N	125,345	163,534	167,966

자료: 1985, 1995,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2절 자가 소유율의 변화

1. 전체 가구

<표 6>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의 변화를 보여 준다. 이 자가소유율은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자료(1985년, 1995년, 2005년)를 분석하여 계산한 것이다. 첫째,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을 보면,

1985년 53.0%, 1995년 52.9%, 2005년 59.2%이다. 2005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10가구 가운데 6가구가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보았듯이,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전국의 자가소유율은 56.1%이다. 여기에 비해서 2% 표본자료를 통해서 나온 2005년 자가소유율은 59.2%로 3.1%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자가소유율의 추이를 보면, 1985년부터 1995년까지는 53% 정도로 자가소유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동안 자가소유율이 6.3% 증가했다. 과연 지난 10년간 자가소유율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가소유율 증가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차후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이 표는 가구주의 직업별로 자가소유율의 현황을 보여준다. 2005년 현재 전체 가구주의 직업별 자가소유의 현황을 보면, 전문직, 관리직 56.7%, 사무직 53.0%, 판매직, 서비스직 48.8%, 생산직 54.2%, 단순노무직 49.5%, 농림, 어업 93.3%로 나타난다.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들의 자가소유율이 가장 높다. 100가구 중 93가구 정도가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농림, 어업을 제외하면,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자가소유율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생산직, 사무직, 단순노무직, 판매직 및 서비스직 순으로 자가소유율이 높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자가소유율이 높다는 것과 판매직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가소유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셋째, 이 표는 가구주의 직업별 자가소유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자가소유율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다른 직업군을 잘 살펴보면, 전문직, 관리직 가구주의 자가소유율만 4.3% 상승했고, 나머지 직업군의 자가소유율은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에서 2005년의 기간 동안에는 그 이전의 10년과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즉, 모든 직업군의 자가소유율이 증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직업군은 생산직이다. 44.6%에서 54.2%로 무려 9.6%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자가소유율도 8.3% 증가했고, 사무직 가족주의 자가소유율도 6.3% 증가했다. 지난 20년 동안 가구주의 직업별 자가소유율의 변화를 정리하면, 전문직, 관리직 가구주와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자가소유율은 계속 증가한 반면,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생산직 가구주의 자가소유율은 1985년부터 1995년까지는 감소했지만,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 증가했다.

<표 6> 자가소유율의 변화(직종별): 전국 가구주, 1985 - 2005

(단위: %)

직업	1985	1995	2005
전문직, 관리직	49.6	53.9	56.7
사무직	48.2	46.7	53.0
판매직, 서비스직	49.6	44.7	48.8
생산직	49.7	44.6	54.2
단순노무직	-	45.9	49.5
농림,어업	62.8	85.0	93.3
전체가구	100%	100%	100%
N	197,632	212,938	227,255

자료: 1985, 1995,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2.도시 가구

<표 7>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 가구 자가소유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첫째, 도시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1985년 47.7%, 1995년 45.5%, 2005년 52.7%이다. <표 6>에 나와 있는 전국 가구의 자가소유율과 비교하면, 도시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6-7% 낮음을 알 수 있다. 가령, 2005년의 경우, 전국 가구의 자가소유율이 59.2%인데 반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52.7%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도시 가구의 자가소유율 추이는 전국 자가소유율의 추이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 도시 가구 자가소유율은 감소했고 (전국의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 가구 자가소유율은 증가했다. 후반 10년 동안 도시의 자가소유율은 7.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 가구주의 직업별 자가소유 현황을 전국 가구주와 비교해 볼 때, 도시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거의 대부분 낮게 나오지만 (단 하나의 예외는 2005년 전문직, 관리직 자가소유율임), 직업별 자가소유율의 상대적 크기는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즉, 전국 가구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도시 가구의 경우, 농림, 어업을 제외한다면, 전문직, 관리직, 생산직, 사무직의 순서로 자가소유율이 높다.

<표 7> 자가소유율의 변화(직종별): 도시 가구주, 1985 - 2005

(단위: %)

직업	1985	1995	2005
전문직, 관리직	47.3	52.7	57.0
사무직	46.0	44.7	52.5
판매직, 서비스직	46.9	41.7	46.6
생산직	47.6	41.3	53.3
단순노무직	-	41.1	46.0
농림, 어업	60.7	61.8	77.9
전체가구	100%	100%	100%
N	125,345	163,534	167,966

자료: 1985, 1995,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셋째, 지난 20년 동안 도시 가구 자가소유율의 추이를 가구주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1985년에서 1995년까지의 경우, 도시내 다른 직업군의 자가소유율은 감소한 반면, 농림, 어업과 전문직, 관리직은 각각 1.1%와 5.4% 증가했다. 1995년부터 2005년의 기간 동안에는 모든 직업군의 자가소유율이 증가했다. 지난 20년 동안 도시 가구의 직업별 자가소유율 변화 추이는 전국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전문직, 관리직과 농림, 어업의 경우 자가소유율이 계속 상승했지만,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생산직은 자가소유율의 부침을 겪었다. 첫 10년 동안 자가소유율이 하락했다가 다음 10년 동안 하락폭을 능가할 정도로 자가소유율이 증가했다. 특히 가장 부침이 심한 자가소유율을 보인 직업군은 생산직이다. 첫 10년 동안 자가소유율이 6.3% 하락했다가 다음 10년 동안 무려 12%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전국과 도시에서 경험한 자가소유율의 부침은 중요한 연구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3절 직업별 주택소유와 주택유형

<표 8>은 가옥주의 직업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이 다양함을 보여준다. 전문직, 관리직 가구주와 사무직 가구주가 다른 가구주에 비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직업군의 경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30% 이하이지만, 전문직, 관리직의 42.2% 그리고 사무직의 38.8%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표 8> 직업별 주택소유와 주택유형: 전국 가구주, 2005

(단위: %)

직업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주거 (상가)주택	자가 소유율
전문직, 관리직	8.4	42.2	4.9	0.9	56.7
사무직	7.4	38.8	5.8	0.8	53.0
판매직, 서비스직	14.2	26.0	6.7	1.7	48.8
생산직	14.3	29.7	9.7	0.5	54.2
단순노무직	21.9	17.6	9.5	0.4	49.5
농림, 어업	90.0	2.0	0.7	0.3	93.3
전체 가구 = 227,255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사무직 가구주와 생산직 가구주를 비교해 보면, 자가소유율의 경우 생산직이 사무직 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무직이 생산직 보다 약 10%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순노무직 가구주의 경우 아파트 보다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으며,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경우 90%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단지 2%만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직, 서비스직 가구주는 다른 직업군보다 비주거(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절 누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가?

1. 아파트 소유자의 직업분포: 전국, 서울, 6대광역시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국의 아파트 수는 2005년 현재 6,962,689호이다. 서울의 아파트 수는 1,258,658호이며, 6대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수는 2,006,241호이다. 경기도의 아파트 수는 1,707,868호이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수는 3,363,006호이며, 이는 전국 아파트의 48.3%를 차지한다(통계청, 2005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제3권 주택편, 2006).

대한주택공사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아파트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6백만 호를 넘는 민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파트를 소유하는가? 한국의 아파트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분배되었는가? 여기서는 비록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표 9>는 아파트 소유자의 직업분포에 관한 표이다. 2005년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구 중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구의 직업별 분포이다. 먼저 전국 아파트의 소유 분포를 보면, 33.2%를 전문직, 관리직 가구주가 소유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25.7%를 생산직 가구주가, 19.2%를 사무직 가구주가, 그리고 15.7%를 판매직, 서비스직 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다. 6대광역시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현황은 전국 아파트의 소유현황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전국 아파트의 소유현황과 서울 아파트의 소유현황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이다. 첫째, 서울의 아파트는 전문직, 관리직에게 더 많이 배분되어 있다. 전국 아파트의 33.2%를 전문직, 관리직이 소유하는 반면에, 서울의 전문직, 관리직은 서울 아파트의 41.7%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서울의 아파트는 생산직 종사자에게 더 적게 배분되어 있다. 전국 아파트의 25.7%를 생산직 종사자가 소유하는 것에 반해, 서울 아파트의 14.8%만 생산직 종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표 9> 아파트 소유자의 직업분포: 가구주, 2005

(단위: %)

직업	전국	서울특별시	6대광역시
전문직, 관리직	33.2	41.7	32.5
사무직	19.2	22.2	17.0
판매직, 서비스직	15.7	17.5	15.6
생산직	25.7	14.8	28.9
단순노무직	5.1	3.7	5.4
농림,어업	1.0	0.2	0.6
전체가구	100%	100%	100%
N	63,428	11,275	20,085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2. 규모별 아파트 소유자의 직업분포

아파트를 소유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아파트의 규모별로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아파트가 규모별로 볼 때 어느 사람들에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0> 규모별 아파트 소유자의 직업분포: 전국 가구주, 2005

(단위: %)

직업	10평미만	10-19	20-29	30-39	40-49	50평이상
전문직, 관리직	21.7	22.3	33.0	49.9	62.1	74.0
사무직	28.3	18.5	20.8	18.2	15.3	9.6
판매직, 서비스직	19.6	15.5	16.0	16.7	14.3	10.5
생산직	26.1	35.2	24.5	12.1	6.9	4.8
단순노무직	4.3	7.4	4.6	2.3	0.8	0.5
농림,어업	0.0	1.1	1.1	0.8	0.6	0.6
전체가구	100%	100%	100%	100%	100%	100%
N	46	22,482	29,822	6,385	3,708	985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10>은 전국의 아파트를 10평 단위로 분류하여, 작은 아파트에서부터 큰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규모별로 아파트가 어떤 사람들에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보면, 20평 이상의 아파트는 전문직, 관리직에게 가장 많이 배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0평형대를 넘어가면 전문직, 관리직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30대평형의 50%, 40대평형의 62%, 그리고 50대 이상 평형의 74%를 전문직, 관리직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미만의 평형의 경우 사무직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점과 20대평형의 경우 생산직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점도 재미있는 현상이다.

제 4 장 결론

이 연구는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의 모습을 검토하고 난 다음, 지난 20년 동안 자가소유율의 추이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가구주의 직업을 여섯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주택소비 특히 자가소유의 몇 가지 모습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를 같이 고려해서 보면, 단독주택에 사는 가구는 자기집이 아니라 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더 많고,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에 사는 가구는 자기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다.

둘째, 지난 20년간 자가소유율의 추이를 보면, 1985년부터 1995년까지는 자가소유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 동안 자가소유율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자가소유율이 증가한 이유를 밝혀내는 것은 앞으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구주의 직업과 가구의 자가소유 여부를 관련시켜서 보면, 농림, 어업을 제외하고,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자가소유율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생산직, 사무직, 단순노무직, 판매직 및 서비스직 순으로 자가소유율이 높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자가소유율이 높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넷째, 지난 20년 동안 가구주의 직업별 자가소유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문직, 관리직 가구주와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자가소유율은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생산직 가구주의 자가소유율은 다른 추이를 보인다. 이들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1985년부터 1995년까지는 감소했지만,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 증가했다. 특히 생산직 가구주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가소유율은 지난 20년 동안 가장 부침이 심했다. 가구주의 직업별로 가구의 자가소유율의 추이가 상이한 것은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연구과제이다.

다섯째, 아파트의 소유 분포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를 100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문직, 관리직 가구이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가구의 순으로 아파트가 배분되어 있다. 6대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분포는 전국 아파트의 분포와 유사하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다르다. 서울의 아파트는 전문직, 관리직 가구에게 더 많이 배분되어 있고, 생산직 가구에게 더 적게 배분되어 있다.

도시연구에서 주택과 계급 혹은 계층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몇 가지 논쟁을 거듭하면서 심화되어 왔다. 주택소비의 다양한 모습을 계급 혹은 계층론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연구는 계급 혹은 계층론적 관점으로 주택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이다. 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5 장 참고문헌

- 권태환·윤일성·장세훈. 2006.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다해출판사.
- 윤일성. 2002. 『도시개발과 도시불평등』. 한울출판사.
- 홍두승. 1991. “계층의 공간적 분화 1975-1985: 서울시의 경우”.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회(편).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다산출판사.
- 홍두승·이동원. 1993. 『집합주거와 사회환경』. 서울대학교 출판부.
- Forrest, R., Murie, A., and Williams, P., 1990. *Home Ownership: Differentiation and Fragmentation*, London: Unwin & Hyman.
- Hamnett, C., 1989. "Consumption and class in contemporary Britain." in Hamnett et al.(eds), *Restructuring Britain: the Changing Social Structure*, London: Sage.
- Saunders, P., 1990. *A Nation of Home Owners*. London: Unwin & Hyman.

9

**영국의 2001년 One Number Census
프로젝트: 방법론의 골자와 2011년의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전 광 희
(충남대학교)

〈표 목차〉

<표 1> 응답률과 남녀 5세 연령집단에 대한 95% 신뢰구간	288
<표 2> ONC 추정인구와 연앙추계인구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	290

(그림 목차)

(그림 1) One Number Census 방법론의 플로 차트	268
(그림 2) 영국의 우편번호체계	269
(그림 3) 영국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2000년 현재	270
(그림 4) 매칭작업의 기본 플로차트	276
(그림 5) 이원시스템 추정법(DSE)의 기본구조	279
(그림 6) 추정지역의 인구추정을 위한 제로절편 회귀모형의 구조	281

〈부록〉

<부록 A> 영국의 2011년 ONC 프로젝트의 작업영역	313
<부록 B> 영국의 2011년 ONC 프로젝트의 품질 확인 작업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원의 리스트	314

영국의 2001년 One Number Census 프로젝트: 방법론의 골자와 2011년의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전광희 (충남대)

제 1 장 머리말

영국은 1991년 센서스의 실패경험을 반성하고 센서스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2001년 센서스에서 “One Number Census” (ONC)¹⁾ 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의 개발에 착수하였다(Brown et al, 1999; ONS, 2005). 이 프로젝트는 영국 통계청의 주관으로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결과에 본조사에서 누락된 인구의 추정수치를 합산하여 전국의 총인구를 “최고품질의 단일인구”로 통일하는 사업계획을 가리킨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의 표본조사가 동원되어 과소집계의 정도를 추정하고 이것을 다시 보정변수로 전환하며 이 변수를 토대로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결과를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물론 영국만이 선진국 중에서 ONC 프로젝트를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2000년 센서스부터 “Integrated Coverage Measurement Survey” (ICM)라 불리는 대규모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오류에 대한 평가 및 보정작업을 진행하고 이것을 토대로 선거구 확정과 연방자금의 배분에 필요한 추정인구를 작성할 예정이었다(Kinnecannon, 2006). 그러나 미국의 ONC 프로젝트는 좌절되고 말았다. 연방대법원은 1999년 1월 25일, 표본조사를 토대로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결과를 보정하는 추정인구를 최종수치로 하여, 연방하원의 의석을 배분한 것은 연방 법률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로 미국의 인구조사국은 ICM 표본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센서스 본조사의 결과를 보정하여 최종결과를 작성하는 이른바 미국판 ONC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의 ONC 프로젝트에서 당초부터 센서스 본조사의 응답내용의 정확성이나 중복집계, 과다집계는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환언하면 ONC 프로젝트는 센서스에서 누

1) One Number Census라는 용어에서 “One Number”는 “유일”, “단수” 또는 “최고”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이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센서스 본조사의 과소집계를 추정작업을 통하여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인구수를 정확히 집계한 것처럼 간주되어, 센서스 결과는 ONC 방법론을 통하여 추정된 숫자와 더불어 두 수치의 센서스(Two Number Census)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ONC 프로젝트는 이상적으로, 과소집계 또는 과다집계로 편향된 센서스 본조사의 수치를 버리고, ONC 방법론에 따라서 추정된 “최고의 단일한 수치”를 채택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락된 개인과 가구의 총수를 확인하고, 이것을 보정하는 방법론과 작업절차를 구체화 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국 통계청은 센서스 범위조사(CCS, Census Coverage Survey)라 불리는 대규모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범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통계적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개인과 가구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정작업과 품질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2001년 센서스의 최종결과를 공표하였다. 최종결과는 장래인구추계의 기준 인구를 설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였다.

영국의 ONC 프로젝트는 2001년 센서스의 최종결과 발표를 두고 논란에 휘말렸다. 영국 통계청은 2002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만 2년간에 걸쳐 각종 연구보고서를 출판하면서 2001년 ONC 결과와 종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추정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영국의 통계청은 2005년 9월, 작업성과를 최종정리하기 위하여 ONC 프로젝트평가보고서를 출판하였다(ONS, 2005). 보고서는 2001년의 ONC 프로젝트는 센서스의 정확성을 개선하는 필수불가결한 방법론이었으며 2011년에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영국의 센서스 역사에서 ONC 프로젝트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서 시작하여 ONC 방법론의 윤곽을 개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3장은 ONC 방법론의 주요단계를 (1) 센서스 범위조사 (2) 매칭작업 (3) 추정작업 (4) 보정작업 (5) 품질 확인 작업 등 5개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본 연구는 제4장에서 영국 통계청이 2011년 센서스와 관련하여 2001년의 ONC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그들의 자체 평가 작업을 토대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은 ONC 방법론의 실천과 관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물론 ONC 방법론과 관련된 향후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영국의 통계청이 내린 평가결과는 근대적 센서스의 기본 원칙 중에서 전수조사와 현지실사의 원칙이 조사환경의 악화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센서스 본조사의 정확성을 평가하고자 ONC 방법론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의 제5장과 제6장은 영국 통계청이 ONC 방법론을 2011년 센서스의 범위평가와 본조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정하는 최고방안으로 취급하는 자체평가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자체평가는 영국의 센서스 환경의 급격한 악화를 염두에 두고 전개되는 논의이기는 하지만, 국가별 상황을 반영하여 약간의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면, 한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순(純) 과소집계가 2%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판' ONC 프로젝트가

탄생할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지연, 2007).

영국의 One Number Census의 기본전략은 센서스 본조사의 과소추계를 추정하는 작업을 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센서스의 개인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정작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영국의 2001년 ONC 방법론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2011년 ONC 프로젝트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계획을 요약정리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5장에서 2011년에는 ONC 프로젝트가 어떤 작업목표를 설정하여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제6장에서는 영국의 통계청이 ONC 방법론과 관련하여, 자체사업의 일부로 설정하고 있는 2011년 센서스의 혁신과 대안들에 관하여 부연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01년 ONC 방법론을 총괄적으로 요약정리하고, 이것에 대한 평가와 교훈을 기술하면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제 2 장 2001년 ONC 방법론의 배경과 윤곽

1절 배경

영국은 1801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1년을 제외하고, 10년마다 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새로운 문항이 추가되고 불필요한 문항은 삭제되기도 하지만, 센서스 실시의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1911년까지는 영국 의회가 센서스를 실시할 때마다 새로운 센서스법을 통과시켜야 했지만, 1920년 센서스법(Census Act)의 통과로 직전 센서스가 실시된 후 5년이 경과하고, 특별 센서스의 필요성을 영국 의회가 인정하는 추가입법을 승인하게 되면, 언제라도 센서스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센서스는 1939년 국민등록법(National Registration Act)이 1941년의 센서스를 대체했던 경우를 예외로 하고, 관례대로 10년마다 계속 실시되어 왔으며, 2001년은 영국 센서스 실시 20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된다.

영국에서 센서스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후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것은 1966년의 표본센서스부터였다. 1971년 센서스에서는 사후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신, 1981년에는 ‘센서스 집계조사’(CES, Census Enumeration Survey)라 불리는 사후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²⁾, 당시 총인구 4,960만 명의 2.0%(1백만 명)가 센서스 본조사에서 과소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조사 결과에 의하면, 순(純) 과소집계는 0.4%(21만 명)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1.6%(80만 명)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나,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부재가구”의 거주자로 확인되었다. 사후조사의 결과 과소집계된 인구는 1981년 센서스의 최종결과에 추가되었으며, 1971년 센서스와 인구동태통계의 인구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1981년 추계인구의 최종수치를 보정하는데 사용하였다.

1991년 사후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1991년 센서스는 총인구 5,455만 명의 3.8%(2.1백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 중에서 1.6%(90만 명)는 조사 당시의 부재가구에 보정 집계되었으나, 나머지 2.2%(1.2백만 명)는 최종집계에서도 여전히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등록형 또는 순환형 센서스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유럽의 대륙 국가들이 영국처럼 고전적 의미의 센서스를 실시하던 때보다는 양

2) 본 연구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두 지방에 관한 통계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영국 전역의 통계수치로 간주하여도 좋을 것이다. 영국 전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4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에서 통계청(ONS)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센서스를 실시하는 주무기관이고, 스코틀랜드는 일반등록사무소(GROS, General Register Office), 북아일랜드는 통계연구부(NISRA, Statistics and Research Agency)가 해당지역의 센서스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위의 세 기관은 지역별로 센서스 실시나 여타 통계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필요에 따라 영국 전역의 통계를 총괄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 과소집계가 1981년 센서스보다도 크게 늘어났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의 성·연령별 인구집단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영국 통계청은 1991년 센서스의 현지실사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나 응답하지 않은 가구, 이른바 ‘부재가구’를 대상으로 보정집계를 실시하였다. 이 작업에서 총인구의 1.6%인 90만 명을 파악하여 센서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였다. 보정집계 결과는 센서스 제표작업에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결과로 간주되었다.

1991년 사후조사는 ‘센서스 타당성조사’(CVS, Census Validation Survey)로 명명되었는데, 이것은 과소집계의 정도나 분포형태의 파악에서 실패작으로 취급되고 있다(Dale, 2000; Abbot, 2001, Abbot and Brown, 2006).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먼저, 사후조사가 2만 가구의 표본규모로 실시되어 지역별 과소집계의 상세내역을 파악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다음은 사후조사가 센서스 본조사와 조사 설계상 완전 별도의 독자적인 조사가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후조사가 과소집계의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 해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1991년 센서스 실시 후, 상당기간 영국내 거주인구의 집계수치에는 적어도 4가지 버전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 당초에는 총인구의 1.6%에 해당하는 부재가구의 보정집계를 포함하는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결과가 발표되었다. 다음은 사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결과를 상향조정하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또 영국 통계청은 사후조사의 결과를 무시하고, 인구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전국추계인구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계인구에 대해서는 수리모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인구분석은 1981년 센서스 본조사의 결과와 1981~1991년의 출생·사망·이동 등의 인구동태통계를 토대로 하여 1991년의 성·연령별 인구구조를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인구분석의 결과와 센서스의 집계결과를 비교하여, 센서스 집계의 최종수치를 확정하기로 하였다. 인구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1991년 센서스에서 총인구의 1.6%(90만 명)에 해당하는 부재가구 거주자를 제외하고도, 총인구의 2.2%(120만 명)가 여전히 센서스 본조사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통계청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소집계의 정도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면서, 경제사회연구심의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가 프로젝트 “Estimating with Confidence”에서 작성한 추정인구가 각종 지방행정업무에 활용되기도 하였다(Dale, 2000; Abbot and Brown, 2006). 결국, 1991년 센서스의 공식적 집계 결과는 1981년 센서스와 인구동태통계의 인구분석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인구추계의 결과와 일치하지 못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인구집계의 정확성에 대하여 ‘신뢰성의 상실’ (loss of confidence)이라는 문제가 생겨났다.

영국의 통계이용자들은 2001년 센서스 실시 이전에 광범위하게 개최된 전문가회의에 참석하여, 2001년 센서스에서는 하나의 확실한, 최고 품질의 최종인구를 추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더욱이, 그들은 1991년 센서스에서 영국 통계청이 과소집계를 측정하는 문제에 큰 난관에 봉착하였음을 염두에 두고, 센서스의 최종결과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계오류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론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국 통계청은 ONC 프로젝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ONC 프로젝트는 사후조사를 완전히 재설계하여, 내용오류와는 별도로 범위오류를 추정하고 센서스의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보정하여, 센서스 제표작업의 최종결과는 전국수준의 추정인구와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ONC 프로젝트는 종전 센서스에서 이룩한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적지 않았다. 가령, 1991년 센서스에서 부재가구(센서스 본조사의 현장실사에서 부재중이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구)의 보정집계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입된 누락변수의 자동적인 편집 및 보정절차는 2001년의 ONC 프로젝트의 매칭작업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과 가구를 보정하는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더욱이, 연앙추계인구는 ONC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수치 간에는 간단한 연결 장치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영국의 2001년 One Number Census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는 2001년 센서스 실시 후에 공존하는, 1991년과 같은 4개 버전의 추정인구가 아니라 최종적인 세트의 센서스 추정인구(a final set of census estimates)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통계청은 2001년 센서스에서 ONC 프로젝트의 도입으로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100%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는 자체평가를 내리고 있다. 본 연구는 ONC 프로젝트가 완전히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와 프로젝트 자체가 야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3장의 ONC 방법론에 대한 평가연구와 제4장의 2001년 ONC 프로젝트의 교훈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2절 방법론의 개관

현대국가가 전수조사와 현지실사³⁾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센서스를 실시하는 경

3) 전수조사와 현지실사는 전통적 센서스 방법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 유엔의 보고서(1998)에 의하면, 2000년 라운드 센서스를 실시하는 247개 국가 중에서, 196개 국가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등록형 센서스(register census)는 비용절감과 높은 빈도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현지실사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방법과 차이가 있다. 또 순환령 센서스(rolling census)는 전국의 지역들을

우, 주권행사가 가능한 영토 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가구를 100%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어떤 국가의 센서스도 100% 완전무결한 경우는 없으며, 본조사에서 빠뜨려지는 개인과 가구가 있게 마련이다. 이 과소집계의 정도는 지역은 물론 성·연령별 인구집단의 속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센서스를 실시하는 현대국가는 사후조사(PES, Post-Enumeration Survey)라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추정방법으로 과소집계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특히 선진국은 물론 최근의 신흥공업국에서도 센서스나 표본조사에 대한 비응답자의 비율이나 특성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계누락의 정도나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여, 센서스 본조사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국가통계기관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영국 통계청은 사우스햄턴 대학(Southampton University) 통계학과 교수들의 자문을 토대로 One Number Census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ONC 프로젝트는 1991년 센서스 평가 작업을 완료한 1996년부터 개시되었으며, 센서스 통계이용자들이 제기한 과소집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영국 통계청은 ONC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대표, 통계학술기관 등을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프로젝트의 방법론 개발과 운영관리를 감독하고 지도하도록 하였다. 또 영국 통계청은 내부 국장급 직원과 여타 정부기관의 대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ONC Project Board를 설치하여 프로젝트의 진전 상황을 일일점검 하도록 하였다.

One Number Census는 이론적으로는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 사후조사를 대규모의 표본조사로 실시하여, 이것을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범위를 측정하고 과소집계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사후조사의 결과를 개인 수준에서 2001년 센서스 본조사의 결과와 짝을 맞추는 매칭작업을 실시하였다. 센서스 본조사와 사후조사의 매칭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이원시스템 추정법을 사용하여 본조사에서 파악되지 못한 개인과 가구의 총수를 추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실사된 개인의 정보를 복사하는, 이른바 기증자 방법(donor method)을 활용하여, 센서스에서 누락되었다고 추정되는 개인과 가구에 대한 정보를 보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영국의 ONC 프로젝트 추진방안은 개인별 데이터베이스의 보정작업을 제외한다면, 전수조사와 현지실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근대적 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미국의 인구조사국도 1950년 이후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과소집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주목적은 센

일정기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센서스의 기본원칙 중에서 동시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전체인구의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일성·보편성(universality)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서스 본조사의 집계결과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센서스 본조사의 정확성에 대하여 통계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국의 ONC 프로젝트는 센서스 조사환경의 악화⁴⁾라는 문제를 염두에 둘 때, 구체적인 실천 자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수많은 근본적 질문, 대안, 가정들이 영국 통계청의 내검 대상과 전문가회의의 토론주제가 되었다. 프로젝트의 개발과정에서 몇 가지 대안들(예: 센서스 본조사, 범위조사, 행정자료의 동시 이용과 관련 추정방법의 개발, 센서스 조사구 수준에서 과소집계를 측정하는 수리모형의 구축 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지면 때문에, 각종 대안전략, 특히 ONC 운영위원회이나 영국 국내 또는 유럽의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ONC 방법론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ONC 방법론을 영국의 통계청이 제시하는 최종버전을 기준으로 주요단계와 특징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4) 센서스 환경은 사생활 의식의 강화, 보안의식의 강화, 주거환경의 변화, 생활환경의 변화, 지역공동체 의식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사표의 배포방식이나 회수방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대부분의 경우, 조사표의 회수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령, 영국의 경우도, 우편배포와 우편회수의 방법을 채택하면서, 응답율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제 3 장 2001년 ONC 방법론의 주요단계와 특징

본 절에서는 ONC 방법론의 핵심을 주요단계별로 그 특징을 요약 정리한다. 영국의 2001년 ONC 방법론은 5개의 주요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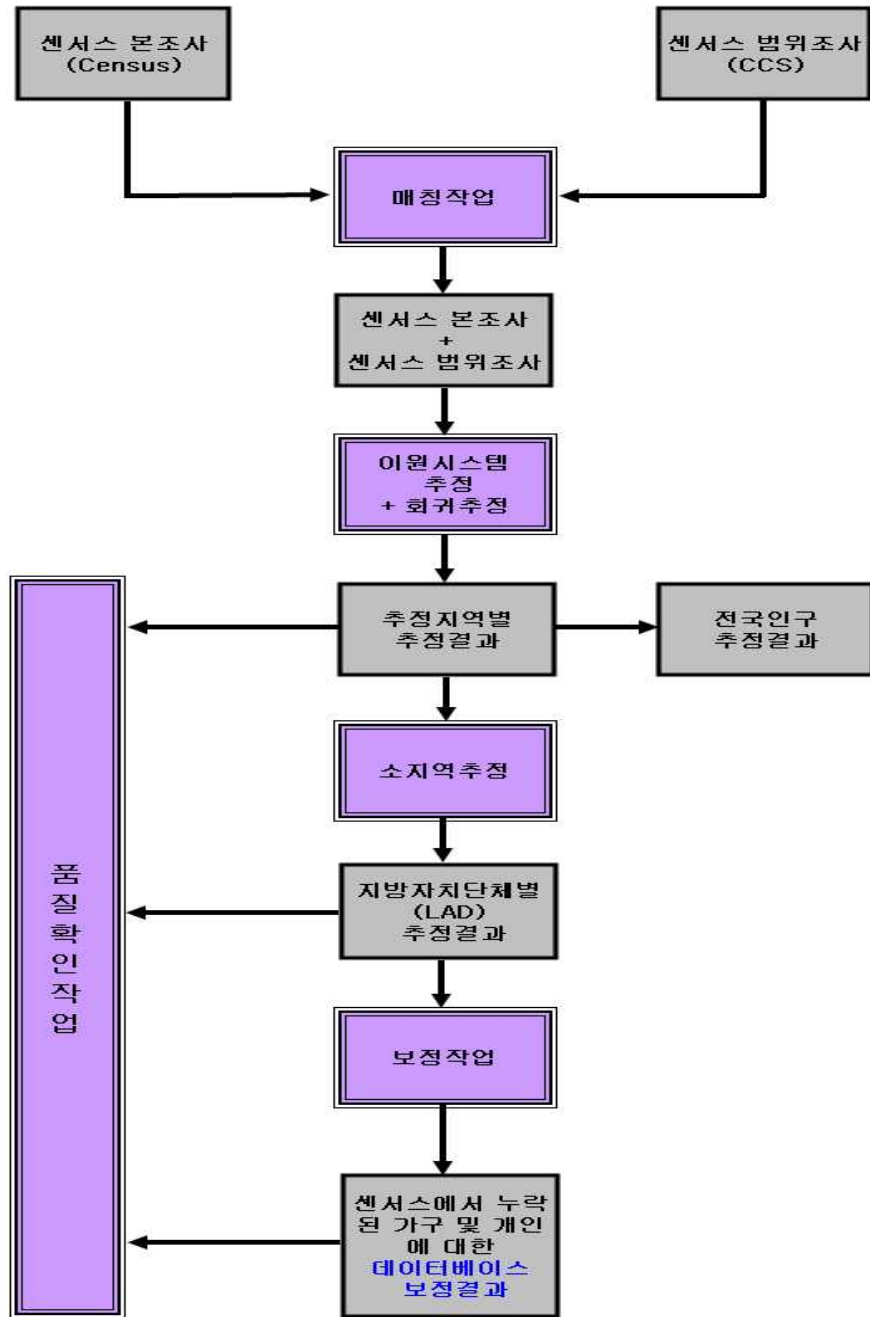
- 센서스 범위조사의 표본설계
- 센서스 본조사와 범위조사의 매칭작업
- 추정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별 추정작업
-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보정작업
- 추정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품질 확인 작업

다음의 (그림 1)은 ONC 방법론의 주요단계를 표본설계, 매칭작업, 추정작업, 보정작업, 품질 확인 작업으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를 흐름도의 형태로 보여준다.

1절 센서스 범위조사

2001년의 센서스 범위조사는 1991년의 사후조사인 ‘센서스 타당성조사’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범위조사는 과소집계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본조사의 내용오류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도의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둘째, 범위조사의 표본 수는 36만 가구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1991년의 타당성조사는 2만 가구 정도의 소규모 표본조사가 불가피하였는데, 그 이유는 센서스 본조사의 응답오류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인적·물적 자원을 너무 많이 할애하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1991년 사후조사의 실패를 지적했던 것처럼, 영국 통계청은 2만 가구 정도의 소규모 표본조사를 토대하여 우리나라의 시군구(市郡區) 급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소지역 단위는 물론 전국수준에서도 집계범위를 제대로 평가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당시 전문가들은 센서스 본조사의 과소집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 센서스 범위조사의 표본규모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 센서스 범위조사는 영국 전역의 하위지역과 성·연령별 인구속성변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과소집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추정하여,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결과를 보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림 1) One Number Census 방법론의 플로 차트



(그림 2) 영국의 우편번호체계

A9 9AA
 A99 9AA 영국의 우편번호는 5-7개의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다.
 A9A 9AA
 AA9 9AA
 AA99 9AA
 A99A 9AA

구성포맷	한글명칭	영문명칭	개수
A or AA	우편번호 지역	Postcode Area	124
9, 99 or 9A	우편번호 구역	Postcode District	3,064
9	우편번호 섹터	Postcode Sector	11,598
AA	우편번호 단위	Postcode Unit	1,780,000
우편번호 주소 Postcode Address			27,000,000

**영국의 우편번호는 대략 15개의 주소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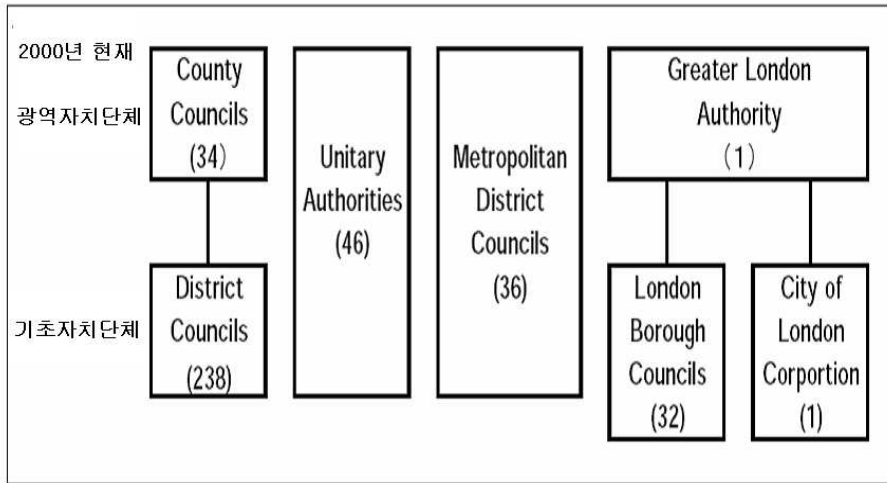
센서스 범위조사는 영국의 우정사업본부(Royal Mail)가 관리하는 영국 전역의 178만 우편번호 중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19,500개의 우편번호를 대상으로 36만 가구를 현지실사하고, 개인과 가구의 수를 100% 완전무결하게 파악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설정하였다(영국의 우편번호체계에 대해서는 (그림 2)를 참고할 것). 센서스 범위조사는 사후조사의 일반적 관례대로, 대규모의 공동보호시설(Communal Establishment, 예: 교도소, 병원, 장기요양소 등)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들 시설인구로 인한 추정작업의 문제점은 품질 확인 작업에서 검토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또 센서스 범위조사의 현지실사에서 조사지역의 우편번호가 우범지역이나 불량주택지대여서 다른 곳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1. 추정지역

센서스 범위조사의 표본설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되어, 이들 각각에 대해서 과소집계의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영국 통계청은 영국 전역에 433개의 지방자치단체⁵⁾가 있어서, 직접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데는

5) 2001년 ONC 프로젝트에서 추정인구를 작성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 현재, 잉글랜드 353개, 웨일즈 22개, 스코틀랜드 32개, 북아일랜드 26개 등 433개로 구성되어 있다(日本自治体國際化協會, 2000). 잉글랜드의 경우는 이층 행정구역으로(<그림 9-3>을 참고할 것),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Unitary Authority 46개, Metropolitan District Council 36개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만을 가지는 District Council 238개, London Borough, Council 32개 City of London Corporation 1개를 합쳐서 353개로 구성되어 있다. 잉글랜드에서 County Council 34개(우리나라의 시도급 자치단체보다는 규모가 작고, 시군구급 자치단체보다는 규모가 큼)와 Greater London Authority(런던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의 기능만을 가진다. 웨일즈는 22개가 모두 1층 행정구역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 한편, 스코틀랜드 District Council 26개, 북아일랜드 Unitary Council 32개가 있다. 이들도 모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일층의 통합적 지

(그림 3) 영국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2000년 현재



100만 가구 이상(2001년 기준 2,330만 총가구의 약 4%에 해당)의 표본이 필요한데, 이 정도로 대규모의 표본조사를 계획한다는 것은 인원배치나 재정현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영국 전역에 대하여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하여 433개 지방자치단체(단체별 평균인구 12만 명)를 112개 지역으로 분할하였다. 이들 지역은 추정지역(Estimation Area) 또는 설계집단(Design Group)으로 명명되었으며, 각각의 추정지역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LAD, Local Authority District)로 구성된 경우도 있었고, 둘 또는 셋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추정지역의 설계 작업에서 추정지역들의 규모나 동질성과 둘 또는 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추정지역으로 묶을 때 생겨나는 현실적 또는 정책적 문제점들이 충분히 조화될 수 있게끔 배려하였다. 추정지역의 설계 작업을 통하여 각각의 추정지역에 대하여 통계적 추정방법론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정지역의 과소집계 유형에 대하여 몇 가지 가정을 설정하게 되면 각각의 추정지역에 대하여 직접추정을 하더라도 상당정도의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최소한 3~4개의 표본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표본 선정 작업에서 특별히 배려하였다. 이 문제는 ONC 추정방법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3항의 추정작업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2. 표본설계

ONC 프로젝트는 112개의 추정지역(잉글랜드와 웨일즈 101개, 스코틀랜드 7개, 북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 4개)에 대하여 영국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평균 15개의 주소로 구성된 178만 개의 우편번호 중에서 19,500개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추정 지역마다 별개의 독립된 표본을 선정하였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집락표집법을 이용하여 우편번호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이유는 실용적 목적과 통계적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 구체적으로, 우편번호 주소파일(Postcode Address File)은 센서스 본조사에 이용되는 가구명부와는 달라서 대부분의 가구주는 그들이 살고 있는 가구의 우편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편번호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일어나는 문제점은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주소나 집 번지를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편번호별로 가구 수를 변수화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편번호를 직접 층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112개의 추정지역에 대하여 채택된 표집전략은 개별 우편번호를 1991년 센서스 조사구(CED)와 연계하여, 해당 우편번호에 대하여 1991년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변수정보를 이용하는 2단계 표집방법(two-stage sampling method)을 구사하는 것이었다.

먼저, 1991년 센서스 조사구의 표본을 선정하여, 과소집계의 정도가 조사구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었을 것이라는 가정과 함께, 집계난이도 지표에 따라 센서스 조사구의 표본을 층화하였다(층화작업은 다음에 집계난이도 지표에서 설명할 것이다). 센서스 범위조사의 표본설계는 당초에 우편번호를 단위로 하는 지역 간 표집편차를 최소화하여, 추정인구를 상당정도 정확하게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1년 센서스 조사구도 1991년 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표본편차를 통제하기 위하여 24개의 성·연령(5세 간격)별 하위집단⁶⁾에 대하여 층화작업을 진행하였다.

둘째로, 1991년 센서스 조사구가 선정되면, 제2단계 표집절차는 선정된 1991년 센서스 조사구 안에서 우편번호의 가구 수를 기준으로 3~5개 정도의 우편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다.

3. 집계난이도 지표

집계난이도 지표는 1991년 센서스의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여 실업률, 외국어(출생국가) 사용여부, 다가구주택, 세입자 동거여부, 1991년 집계누락 여부 등의 구성변수를 추출하여 작성되었다. 이 지표는 과소집계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6) 인적·물적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여, 센서스 범위조사는 24개의 성·연령집단(남녀별)과 12개의 연령구간(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표집단계의 층화작업은 다음에 보는 추정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2001년 센서스 예비조사에서도 무응답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국 전체를 집계단이기도 지표틀 기준으로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령,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 지표 점수를 하위 40%는 집계가 쉬운 “1점”, 다음 40%는 집계가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2점”, 그리고 상위 20%는 집계가 어려운 “3점”으로 구분하였다. 집계단이기도 지표틀 작성하는 이유는 센서스 조사구의 모든 유형에 대하여 센서스 본조사의 모집단을 반영하도록 표본을 골고루 분산하여 과소집계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ONC 프로젝트는 집계단이기도와 관련하여 축적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표가 당시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구성이 가능했던 최고의 지표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센서스 범위조사가 집계단이기도 지표의 점수가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에서 모두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ONC 프로젝트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였다. 집계단이기도 지표의 점수가 높은 지역은 3개 층화집단 간에 집계편차의 차이를 축소하기 위하여 과다 표집되었다. 집계단이기도 지표는 1991~2001년의 10년간에 일어난 사생활 보호, 보안의식, 생활양식의 변화, 거주형태의 다양화, 공동체 의식의 쇠퇴 등 조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과소집계 유형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설계하였다. 그러나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예: 우범지대와 불량주택지역의 재개발사업)는 1991년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변수정보를 가공하여 구성한 집계단이기도 지표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4. 표본규모

표본규모는 센서스 범위조사의 조사 설계에서 인원배치나 예산책정과 관련하여 핵심적 관심영역이 되었다. 표본설계 작업에서 개별 추정지역 총인구에 대하여, 상당수준의 정확성, 곧 1% 이하의 상대적 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추정치에 표준오차를 추정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만을 허용하는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는 36만 가구에 해당하는 대략 4,000~5,000개 정도의 전국을 대표하는 센서스 조사구의 표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집계단이기도 지표의 층화집단에 대하여 표집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국 수준의 표본설계에 착수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센서스 조사구에 대하여 집계단이기도 지표의 층화집단별로 총표본수를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또 위에서 설명한 표집율은 표본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112개의 추정지역 안에 있는 센서스 조사구의 가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지표점수별 층화집단에 대한 표집율은 지표점수가 1점인 집단(집계가 쉬운 지역)을 3.4%, 지표점수가 2점인 집단(집계가 쉽지도 어렵지

도 낮은 중간지역)을 3.7%, 지표점수가 3점인 집단(집계가 어려운 지역)을 4.5%로 설정하였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 101개 추정지역의 모든 센서스 조사구(CED)에 대하여 3~5개의 우편번호가 선정되었으며, 그 결과 16,400개의 우편번호를 전체 표본으로 하여 우편번호 안의 32만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표본조사의 골격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한편,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7개의 추정지역에 대하여 2,400개의 우편번호에서 4만 가구를 표집하였으며 북아일랜드에서는 4개의 추정지역에 대하여 700개의 우편번호에 대하여 1만 가구를 현지 실사하는 별도의 센서스 범위조사가 실시되었다.

5. 조사방법론

센서스 범위조사의 현장실사는 2001년 센서스 본조사가 실시되고 3.5주 후에 실시되었다. 이것은 조사표를 토대로 하는 면접자 조사로서, 나중의 매칭작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응답자의 시간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가구특성이나 인구학적 속성 등 센서스 본조사의 핵심적 질문만을 반복 조사하였다(Brown, 2000; Pereira, 2002). 조사방법은 가능한 한 조사대상자의 응답률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조사대상자와 접촉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별주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면접원의 작업분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접 우편번호를 하나로 모아서, 1인당 90~200가구의 면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ONC 프로젝트는 센서스 범위조사의 면접원들에게는 100% 완전집계가 가능하도록 종합적 면접훈련을 실시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센서스 범위조사의 면접원들은 대부분 현장조사 경험이 미숙한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영국 통계청에 소속된 80명 정도의 숙련된 면접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조사표 작성에 협조를 하지 않는 우편번호에서 활동하는 면접원들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센서스 범위조사의 대원칙은 센서스 본조사와는 독립적으로 실시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관련 쟁점을 추정작업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ONC 프로젝트에서 센서스 본조사의 과소집계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최소요건이기도 하였다. 두 조사 간에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센서스 본조사가 누락한 개인과 가구를 센서스 범위조사도 파악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두 조사의 독립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센서스 범위조사 면접원에게 해당지역의 센서스 본조사의 가구명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면접원들에게 센서스 범위조사의 현지실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우편번호의 지도만을 제공하였으며 그들은 우편번호 안에 있는 모든 주소자의 가구들을

면접하여, 해당지역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재집계하려고 노력하였다. 면접원들은 우편번호 안의 가구명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번호에 포함된 가구를 모두 면접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접원들에게 우편번호의 지역경계를 최종 점검하도록 요구하였다.

추가적으로 센서스 범위조사가 센서스 본조사의 결과에 오염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센서스 범위조사가 센서스 본조사의 현지실사에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 표본으로 추출된 우편번호들의 리스트는 기밀서류로 취급하고, 그것이 무단 유출된 지역은 우편번호의 리스트를 다시 추출하도록 하였다.
- 센서스 본조사 관리자는 센서스 범위조사의 집계요원으로 참가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센서스 범위조사 관리자는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요원으로 참가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센서스 본조사 집계요원이 센서스 범위조사의 집계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그들이 집계했던 동일지역에서 집계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센서스 본조사가 종료될 까지 그들이 배정받게 될 우편번호에 대하여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

센서스 범위조사의 추정 응답률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확인 가능한 거주가구의 89%였으며, 추후에 우편으로 반송된 조사표를 포함하면, 실제응답률이 91%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응답률은 각각 95%와 92%에 이르렀다.

2절 매칭작업

센서스 본조사와 범위조사의 실사작업이 끝나고 각각 수집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나면 센서스 본조사와 범위조사의 응답내용을 1: 1로 짝짓는 매칭작업을 실시하였다. 매칭작업은 크게 자동매칭과 수동매칭으로 구분하였다. 매칭작업의 결과는 센서스 본조사에서 누락된 개인과 가구의 수를 추정하는 작업을 위하여 그대로 보관하였다. 매칭작업을 토대로 작성되는 추정결과에 편향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칭작업의 일차적 목표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두 조사의 응답내용을 매칭하는 것인데, 매칭오류를 0.1% 이하로 최소화하는 것이 최종목표로 설정되었다.

특정의 개인 센서스 본조사와 범위조사에서 모두 집계되어 있으면, 그것은 매칭에 성공한 것이 되지만, 매칭실패는 인구추정치를 상향조정해야 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다. 가령, 매칭실패율이 0.1%이면, 추정작업에서 작성되는 인구추정치에 0.1%의 편향성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ONC 프로젝트는 다양한 수준의 품질확인과정을 거쳐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단계의 매칭절차를 개발하였다.

개별 우편번호의 개인과 가구들에 대한 매칭작업의 5단계 절차는 ① 정밀매칭 ② 확률매칭 ③ 수동해법 ④ 수동매칭 ⑤ 품질확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의 개요는 (그림 9-4)에 흐름도의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그것의 특성은 아래에서 상세히 기술하도록 한다(ONS, 2002,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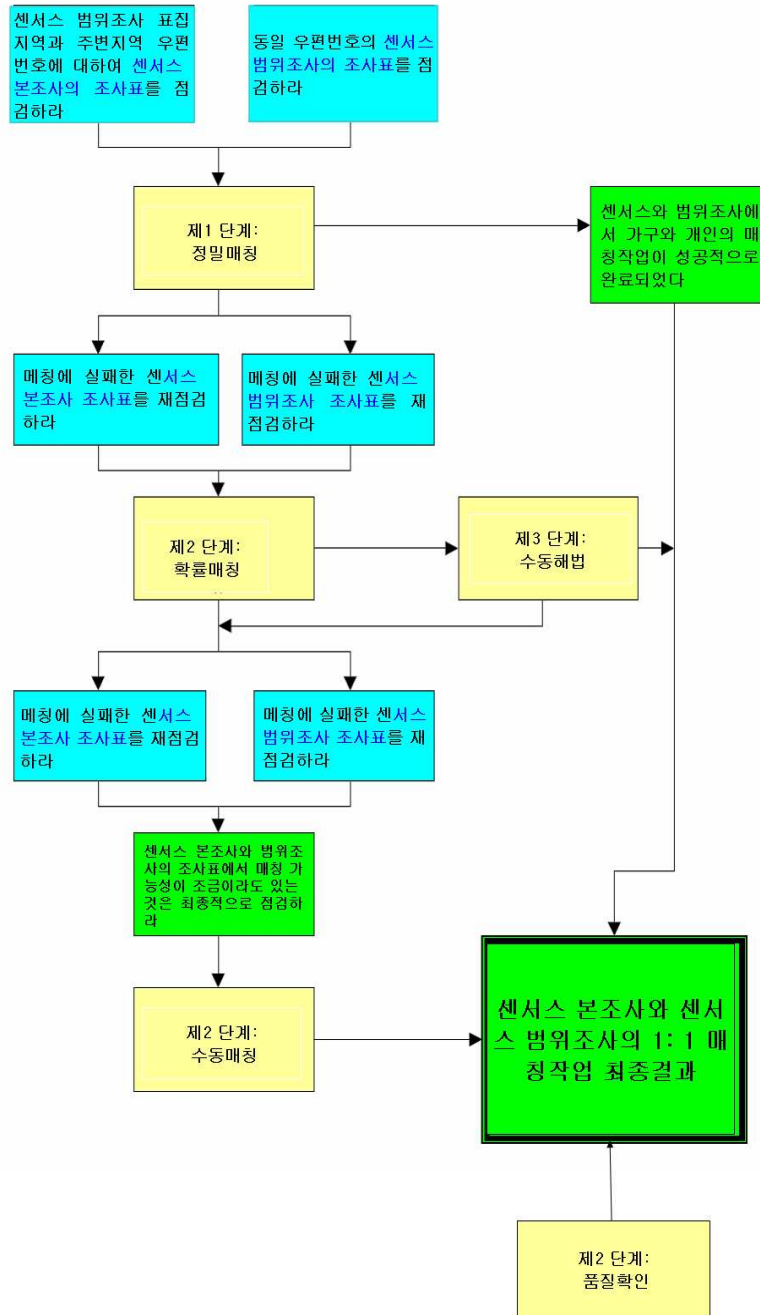
제1단계: 정밀매칭

먼저, 센서스 범위조사와 본조사의 응답내용에서 핵심변수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매칭되는 경우이다. 이것을 간단히 정밀매칭(exact matching)이라고 부른다. 가구의 정밀매칭에 이용하는 핵심변수는 우편번호, 주소/번지, 주택의 종류, 가구원수, 가구주의 성 등 5개 변수이다. 개인의 정밀매칭에는 성, 이름, 출생연월,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등 5개 변수를 사용한다. 센서스 범위조사와 본조사에서 동시에 파악된 가구의 경우 그 가구에 등재된 모든 개인들의 핵심변수가 문제없이 자동적으로 연계되면 그 가구는 매칭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제2단계: 확률매칭

확률매칭(probability matching)은 제1단계에서 매칭에 실패한 개인과 가구에 대하여, 제1단계와 동일한 핵심변수들을 사용하여 시도하는 작업이다. 센서스 범위조사와 본조사의 핵심변수 간에 일치도를 토대로, 확률 가중치(probability weight)를 한 짝을 이루는 두 조사표에 적용하게 되어 있다. 확률 가중치가 크면, 두 조사표 간에 일치도가 큰 것으로 간주되었다. 가령, 한 짝을 이루는 두 조사표에서 핵심변수 중 하나만을 예외로 하고 다른 변수들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일치하지 않는 변수는 기재오류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높은 확률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확률 가중치가 높은 가구들의 짝을 연계하여, 그 가구 안에 기재된 모든 개인을 비교대상으로 매칭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대단히 유사한 특성을 갖는 가구는 1:1 매칭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4) 매칭작업의 기본 플로차트



ONC 프로젝트는 확률 가중치의 초기 값을 1999년 센서스 사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설정하였으며, 2001년 매칭작업에서는 주요 단계마다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하였다.

제3단계: 수동해법

가구나 개인의 짝들이 일치도는 상당 수준에 이르지만, 확률매칭에 실패한 경우에는 수동해법(clerical resolution)을 시도하였다. 수동해법의 단계는 매칭작업의 프로그

램 관리자는 1:1로 제시된 짝들이 매칭 되느냐 아니냐를 단순히 판단하는 것으로 끝났다. ONC 프로젝트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두 조사표의 기록들의 1:1로 짝을 맞추기 위하여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 탐색작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제4단계: 수동매칭

수동매칭(clerical matching) 작업은 센서스 범위조사에서 매칭에 실패한 개인과 가구를 대상으로 센서스 본조사의 조사표를 수동적으로 1: 1로 짝짓는 탐색작업을 포함하였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매칭작업을 돕기 위하여 센서스 본조사와 범위조사의 조사표에 직접 접근하며, ONC 프로젝트를 위하여 특별히 개발한 컴퓨터매칭시스템(CAMS, Computer Assisted Matching System)의 지원을 받았다.

제5단계: 품질확인

매칭작업 일반요원이 수행한 작업결과를 토대로, 전문요원은 매칭작업이 정확하게 수행되었는가를 최초 200개의 기록을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시점에서, 작업결과의 10%에 대해서만 품질 확인 작업을 거쳤다. 물론 전문요원들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결과를 하나라도 발견하면, 그 기록을 기준으로 200개의 기록을 추가적으로 점검하였다. 일반요원은 어떤 기록에 대해서도 ‘매칭불능’으로 표시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었다. 일반요원은 특정기록에 대해서 정확한 짝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기록을 전문요원에게 넘겨서 점검하도록 하였다.

품질확인팀은 전문요원의 작업결과를 다시 점검하여 품질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다. 품질확인팀은 200개의 최초기록에 대한 작업결과가 매칭오류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매칭에 성공한 기록과 실패한 기록들을 모두 100%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재점검하였다. 일단 그 수준에 도달하고 나서는, 전문요원이 수행한 작업결과는 10%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였다. 품질확인팀은 전체 지역에 대하여 매칭이 불가능한 기록들 모두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다. 센서스 범위조사의 표본이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방의 변경지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추정지역을 대상으로 매칭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 작업을 실시하였다.

품질확인팀은 매칭작업을 어렵게 하는 조사표 기록의 유형들을 조사하였다. 이 유형들 가운데 1:1로 짝을 짓는 매칭작업이 아니라 1:다(多) (또는 다(多): 1)로 짝을 짓는 매칭작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센서스 본조사의 조사표가 주소지에 하나의 가구만이 있는 것으로 기재한데 반하여 센서스 범위조사는 같은 주소지에 동일한 개인을

그대로 포함하지만 둘 이상의 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또는 센서스 본조사와 범위조사의 응답이 뒤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다)에 발생하였다.

매칭작업에서 품질확인 of 마지막 요소는 이원매칭전략(double matching strategy)이다. 이것은 추정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추정지역 전체를 독립적으로 재매칭하여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두 개의 작업결과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을 연구하고, 매칭훈련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다. ONC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최초의 10개 추정지역에 대해서 재매칭 작업을 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데이터처리 스케줄의 변동으로 마지막 몇 개를 제외하고 112개 추정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재매칭 작업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들 몇 개의 마지막 추정지역은 재매칭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품질확인 of 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ONC 프로젝트는 이들 추정지역에 대한 매칭작업 of 최종결과가 이원매칭전략을 채택한 추정지역 of 매칭작업 of 최종결과와 동일한 수준에 있도록 품질확인에 노력을 기울였다.

3절 추정작업

추정작업은 112개의 추정지역과 43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영국 전역의 인구를 추정하는 절차를 포함하는데, 이 작업은 다음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ONS, 200b, 2000c; Brown, Abbot, and Diamond, 2006).

- 제1단계에서는 센서스 범위조사에서 표집된 우편번호의 실제인구를 추정하기 위하여, 2001년 센서스 본조사와 센서스 범위조사의 조사표를 매칭한 최종결과를 토대로, 이원시스템 추정법을 이용한다.
- 제2단계는 표준적 표본조사 추정기법의 수정을 바탕으로 이원시스템 추정법의 적용을 우편번호 표집지역에서 112개 추정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이 단계에서 추정지역별로 24개 성·연령(5세 간격)별 하위인구 집단에 대하여 과소집계의 정도를 추정한다. 센서스 범위조사의 표본설계 특히 표본규모 때문에, 추정지역 또는 그 이상의 지역(예: 영국 전체)에 대해서만 과소집계를 상당히 정확하게 직접 추정할 수 있다.
- 제3단계의 추정작업은 제2단계에서 작성된 추정지역별 추정인구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추정지역별 과소집계의 정도를 추정지역을 구성하는 433개의 지방자치단체단체로 할당하는 절차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추정인구는 ONC 프로젝트의 보정작업에서 사용되는 최종인구로 이용되며, 제5항에서

설명하는 품질 확인 작업의 일차적 대상이 된다.

1. 이원시스템 추정법

센서스 범위조사가 현지 실시한 우편번호 안의 총인구는 이원시스템 추정법이라고 불리는 과소집계 추정을 위한 표준적 기법을 사용하였다(<그림 9-5>의 이원시스템 추정법의 기본구조 시스템 추정법의 구조를 참고할 것). 이 방법은 찬드라세카와 더밍이 1940년대에 개발한 것으로(Chandraseka and Deming, 1949), 미국의 인구조사국이 1980년과 1990년 센서스에서 과소집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이용하였다. 이원시스템 추정법은 센서스 본조사와 이와는 별도의 재집계 결과, 여기서는 센서스 범위조사의 응답내용을 조합하여, 센서스 범위조사 실시지역에서 센서스 본조사 또는 범위조사에서 조사대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전제로 하여, 실제인구를 추정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ONS, 200b; Brown et al, 1999; Brown, Abbot, and Diamond, 2006).

(그림 5) 이원시스템 추정법(DSE)의 기본구조

조사별 집계여부		센서스 범위조사		
		예	아니오	합계
센서스 본조사	예	n_{11}	n_{10}	n_{1+}
	아니오	n_{01}	n_{00}	n_{0+}
	합계	n_{+1}	n_{+0}	n_{++}

추정의 대상: n_{++} (우편번호 안에서 집계되어야 개인 또는 가구의 수)

이원시스템 추정법의 가정: 센서스 본조사와 센서스 범위조사는 별도의 조사이다.

$$\therefore n_{++} = n_{+1} \times n_{1+} \div n_{11}$$

① 이원시스템 추정법(DSE)은 센서스 범위조사 또는 본조사에서, 특정의 개인 또는 가구가 집계될 확률이 대상인구의 어떤 하위집단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

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상 인구에 이 가정을 아무런 수정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추정결과에 편향(偏向)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센서스 본조사와 범 위조사가 특정의 개인 또는 가구를 집계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상호독립이라고 가정 한다. 그러나 이 가정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아래 참조할 것).

③ 특정 리스트에서 집계된 개인 또는 가구가 다른 리스트에서 집계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자료원에 대한 완전무결한 100%의 매칭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매칭오류는 이원시스템 추정법에 편향성을 야기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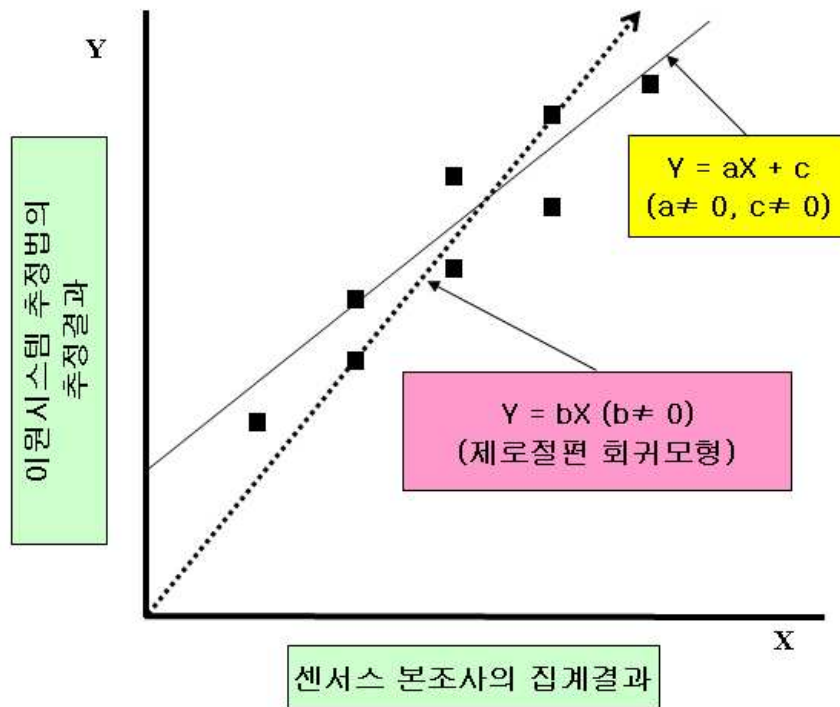
위의 조건들은 추정수치의 편향성을 없애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필요조건들이 다. 가정 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집계난이도 지표를 기준으로 총화된 우편 번호 안에서 해당인구를 24개의 성·연령(5세 간격)별로 하위집단으로 분할하여, 이들 하위집단에 대하여 이원시스템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현지실사의 운영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본 두 조사의 상호독립성’과 더불어, 가정 ②의 타당성도 확보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 ②의 실패로 말미암아 생겨난 종속성의 문제가 추정결과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센서스 본조사와 범 위조사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두 조사 간에 약간의 종속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원시스템 추정법은 비교적 강력한 추정결과를 도출하였다(Brown, Abbot, and Diamond, 2006). 그러나 문제는 ‘두 조사의 응답률이 높아야 한다’는 가정설정이 사실상 실패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종속성 문제를 보정하는 절차가 이원 시스템 추정법의 현장적용에 필수요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종속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나중에 다시 설명한다.

가정 ③의 ‘매칭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가정도 완전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제2항에서 설명한 매칭작업은 매칭오류, 특히 매칭실패의 확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매칭오류로 인한 추정실패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2. 추정지역별 추정작업

추정작업의 제2단계로서, 표준적 표본조사 추정기법을 토대로 이원시스템 추정법의 적용을 19,500개의 우편번호에서 112개의 추정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절차가 진행 되었다(ONS, 200b). 개별 우편번호 표집지역을 대상으로 제로절편 회귀모형 (zero-intercept regression model)을 구축하여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결과와 이원시스

(그림 6) 추정지역의 인구추정을 위한 제로절편 회귀모형의 구조



템 추정법의 추정결과를 각각 독립변수(X)와 종속변수(Y)로 설정하였다(그림 6)을 참고할 것). 이 회귀모형은 개별 우편번호 표집지역 안의 2001년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결과와 이원시스템 추정법의 추정결과는 상호 비례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1991년 센서스 본조사 결과에서 과소집계의 수준은 지역특성은 물론 성·연령별 하위집단에서도 편차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ONC 프로젝트는 추정작업에서 개별 추정지역에서 집계난이도 지표별 계층 안에서 24개의 성·연령(5세 간격)별 하위집단의 인구를 추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로절편 회귀모형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위에서 설명한 제로절편 회귀모형이 바로 표준적 비추정법(比推定法, ratio estimation technique)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결과에서 인구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모형실패를 야기하기 쉽고, 인구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정결과에 편향성이 생겨나기 쉽다. ONC 프로젝트는 후속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표준적 비추정법을 변형하여 이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뿐만 아니라 이상점(異狀点)을 취급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영국의 ONC 프로젝트는 추정지역의 인구를 추정하기 위하여 수정비추정법(修正比推定法, modified ratio estimation technique)을 개발하였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집

계난이도별로 층화집단을 만들고 성·연령별 하위집단에 대하여 인구를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추정인구의 작성결과에 대한 직접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단정보를 추가하였다. 추정지역의 추정작업에서 표본규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집계난이도별 층화집단이나 성·연령별 하위집단은 병합하였으며 이것이 비록 인위적이기는 하지만 강력한 추정결과를 산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추정작업에서 개별 추정지역에 대하여 인구를 추정할 때 표집오차의 추정치도 계산하여 추정결과와 신뢰구간을 작성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추정지역의 경우, 설계방법과 추정방법이 모두 복잡하기 때문에 일차표집단위들(PSUs, Primary Sampling Units)을 계속하여 배제하는 재크나이프 추정방법(Jackknife estim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우편번호 간 표집오차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별 추정작업

제3단계의 추정작업은 영국 전역의 43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정작업이다(ONS, 2000c). ONC 프로젝트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즈가 101개 추정지역 375개 지방자치단체, 스코틀랜드가 7개 추정지역 32개 지방자치단체, 북아일랜드가 4개 추정지역 2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영국 전역의 112개 추정지역은 많은 경우, 하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었다. 433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센서스 범위조사의 인원·예산계약으로 인하여 과소집계의 정도를 직접 추정할 수 있는 우편번호들의 표본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지역추정법(小地域推定法, small area estimation technique)의 적용이 불가피하였다.

비(非) 편향의 추정인구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112개 추정지역의 인구를 추정하는데 사용했던 표준적 직접추정법의 적용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43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나라의 도농 통합시(統合市)나 농촌 군(郡)의 경우와 같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의 경우에는 센서스 범위조사의 표본규모도 작기 때문에, 소지역 단위에 대한 추정결과와 표준오차는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추정작업에서는 유효표본의 규모를 늘리고 추정결과와 표준오차를 줄이는 간접추정법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방법은 112개의 추정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여 적합화된 모형이 433개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그 지역에 대한 추정인구를 계산하는 일종의 합성추정법(合成推定法, synthetic estimation technique)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의 문제는 규모가 큰 지역에서는 추정인구의 표준오차가 상대적으로 적겠지만,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추정인구의 표준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데 있었다. 이 때문에, 직접추정법과 간접추정법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절충안을 채택하여, 규모가 작은 지역이 갖는 특유한 변수의 효과를 규모가 큰 지역의 직접추정모형에 추가적으로 도입하였다. 소지역 특유의 변수효과는 합성추정법을 토대로 한 추정인구와는 차이가 나며, 추정결과의 분산이 약간 증가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소지역 단위에 대한 추정인구의 편향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정지역에 대한 직접추정법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별 우편번호 표집지역에 대하여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결과와 이원시스템 추정법의 추정결과를 연계하는 제로절편 회귀모형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모형은 지방자치단체별 고정효과(固定效果)를 고려하기 위하여 추정지역 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적용되었다. 이 지방자치단체별 고정효과는 추정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제로라고 가정하였다. 이모형은 (1) 추정지역 전체에 대한 성·연령(5세 간격)별 하위집단의 기울기 파라미터와 (2) 지방자치단체 간의 편차를 고려하는 기울기의 상하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충안은 추정지역 안의 집계난이도별 하위집단들에 대하여 따로따로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3개의 집계난이도별 인구집단과 24개의 성·연령(5세 간격)별 하위인구 집단에 대하여 433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정인구 작성결과는 보정작업과 품질 확인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4절 보정작업

보정작업의 단계를 4개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범위 가중치의 설정: 이 작업을 위하여, 센서스 범위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센서스 본조사에서 일어난 과소집계 정도와 특성을 추정한다. 매칭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과소집계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고, 범위 가중치를 계산한다. 범위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두 모형이 구축되었는데, 그것은 가구 집계범위를 다루는 모형과 집계된 가구를 대상으로 개인의 집계범위를 다루는 모형으로 이루어졌다.
- 누락된 가구와 가구누락으로 파악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보정작업: 가구수준의 집계범위 가중치를 토대로, 보정된 가구는 센서스 본조사의 조사표가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센서스 면접원이 확인한 물리적 공간에 입지하도록 하였으며 무응답자 가구가 없으면, 유사한 특성의 가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에 입지하도록 하였다.

- 누락된 개인의 보정작업: 센서스 본조사에서 가구는 집계되었지만, 가구에서 개인이 누락된 경우.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기준자가 선정되었으며, 센서스 본조사의 응답과정에서 가구 내 가구원을 누락하였을 개연성이 가장 큰 가구의 유형에 누락된 개인을 보정하는 작업이다.
- 추정인구 수치의 캘러버레이션: 이 작업은 보정작업의 대상이 된 개인과 가구의 총수를 2001년 센서스 본조사에서 누락된 개인과 가구의 총수가 동일한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영국의 ONC 프로젝트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단순히 평가 작업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정작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ONS, 2002, 2005). 보정작업은 과소집계의 정도를 파악하고 난 후에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 센서스 본조사에서 누락된 개인과 가구의 변수정보를 센서스 본조사의 모든 문항에 대하여 보정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무응답이나 응답내용의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면, 조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자료보정작업을 실시한다. 영국의 센서스 데이터베이스 보정작업은 사실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특이한 것이었다. 보정작업에 이용된 방법은 우선 센서스 본조사에서 집계될 확률을 반영하는 범위가중치(coverage weight)의 계산에서 시작하였다. 이 가중치는 센서스 본조사에서 집계된 인구에 적용하여 기증자 방법(donor method)의 기준을 도출하는데 이용하며 이 기준에 따라 센서스 본조사에 집계된 개인과 가구의 정보를 누락된 가구와 개인의 정보에 복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Steele, Brown, and Chambers, 2002).

ONC 프로젝트의 추정인구는 추정지역별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정대상이 되어야 할 총인구수와 여타 특성에 대한 과소집계 유형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센서스 본조사가 집계과정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개인과 가구의 자세한 특성들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종합분석이 나왔다는 것은 ONC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개인이 집계에서 누락되는 원인은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가구가 집계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개인이 누락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가구에 대한 면접은 이루어졌으나 가구원 중의 일부가 집계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경우이다. 가구와 개인의 집계범위 가중치는 매칭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이것은 집계에서 누락된 개인과 가구의 주요특성을 결정하였다. ‘기증자 방법’(donor method)을 이용하여 다른 주요특성들도 보정작업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영국 통계청은 ONC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하여 직접응답이든 과소집계의 보정작업을 통해서든 영국 내 거주하는 개인과 가구의 100%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영국 통계청은 ONC 보정작업에서 2001년 센서스 본조사가 개인과 가구를 누락하지 않고 100% 정확하게 실시되었더라면 수집될 수 있는 자료들의 추정치를 대변하는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작성된 각종 표들은 모든 변수와 지역수준에 대해서 센서스 범위조사가 측정한 과소집계의 정도를 보완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5절 품질 확인 작업

영국 통계청은 ONC 추정인구에 대하여 광범위한 품질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절차는 ONC 방법론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결과가 전국수준은 물론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3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득력이 있는가를 진단하는 작업이다.

품질 확인 작업의 전반적 전략은 최고품질의 제2차 자료, 예컨대 행정자료, 인구자료, 질적 자료 등을 이용하여 ONC 프로젝트의 최종결과와 비교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433개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24개의 성·연령별 하위인구 집단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실시되었다. 제2차 자료에서 모든 정보가 수집되어, 해당 지역과 관련 자료에 대하여 완전한 조감도가 그려질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자료는 어떤 경우에도 센서스 추정인구를 대체하지 못하였다. 실제, 행정자료의 취약성은 One Number Census 프로젝트의 개발과정에서도 확인되었고 삼원시스템 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인구를 산정할 때 신뢰도가 결여된 자료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영국의 통계청은 행정자료는 개인수준의 부정확성 때문에 ONC 추정작업에서 상당한 편향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영국 통계청은 특정지역의 경우 추가적 자료의 탐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징세자료는 매칭작업과 지역별 사례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 품질확인과정

품질확인과정은 추정지역별로 일련의 품질점검절차를 거치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연령, 성, 지역별로 작성된 자료, 영국 통계청이 작성한 연차별 연앙인구에서 추출된 자료, 집단수준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ONS, 1997). 영국의 행정자료와 자료공급기관은 (1) 환자등록부(National Health Service Information Agency) (2) 각종 급여를 수령하는 연금수급자와 아동급부 수급자 명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3) 재학생 명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4) 웨일즈 국회

(Welsh National Assembly) (5) 계속교육과 고등교육 등록학생 명부(Learning Skills Councils and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6) 형무소 수감자 명부(Home Office) (7) 영국 육해공군 근무요원 명부(Defense Analytical Service Agency) (8) 미국 육해공군 군사요원 명부(United States Air Force) 등이 있었다.

다양한 유형의 제2차 자료를 발굴하여, 각 지역에서 5세 간격 연령집단에 대하여 남녀별 인구수의 진단정보(diagnostic information) 곧 최대인구와 최소인구를 계산하였다. ONC 프로젝트의 최종 추정인구를 신뢰구간과 함께 이들의 진단범위, 곧 최대-최소인구와 비교하였다. 이들 진단범위는 센서스 실시 이전에 획득 가능한 인구수의 최고지표라고 할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이 센서스 본조사의 결과를 이들 진단수치에 따라 보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질적 자료도 가능하면 충분히 수집하여 해당지역의 조감도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질적 자료의 예로는 센서스 본조사나 범위조사의 피드백, 영국 통계청이 작성한 종전의 연앙 추정인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피드백 등을 포함하여, 각종 인구지표를 계산하기도 하였다. 이들 정보는 영국 통계청과 사우스햄턴대학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확인검토위원회(Quality Assurance Panel)에 제출되었다. 품질확인검토위원회는 112개 추정지역과 43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는 기준을 이용하였다.

2. 비상대응전략

영국 통계청은 ONC 추정인구와 “진단범위”와의 차이가 큰 경우, 표본규모와 이상점을 중심으로 ONC 추정인구와 “진단범위”에 대한 광범위한 내검 절차를 밟고,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비상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행정자료, 센서스 본조사와 범위조사의 현장실사, 데이터 입력, ONC 매칭 및 추정작업 등에서 얻은 질적 정보가 비상대응전략의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사용되었다.

현장실사의 어려움 등 센서스 범위조사의 문제가 과소집계의 정도를 제대로 추정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비상대응전략을 수립하였다. 보정작업을 위하여, 품질확인을 거친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였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사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여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례연구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전구수준의 센서스 최종결과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 비상대응전략을 전국수준에서 마련하였다(Abbot and Brown, 2006). 이 전략은 센서스 본조사와 범위조사의 집계범위가 너무 종속성이 큰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응전략이다. 물

론, 프로젝트 개발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센서스 범위조사가 모든 지역에서 과소집계를 탐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수준의 비상대응전략은 1991년 센서스와 유사하게 성비 또는 여타 인구정보를 목표로 설정하여 이원시스템 추정법의 추정방식을 변형하는 것이었다.

제 4 장 2001년 ONC 결과-문제점과 방법론 평가

본 장에서는 One Number Census 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전국수준, 추정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정인구의 일차결과를 공표하고 나서 수행된 각종 평가연구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만 선택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ONC 추정인구의 결과와 연앙추계인구의 차이를 검토하는 연구를 살펴보고 다음은 ONC 방법론 자체에 대한 영국통계청의 자체평가를 요약하기로 한다.

1절 ONC 추정결과의 문제점

1. ONC 전국 추정인구

이 부분에서는 영국의 One Number Census의 결과로 작성된 전국추정인구를 간단히 기술한다.

<표 1> 응답률과 남녀 5세 연령집단에 대한 95% 신뢰구간

(단위: %)

연령집단	합계	남자		여자	
	응답률(%)	응답률(%)	95% 신뢰구간(%)	응답률	95% 신뢰구간(%)
합계	93.9	93.3	0.2	94.4	0.2
0-4	90.4	90.4	0.4	90.4	0.4
5-9	92.4	92.4	0.4	92.4	0.5
10-14	93.6	93.4	0.5	93.7	0.4
15-19	92.6	92.5	0.4	92.7	0.4
20-24	87.8	87.0	0.7	88.6	0.6
25-29	88.8	87.6	0.6	89.9	0.5
30-34	91.7	90.5	0.5	92.8	0.4
35-39	93.3	92.2	0.4	94.3	0.3
40-44	94.6	93.9	0.4	95.4	0.3
45-49	95.7	95.3	0.3	96.2	0.3
50-54	96.6	96.2	0.3	97.0	0.3
55-59	97.1	96.7	0.3	97.4	0.2
60-64	97.3	97.1	0.3	97.5	0.3
65-69	97.6	97.5	0.3	97.7	0.2
70-74	97.8	97.8	0.3	97.8	0.2
75-79	97.8	97.8	0.3	97.8	0.3
80-84	97.2	97.0	0.4	97.3	0.3
85세 이상	97.2	96.8	0.5	97.3	0.4

영국 통계청은 ONC 방법론의 적용결과, 전국수준에서 총인구 5, 415.4만 명의 6.1%

가 2001년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영국 센서스 본조사의 응답률 또는 집계범위는 93.9% 수준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433개 지방자치단체의 집계범위에 대해서는 영국 통계청의 웹사이트 (<http://www.statistics.gov.uk>)에서 추가적으로 상세내역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추정치를 근거로 하여 영국 통계청은 2001년 센서스에서 총집계가구(2,200만)의 5.9%에 해당하는 130만 가구에 대하여 보정작업을 실시하였다. 보정작업을 거친 가구에서 250만 명의 가구원 정보가 보정되었는데, 이것은 총 집계인구의 4.9%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센서스 본조사에서 가구는 집계되었으나 가구원으로 누락된 경우가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것은 총 추정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 결과는 영국의 2001년 ONC 방법론의 적용결과 도출된 것이며 다음 항에서 ONC 추정결과를 두고 이행당사자들 간에 논란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을 검토하여 본다.

2. ONC 추정결과와 연앙추계인구의 차이

영국의 통계청이 ONC 방법론을 적용하여 영국의 전국수준과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37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추정인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하였을 때, 그 결과 수치는 그들의 자체평가대로, '최단 시일에 달성할 수 있었던 최고품질의 추정수치'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ONC 방법론의 적용결과 작성된 추정인구와 1991년 센서스의 인구집계와 출생·사망·이동 등 인구동태변수를 인구방정식에 적용하여 작성한 연앙추계인구 사이에는 110만 명이라는 큰 갭이 발생하였던 것이다(<표 >을 참고할 것)). 공교롭게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01년 인구추정의 결과에 대하여 지난 10년간에 걸쳐 끊임없이 수정이 가해지기도 했다. 이것은 결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우려감을 극대화하고 ONC 방법론에 대한 '신뢰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영국의 통계청은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인구와 ONC 프로젝트의 추정인구 사이에 생겨나는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인 심층 연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Chappell et al., 2005).

영국의 통계청은 먼저 ONC 추정인구와 연앙추계인구의 차이는 1) 1991년 장래인구추계의 기준인구 과다설정 2) 국제인구이동통계의 취약점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자체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그 차이가 주로 국제인구이동통계, 특히 출국통계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는 결론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었으며 이 때문에 추가적 연구 분석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영국 통계청은 추가적 연구 분석을 토대로 하여, 2003년 6월에는 국제인구이동통계의 수정결과, 2003년 9월에는 연앙추계인구를 하

향조정하는 결과를 공표하였다. ONC 지방자치단체 추정인구의 추가적인 수정결과는 2004년 9월에 공표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인구연구, 특히 맨체스터·웨스트민스터 사례연구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표 2> ONC 추정인구와 연앙추계인구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

연앙추계인구 - ONC 추정인구	1,140,000	관련 보고서의 링크
1991년 센서스 과소집계 추정 및 보정작업 실패	351,000	http://www.statistics.gov.uk/about/methodology_by_theme/revisions_to_population_estimates/introduction.asp
1992-2001년 국제인구이동통계, 특히 출국통계의 불완전성	305,000	
Longitudinal Study 보고서 결과(기타 연구성과 포함, 2003년 기준)	193,000	
인구차이 중 설명 불가능한 부분	291,000	
지방자치단체 인구연구	107,000	http://www.statistics.gov.uk/pdfdir/census0704.pdf
Longitudinal Study 보고서 최종결과(기타 연구 성과 포함, 2004년 9월)	-25,000	http://www.statistics.gov.uk/services/LS2001FirstRelease.asp
인구차이 중, 여전히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	209,000	

자료: ONS (2004), One Number Census: Evaluation Report p. 13 및 ONS 웹사이트 <http://www.ons.gov.uk/>

<표 2>는 2001년 연앙 추계인구와 2001년 ONC 추정인구 간의 차이를 요약하고 있다. 2001년 연앙 추계인구가 과다 추계된 요인은 2001년 기준인구의 과다설정(35만 1,000명)과 1991-2001년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역내국가간 발생했던 해외전출인구의 과소집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Longitudinal Study의 분석(19만 3,000명)과 지방자치단체 사례연구(10만 7,000명)는 ONC 추정인구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센서스 본조사가 누락한 인구를 센서스 범위조사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Longitudinal Study나 국제인구이동통계로는 물론 추후의 지방자치단체 사례연구를 토대한 보정결과도 여전히 2001년 연앙추계인구와 2001년 ONC 추정인구 간에는 20만 9,000명이라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통계청은 이에 대하여, 국제인구이동통계의 불완전성과 상주지(常住地) 개념의 불명확성에 기인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2절 ONC 추정결과의 평가연구

1. Longitudinal Study의 분석

영국의 Longitudinal Study는 1971년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인구 1%에 대하여 센서스 정보와 인구동태사건의 정보를 연계하는 일종의 코호트 연구이다. 이 연구는 1971년 이후 10년마다 실시된 센서스의 시점(곧, 1981년, 1991년, 2001년)마다 센서스 조사표의 기록과 인구동태사건의 변동내역의 관계를 검토하고 센서스 실시의 각 시점에서 누락된 개인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또 이 연구는 연구개시 초창기 10년 동안 발생하였던 감소요인의 유형(예: 원인불명의 전출요인, 센서스 기록과의 1:1 매칭 불가능)을 외삽 연장함으로써 당초의 표본에 포함된 조사대상자들의 누적적 감소요인을 추적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연구개시 초창기 10년 동안 발생했던 감소요인의 유형으로 해명이 불가능한 누적적 감소의 원인이 어느 정도 1991년과 2001년 센서스의 집계누락을 해명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영국 통계청은 ONC 방법론에 의한 성·연령별 추정인구가 전국수준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수치인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결과에서 젊은 연령층의 남자들이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과정에서 누락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사실을 근거로 영국 통계청은 2003년 9월에 2001년 연앙추계인구의 수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수정결과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인구에 19만 3,000명을 추가하였으며 이것은 수정 이전 추계인구의 0.36%에 해당하는 수치로 대부분은 25~34세의 젊은 연령층의 남자가 과소 집계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 Longitudinal Study에 의하여 확인된 과소집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ONC 프로젝트에서 센서스 본조사와 범위조사가 결코 독립적이지 못한데도 그것이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센서스 본조사에서 누락된 사람을 추정하는 이원시스템 추정법의 문제점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었다. 또 영국의 통계청은 센서스의 본조사나 범위조사가 서로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현지실사를 하지만 상호 독립적이지 못하게 되는 이유의 하나로, 젊은 연령층의 남자들이 센서스 본조사에서나 범위조사에서 체계적으로 누락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ONS, 2003a).

2. 지방자치단체 연구

영국 통계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표현된 우려감을

반영하여 ONC 추정인구가 편향성이 있을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인구연구를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연구가 있는 하나는 매칭연구이고(ONS, 2003b), 다른 하나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 사례연구인데(ONS, 2003c), 그 내용은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매칭연구

영국 통계청은 맨체스터·웨스트민스터 센서스 매칭연구(Census Manchester and Westminster Matching Study)에 착수하면서 ONC 추정인구의 품질 확인 작업의 일부로서 이 두지역이 극히 예외적인 이유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맨체스터는 ONC 추정인구와 행정자료 상의 인구 간에 괴리가 큰 지역이었다. 웨스트민스터는 1991년 센서스와 인구동태변수를 입력변수로 인구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연앙추계인구와 2001년 센서스의 결과수치 사이에 인구수의 차이가 큰 지역이었다. 매칭연구의 목적은 맨체스터·웨스트민스터 시청이 보관하고 있는 행정주소와 2001년 센서스 현지실사를 목적으로 영국 통계청이 수집한 가구명부의 차이를 해명하는 것이었다.

매칭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2001년 센서스의 본조사가 맨체스터의 경우는 1.2만 가구에서 1.6만 가구의 주소(2.6만 명의 추정인구에 해당하는 거주지)를 잘못 파악하고 있으며 웨스트민스터의 경우는 1.16만 가구에서 1.46만 가구의 주소(1.75만 명의 추정인구에 해당하는 거주지)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ONC 프로젝트가 집계누락을 추정하고 보정하는 작업을 위하여 계획된 것이기는 하지만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과정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ONC의 세련된 방법론으로도 그것을 제대로 보정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ONS, 2003b).

나. 사례연구

지방자치단체 사례연구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센서스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자료를 포함한 여타 자료원의 수치 사이에 생겨나는 차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착수한 사업이다(ONS, 2003c, Statistics Commission, 2003). 영국 통계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을 분석하여 ONC 프로젝트의 최종 추정수치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을 색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에서 문제점의 성격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3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ONC 프로젝트의 최종 추정수치는 적합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ONC 프로젝트의 최종 추정수치가 잘 맞아들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 통계청의 결론에 따르면 15개 지역에서 추정인구의 최종수치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3개 지역이 최종수치를 약간만 수정하면 되는데 반하여 맨체스터와 웨스트민스터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정작업에는 ONC 방법론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센서스 결과의 집계누락을 가져오는 위험요인과 지역의 특수한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약간의 변형된 방법을 사용하였다(ONS, 2003c).

이상의 보정작업 결과는 2001년 센서스를 기반으로 하는 추정인구의 최종수치에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 전체의 경우에 대하여 10만 7,000명을 추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절 One Number Census 방법론의 평가

이 부분에서는 영국 통계청이 ONC 방법론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한 각종 연구를 요약 정리한다. 이 분석의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 사례연구의 일부로서 실시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영국 통계청(ONS, 2005)의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 다른 보고서(Chappel and Dobbs, 2005)는 대도시, 특히 런던시 행정구를 중심으로 ONC 프로젝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비판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1. 조사설계

영국의 통계청은 범위조사의 표본설계는 성공적이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사실, 센서스 범위조사가 대규모의 표본조사이기는 하지만, 영국 전역의 112개 추정지역, 433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24개 성·연령(5세 간격)별 하위집단에 대해서 강력한 보정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원천재료를 제공할 수 있었던 사업임에 틀림없을 것이다(ONS, 2005,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03)

그러나 범위조사의 표본설계는 추정작업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는 표본설계가 균형설계(balanced design)나 아니나와 연동되어 있었다. 가령 제로절편 회귀추정법은 강력한 기법이 되기 위해서는 범위조사의 표본설계가 센서스 본조사의 모집단분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그 가정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제로절

편 회귀모형에 입각한 비추정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비상대응전략을 개발해야 했다. 그러나 분석단계에서 비상대응전략을 전격적으로 마련하기보다는 표본설계를 환골탈태하여 범위조사의 조사표본이 센서스 본조사의 모집단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집계난이도 지표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ONS, 2000, 2005). 이 지표는 범위조사의 표본을 증화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이었는데, 이 절차는 센서스 본조사에서 과소집계가 발생하는 경우 센서스 본조사의 모집단분포를 반영하여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집계난이도 지표가 제 1단계 증화변수이기는 하지만 외국인 비율, 다가구주택, 세입자 동거여부 등의 구성변수가 1991년 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한 것으로 이것이 당시 하위수준의 지역에 대해서 획득이 가능한 유일한 자료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맨체스터와 같이 1991년 센서스 이후에 대규모의 재개발이 일어난 지역도 있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에는 집계난이도 지표대로 증화작업을 진행했던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었으며 집계난이도 지표와 표본할당의 크기 사이에는 비례성이 파괴되어 표본할당의 균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좀 더 업데이트한 자료를 사용하여 집계난이도 지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센서스 범위조사의 표본설계를 환골탈태하지 않고서 증화작업에 필요한 구성변수를 업데이트시켜서 추정작업의 편향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수정의견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2. 매칭작업

ONC 프로젝트의 매칭작업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중대한 도전의 하나는 바로 어떻게 요구조건에 맞추어 1:1로 짝을 맞추는 매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다(Brown and Diamond, 2006). 매칭 정확성의 목표는 매칭오류가 0.1%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매칭 오류율은 매칭훈련을 받은 두 사람이 일관성이 없는 매칭결과를 찾으면서 별도로 매칭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두 사람의 매칭결과를 최종적으로 비교하여 측정될 수 있는 지표이다. 이것은 매칭 오류가 정교한 매칭을 가능하게 하는 제 3자 정보가 없는 경우 측정이 불가능한 체계적인 방법론상의 오류가 아니라면 거의 사무착오에 의해서만 발생할 가능성만을 가정하는 것이다. 모든 센서스 조사구에 대하여 정확성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유능한 매칭담당 요원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다양한 훈련과정을 통하여 매칭규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었다. 매칭규칙은 특정 기록이 매칭 불가능이라고 판정되기 위하여 각 수준의 매칭담당 직원들이 완성해야 할

탐색과정의 윤곽을 정확히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다. 매칭작업이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이원적 매칭절차에 의하여 제공되는 측정치를 기반으로 할 때 모든 센서스 조사구에 대해서 매칭의 정확성은 목표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추정작업

ONC 추정 방법론에 대한 평가연구는 제로절편 회귀모형, 바로 비추정법을 변형한 방법이 어떤 경우에는 과소집계의 추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ONS, 2005, Brown and Diamond, 2006). 이상점 전략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상점이라고 분류된 관측치가 오히려 표본을 대표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이상점은 어떤 면에서 “센서스 본조사의 실패”라는 극단적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떤 지역 가령, 웨스트민스터와 같은 곳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소지역추정 모형은 문제점이 없었으며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NS, 2005).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정인구가 표본규모나 이상점이 아닌 관측치 등으로 오히려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ONC 방법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센서스 본조사와 범위조사의 종속성이었다. 종속성을 측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로서 국제적으로 몇 가지 이론적 연구가 있지만 센서스 본조사의 추정·보정작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출판된 연구업적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었다. 영국 통계청의 연구는 ONC 방법론을 적용한 추정인구 최종수치에 종속성의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센서스 본조사와 범위조사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약간의 종속성이 추정인구의 최종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종속성 문제 때문에 임시대응방안으로 전국인구를 추정해야 할 개연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범위조사에서 높은 응답률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사 설계도 불구하고 종속성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Brown et al (2006)이 기술한 것처럼 이러한 편향성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종속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안을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종속성의 측정법으로 ONC 추정방법론의 우편번호 주소파일과 센서스의 가구리스트의 조합에서 도출한 지역별 가구집계를 가구수준의 이원시스템 추정법에 캘러버레이션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 작업은 가구 간 종속성을 허용하였으며 개인수준에서 종속성의 합성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모형의 개발로 이어졌다. 이것은 또 개인수준의 이원시스템 추정법을 보정하고 최종적으로 ONC 추정인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사

용되었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경우 종속성의 정도를 보정하여 추정한 결과, ONC 추정인구의 1차 공표결과에 23만 명을 추가하게 되었다. 이 추가수치는 쉽게 얻어진 수치가 아니었지만 그것은 이원시스템 추정법을 변형하여 ONC 추정·보정 작업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중대한 교훈을 남겼다.

4. 과다집계

영국의 2001년 ONC 프로젝트는 시종일관 유별나게 과소집계에 초점을 맞추었다(ONS, 2005). 과다집계는 영국, 특히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센서스에서 쟁점이 된 적이 없었으며 과다집계의 측정은 우선과제로 부각된 적도 없었다. 센서스 범위조사는 조사대상자들이 센서스 본조사의 실시시점에서 집계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다른 곳에 있었던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두 번 이상 집계될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매칭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과다집계는 0.1% 이하일 것이라는 추정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후속 연구들은 이러한 추정결과는 과소추정일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영국의 Longitudinal Study는 조사대상자 중에서 2번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0.38%에 이르렀다. 센서스의 개인별 데이터베이스에서 복본(複本) 조사표에 관한 연구는 이 결과를 지지하였는데, 0.4%의 복제 응답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1년 ONC 프로젝트에서 과다집계는 당초부터 심각한 의제로 채택된 적이 없었다.

5. 보정작업

ONC 보정작업과 관련된 쟁점들은 후속연구에서 제기된 것들이었다. 보정작업에 사용되는 모형들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미리 특정화된 모형들은 최적상태로의 보정작업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ONS, 2002, 2005). 보정모형들이 전반적으로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급 행정구역보다는 상급 행정구역에 모형을 적합화할 때 예측확률이 개선되었으며, 설득력 있는 결과가 나왔다. 영국 통계청은 2011년 센서스에서 사전에 특정화된 모형보다는 심층적 모형구축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정작업의 기증자 선정에 대한 평가연구에 의하면 보정시스템이 회귀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기증자로 동일 가구와 동일 개인을 선택하여 소지역의 보정작업은 동일 가구와 동일 개인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정시스템이

작동하는 제약조건과 보정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시스템에 주어지는 변화와 관련하여 생겨나는 것이었다. 결론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보정방법론에 과도한 제약조건이 추가된다는 사실이었다. 이 문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하여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 시간제약으로 전혀 쟁점화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묻혀버린 사안이었다. 그러나 영국 통계청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개발된 보정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였으며 방법론의 기본구조는 2011년의 보정작업을 진행하는 토대로서 아무런 손색이 없었다고 자체평가를 내리고 있다(ONS, 2005).

6. 품질 확인 작업과 관련된 문제

영국의 ONC 프로젝트는 품질확인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지만,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경우도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양호한 행정 및 지역정보가가 웨스트민스터와 맨체스터의 ONC 추정인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현지의 행정 및 지역정보를 얻는 절차를 품질확인과정의 일부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2001년 ONC가 넓은 의미에서 난(難)집계 인구를 인구집계에서 제대로 집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지만 왜 이들 인구집단의 유형, 특성, 그리고 이들이 센서스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 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들이 2001년 센서스의 일부로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집단을 제대로 조사하는 최선의 방법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집계가 쉬운 집단과 어려운 집단 간에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측정자원의 배치는 세심하게 배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추정지역의 인구규모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표본을 할당하여야 할 것인가는 그것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집계난이도 지표는 1991년 센서스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표가 2001년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집계지역에서는 효과적으로 과소집계를 측정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다. 영국 통계청은 ONC 방법론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통계청은 2011년의 ONC 프로젝트에서는 행정등록자료, 표본조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정보에서 최신 자료를 획득하여 집계난이도 지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추정지역별로 집계과정에서 난(難) 집계 집단을 보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01년의 경험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설계집단별로 인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지표를 확인하는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제 5 장 2011년 ONC 프로젝트의 운영목표

1절 운영목표의 개관

영국의 통계청은 2011년에도 2001년 ONC 프로젝트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1차적 목표로서 2011년 센서스 본조사에서 누락된 개인과 가구의 수치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자료를 보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2011년 ONC 프로젝트의 2차적 목표로 센서스 본조사의 과다집계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보정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2차적 목표는 2001년 ONC 프로젝트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국 통계청의 2011년 ONC 프로젝트에는 다른 작업 목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과소집계가 생겨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작업 목표는 매칭작업과 추정 작업을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하여 과소 집계된 개인과 가구의 수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 ONC 방법론의 타당성을 통계이용자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핵심목표이다. 통계이용자들이 센서스의 평가 및 보정작업의 결과를 신뢰하지 않으면 2011년 센서스 추정인구의 최종수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센서스 작업의 최종수치나 제표결과가 채택된 방법론에 의하여 심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계청은 적절한 통로로 세련된 재료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다.
- ONC 프로젝트는 이해당사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쉽고 간단한 방법론을 개발한다.

영국 통계청은 2011년의 기본전략으로서 ONC 방법론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면서 추정인구의 정확성에 대한 운영목표를 재설정하였다. 최종결과 추정치의 정확성(표집오차만 고려하는 경우)은 전국 추정인구는 95% 신뢰구간에서 0.1% 미만의 오차를 허용하고, 50만 명 인구의 지방자치단체(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대해서는 95%의 신뢰구간에서 1% 미만의 오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24개 성·연령(5세 간격)별 추정인구도 최소오차만을 허용하는 것을 작업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2011년의 ONC 추정인구도 그 정확성이 2001년의 ONC 추정인구와 동일수준에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 전략은 방법론, 특히 센서스

범위조사의 표본설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1년 ONC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는 2001년 센서스보다 품질이 우수한 최종수치를 제공하고, 2001년 센서스에서 정확성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보다 더 정확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가령, 지방자치단체의 총인구의 오차가 6.1%보다 큰 지역을 없애는 것이다).

2절 전략검토

2005년 중, 영국 통계청은 2011년 ONC 프로젝트의 추진과 관련하여 고위급 대안을 모색하는 전략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검토회의에서 국제적 관행과 집계범위 품질 확인 작업에서 이용 가능한 원천재료의 출처를 검토하였다. 이 검토과정에서 재차 명확해진 것은 2011년에도 센서스 범위조사의 실시는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센서스 범위조사 대신 다른 자료원을 이용하여 ONC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는 위험요인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1년의 ONC 프로젝트에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은 센서스 본조사와 범위조사의 종속성 때문에 2011년에는 범위조사에만 의존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또한 영국의 통계청이 2001년 ONC 전략을 아무런 문제없이 확대추진하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ONC 프로젝트 사업의 지속적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주제이다.

전략검토의 결론은 2011년 센서스에서 2001년 ONC 방법론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2001년 ONC 방법론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센서스 설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다음 절에서 ONC 방법론의 주요 혁신방안을 설명하겠지만 아래는 2011년 ONC 프로젝트를 위한 전반적 전략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3절 조사설계

영국 통계청은 2011년에도 2001년과 같이 ONC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센서스 범위조사를 실시하고 영국 전역에 대하여 36만 가구 정도의 표본규모와 현지실사 방법론을 사용할 계획이다. 센서스 범위조사의 표본설계는 미국의 인구조사국이 범위측정조사(ICM)⁷⁾에 이용되는 방법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영국의 우정사업본부

7) 미국의 2001년 범위측정조사는 표본수가 314만가구로 표집률이 0.2%였다. 표본설계의 제1단계는 미국 전역을 센서스 블록의 클러스터로 구분하는 것으로, 각 클러스터는 평균 30명으로 이루어졌다. 집계요원은 해당 클러스터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주소를 기재하고, 작성결과에 대하여 엄격한 품질확인절차가 있다. 중요한 것은 센서스 본조사와 범위측정조사의 상호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부작성은 센서스가 실시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센서스

가 사용하는 우편번호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이른바 집락표집법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2001년에 개발된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본설계는 센서스 조사구를 지역단위로 층화하여 조사구 안에서 3~5개의 우편번호를 표집하는 2단계 표본추출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센서스범위조사의 개선사항을 다음 절에 있는 “주요 혁신과 대안들”에서 몇 가지 언급하며, 조사설계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작업의 내역을 <부록 A>에 요약 정리한다.

4절 매칭작업

영국 통계청은 ONC 프로젝트에서 센서스의 본조사와 범위조사의 응답자들을 매칭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업에 사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것을 사용하여 매칭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센서스에서 과다집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센서스의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매칭작업을 위한 추가적 자료의 발굴과 과다집계의 문제는 다음 절에 있는 ‘2011년의 주요혁신과 대안들’에서 다시 설명하겠으며, 매칭을 위한 방법론과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작업의 내역은 <부록 A>에 간단히 정리한다.

5절 추정작업

영국 통계청은 2011년 ONC 프로젝트에서도 이원시스템 추정법에서 두 조사간의 종속성이 문제를 야기하지만, 이것을 보완하여, 센서스 본조사, 범위조사, 제3의 독립적인 고품질의 개인정보자료 등의 3종류의 자료를 사용하는 삼원시스템 추정법(Triple System Estimation)으로 추정인구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삼원시스템 추정법’이라는 방법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방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제3의 독립적인 고품질의 개인자료’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각한 쟁점이 되고 있다⁸⁾. 따라서 2011년 ONC 프로젝트에서도 이원시스템 추정법이 그대로 사용될 것이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법론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원시스템 추정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특히 전반적 정확성의 개선과 자료 간 종속으로 인한 편향을 축소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

현지실사와 별도로 운영되도록 특별조치하였다.

8) 삼원시스템 추정법은 Zaslavsky and Wolfgang(1993)에 소개되어 있는데, 제3의 정보가 입수가 가능하다면, 추정방법은 2x2x2 제표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 방법은 영국의 사우스햄턴대학에서 최근에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며, 2011년 ONC 프로젝트의 품질 평가 작업에서 사례연구의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말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 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부록 A>는 추정작업에 필요한 세부작업의 내역을 간단히 정리한다.

6절 보정작업

보정작업은 영국 ONC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을 이루며, 이것은 추정인구를 계산하고, 센서스 본조사의 무응답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소집계를 고려하여 센서스의 개인별 데이터베이스에 누락된 개인과 가구를 추가하는 작업이다. 물론 영국 통계청은 2011년에는 과소집계만이 아니라 과다집계에 대한 보정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센서스 본조사에서 완전히 누락된 가구는 센서스 가구명부를 사용하여 추적하고 보정할 계획이다. 또, 가구가 센서스 본조사에서 집계되어 있으나 가구원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도 보정작업을 거치게 되어 있다. 2011년에도 2001년의 ONC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지만 과다추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의 ONC 프로젝트에서는 보정작업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원천자료를 사용할 계획이며 <부록 A>는 방법론과 구체적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과제들을 기록하고 있다.

제 6 장 2011년의 주요혁신과 선택

1절 센서스 범위조사의 표본설계

센서스 범위조사는 2011년의 ONC 프로젝트에서 과소집계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1차적 정보원이다. 2011년에도 집계범위 평가 작업에서 표본선정은 영국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주소파일(PAF)에 있는 우편번호를 지역단위로 추출하는 집락표집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우편주소파일이 2011년 센서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가구명부와는 독자적인 고품질의 가구명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1년 센서스 범위조사의 표본설계는 2001년에 채택된 모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범위조사는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주소파일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파악된 지역단위를 층화하여 그것을 다단계 표집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2011년의 ONC 프로젝트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은 층화(stratification)와 집락화(clustering)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는가에 관련되는 것들이다.

영국 통계청은 센서스가 과소집계가 지역과 성·연령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달랐다는 사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물론, 소수민족, 외국인의 과소집계는 지역요인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다. 인구집계의 지역별·하위인구집단별 차이를 근거로 하여 2011년에도 범위조사의 표집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조사표본을 층화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영국 통계청은 2011년 센서스 설계에서 추가적인 운영상 요인으로 과소집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데, 그것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이 센서스 조사표를 우편으로 반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사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ONC 프로젝트의 제1단계인 범위조사의 표본설계에서 추가적인 층화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집계범위의 평가·보정작업의 정확성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1년 ONC 프로젝트에서 층화작업은 영국 전역의 43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인접하는 것들끼리 100여개의 지역으로 묶어서 추정지역 또는 설계집단으로 명명하는데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묶는 방식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서 인구속성이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추정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많은 경우 도시지역이 농촌지역과 함께 묶여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이 영국 통계청에서 2011년의 경우에도 추정인구를 산출해야 하는 핵심 하위집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방자치단체를 묶어서 추정집단을 재구성하는 절차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영국 통계청은 2011년 ONC 프로젝트에서도 추정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몇 개를 하나로 묶어서 추정지역을 만들고 이 지역에서 표본을 선정할 계획이다. 영국 통계청은 지리적 특성에 따른 제약요건을 설정하지 않고 지역특성 지표에 의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을 묶어서 표본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추정지역에 대한 추정결과의 상대적 오차를 축소하고 나아가 자료처리시간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어지며 이러한 사후증화 방법을 대안으로 하여 손익분석(損益分析)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영역에서 2011년 ONC 프로젝트의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집계난이도 지표를 효율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지역의 새로운 특성변수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 표본이 과소집계의 정도가 크다고 예상할 수 있는 하위인구집단의 주요 특성을 포함하도록 “규모” 변수를 사용하여 표본을 증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핵심적 개선방법은 최근의 인구 수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 표본할당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2001년의 ONC 프로젝트에서 얻은 지식을 종합하면 표본이 어떤 곳에 집중 할당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한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A>는 조사 설계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작업의 윤곽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 설계는 현재로서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도 유사할 것이며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사회인구학적 특성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절 추정작업을 위한 자료원의 개발

영국의 2011년 ONC 프로젝트에서 주요 혁신사항의 하나는 최근정보를 담고 있는 추가 자료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이들 추가 자료가 사용될 필요가 있는 영역은 세 군데, 곧 센서스 범위조사의 조사설계, 추정방법론, 그리고 보정작업의 ONC 프로젝트 사업의 주요영역을 관통하고 있다. 그러나 추정과정에서 이원시스템 추정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추정결과의 전반적인 정확성을 개선하는데 추가 자료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ONC 프로젝트 수행자들의 의견이다. 여기서는 영국의 ONC 프로젝

트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3종류의 자료들을 언급하고 한다.

- 1) 방문자 자료(2011년 센서스)
- 2) 센서스 가구프레임 (2011년 센서스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
- 3) 정부 표본조사 자료

<부록 B>는 추정방법론에 사용될 수 있는 여타 자료원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ONC 프로젝트 사업에서 일차적 자료로서 센서스 범위조사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센서스 범위조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 만에 모든 것을 의존할 수 없다는 2001년의 ONC 프로젝트 경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방문자 자료

영국의 센서스는 집계원칙으로 상주주의(de jure principle)를 사용하여 왔다. 2011년에도 이 원칙을 고수하겠지만, 여기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집계범위의 평가 작업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의 하나가 일차적으로 방문자의 상주지와 인구속성에 관한 변수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2011년 센서스 본조사에서 방문자 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이유로서 이들을 그들의 상주지에서 매칭작업을 진행하여 이들이 센서스에서 과소집계의 원인을 제공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방문자 정보는 센서스의 본조사나 범위조사에 방문자 정보를 추가하여 누락된 사람들을 확인함으로써 센서스 범위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방문자 정보의 장점은 이것이 영국의 전 지역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정보원이 되며 상당히 유동성이 큰 하위 인구집단(예: 다른 집을 방문하고 있는 사람), 집계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집단, 다른 사람들이 상주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인구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2011년 센서스 본조사의 조사표에 포함된 방문자 정보는 ONC 프로젝트의 개선과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2. 센서스 가구명부

2011년 센서스가 현지실사를 위하여 사용하게 될 가구 리스트는 추정작업의 일부

로서 이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이다. 이것은 2001년 센서스에서는 수집되지 않은 자료로서 어떤 형태로든 이원시스템 추정법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가구의 공간규모나 유형(비어있는 집, 제2의 주거 공간)을 추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등록자료의 품질이 양호하다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하며 행정등록자료의 품질은 오히려 센서스 범위조사를 통하여 측정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기도 한다. 이 경우 영국 통계청은 센서스 가구명부가 2011년의 ONC 프로젝트에서 추가적인 통제변수로서 보조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3. 정부 표본조사

영국 통계청은 현재 Integrated Household Survey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조사는 분기별로 진행되고, 50만 명 규모의 전국수준의 연차별 표본조사가 될 것이다. 이 조사결과는 2011년 ONC 프로젝트의 센서스 범위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센서스 범위조사와 함께 또는 별도로 가구 내 가구원을 얼마나 정확하게 집계하였는가를 평가하여 조사간의 종속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이론상, 표집가구에서 모든 가구원을 포함해야 한다). 이 자료의 장점은 센서스와 동시에 실시되기는 하지만 센서스와는 독립적으로 실시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무응답자의 상관성으로 인한 편향성의 문제는 완전 배제되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그러나 2001년 조사 자료를 이용한 기존연구를 보면 센서스가 누락한 가구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센서스의 집계범위를 평가하고 보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유사한 표본조사를 이용하여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3절 이원시스템 추정법

영국 통계청은 2001 센서스의 교훈으로서 본조사와 범위조사의 종속성로 인하여 생겨나는 이원시스템 추정법의 편향성으로 인한 인구의 과소추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한 가지 방법은 Brown and Diamond (2006)에 의하여 설정된 2001년에 개발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특정지역의 가구 총수에 대한 외부자료를 사용하여 이원시스템 추정법의 과소추정을 보정하였다.

영국 통계청은 이원시스템 추정법의 편향성을 축소하기 위하여 2001년 ONC 프로젝트와 비교할 때 방법론상의 개선이 상당정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 가구리스트의 정교화 추진 ---센서스 가구프레임이 2011년에는 개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확성은 추계지역 수준에서 직접보정을 가증하도록 할 것이다 (2001년 방법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 가구수준의 보정방법을 개인수준으로 역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형을 개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가구규모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다는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 성·연령별 집단에 대한 적합한 보정변수를 찾기 위하여 여타 추가적 자료 (예: 인구분석)에서 얻은 성비정보를 가지고 추가적 작업을 진행한다.

4절 과다집계

영국 통계청의 ONC 프로젝트는 과소집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일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역사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센서스에서 과다집계가 문제가 된 적은 없었으며 따라서 과다집계의 해결방안은 영국 통계청의 우선과제가 아니었다. 센서스범위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그들이 센서스 본조사의 실시시점에서 집계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다른 곳에 있었던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두 번 이상 집계될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매칭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과다집계는 0.1% 이하일 것이라는 추정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후속 연구들은 이러한 추정결과는 과소추정일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영국의 Longitudinal Study는 조사대상자 중에서 2번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0.38%에 이르렀다.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복본조사표에 관한 연구는 이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0.4%의 복본 응답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2001년 과다집계는 전반적 수준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지만 장래에는 이것이 영국의 센서스가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표를 제출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990년 이후 경험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은 자녀양육 책임을 공유하는 이혼가정의 증가(이 경우는, 자녀가 두 조사표에 기재될 가능성이 크다) 등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영국 통계청은 2011년 센서스 계획에서는 과다집계 또는 중복집계를 측정하는 방법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통계청은 현재 2011년 센서스 본조사의 설계가 과다집계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정하기 위한 잠정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

- 과소집계와 별도로 과다집계를 추정하는 방안(2001년 센서스에서 채택된 방안). 여기서는 과다집계와 과소집계에 대한 별도의 보정방안을 모색한다.
- 우편번호별 개별집계를 보정하는(따라서, 이들 개별집계를 이중시스템 추정법, 최종추정결과와 보정잡업에서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2011년 센서스에서는 센서스 범위조사와 전국수준의 분석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는데,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복본을 찾아내는 집중적 매칭작업이 이 전략의 일부로 사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 7 장 요약과 결론

영국 통계청은 2021년의 센서스 본조사가 통합인구통체제(Integrated Population Statistics System)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될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2011년 센서스는 ONC 방법론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통계청은 2011년의 ONC방법론은 다른 정책과제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센서스의 집계범위와 보정방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 다양한 행정등록자료와 표본조사자료의 매칭작업.
- 삼중시스템 추정법의 평가.
- 행정등록자료 소장기관에 대해서, 해당 자료가 장래에 필요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센서스 실시일자를 기준으로 자료를 갱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업무 협조 작업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영국의 2001년 ONC 프로젝트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는데서 출발하여 제3장에서는 ONC 방법론을 단계별로 (1) 센서스 범위조사의 표본설계 (2) 매칭작업 (3) 추정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정작업 (4) 보정작업 (5) 품질 확인 작업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제4장에서 각종 추정결과의 검토결과와 평가연구를 요약하였다. 이 연구는 2001년 ONC 방법론의 결과가 방법론의 최대강점과 최대약점이 무엇인가를 조명해 주는 수많은 연구들의 성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물론 ONC 방법론의 약점들이 상당한 관심과 우려의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ONC 프로젝트는 총괄적 평가를 내린다면 센서스 품질의 상당한 개선을 가져다주었고 많은 통계이용자들은 그것을 “일대전진”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산출하기도 하였다. 센서스 자료에 대한 수요와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영국의 2001년 ONC 프로젝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대규모 표본조사를 근간으로 하는 사후조사가 근대적 센서스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2011년의 센서스 환경이 집계누락을 조장하는 강력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해당사자들은 고품질의 센서스 범위평가 작업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는 제5장과 제6장에서 ONC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11년 센서스의 전반적 목표와 주요혁신과 전략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영국 통계청은 현재 2011년 센서스 본조사의 범위평가와 보정작업을 위하여 2001 ONC 프로젝트에서 배울 수 있는 교

혼이 무수히 많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 ONC 방법론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가정(두 자료의 상호 독립성)은 신중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가정실패에 대안으로 강력한 방법론적 절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임시대응전략이 특히, 전국수준의 보정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다.
- 과다집계의 측정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이다.
- ONC 프로젝트의 각종 추정인구에 대한 품질확인에는 고품질의 행정기록과 지역정보의 획득을 필요로 한다.
- 장래 사용될 행정자료를 평가하는 노력은 완전히 새로운 연구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혁신적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이행단계에서 수많은 위험이 불가피하게 생겨난다. 개발, 이행, 운영의 전반적 과정에서 자원을 적정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이해당사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리더나 통계이용자들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영국 통계청은 위의 교훈들을 바탕으로 2011년 센서스의 집계범위 평가 및 보정작업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 전략은 바로 2001년 ONC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방법론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좀 더 강력하고 고품질의 최종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 8 장 참고문헌

- 이지연. 2007.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범위오차평가와 지역별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日本 自治体国際化協会(編). 2000. 『英国の地方自治』. 東京.
(<http://www.jlgc.org.uk/uklg/uklg.htm>).
- 竹下讓他. 2000. 『ギリスの政治行政システム: サッチャー, 메ジャー, 브레아政權の行財政改革』. 東京: ぎょうせい.
- Abbott, O. 2001. “Census Coverage Assessment and Adjustment Strategy Outlines the Proposed Strategy for the 2011 Census.” London, Britai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www.statistics.gov.uk/articles/population_trends/PT127Abbott.pdf).
- Abbot, O and Brown, J. 2006. “A Review of the 2001 One Number Census Methodology and Lessons Learnt.” A Paper Presented at GSS Methodology Conference, London, June, 2006.
(<http://www.statistics.gov.uk/events/gss2006/downloads/D1Abbott.doc>).
- Brown, J. J., Diamond, I. D., Chambers, R. L., Buckner, and A. D. Teague, A. D. 1999. "A Methodological Strategy for a One Number Census in the UK."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 A* 162: 247-267.
- Brown, J. J. 2000. "Design of a Census Coverage Survey and Its Use in the Estimation and Adjustment of Census Underenumeration." an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Southampton, Britain.
- Brown, J., O. Abbott, and I. Diamond. 2006. "Dependence in the One Number Census Project."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 169, Part 4.
- Chandra Sekar, C. and W. Edwards Deming. 1949. "On a method of estimating birth and death rates and the extent of registr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44: 101–15.
- Chappell, R. and J. Dobbs. 2005. "Are Densely Populated Inner City Areas Easy to Measure and Estimate? Lessons Learned From the 2001 Census in England and Wales." A Paper presented at IAOS satellite meeting, Wellington, New Zealand, April 2005.
(<http://www.stats.govt.nz/about-us/events/satellite-meeting/default.htm>).
- Dale, Angela. 2000. "Developments in Census Taking in the Last 25 Years."

Population Trends 100: 40-46.

- Kinnecannon, C. H. 2006. *Apportionment in the Balance: A Look into the Progress of the 2010 Decennial Census*. A Report given at the Subcommittee on Federalism and the Censu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n March 1, 2006.
- Holt, T., I.D., Diamond, I. D., and M. Cruddas. 2001. "Risk in Official Statistics: A Case Study of the 2001 One-Number Census Project."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 D* 50: 441-456.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03. "The 2001 One Number Census and Its Quality Assurance: A Review." Research Briefing 6.03.
(<http://www.lga.gov.uk/Documents/Publication/onenumpercensus.pdf>).
- ONS. 1997. "Using Administrative Records in the One Number Census." One Number Census Steering Committee Paper 97/14.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Britain. (<http://www.statistics.gov.uk/census2001/pdfs/sc9714.pdf>).
- ONS. 1998. "One Number Census Matching." ONC Steering Committee paper SC9814,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Britain.
(<http://www.statistics.gov.uk/census2001/pdfs/sc9814.pdf>).
- ONS. 2000a. "2001 Hard to Count Index." One Census Steering Committee Paper 00/15,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Britain.
(<http://www.statistics.gov.uk/census2001/pdfs/sc0015.pdf>).
- ONS. 2000b. "Estimation Strategy for Design Group Estimates by Age and Sex from the Census Coverage Survey." One Number Census Steering Committee Paper 00/03A,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Britain.
(<http://www.statistics.gov.uk/census2001/pdfs/sc0003a.pdf>).
- ONS. 2000c. "One Number Census Local Authority Estimation." One Number Census Steering Committee Paper 00/03B,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Britain. (<http://www.statistics.gov.uk/census2001/pdfs/sc0003b.pdf>).
- ONS. 2002. "Changes to the ONC Imputation System." One Number Census Steering Committee Paper 02/01,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Britain.
(<http://www.statistics.gov.uk/census2001/pdfs/sc0201.pdf>).
- ONS. 2003a. "Method Used to Revise 2001 Population Estimates for Shortfall of Men." A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Britain.
(http://www.statistics.gov.uk/about/methodology_by_theme/Revisions_to_Population_Estimates/downloads/Methodology_for_revision_to_mid-2001.pdf).

- ONS. 2003b. "2001 Census: Manchester and Westminster Matching Studies Full Report."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Britain.
(http://www.statistics.gov.uk/downloads/theme_population/ManchesterandWestminster_FullReport.pdf).
- ONS. 2003c. "Local Authority Population Studies: Full Report."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Britain.
(http://www.statistics.gov.uk/downloads/theme_population/LAStudy_FullReport.pdf).
- ONS. 2005. "One Number Census Evaluation Report."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Britain. (http://www.statistics.gov.uk/census2001/pdfs/onc_evr_rep.pdf).
- Pereira, Richard. 2002. "The Census Coverage Survey-the Key of a One Number Census." *Population Trend* 108: 16-31 (Summer, 2002)
- Rees, Philip. 2003. "Methodological Innovation in the 2001 Census: A User Perspective, with Illustration for the Demography of a Big Northern City." A Paper presented at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nd Royal Statistics Society Conference on Census 2001 and Beyond: Learning from the Past – Building for the Future, 11-12 November 2003, London.
- Statistics Commission. 2003. "The 2001 Census in Westminster: Final Report."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Britain.
(http://www.statscom.org.uk/media_html/reports/report_022/contents.asp).
- Steele, F., Brown, J. and Chambers, R. 2002. "A Controlled Donor Imputation System for a One-Number Census."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 A* 165: 495-522.
- Whitford, David C. and Jeremiah P. Banda. 2001. "Post-enumeration surveys (PES's): Are They Worth It?" A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n Global Review of 2000 Round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Mid-Decade Assessment and Future Prospects Statistics Divis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Secretariat, New York, 7-10 August 2001.
- Zaslavsky, Alan M. and Glenn S Wolfgang. 1993. "Triple-System Modeling of Census, Post-enumeration Survey, and Administrative-List Data."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 Statistics* 11 (3): 279-288.

<부록 A> 영국의 2011년 ONC 프로젝트의 작업영역

작업영역	세부작업	참고사항
센서스 범위조사 표본설계	a) 표집전략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집단위와 추정지역 • 표본규모 • 표본할당 • 층화방법 • 집계단위도 b) 표본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선정시스템 개발 • 예행연습을 위한 표본의 선정 • 2011년 센서스를 위한 표본의 선정 	표본설계는 2001년 센서스와 유사하다. 그러나, 2001년 ONC 프로젝트에서 획득한 집계패턴을 사용하고,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증대시켜, 범위조사의 표집전략에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프로젝트팀은 상이한 대안들의 효율성을 적정평가하기 위하여, 경험적 방법과 시뮬레이션 방법을 병용한다.
매칭	a) 매칭전략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칭 방법론 b) 매칭시스템의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요구사항 • 시스템 점검 c) 매칭시스템의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칭규약의 개발 • 매칭 담당요원의 모집과 훈련 • 매칭 예행연습 • 2011년 센서스를 위한 매칭의 실행 	매칭작업은 2001년에 사용된 방법론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2011년 센서스 본조사에는 방문자 자료 또는 영국 통계청이 실시한 독자적인 표본조사 같은 추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센서스 본조사와 범위조사 간 정보를 매칭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 매칭 시스템은 과다집계(중복집계)를 광범위하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추정	a) 추정방법론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전략 • 이원시스템추정법(DSE)의 사용 • DSE법 방법론의 편향성 조정 • 소지역 추정방법론 • 변량 추정방법론 • 위기대처방법 b) 과다집계(중복집계), 특히 이 문제를 과소집계와 함께 다룰 것인가 또는 분리하여 다룰 것인가를 탐색하는 과제, 또 과다집계된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도 c) 센서스범위조사 외에 여타 자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 정보 사용에 관한 손익분석 • 영국 통계청의 표본조사 자료 사용의 손익분석 • 추정작업에서 가구 프레임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추정방법론은 2001년 센서스의 ONC 프로젝트에 사용된 것을 이용한다. 2001년 상황보다 훨씬 첨단상태로 개선된 시뮬레이션 방법이 각종 테크닉과 대안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이것은 2001년 센서스의 추정방법에서 생겨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방법이 신축성이 결여됨으로 해서 생겨나는 위기 대처방법을 생각하기 위한 것이다. 과다집계 평가는 영국 통계청이 처음으로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노력하는 최초의 시도이다. 연구되어야 할 다양한 대안들이 있다. 특히, 추정과정에서 많은 자료원을 추가하여야 하며, 매칭작업에 소요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들을 추정과정에 포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료원 각각에 대하여 손익분석(損益分析)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보정작업	a) 보정작업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에 대한 모형 • 캘러베이션 방법론 • 보정방법론 • 가구프레임 등 여타 자료원 이용방안 탐색 • 과다집계 해결 방법 모색 b) 보정시스템의 완성과 실행	보정작업은 센서스 범위조사의 표본설계와 추정작업보다 늦게 시작한다. 작업의 핵심은 2001년 ONC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모형을 재검토하는 것이며, 각종 합계를 맞추기 위한 캘러베이션 방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지원사업	각종 방법론의 완성과 실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당사자의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 프로젝트 관리 • “downstreaming” 계획과 기술환경의 통합 • 제안 방법론의 품질확인 • 센서스범위조사의 현장방법론 	

<부록 B> 영국의 2011년 ONC 프로젝트의 품질 확인 작업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원의 리스트

** 다음 자료는 ONC 프로젝트의 품질 확인 작업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보여주는 것이다.

1. 아동급부(Child Benefits) 기록 (개인자료)
2. 연금(Pension) 기록(개인자료)
3. 출생등록(Birth registration) (개인 또는 집단자료)
4. 추가 거주지(Second residence) 정보 (2001년 센서스)
5. 2001년 센서스 자료 (개인 또는 집단자료)
6. 선거인 명부(Electoral Roll) 자료(개인자료 또는 집단자료)
7. 패널연구(개인자료로, 과거의 기록을 점검하는데 사용이 가능함)
8. 커뮤니티 보건지표 (개인수준 또는 집단자료) (스코틀랜드)

10

한국의 종교인구

조순기·박영실·최은영

(통계청)

〈표 목차〉

〈표 1〉 종교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1985-2005년)	320
〈표 2〉 성별 종교인구의 구성 변화(1985-2005년)	320
〈표 3〉 연령대별 종교인구의 구성 변화(1985-2005년)	321
〈표 4〉 3대 종교의 연령대별 종교인 비율의 변화(1985-2005년)	322
〈표 5〉 성·연령별 종교인구의 구성 변화(1985-2005년)	323
〈표 6〉 성·연령별 종교인구의 구성(1985년)	324
〈표 7〉 성·연령별 종교인구의 구성(1995년)	324
〈표 8〉 성·연령별 종교인구의 구성(2005년)	325
〈표 9〉 부부간 종교의 일치 및 불일치 비율(1985-2005년)	327
〈표 10〉 시도별 부부간 종교의 일치 및 불일치 비율(2005년)	328
〈표 11〉 가구 내 종교의 일치 및 불일치 비율(1985-2005년)	330
〈표 12〉 시도별 종교의 일치 및 불일치 비율(2005년)	330
〈표 13〉 종교별 교육수준의 구성비(2005년)	331
〈표 14〉 시도·종교별 평균 교육년수(2005년)	332
〈표 15〉 30-40대 인구의 종교별 평균 교육년수(2005년)	332
〈표 16〉 15세이상 인구의 종교별 직업현황(2005년)	333
〈표 17〉 30-40대 인구의 종교별 직업현황(2005년)	334
〈표 18〉 시도별 종교인구 구성비의 변화(1985-2005년)	336

(그림 목차)

(그림 1) 연령대별 종교인 비율의 변화(1985-2005년)	321
(그림 2) 종교별 인구 피라미드 유형의 변화(1985-2005년)	326
(그림 3) 시도 및 시군구별 무종교인 비율(1985-2005년)	337
(그림 4) 시도 및 시군구별 불교인구 비율(1985-2005년)	338
(그림 5) 시도 및 시군구별 개신교인구 비율(1985-2005년)	340
(그림 6) 시도별 천주교인구 비율 추세(1985-2005년)	341
(그림 7) 시도 및 시군구별 천주교인구 비율(1985-2005년)	342

〈부록〉

연령별 종교인구의 구성 변화(1985-2005년)	346
-----------------------------------	-----

한국의 종교인구

조순기 · 박영실 · 최은영 (통계청)

제 1 장 머리말

종교가 하나만 있거나 또는 여러 종교들이 있는 가운데 한 종교가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현재의 우리사회는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 시대라고 불린다(김종서, 2000). 선행 연구(정창수 · 김신열, 1993; 은기수, 2002; 윤이흠, 2007)에 의하면 현대 한국사회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¹⁾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적 종교 현상의 특성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다종교 상황에 대해 그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부족한데, 김종서(1998: 50)는 해방 후 50년간 종교사회학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서, 기존 연구들이 사회학적 이론들에 집중한 나머지 종교들의 실제 양상에 관한 정보들을 간과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종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부족은 이에 대한 자료의 빈곤과도 관련이 있는데, 1980년대 이전에는, 각 종단의 보고에 기초한 문화부의 종교단체현황이 통계자료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종단보고에 근거한 신도수는 해마다 인구증가율을 압도하여 총인구보다 많이 보고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984년 이후 부정기적으로 4차례에 걸쳐 실시된 한국갤럽연구소의 종교조사는 한국에서의 실제적인 종교측정 분야의 발달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198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는 종교에 관한 최초의 전수조사로, 종교인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김종서, 1998). 이후 1995년과 2005년의 총조사에서 종교항목이 각각 조사되어 현재 10년 주기로 20년간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종교자료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는데, 첫째는 일정한 시계열이 유지된다는 점, 둘째는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전국 대상의 시도 및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 등의 다양한 공간단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85~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와 2005년 표본자료를

1) 한국에서는 종교다원주의가 사회 속에서만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조차 때때로 다양한 종교적 성향이 상호 '겹쳐(overlapped)' 나오고 또 깊이 '연관되어(interpenetrated)' 있다. 더구나 그것에 대해 모순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교회에 다니면서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고 또 종종 절에도 가고, 유교식 조상제사를 지내면서도 때로는 성당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이다(김종서, 2000: 44).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다종교 상황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GIS에 기반한 분석, 코호트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불교 인구 몇 %, 개신교 인구 몇 % 등과 같은 단일 숫자를 성별 · 연령 · 직업 · 교육정도 · 지역 등의 변수를 통해 분해해 봄으로써 한국의 종교 현상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분석이 이루어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간 한국 종교 구조의 변화를 종교인구의 구성 및 성 · 연령별 특성과 가구 내 종교 구성을 통해 살펴보았다.²⁾ 둘째, 종교별로 교육수준과 직업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종교인구의 사회 ·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시도 및 시군 구별 종교인구 분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교인구 분포의 공간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2) 본 연구에서 ‘종교인구’는 종교를 믿지 않는 ‘무종교인’과 종교를 믿고 있는 ‘종교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제 2 장 한국 종교 구조의 변화

1절 종교인구의 구성 및 성·연령별 특성의 변화

1. 종교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

1985~2005년까지 20년 동안 종교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무종교인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표 1> 참조). 종교인 비율은 2005년 53.5%로, 1985년의 42.6%에 비해 약 10%p 증가하였으며, 무종교인 비율은 1985년 57.4%에서 2005년 46.5%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무종교인 비율의 감소가 1985~1995년에 8.1%p였던데 비해 1995~2005년에는 2.8%p에 그치고 있어, 종교인의 증가와 무종교인의 감소 경향이 최근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의 무종교인 비율이 15.0%(국민일보, 2006. 8.13)인 점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의 무종교인 비율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종교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불교와 개신교인구 비율은 1985~1995년 사이에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개신교 인구는 1995년 876만 명에서 2005년 862만 명으로 약 14만 명의 절대적인 신도수 감소를 보였다. 반면 천주교인구 비율은 1985년 4.6%에서 2005년 10.9%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천주교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기독교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불교인구 비율과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기독교인구 비율과 불교인구 비율이 1985년에는 각각 20.7%, 19.9%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지만 2005년에는 그 비율이 29.2%와 22.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불교인구 비율은 1995~2005년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교인구 비율은 1985년 1.2%, 2000년 0.5%, 2005년 0.2%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기타 종교 인구수는 1985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 국민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종교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1985~2005년)

(단위 : 천 명, %)

구 분	1985년		1995년		2005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총인구	40,420	100.0	44,554	100.0	47,041	100.0	
종교인	계	17,203	42.6	22,598	50.7	25,176	53.5
	불교	8,060	19.9	10,321	23.2	10,726	22.8
	개신교	6,489	16.1	8,760	19.7	8,616	18.3
	천주교	1,865	4.6	2,951	6.6	5,146	10.9
	원불교	92	0.2	87	0.2	130	0.3
	유교	483	1.2	211	0.5	105	0.2
	기타 종교	213	0.5	271	0.6	453	1.0
무종교인	23,216	57.4	21,953	49.3	21,865	46.5	

주) 기타 종교에는 종교 미상 포함, 총인구는 내국인수임.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2. 성별 종교인구의 변화

성별 종교 구성을 살펴보면(<표 2> 참조), 여자 종교인의 비율이 남자에 비해 매년 6.5~6.9%p 높게 나타난다. 종교인 비율이 남자는 2005년에 과반(50.2%)에 도달한 반면, 여자는 1995년에 이미 과반(54.2%)을 넘어섰고, 2005년에는 56.9%로 증가하였다. 이를 종교별로 살펴보면, 유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 여자 종교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005년의 종교별 남자신도 대 여자신도의 비율을 살펴보면, 불교가 46.7: 53.3, 개신교가 46.5: 53.5, 천주교가 46.1: 53.9로 나타나고 있다. 세 종교 모두 유사한 성별 구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천주교가 여자신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교는 여자에 비해서 남자 비율이 높는데, 2005년의 성 구성비는 남자 55.1%, 여자 44.9%이다.

<표 2> 성별 종교인구의 구성 변화(1985~2005년)

(단위 : %)

구 분	1985년				1995년				2005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총인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종교인	계	39.3	(46.2)	45.8	(53.8)	47.3	(46.8)	54.2	(53.2)	50.2	(46.7)	56.9	(53.3)
	불교	18.5	(46.4)	21.4	(53.6)	21.8	(47.2)	24.6	(52.8)	21.5	(47.1)	24.1	(52.9)
	개신교	14.7	(45.8)	17.4	(54.2)	18.3	(46.7)	21.1	(53.3)	17.1	(46.5)	19.6	(53.5)
	천주교	4.2	(45.3)	5.1	(54.7)	6.0	(45.4)	7.3	(54.6)	10.1	(46.1)	11.8	(53.9)
	원불교	0.2	(45.4)	0.2	(54.6)	0.2	(45.6)	0.2	(54.4)	0.3	(47.2)	0.3	(52.8)
	유교	1.3	(54.0)	1.1	(46.0)	0.5	(54.0)	0.4	(46.0)	0.2	(55.1)	0.2	(44.9)
	기타 종교	0.5	(46.0)	0.6	(54.0)	0.6	(45.8)	0.7	(54.2)	0.9	(48.5)	1.0	(51.5)
무종교인	60.7	(52.9)	54.2	(47.1)	52.7	(53.7)	45.8	(46.3)	49.8	(53.5)	43.1	(46.5)	

주) 괄호 안은 종교별 성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3. 연령별 종교인구의 변화

연령대별로 종교인구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표 3> 참조,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종교를 믿는 비율이 높아지고 무종교인 비율이 낮아지는데, 이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종교에 의지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10세 미만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무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다. 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985년과 1995년에는 40~60대, 2005년에는 50대이상의 연령층이다((그림 1) 참조). 1985~2005년 사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종교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30~40대의 종교인 비율은 1985~1995년에는 증가하였으나 1995~2005년에는 감소하였다. 특히 30대 인구의 종교인 비율은 1995년 52.8%에서 2005년에는 48.5%로 4.3%p나 감소해 전반적인 종교인 비율 증가와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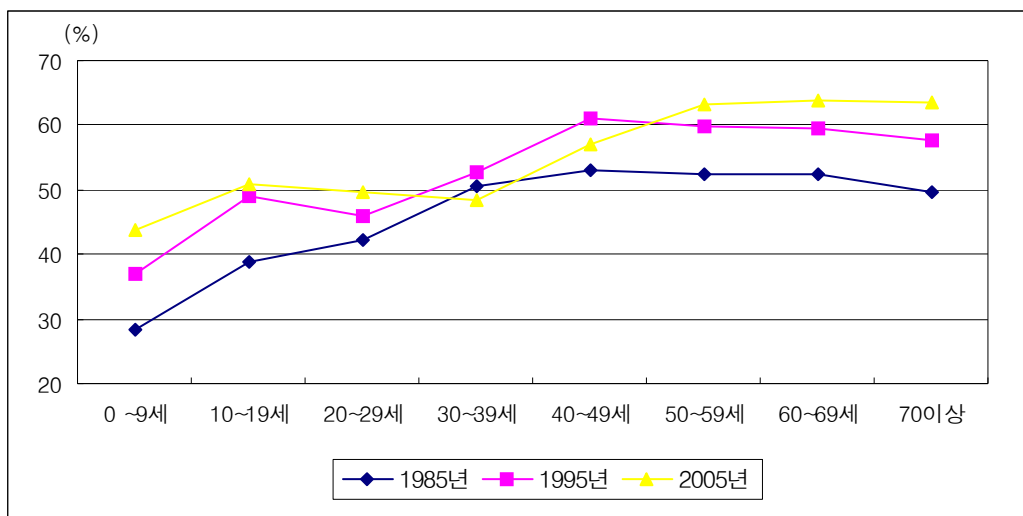
<표 3> 연령대별 종교인구의 구성 변화(1985-2005년)

(단위 : %)

구 분	1985년		1995년		2005년	
	종교있음	종교없음	종교있음	종교없음	종교있음	종교없음
전연령	42.6	57.4	50.7	49.3	53.5	46.5
0 ~ 9세	28.2	71.8	36.9	63.1	43.9	56.1
10~19세	38.9	61.1	49.0	51.0	51.0	49.0
20~29세	42.3	57.7	45.9	54.1	49.6	50.4
30~39세	50.6	49.4	52.8	47.2	48.5	51.5
40~49세	53.0	47.0	60.9	39.1	57.0	43.0
50~59세	52.5	47.5	59.9	40.1	63.1	36.9
60~69세	52.4	47.6	59.5	40.5	63.7	36.3
70세이상	49.5	50.5	57.7	42.3	63.4	36.6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그림 1) 연령대별 종교인 비율의 변화(1985 ~ 2005년)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중에서 3대 종교를 믿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통해 종교별 인구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불교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신교와 천주교의 인구는 비교적 전 연령층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개신교는 10대 이하의 저 연령층에서 타 종교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교인구의 비율보다는 낮아지고 천주교인구의 비율과는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를 보인다. 불교인구 비율은 개신교와 천주교 인구를 합한 기독교인구 비율에 비해 1985년에는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 1995년에는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2005년에는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많아진다.

현재의 연령계층과 10년 전 연령계층을 비교하는 코호트 분석에 의하면, 동일 인구 집단(예를 들어 1985년의 10대 인구는 1995년의 20대 인구, 2005년의 30대 인구와 동일 인구 집단이다)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종교성향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3대 종교에 대한 코호트 분석에 의하면(<표 4> 참조), 개신교는 불교·천주교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체로 동일 코호트에 속한 인구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불교와 천주교인구 비율은 늘어나는 반면 개신교인구 비율은 1995~2005년 사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1985년에서 2005년 사이의 코호트 분석이 가능한 1985년의 0~59세 연령대 중에서, 개신교의 경우 1985년 당시 50대였던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10년 전에 비해 구성 비율이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을 1985년 10~19세였던 인구집단을 사례로 살펴보면, 1985년, 1995년, 2005년 각각 이 집단의 불교인구 비율은 15.0%, 19.4%, 19.6%, 천주교인구 비율은 4.4%, 4.8%, 9.8%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개신교인구 비율은 18.1%, 19.7%, 17.7%로 변화하였다. 1985년 20~29세였던 인구집단의 개신교인구 비율 역시 동일

<표 4> 3대 종교의 연령대별 종교인 비율의 변화(1985-2005년)

(단위 : %)

구 분	1985년			1995년			2005년		
	불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전연령	19.9	16.1	4.6	23.2	19.7	6.6	22.8	18.3	10.9
0 ~ 9세	9.5	14.1	3.8	11.3	19.3	5.6	13.2	19.9	9.7
10~19세	15.0	18.1	4.4	18.3	22.5	7.2	17.7	20.4	11.7
20~29세	18.6	17.3	4.9	19.4	19.7	5.8	19.3	17.9	11.2
30~39세	25.2	17.9	5.7	24.7	20.0	7.0	19.6	17.7	9.8
40~49세	30.3	14.9	4.9	31.5	20.0	8.0	26.6	17.7	11.3
50~59세	31.5	12.8	4.3	34.7	16.7	6.3	31.7	17.8	12.0
60~69세	30.4	13.0	4.5	34.5	16.0	6.2	34.1	16.6	10.8
70세이상	28.0	12.4	4.4	30.5	17.5	6.8	31.1	18.2	11.5

주) 해당 연령 인구 전체에 대한 비율임. 음영은 동일 코호트의 사례를 나타냄.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1985년, 1995년, 2005년 각각 17.3%, 20.0%, 17.7%로 변화하였다.

1985~1995년 자료를 분석한 은기수(2002)에 의하면 개신교가 가장 젊은 인구구조를 보였지만, 2005년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신교가 청소년층과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인구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신교인구 비율은 청장년층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인구는 0~19세 인구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4. 성·연령별 종교인구

성·연령 계층별로 종교인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남녀간 종교인 비율의 차는 20대 이하의 저연령층에서는 크지 않지만 30대 이상에서는 10%p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 종교인 비율의 차가 가장 큰 연령대는 1985년에는 60대(13.7%p)였으며, 1995년과 2005년에는 70대 이상의 연령대이다.

불교는 연령에 따른 성별 구성의 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1985년, 1995년, 2005년 세 시점 모두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6>, <표 7>, <표 8> 참조). 20대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남자 불교인구 비율이 여자보다 약간 더 높았으나, 20대를 지나면서 여자 비율이 남자를 추월,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그 차가 더 벌어진다. 개신교의 경우에는 전 연령대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다. 천주교의 경우, 남자나 여자 모두에서 연령에 따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원불교나 유교인구의 경우 해당 연령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서 비교에 무리가 있으나, 가장 뚜렷한 특징은 50대 이상에서 유교를 믿는 인구 중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는 점이다.

<표 5> 성·연령별 종교인구의 구성 변화(1985-2005년)

(단위 : %)

구 분	1985년			1995년			2005년		
	남자	여자	차이	남자	여자	차이	남자	여자	차이
전연령	39.3	45.8	6.5	47.3	54.2	6.9	50.2	56.9	6.7
0 ~ 9세	27.9	28.5	0.6	36.5	37.3	0.8	43.6	44.3	0.7
10~19세	37.3	40.6	3.3	48.2	49.9	1.7	50.3	51.7	1.4
20~29세	40.0	44.7	4.7	45.1	46.8	1.7	49.4	49.8	0.4
30~39세	45.3	56.2	10.9	46.7	59.1	12.4	44.3	52.6	8.3
40~49세	48.7	57.5	8.8	56.0	66.1	10.1	51.5	62.6	11.1
50~59세	46.4	57.8	11.4	54.8	64.7	9.9	58.1	68.1	10
60~69세	44.6	58.3	13.7	52.3	64.9	12.6	58.4	68.3	9.9
70세이상	41.6	53.5	11.9	49.0	62.3	13.3	56.2	67.6	11.4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표 6> 성·연령별 종교인구의 구성(1985년)

(단위 : %)

구 분	종교있음							종교없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남자	39.3	18.5	14.7	4.2	0.2	1.3	0.5	60.7
0 ~ 9세	27.9	9.7	13.6	3.8	0.1	0.4	0.3	72.1
10~19세	37.3	15.2	16.5	4.2	0.2	0.8	0.5	62.7
20~29세	40.0	18.3	15.9	4.2	0.2	1.0	0.5	60.0
30~39세	45.3	22.8	15.8	4.8	0.2	1.1	0.5	54.7
40~49세	48.7	27.4	13.8	4.6	0.3	2.1	0.6	51.3
50~59세	46.4	27.8	10.7	3.7	0.3	3.3	0.6	53.6
60~69세	44.6	25.4	10.3	3.6	0.3	4.2	0.8	55.4
70세이상	41.6	22.0	10.1	3.4	0.3	5.0	0.8	58.4
여자	45.8	21.4	17.4	5.1	0.2	1.1	0.6	54.2
0 ~ 9세	28.5	9.2	14.6	3.9	0.1	0.3	0.3	71.5
10~19세	40.6	14.7	19.8	4.7	0.2	0.7	0.5	59.4
20~29세	44.7	18.9	18.8	5.5	0.2	0.8	0.5	55.3
30~39세	56.2	27.7	20.0	6.5	0.3	1.1	0.6	43.8
40~49세	57.5	33.3	16.0	5.2	0.3	1.9	0.7	42.5
50~59세	57.8	34.7	14.6	4.8	0.4	2.4	0.9	42.2
60~69세	58.3	34.1	15.1	5.2	0.5	2.4	1.0	41.7
70세이상	53.5	31.1	13.6	5.0	0.4	2.6	0.8	46.5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표 7> 성·연령별 종교인구의 구성(1995년)

(단위 : %)

구 분	종교있음							종교없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남자	47.3	21.8	18.3	6.0	0.2	0.5	0.6	52.7
0~ 9세	36.5	11.7	18.6	5.5	0.1	0.1	0.4	63.5
10~19세	48.2	18.8	21.5	6.9	0.2	0.2	0.5	51.8
20~29세	45.1	19.7	18.9	5.4	0.2	0.3	0.6	54.9
30~39세	46.7	22.7	17.4	5.6	0.2	0.3	0.6	53.3
40~49세	56.0	29.0	18.5	7.2	0.2	0.5	0.6	44.0
50~59세	54.8	31.5	15.4	5.9	0.2	1.2	0.6	45.2
60~69세	52.3	30.9	13.2	5.1	0.3	2.1	0.6	47.7
70세이상	49.0	25.6	14.4	5.4	0.3	2.5	0.8	51.0
여자	54.2	24.6	21.1	7.3	0.2	0.4	0.7	45.8
0~ 9세	37.3	10.9	20.1	5.8	0.1	0.1	0.4	62.7
10~19세	49.9	17.8	23.7	7.5	0.2	0.2	0.6	50.1
20~29세	46.8	19.1	20.6	6.2	0.2	0.2	0.6	53.2
30~39세	59.1	26.8	22.7	8.4	0.2	0.3	0.7	40.9
40~49세	66.1	34.1	21.5	8.9	0.3	0.5	0.8	33.9
50~59세	64.7	37.9	17.9	6.8	0.3	1.0	0.8	35.3
60~69세	64.9	37.2	18.2	7.0	0.4	1.3	1.0	35.1
70세이상	62.3	33.1	19.2	7.5	0.4	1.2	0.9	37.7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표 8> 성·연령별 종교인구의 구성(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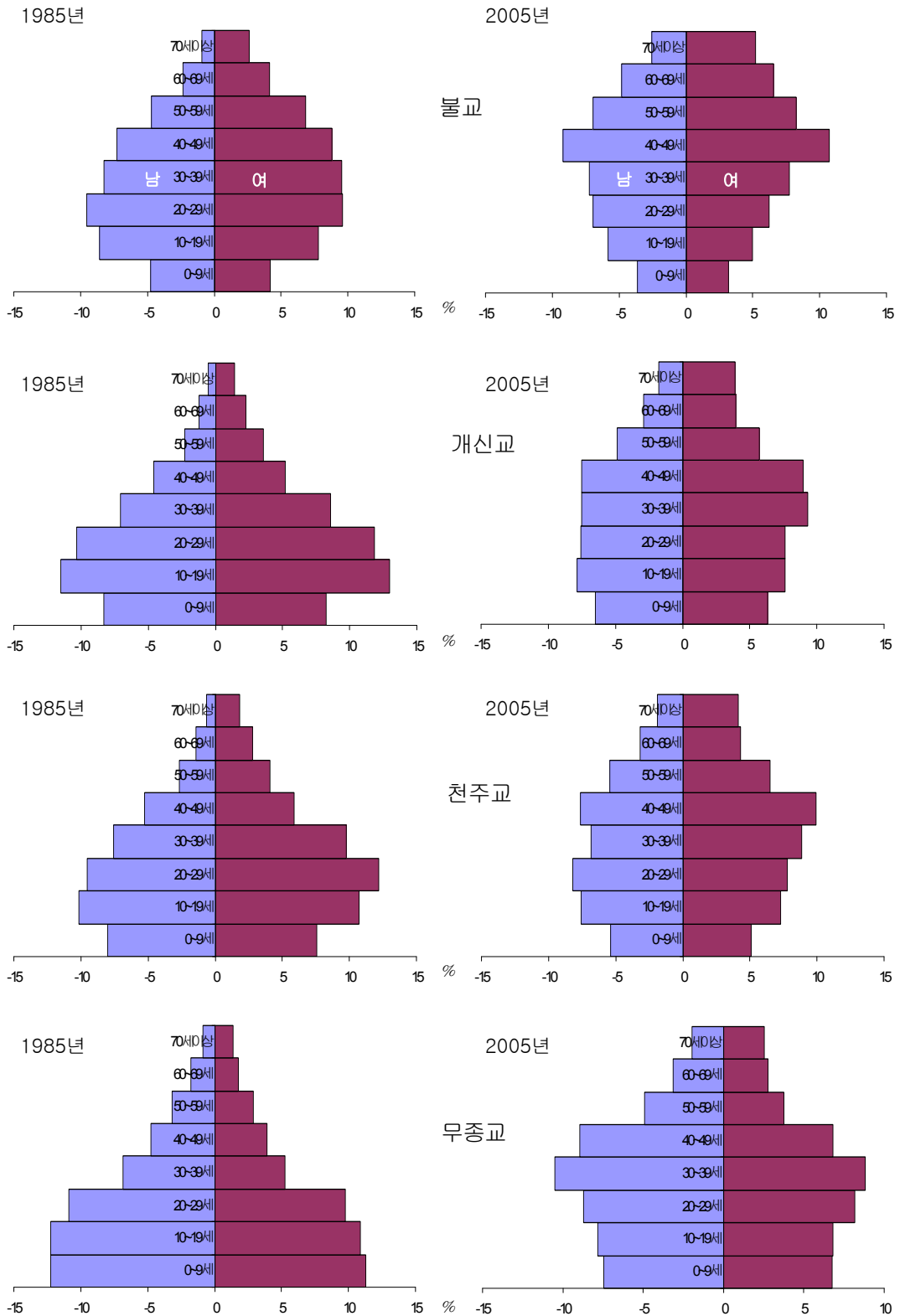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종교있음	종교						종교없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남자	50.2	21.5	17.1	10.1	0.3	0.2	0.9	49.8
0~9세	43.6	13.6	19.4	9.5	0.2	0.0	0.8	56.4
10~19세	50.3	18.2	19.7	11.3	0.2	0.1	0.8	49.7
20~29세	49.4	19.8	17.3	11.2	0.2	0.1	0.9	50.6
30~39세	44.3	18.8	15.7	8.5	0.2	0.1	1.0	55.7
40~49세	51.5	24.4	16.0	9.7	0.3	0.2	1.0	48.5
50~59세	58.1	29.1	16.4	10.9	0.3	0.3	1.0	41.9
60~69세	58.4	31.1	15.0	10.0	0.4	0.9	1.0	41.6
70세이상	56.2	27.9	15.4	9.9	0.5	1.5	1.0	43.8
여자	56.9	24.1	19.6	11.8	0.3	0.2	1.0	43.1
0~9세	44.3	12.9	20.5	9.9	0.2	0.0	0.8	55.7
10~19세	51.7	17.2	21.3	12.1	0.2	0.1	0.8	48.3
20~29세	49.8	18.8	18.5	11.2	0.2	0.1	1.0	50.2
30~39세	52.6	20.4	19.7	11.2	0.2	0.1	1.0	47.4
40~49세	62.6	28.9	19.5	12.8	0.3	0.1	1.0	37.4
50~59세	68.1	34.2	19.1	13.0	0.3	0.3	1.1	31.9
60~69세	68.3	36.6	17.9	11.6	0.4	0.7	1.1	31.7
70세이상	67.6	32.9	19.8	12.5	0.5	0.7	1.2	32.4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보다 구체적으로 종교별로 성별·연령별 인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985년과 2005년 각 종교의 전체 신도수 대비 성·연령별 인구를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1985~2005년 사이 성·연령별 구조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은 한국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종교의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았던 불교는 물론 개신교와 천주교의 경우도 고령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둘째,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대체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0~49세에서 역삼각형 모양의 인구구조를 보이는데 비해 개신교는 이와는 다른 종형의 인구구조를 보인다. 이는 앞의 3대 종교의 연령대별 종교인 비율의 변화를 코호트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림 2) 종교별 인구 피라미드 유형의 변화(1985-2005년)



자료: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2절 가구 내 종교 구성의 변화

1. 부부간 종교 일치도

부부간의 종교 일치도를 살펴보면, 약 90%에 이르는 가구에서 부부간에 종교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1985년, 1995년, 2005년 각각 88.0%, 88.6%, 88.8%로 나타나 약간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³⁾

일치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부 모두 무종교로 일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순으로 나타났다. 무종교로 일치하는 경우는 1985년 44.6%에서 2005년 38.1%로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불교와 개신교의 경우에는 1985년에서 1995년 사이에는 일치도가 약간 증가하였으나 2005년으로 오면서 두 종교로의 일치율은 약간씩 감소하였다. 반면에, 천주교로의 일치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 4.0%에서 2005년 9.5%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간에 종교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보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무종교인이지만 다른 한사람은 불교·개신교·천주교인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경우에 종교가 달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기성종교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구에 비해서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부간에 기성종교가 혼재해 있는 경우는 1%대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9> 부부간 종교의 일치 및 불일치 비율(1985 ~ 2005년)

(단위 : %)

구 분	종교 구성	1985년	1995년	2005년
일치	계	88.0	88.6	88.8
	무종교	44.6	38.9	38.1
	불교	23.6	26.0	24.6
	개신교	13.5	16.7	14.9
	천주교	4.0	5.7	9.5
	기타 일치	2.3	1.3	1.7
불일치	계	12.0	11.4	11.2
	무종교+불교	4.6	3.9	3.8
	무종교+개신교	4.2	4.3	3.4
	무종교+천주교	1.5	2.1	2.8
	기타 불일치	1.7	1.1	1.2

주) 1985년과 1995년의 비율은 은기수(2002: 574)의 수치임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3)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방법 특성상 주로 가구원 중 한 명이 가구원 전체에 대해 응답하는 대 리응답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별로 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우와 종교에 대한 응답결과가 일부 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부간 일치도 또는 가구 내의 종교일치도는 실제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가 조사표를 기입하게 되는 0~19세 인구의 무종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료의 신뢰수준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부부간 종교 일치 여부를 시도별로 살펴보면(<표 10> 참조), 일치율이 90%에 근접하거나 상회하는 지역은 불교인구가 많거나, 지리적으로 동쪽에 위치하는 시도로 나타났다. 즉 대구 90.2%, 울산 91.9%, 강원 90.8%, 경북 91.4%, 경남 91.3%, 제주 90.6% 등 6개 시도가 타 지역에 비해 일치율이 높게 나타난다.

무종교로 일치하는 부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그 비율은 45.2%이었으며, 다음으로 강원(45.0%), 충남(43.5%), 광주(41.7%) 등의 순이었다. 불교인 부부의 일치 비율은 경남지역에서 45.0%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과 부산이 각각 43.0%와 42.0%로 높았다. 이들 지역은 개신교인 부부의 비율이 낮은 곳과 일치된다(경남: 6.5%, 울산: 8.2%, 부산: 8.3%). 부부가 모두 개신교인 비율은 전북(19.7%)이 가장 높고, 수도권(서울: 19.2%, 인천: 18.9%, 경기: 18.2%) 역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에도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부부가 모두 천주교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서울: 12.8%, 인천: 12.7%, 경기: 11.4%).

한편, 부부간 종교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무종교인과 불교인 부부는 부산이 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남과 제주가 각각 5.5%와 4.9%로 나타났다. 부부 사이의 종교가 무종교와 개신교인 경우는 전북 5.5%, 광주 4.9%, 인천 4.4%이다.

<표 10> 시도별 부부간 종교의 일치 및 불일치 비율(2005년)

(단위 :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치	계	86.9	89.6	90.2	88.3	85.5	88.0	91.9	88.5	90.8	89.7	89.2	86.8	88.3	91.4	91.3	90.6
	무종교	35.9	30.3	35.2	41.3	41.7	37.8	33.9	39.4	45.0	41.7	43.5	39.9	45.2	37.8	33.4	37.9
	불교	17.2	42.0	37.1	13.6	15.7	22.1	43.0	17.8	23.4	27.1	20.8	15.3	18.1	36.6	45.0	34.8
	개신교	19.2	8.3	8.3	18.9	15.8	17.3	8.2	18.2	13.1	11.9	15.7	19.7	15.7	9.8	6.5	5.8
	천주교	12.8	7.2	8.6	12.7	10.9	9.8	5.5	11.4	8.1	8.1	7.7	8.7	6.3	5.7	4.6	10.1
	기타 일치	1.9	1.8	1.0	1.8	1.4	1.0	1.3	1.8	1.2	0.9	1.5	3.1	2.9	1.4	1.8	1.9
불일치	계	13.1	10.4	9.8	11.7	14.5	12.0	8.1	11.5	9.2	10.3	10.8	13.2	11.7	8.6	8.7	9.4
	무종교+불교	3.5	5.8	4.4	2.6	3.1	3.4	4.3	2.9	3.5	3.7	3.4	3.7	3.9	4.5	5.5	4.9
	무종교+개신교	4.2	1.9	1.8	4.4	4.9	4.1	1.7	4.0	2.7	3.3	4.2	5.5	4.3	1.9	1.4	1.5
	무종교+천주교	3.9	1.7	2.6	3.6	5.1	3.4	1.3	3.4	2.2	2.4	2.3	2.7	2.3	1.4	0.9	2.5
	불교+개신교	0.5	0.3	0.4	0.4	0.3	0.3	0.3	0.4	0.2	0.3	0.3	0.3	0.3	0.3	0.3	0.0
	불교+천주교	0.3	0.4	0.3	0.2	0.4	0.4	0.3	0.3	0.1	0.2	0.2	0.1	0.2	0.2	0.2	0.3
	개신교+천주교	0.3	0.0	0.1	0.2	0.4	0.2	0.0	0.2	0.2	0.1	0.2	0.2	0.1	0.1	0.0	0.0
	기타 불일치	0.4	0.3	0.3	0.2	0.3	0.2	0.2	0.3	0.2	0.3	0.4	0.8	0.7	0.4	0.4	0.1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2. 가구 내 종교 일치도

부부를 넘어 가구 내 종교 일치 및 불일치 여부를 살펴보면(<표 11> 참조), 가구원 간의 종교 일치도는 1985년 67.7%에서 1995년 73.2%, 2005년 78.9%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구원간의 종교 일치도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가구원간의 종교적 동질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⁴⁾

가구 내의 종교 일치여부를 종교별로 보면 가구원 모두가 무종교인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985년에는 40.8%를, 1995년과 2005년에는 36.2%와 36.7%이었다. 불교로 일치하는 비율은 1985년에는 12.2%이던 것이 1995년에는 16.6%, 2005년에는 18.5%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개신교로의 일치비율은 1985년과 1995년 사이에는 10.5%에서 14.7%로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이보다 감소한 13.8%를 나타내었다. 가구원 모두가 천주교를 믿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1985년에는 전체 가구 중 3.1%가 천주교로 일치하였으나, 1995년에는 4.8%, 2005년에는 8.4%로 급증하였다.

반면 가구원들 사이에 두 가지 이상의 종교가 있는 경우(무종교 포함)는 1985년에는 32.3%, 1995년에는 26.8%, 2005년에는 21.1%로 나타났다. 이 가구들 중에서 무종교와 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각각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전체 불일치 가구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1995년 27.0%, 1995년 23.7%, 2005년 18.6%), 서로 다른 종교들로 결합된 가구는 1985년 5.3%에서 1995년 3.1%, 2005년 2.5%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가구 내 가구원의 종교 일치도를 시도별로 살펴보면(<표 12> 참조), 부부간의 일치도가 높은 지역과는 달리 인천(81.3%), 경기(80.0%), 강원(82.4%), 충북(80.8%), 충남(80.3%), 경북(80.7%) 등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종교유형별로 보면 그 분포는 부부간 일치도 지역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종교로 일치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43.5%), 전남(43.0%), 충남(41.8%) 순이며, 불교로 일치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남(33.5%), 울산(32.0%), 부산(30.4%), 경북(28.7%), 대구(27.0%) 순이다. 개신교로 일치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북이 1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7.9%, 인천 17.8%, 경기 16.8%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뒤에서 살펴보게 될 지역별 종교 구성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가구 내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불교의 비율이 높은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무종교와 불교가 혼합되어 있는 가구의 비율이 16.7%로 높게 나타났다. 불

4) 가구 내 종교일치도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기될 수 있으나, 가구원 모두 동일한 종교를 믿는 경우를 일치로 본 계산방식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평균가구원수가 감소(4.16명(1985년) → 3.34명(1995년) → 2.88명(2005년))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일치 형태가 무종교와 개신교인 경우는 전북이 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남(7.3%), 광주(7.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 내에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의 기성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서울(3.1%), 광주(3.1%), 전북(3.0%)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11> 가구 내 종교의 일치 및 불일치 비율(1985~2005년)

(단위 : %)

구 분	종교 구성	1985년	1995년	2005년
일치	계	67.7	73.2	78.9
	무종교	40.8	36.2	36.7
	불교	12.2	16.6	18.5
	개신교	10.5	14.7	13.8
	천주교	3.1	4.8	8.4
	기타 일치	1.1	0.9	1.5
불일치	계	32.3	26.8	21.1
	무종교+불교	15.4	13.0	9.4
	무종교+개신교	9.1	7.7	5.3
	무종교+천주교	2.5	3.0	3.9
	불교+개신교	0.7	0.7	0.5
	불교+천주교	0.1	0.2	0.3
	개신교+천주교	0.3	0.2	0.3
	기타 불일치	4.2	2.0	1.4

주) 1985년과 1995년의 비율은 은기수(2002: 576)의 수치임
 자료: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표 12> 시도별 종교의 일치 및 불일치 비율(2005년)

(단위 :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치	계	78.0	75.5	77.8	81.3	76.3	78.2	78.8	80.0	82.4	80.8	80.3	78.0	78.7	80.7	77.7	79.9
	무종교	34.2	29.5	34.5	39.6	40.4	36.6	33.2	37.9	43.5	40.7	41.8	37.4	43.0	36.8	32.6	37.4
	불교	12.9	30.4	27.0	10.7	10.8	16.1	32.0	13.6	18.6	21.1	16.5	11.9	13.4	28.7	33.5	26.9
	개신교	17.9	7.6	7.8	17.8	14.6	15.9	7.7	16.8	11.9	11.0	14.0	18.2	14.4	9.0	5.8	5.1
	천주교	11.3	6.2	7.6	11.5	9.6	8.5	4.9	10.1	7.3	7.0	6.7	7.9	5.4	5.1	4.2	8.9
	기타 일치	1.7	1.7	0.9	1.7	1.0	0.9	0.9	1.6	1.1	0.9	1.3	2.7	2.4	1.1	1.5	1.6
불일치	계	22.0	24.5	22.2	18.7	23.7	21.8	21.2	20.0	17.6	19.2	19.7	22.0	21.3	19.3	22.3	20.1
	무종교+불교	7.3	16.7	13.5	5.4	7.4	8.8	15.1	6.9	8.1	9.1	7.8	6.9	7.9	12.0	16.7	12.5
	무종교+개신교	6.4	2.9	2.9	6.4	7.2	6.3	2.3	5.9	4.6	4.6	6.4	8.3	7.3	3.0	2.2	2.3
	무종교+천주교	5.1	2.6	3.5	4.8	6.0	4.2	1.8	4.7	3.1	3.5	3.3	3.7	3.3	2.1	1.4	3.4
	불교+개신교	0.6	0.5	0.5	0.4	0.5	0.6	0.6	0.5	0.5	0.5	0.5	0.6	0.6	0.5	0.5	0.2
	불교+천주교	0.4	0.4	0.4	0.2	0.3	0.4	0.4	0.4	0.2	0.2	0.2	0.1	0.2	0.2	0.3	0.6
	개신교+천주교	0.4	0.1	0.1	0.3	0.5	0.3	0.1	0.4	0.2	0.2	0.3	0.3	0.2	0.1	0.1	0.2
	기타 불일치	1.7	1.3	1.2	1.2	1.8	1.2	1.1	1.3	0.9	1.1	1.3	2.0	1.8	1.3	1.2	0.8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제 3 장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종교

1절 종교 인구의 교육수준

종교 인구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종교별로 교육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3> 참조).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저학력 인구 비율은 불교 26.1%, 개신교 16.6%, 천주교 13.9%이며,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이상의 고학력 인구 비율은 불교 21.7%, 개신교 34.1%, 천주교 38.0%로 나타나고 있다. 개신교와 천주교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천주교의 교육수준은 여타 종교들에 비해서 높다. 불교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유교는 비교된 종교인구 중 교육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불교와 유교인구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은 고령 인구가 많은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종교별 교육수준의 차이는 대체로 이전 조사의 결과와 유사한데, 다만 전체 인구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종교인구의 학력도 전반적으로 이전 조사에 비해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⁵⁾

좀 더 구체적으로 종교별 평균 교육년수⁶⁾를 계산해 보면(<표 14> 참조), 천주교가 12.5년으로 가장 높고, 개신교 12.1년, 원불교 11.1년, 불교 10.5년, 유교 8.0년 순으로

<표 13> 종교별 교육수준의 구성비(2005년)

(단위 : %)

학력	종교있음							종교없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학	7.5	9.5	6.2	4.7	10.2	17.1	6.0	7.6
초등	13.3	16.6	10.4	9.2	15.6	35.2	12.0	12.0
중학	11.8	14.1	9.8	9.2	10.8	14.6	11.6	10.9
고등	38.6	38.1	39.5	38.8	32.3	21.9	42.1	42.6
대학(전문대)	26.0	20.2	30.2	33.7	27.6	10.5	26.2	25.1
대학원이상	2.8	1.5	3.9	4.3	3.5	0.7	2.2	1.7

주)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5) 30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는 1995년 9.7년에서 2005년 11.0년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6) 평균 교육년수는 18세 이상 인구의 교육수준을 수치화하기 위하여 학력별 교육년수를 환산한 수치이다(무학은 0년, 초등졸업은 6년, 중졸은 9년, 고졸은 12년, 대졸은 16년, 대학원졸은 19년, 그리고 중퇴, 재학 등은 중간값을 취하여 계산함).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종교에 관계없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가 큰 반면 천주교는 낮게 나타났다.

<표 14> 시도·종교별 평균 교육년수(2005년)

(단위 : 년)

시도	종교있음							종교없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전국	11.4	10.5	12.1	12.5	11.1	8.0	11.6	11.4
서울	12.8	12.1	13.1	13.5	13.3	11.4	12.5	12.7
부산	11.7	11.3	12.4	12.5	12.7	10.8	11.2	12.1
대구	11.7	11.2	12.5	12.6	11.9	9.9	11.1	12.2
인천	11.7	11.3	11.8	12.1	11.4	8.6	12.1	11.7
광주	12.3	11.5	12.7	12.8	12.7	10.9	12.4	12.3
대전	12.4	11.5	12.9	13.2	13.8	12.3	12.0	12.5
울산	11.5	11.2	12.1	12.6	13.0	12.0	11.3	12.2
경기	12.3	11.4	12.7	12.9	13.3	9.9	12.1	12.2
강원	10.3	9.6	11.0	11.1	12.3	7.8	10.1	9.9
충북	10.0	9.1	11.0	11.1	11.5	8.2	10.6	10.0
충남	9.6	8.9	10.2	10.5	9.0	7.6	10.5	9.5
전북	9.7	8.1	10.2	11.1	10.3	6.1	9.8	9.5
전남	8.8	8.0	9.3	10.3	6.7	6.4	9.0	8.2
경북	9.4	8.9	10.5	11.1	10.0	6.5	10.3	9.5
경남	9.9	9.4	11.6	11.8	10.7	7.3	9.9	10.7
제주	11.0	10.5	11.7	12.5	13.1	7.4	9.6	11.4

주)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앞에서 살펴본 종교별 교육수준의 차가 종교별 연령 구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은기수, 2002), 연령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30~40대 인구만을 대상으로 종교별 교육수준의 차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5> 참조). 30~40대 종교인의 평균 교육년수는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기타종교, 불교, 유교 순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 18세 이상 전체인구의 평균 교육년수와 대체로 유사하다. 하지만 30~40대 인구의 경우 종교별 평균 교육년수의 차가 18세 이상 인구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 연령대 인구의 경우 종교별 교육수준의 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5> 30~40대 인구의 종교별 평균 교육년수(2005년)

(단위 : 년)

구 분	종교있음							종교없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18세이상	11.4	10.5	12.1	12.5	11.1	8.0	11.6	11.4
30~40대	13.3	12.7	13.7	14.0	13.6	11.5	13.1	12.9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2절 종교 인구와 직업

종교별 직업의 분포를 살펴보면(<표 16> 참조), 종교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타 종교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천주교는 직업 대분류 중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등의 직업군에서 다른 종교인보다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는 종교별로 차이가 적으며, 판매종사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종교 등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는 유교에서 67.7%, 원불교 27.4%, 불교 21.3%로 다른 종교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표 16> 15세이상 인구의 종교별 직업현황(2005년)

(단위 : %)

직업구분	종교 있음	종교						종교 없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 종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9	3.6	3.9	4.7	3.9	1.3	3.4	2.8
전문가	10.4	6.2	14.2	15.2	12.8	2.3	9.9	8.1
기술공 및 준전문가	8.6	6.8	10.4	11.0	7.2	2.5	9.0	8.1
사무 종사자	14.8	12.7	16.2	18.2	12.0	4.8	16.1	15.8
서비스 종사자	9.6	10.5	8.6	8.9	8.8	4.2	11.0	9.0
판매 종사자	11.0	10.4	11.5	11.7	8.0	4.5	11.5	9.9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15.7	21.3	10.6	7.6	27.4	67.7	7.4	16.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5	9.0	8.4	7.6	6.9	3.9	10.6	10.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7	11.0	8.6	8.2	7.5	4.9	11.5	11.7
단순노무 종사자	7.1	7.8	6.7	6.1	5.0	3.7	8.8	7.5
기타	0.8	0.6	0.9	1.0	0.7	0.1	0.9	0.6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다음에서는 종교별 평균 교육년수와 마찬가지로 연령구성의 차이를 통제한 후 종교별 직업 구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30~40대 인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17> 참조).

30~40대 인구의 종교별 직업 구성을 15세이상 인구 전체의 종교별 직업현황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종교간의 차이가 크게 줄어든다. 물론 15세이상 종교인구의 직업현황에서의 특징은 갖고 있지만, 유교인구 중 농림어업 종사자가 67.7%에서 30.9%로 줄어드는 등 동일 연령대에서 각 종교간의 차이는 작아진다. 아울러 종교별로 지역분포의 차이까지 제거하여 특정 시도를 비교한다면 종교별 직업분포의 차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17> 30~40대 인구의 종교별 직업현황(2005년)

(단위 : %)

직업구분	종교 있음							종교 없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 종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3	4.3	4.2	4.7	4.7	2.7	4.1	3.5
전문가	11.6	7.1	15.2	16.0	16.8	4.2	10.1	8.7
기술공 및 준전문가	10.2	8.4	11.6	12.0	10.8	5.8	10.1	9.2
사무 종사자	17.1	15.5	17.7	19.9	15.1	13.0	17.1	17.3
서비스 종사자	10.8	12.5	9.2	9.3	11.0	10.9	11.6	10.0
판매 종사자	12.2	12.0	12.4	12.6	7.6	8.8	12.0	10.9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5.7	7.9	4.2	3.0	8.8	30.9	2.4	6.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2	11.5	9.7	8.3	9.4	8.2	12.0	12.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1	13.2	9.5	8.5	9.2	11.8	12.7	13.3
단순노무 종사자	5.9	6.8	5.4	4.7	5.9	3.6	7.0	6.9
기타	0.8	0.7	0.9	1.0	0.8	0.0	0.8	0.5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제 4 장 종교인구 분포의 지역 간 차이

Newman and Halvorson(1984)에 의하면 거주 지역은 개인의 종교적인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 해당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구이동, 사회문화적인 특성 등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halfant and Heller, 1991; Clarke, 1985 등). 반면에 국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며, 다만 정창수·김신열(1993)에 의해 외래종교인 기독교와 전통 종교를 대표하는 불교인구 비율의 지역 간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각 지역에서 기독교의 수용이 이루어진 정도가 유교적 전통의 강도와 종교전파의 전달경로가 되는 사회적인 연결망, 지역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인구 분포의 지역차에 대한 원인 분석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주요 종교인구 분포의 시도별 분석은 물론 시군구별 분석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자료의 지도화를 통한 시계열 분석이 주로 수행되었는데, 시계열 자료의 비교를 위해 지도의 계급급간은 가능한 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표 18>은 1985년과 1995년, 그리고 2005년의 시도별 종교인구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무종교인 비율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그 감소추세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1985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무종교인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995년에는 서울과 대구, 부산, 대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무종교인 비율이 45.8%, 44.8%, 47.4%, 48.2%로 낮아졌다. 2005년에는 경남의 무종교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산과 함께 무종교인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부각되었다.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무종교인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의 계룡시(31.3%)이나, 대체로 경상권의 군지역(경북 울릉군(33.0%), 경북 청도군(33.3%), 경남 산청군(34.7%))에서 무종교인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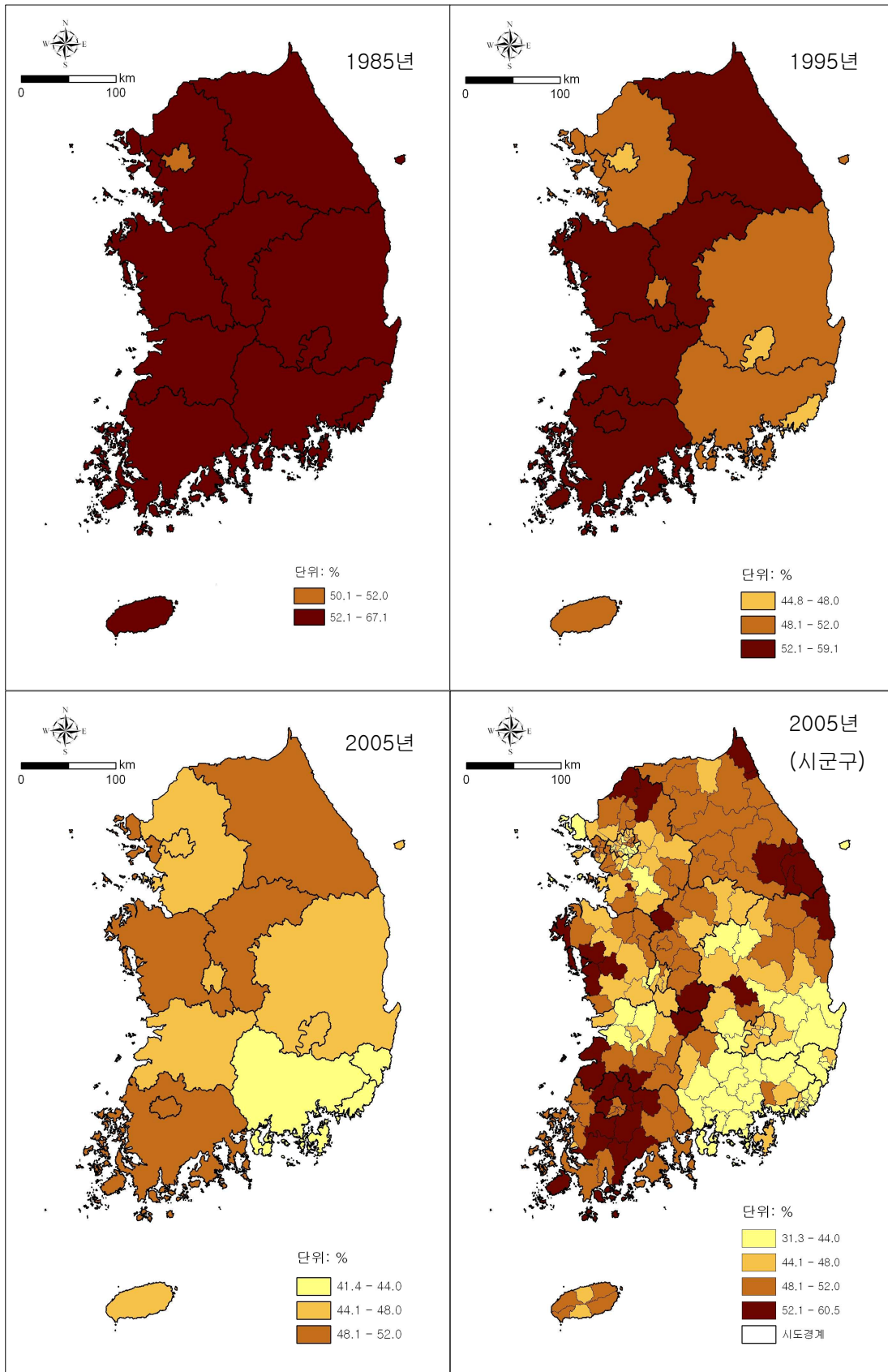
<표 18> 시도별 종교인구 구성비의 변화(1985~2005년)

(단위: %)

시도	연도	종교 있음							종교 없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서울	1985	49.9	18.4	23.8	6.5	0.2	0.4	0.5	50.1
	1995	54.2	18.4	26.2	8.7	0.1	0.2	0.6	45.8
	2005	55.2	16.8	22.8	14.2	0.2	0.1	1.1	44.8
부산	1985	46.1	31.2	10.1	3.7	0.2	0.4	0.6	53.9
	1995	55.2	38.2	11.1	4.7	0.1	0.2	0.8	44.8
	2005	58.6	39.2	10.4	7.4	0.2	0.1	1.3	41.4
대구	1985	45.8	27.5	11.2	5.8	0.1	0.3	0.8	54.2
	1995	52.6	33.2	11.6	6.8	0.1	0.2	0.8	47.4
	2005	54.6	33.4	10.4	9.8	0.1	0.1	0.9	45.4
인천	1985	43.9	13.4	21.8	7.5	0.1	0.6	0.5	56.1
	1995	50.4	14.6	25.8	9.0	0.1	0.3	0.6	49.6
	2005	51.3	13.8	22.4	13.7	0.1	0.2	1.1	48.7
광주	1995	47.5	15.3	21.7	9.1	0.5	0.3	0.6	52.5
	2005	48.3	14.4	19.7	13.0	0.4	0.2	0.6	51.7
대전	1995	51.8	23.2	21.1	6.6	0.2	0.1	0.6	48.2
	2005	54.2	21.8	20.5	10.7	0.2	0.1	0.8	45.8
울산	2005	56.9	39.8	9.5	6.4	0.1	0.1	1.0	43.1
경기	1985	44.8	17.3	19.1	5.6	0.1	2.1	0.6	55.2
	1995	51.1	18.5	23.7	7.7	0.1	0.4	0.6	48.9
	2005	52.5	16.8	21.9	12.4	0.2	0.2	1.1	47.5
강원	1985	36.6	19.0	12.2	3.6	0.1	1.2	0.5	63.4
	1995	45.8	23.2	16.2	5.1	0.1	0.6	0.5	54.2
	2005	48.8	23.0	15.6	9.1	0.1	0.3	0.7	51.2
충북	1985	33.5	17.6	10.8	4.0	0.1	0.7	0.3	66.5
	1995	45.9	23.5	15.2	6.2	0.1	0.3	0.5	54.1
	2005	49.6	23.8	15.1	9.9	0.1	0.1	0.6	50.4
충남	1985	39.0	17.7	15.4	3.6	0.2	1.6	0.5	61.0
	1995	45.5	19.9	19.1	4.7	0.1	0.9	0.6	54.5
	2005	50.4	20.5	19.6	9.1	0.2	0.4	0.6	49.6
전북	1985	33.3	8.1	19.3	3.5	1.3	0.7	0.4	66.7
	1995	47.5	12.2	26.4	6.0	1.5	0.8	0.6	52.5
	2005	53.7	12.8	26.3	11.4	2.3	0.3	0.6	46.3
전남	1985	32.9	10.6	14.6	3.3	0.3	3.7	0.4	67.1
	1995	40.9	13.6	20.4	4.3	0.4	1.8	0.4	59.1
	2005	49.0	16.1	21.8	8.7	0.6	1.2	0.6	51.0
경북	1985	41.3	26.1	10.2	2.7	0.1	1.6	0.5	58.7
	1995	48.8	31.0	12.3	3.9	0.1	0.9	0.5	51.2
	2005	53.8	33.9	11.5	7.1	0.1	0.4	0.8	46.2
경남	1985	40.5	29.0	7.3	2.6	0.2	0.8	0.6	59.5
	1995	50.4	36.3	9.1	3.6	0.2	0.5	0.7	49.6
	2005	56.0	40.1	8.5	5.9	0.3	0.3	0.9	44.0
제주	1985	41.6	28.7	7.4	3.9	0.2	0.8	0.6	58.4
	1995	49.4	33.6	8.4	6.2	0.1	0.4	0.7	50.6
	2005	52.1	32.7	7.2	10.3	0.2	0.3	1.3	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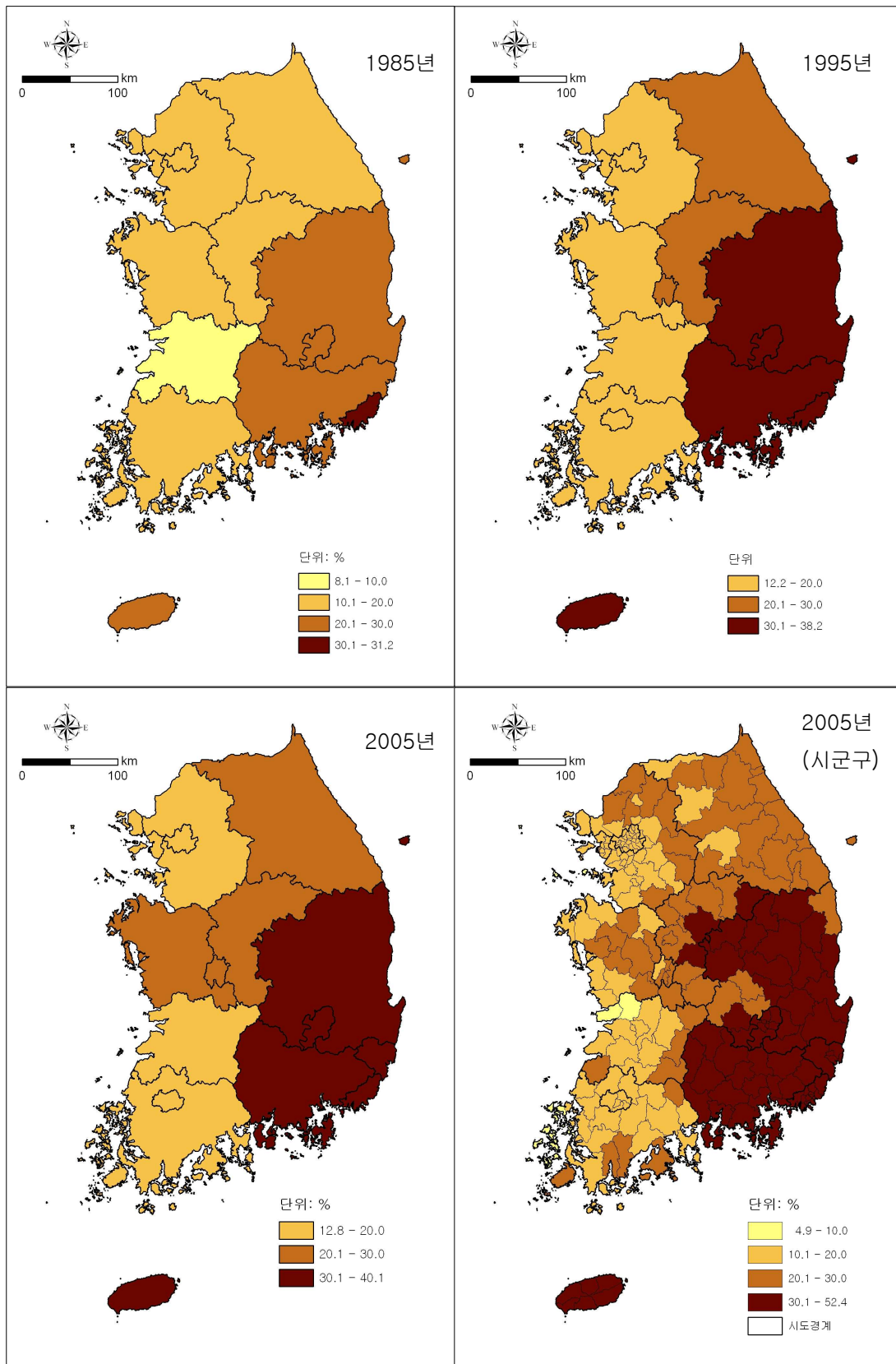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그림 3) 시도 및 시군구별 무종교인 비율(1985~2005년)



자료: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그림 4) 시도 및 시군구별 불교인구 비율(1985~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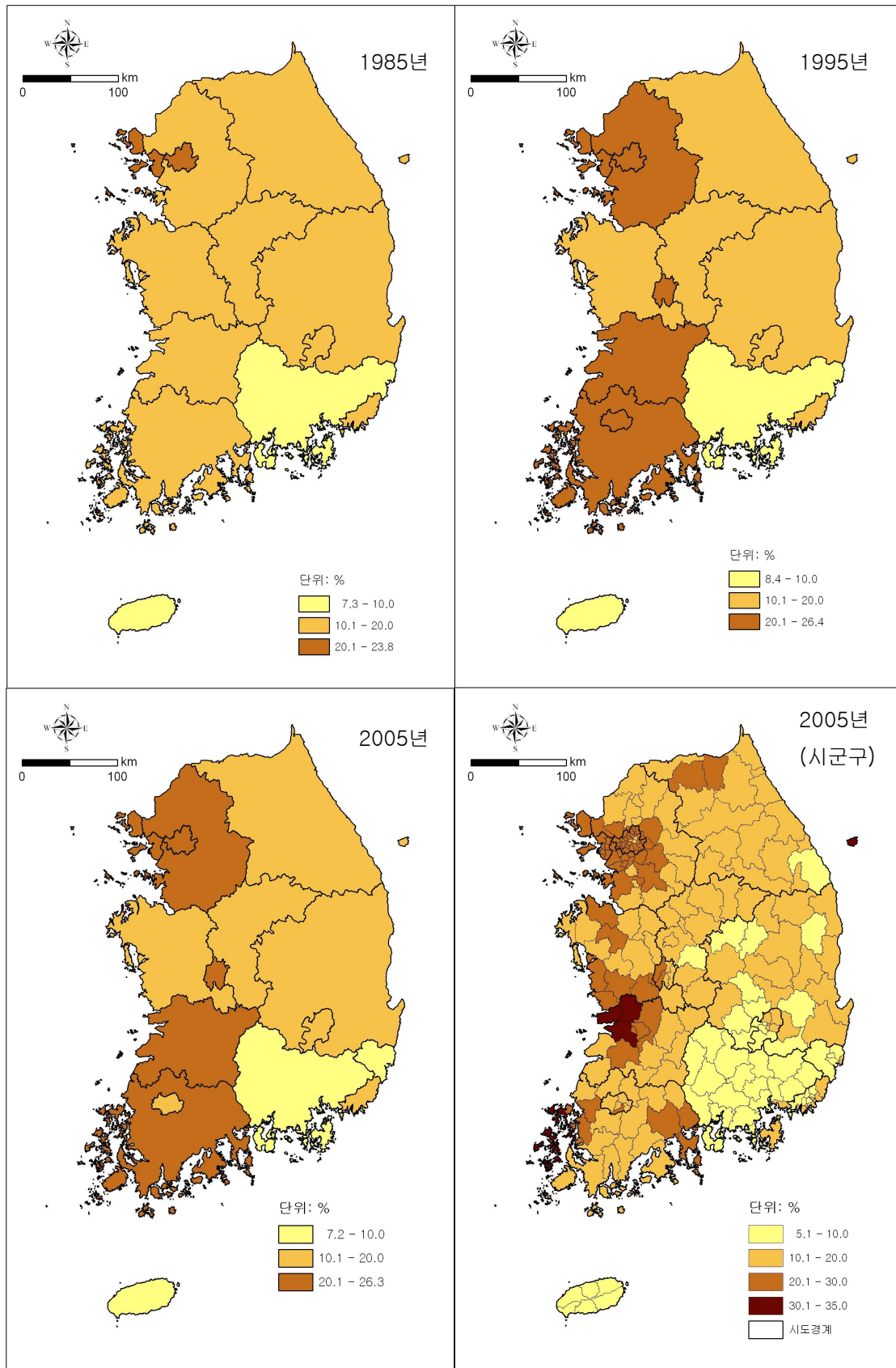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불교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경상권과 제주이다. 1985년의 경우 부산 인구의 31.2%가 불교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남(29.0%) 및 제주(28.7%), 대구(27.5%), 경북(26.1%) 순이었다. 1995년과 2005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으며, 특히 1985년과 1995년 사이의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1995년 부산과 경남의 불교인구 비율은 각각 38.2%와 36.3%로 1985년에 비해 7%p 가량 증가하였다. 대구와 경북, 그리고 제주의 경우에도 5%p 가량 증가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불교인구 비율은 30% 이상이 되었다. 불교인구 비율은 1995~2005년에 전국적으로는 다소 감소(23.2%→22.8%)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및 경상권에 서는 소폭 증가하면서 울산을 포함한 경남의 경우 이 지역 인구의 40% 정도가 불교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청도군(52.4%), 경남 산청군(52.4%)과 창녕군(51.1%)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불교인구로 조사되었다. 이들 지역의 무종교인 비율이 각각 33.3%, 34.7%, 37.9% 인 것을 감안한다면 개신교 및 천주교 등 외래 종교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시군구별 분석에서 눈에 띄는 점은 시도 경계에 위치한 지역의 종교인구 분포이다. 경북 문경시와 인접해 있는 충북 보은군(32.3%)과 괴산군(30.2%), 증평군(30.2%)은 충북 전체(23.8%)에 비해서 불교인구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반면에 개신교인구 비율이 높은 전북과 접해있는 경북의 일부 시지역(김천시 28.5%, 구미시 28.2%)은 경북 전체(33.9%)에 비해 불교인구 비율이 낮았다. 한편, 경남과 인접해 있는 전북시군지역 중 일부(전북 무주군(22.9%), 장수군(24.2%), 남원시(20.2%), 구례군(27.5%))에서는 전북 전체의 불교인구 비율인 12.8%보다 2배가량 많은 인구가 불교를 믿고 있다((그림 4) 참조).

개신교인구 비율은 수도권과 전라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1985년에 서울의 개신교인구 비율은 23.8%, 인천은 21.8%, 경기도는 19.1%였으며, 1995년에는 이보다 증가하여 서울 26.2%, 인천 25.8%, 경기 23.7%를 기록하였다. 개신교인구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지역은 전라권으로 1985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북은 7%p 가량 증가한 26.4%를, 전남은 6%p 가량 증가한 20.4%이었다. 그러나 2005년에는 이 지역 모두에서 그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전남만이 약간 증가(20.4%→21.8%)하는데 그쳤다. 2005년에 개신교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의 신안군(35.0%)과 전북의 익산시(31.4%)와 군산시(31.1%)이다. 반면, 개신교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불교인구가 많은 경남과 제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의 군지역에 집중되어 있다(합천군 5.1%, 의령군 5.4%, 함안군 5.7%, 창녕군 5.7%). 한편 불교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과 울산의 경우, 일부 자치구에서 개신교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그림 5) 시도 및 시군구별 개신교인구 비율(1985~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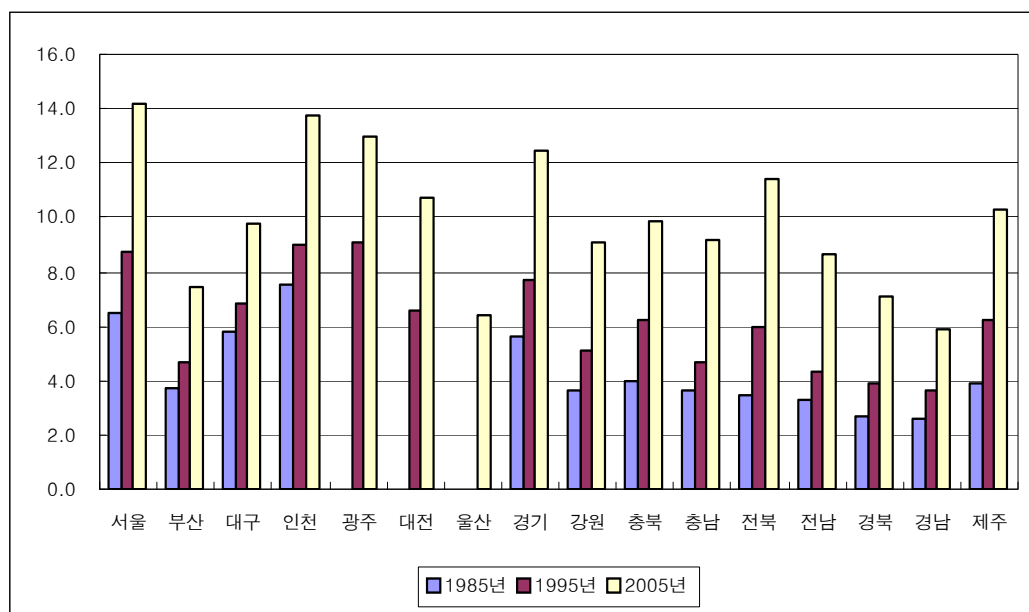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천주교인구 분포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불교, 개신교와 다르게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지역에서 이 종교를 믿는 인구 비율이 일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1985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증가한 지역이 많으며((그림 6) 참조), 시도별 구성분포를 보면 절대적인 비율은 낮지만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1985년에 서울 6.5%, 인천 7.5%, 경기 5.6%이었던 천주교인구 비율은 2005년에는 14.2%, 13.7%, 12.4%로 증가하였다((그림 7) 참조). 전북의 천주교인구 비율은 1985년도에 비해 3배나 증가한 11.4%를 차지하여 천주교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새롭게 부상하였다. 이와 함께 광주(13.0%), 대전(10.7%)과 제주(10.3%)에서도 천주교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제주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불교와 개신교인구의 비중이 1, 2순위를 달리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불교 다음으로 천주교인구의 비율이 높았다.

시군구별 분석을 해보면 서울의 강남권과 인천의 일부 도시에서 그 비율이 20%를 상회하였다. 인천 옹진군이 2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다음으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21.1%와 20.7%, 인천 동구가 20.7%를 보여주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와 인접해 있는 강원, 충북, 충남의 일부 시군지역에서 천주교인구가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주시(15.0%)를 중심으로 해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에서 천주교인구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전주의 경우에는 전라도에 맨 처음 천주교가 전파된 곳이며, 완주군은 전라도 최초의 천주교회 본당이 세워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주명준,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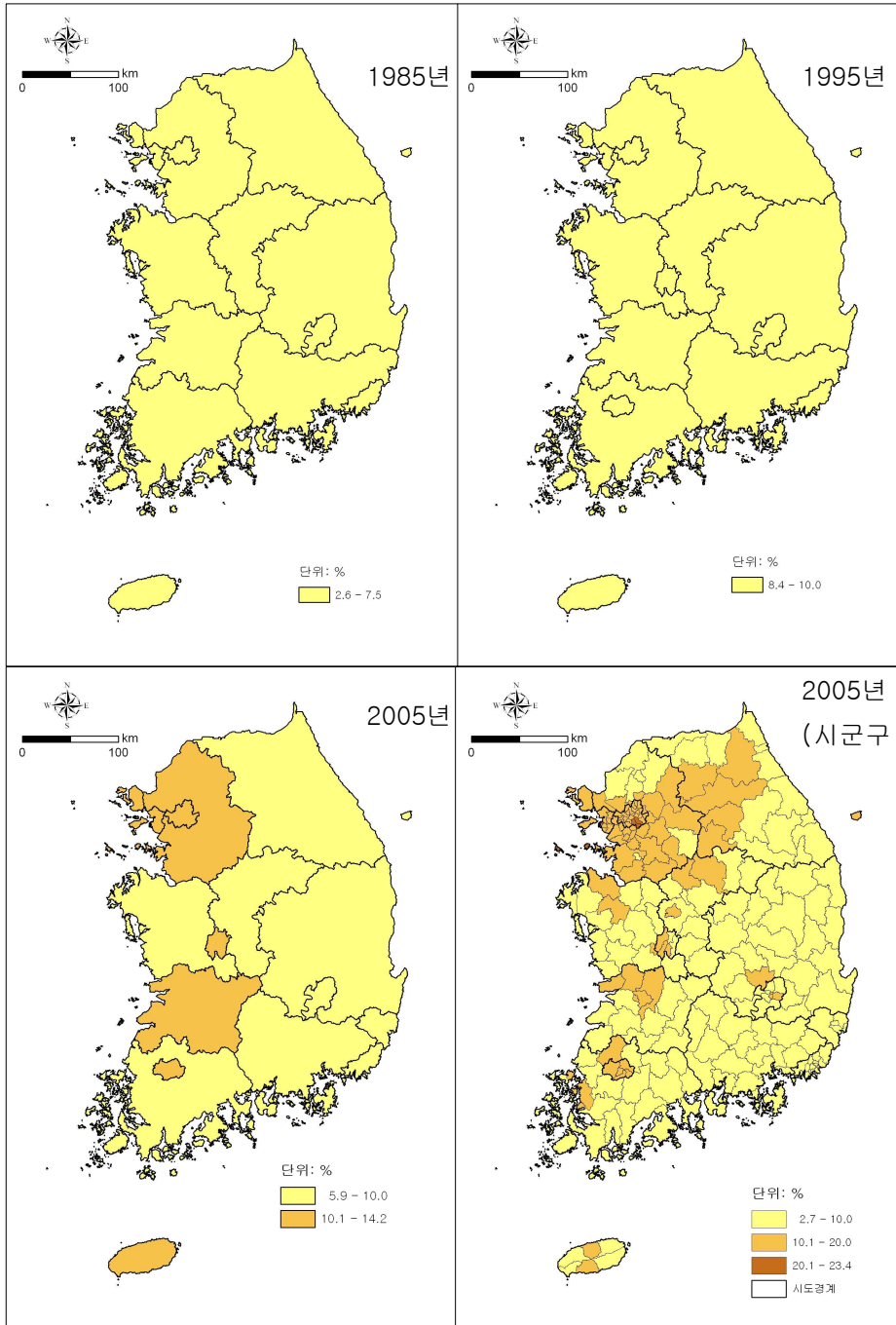
(그림 6) 시도별 천주교인구 비율 추세(1985-2005년)



자료: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원불교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지역이다. 이는 원불교가 전북 익산에서 시작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은기수, 2002). 이 지역에서 원불교인구 비율은 1985년에는 1.3%, 1995년에는 1.5%, 2005년에는 2.3%로 증가하였다. 유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이었으나 그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5년에 유교인구 비율은 전남 1.2%, 경기 0.2%까지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기타종교 인구의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림 7) 시도 및 시군구별 천주교인구 비율(1985~2005년)



자료: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제 5 장 결론

선행연구(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이희길, 1995; 은기수, 200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종교인구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기독교 인구는 불교 인구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연령층이 많다. 반대로 불교 신자들은 연령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다. 불교는 여성 신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종교 집단에 비해 높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러한 일반화된 사실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나 또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종교 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5~2005년까지 20년 동안 종교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무종교인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인의 증가와 무종교인의 감소 경향은 최근 완화되고 있다. 특히 30~40대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무종교인 비율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관찰되었다. 둘째, 불교와 개신교인구 비율은 1995~2005년 사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천주교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기독교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불교인구 비율과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셋째, 연령대별 종교인구의 코호트 분석에 의하면 개신교는 불교·천주교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동일 코호트에 속한 인구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불교와 천주교인구 비율은 늘어나는 반면 개신교인구 비율은 1995~2005년 사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넷째, 성별 종교 구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여자 종교인의 비율이 남자 종교인에 비해 높는데, 3대종교 중에서 천주교의 여자신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각 종교의 전체 신도수 대비 성·연령별 인구를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통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았던 불교는 물론 개신교와 천주교의 경우도 고령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한국의 부부 및 가구 내 구성원들 간에는 강한 종교적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다. 가구구성원들은 무종교로 종교적 성향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수준과 직업을 통해 종교별로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종교별로 교육수준과 직업구성이 달라 종교인들 간에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으며 전

문직 종사자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별 교육수준과 직업구성의 차는 종교별 연령 구성의 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30~40대 동일 연령대 인구의 경우 종교별로 교육수준과 직업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연령뿐 아니라 지역분포의 차이까지 제거하는 경우 그 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종교인구 분포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부산·대구·울산을 포함한 경상권은 불교인구가, 수도권 및 전라권은 개신교인구가 우세하였으며 불교인구가 많은 지역은 개신교인구 비율이 낮고, 개신교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불교인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불교와 개신교의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시계열적으로 볼 때 그 차이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995~2005년 사이 전국적으로는 불교인구 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인구 비율이 높은 경상권의 경우 그 비율은 더욱 증가하였다. 경상권의 경우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종교인 아니면 불교인구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불교인구 비율이 높다. 셋째, 시도별로 종교인구의 분포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과 다르게 시도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시군구 지역은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강한 공간 군집을 형성하면서 양 시도의 중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접이지대에서 불교는 주로 군지역에서, 개신교는 시지역에서 해당 종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연령·교육수준·직업 등의 변수에 비해 지역 간 종교현상의 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이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한국사회의 종교 현상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제 6 장 참고문헌

- 김종서. 1998. “해방후 50년의 한국 종교사회학 연구사.” 『종교연구』 15: 33-72.
- 김종서. 2000. “현대 종교다원주의와 그 한국적 독특성 연구.” 『종교학연구』 19: 33-48
- 윤이흠. 2007. “21세기의 세계종교상황과 원불교사상.” 『원불교 교전』 (중문판) 출판기념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13-33.
- 은기수. 2002. “종교.” 『한국의 인구』 . pp.557-586.
- 이희길. 1995. “한국종교에 있어서 체제저항적 정치운동과 그에 참여한 종교지도자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창수·김신열. 1993. “한국에 있어서 종교인구 분포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사회학적인 연구.” 『한국사회학』 27: 117-151.
- 주명준. 1998. “천주교와 개신교의 전라도 선교 비교.” 『전주사학』 6: 43-77.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
- 한내창. 2005. “가정의 종교 환경과 자녀의 종교성.” 『종교연구』 40: 219-244.
- Chalfant, H. P., and P. L. Heller. 1991. "Rural/Urban versus Regional Differences in Religiosity."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3(1): 76-86.
- Clarke, C. J. 1985. "Religion and Regional Culture: The Changing Pattern of Religious Affiliation in the Cajun Region of Southwest Louisiana."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4: 384-395.
- Newman, W. M. and P. L. Halvorson. 1984. "Religion and regional culture: Patterns of concentration and change among American religious denominations, 1952-1980."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3: 304-315.
- [통계관련자료]
- 통계청. 2007.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_____. 2006.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집계결과』, 인구조사과 보도자료. 통계청
- _____. 1985. 1995.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통계청.

[부록]

<부록 표> 연령별 종교인구의 구성 변화(1985-2005년)

(단위 : %)

구 분	종교 있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종교	종교 없음
0 ~9세	28.2	9.5	14.1	3.8	0.1	0.3	0.3	71.8
10~19세	38.9	15.0	18.1	4.4	0.2	0.7	0.5	61.1
20~29세	42.3	18.6	17.3	4.9	0.2	0.9	0.5	57.7
30~39세	50.6	25.2	17.9	5.7	0.2	1.1	0.6	49.4
40~49세	53.0	30.3	14.9	4.9	0.3	2.0	0.7	47.0
50~59세	52.5	31.5	12.8	4.3	0.4	2.8	0.8	47.5
60~69세	52.4	30.4	13.0	4.5	0.4	3.2	0.9	47.6
70세이상	49.5	28.0	12.4	4.4	0.4	3.4	0.8	50.5
1995년	50.7	23.2	19.7	6.6	0.2	0.5	0.6	49.3
0 ~9세	36.9	11.3	19.3	5.6	0.1	0.1	0.4	63.1
10~19세	49.0	18.3	22.5	7.2	0.2	0.2	0.5	51.0
20~29세	45.9	19.4	19.7	5.8	0.2	0.3	0.6	54.1
30~39세	52.8	24.7	20.0	7.0	0.2	0.3	0.6	47.2
40~49세	60.9	31.5	20.0	8.0	0.2	0.5	0.7	39.1
50~59세	59.9	34.7	16.7	6.3	0.3	1.1	0.7	40.1
60~69세	59.5	34.5	16.0	6.2	0.3	1.6	0.8	40.5
70세이상	57.7	30.5	17.5	6.8	0.4	1.7	0.9	42.3
2005년	53.5	22.8	18.3	10.9	0.3	0.2	1.0	46.5
0 ~9세	43.9	13.2	19.9	9.7	0.2	0.0	0.8	56.1
10~19세	51.0	17.7	20.4	11.7	0.2	0.1	0.8	49.0
20~29세	49.6	19.3	17.9	11.2	0.2	0.1	0.9	50.4
30~39세	48.5	19.6	17.7	9.8	0.2	0.1	1.0	51.5
40~49세	57.0	26.6	17.7	11.3	0.3	0.2	1.0	43.0
50~59세	63.1	31.7	17.8	12.0	0.3	0.3	1.0	36.9
60~69세	63.7	34.1	16.6	10.8	0.4	0.8	1.1	36.3
70세이상	63.4	31.1	18.2	11.5	0.5	1.0	1.1	36.6

자료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